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번역의 질과 원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사항이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이 우선합니다.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OECD 회원국 정부 또는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했습니다. OECD가 이스라엘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지 삽화(Illustration): Christophe Lavirotte/Plus d'images Prod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3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참조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How’s Life? 2013(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은 OECD가 회원국 및 신흥경제국가들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직장에서의 웰빙,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 등 4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와 심화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최종희 부분부장, 이인노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주정미

서문

How's Life?는 OECD 국가와 몇몇 신흥경제국가들의 웰빙에 대한 평가 결과를 2년마다 제공하고 있다. 이 평가는 11개 웰빙의 영역과 광범위한 성과 지표군을 다루고 있는 다차원적 프레임워크(multi-dimensional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다. 각 보고서는 몇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마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ow's Life 2013년 판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직장에서의 웰빙,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 통계국의 웰빙 및 발전 부서(Well-Being and Progress Unit)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작성자는 Carlotta Balestra(제2장과 4장), Romina Boarini(제1, 2, 3장), Carrie Exton(제6장) Mario Piacentini(제4장), Anne Saint-Martin(제5장), Elena Toso(제1, 2, 3장)이다. 보고서 작성은 Romina Boarini, Marco Mira d'Ercole, Martine Durand의 감독 하에 수행되었다. Conal Smith와 Paul Schreyer가 본 보고서의 제5장과 제6장에 대해 각각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Laura Belli, Sue Kendall-Bilicki, Rachel Linden, Carine Viac이 서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데 감사드린다. Catherine Roch와 Audrey Garrigoux에게 출판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는 다른 OECD 회원국가와 OECD 통계위원회에 파견된 각국 대표들의 기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 완성되었다.

목차

논평: 사람을 중심으로	11
독자를 위한 가이드	14
요약	15
제1장 OECD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개념과 지표들	19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와 그 이후	20
웰빙의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23
지표의 선정	27
지표들의 대시보드를 통한 웰빙의 측정	27
How's Life? 의 통계적 과제: 2011년 이래 진전	30
결론	35
주	35
참고 문헌	35
부록 1.A1 전체 웰빙 성취도에서 국가의 상대적 장단점 평가	38
제2장 한눈에 보는 How's Life?	43
소득과 자산	44
직업과 근로소득	47
주거 조건	51
건강상태	55
일과 삶의 균형	59
교육과 기술	63
사회적 관계	6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71
환경의 질	74
개인적 안전	77
주관적 웰빙	80
결론	82
참고 문헌	82

제3장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85
서론	86
소득과 자산	86
직업과 근로소득	94
건강상태	102
주관적 웰빙	104
시민참여	106
사회적 관계	108
향후 통계적 과제	110
결론	111
주	111
참고 문헌	113
부록 3.A1 국가별 관련 증거	117
제4장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121
성불평등과 웰빙	122
웰빙에서의 성별 격차의 측정	124
남성과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비교	125
유급 및 무급 근로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	132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	144
향후 통계적 과제	154
결론	156
주	156
참고 문헌	160
부록 4.A1 시간 빈곤의 결정요소들	168
부록 4.A2 배우자 폭력의 결정 요소들	170
제5장 직장에서의 웰빙: 직업의 질 측정	173
서론	174
고용의 질 측정	174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	178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직장 내 삶의 질 측정	190
향후 통계적 과제	194
결론	195
주	195
참고 문헌	195
부록 5.A1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 간 상호작용	199

제6장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 측정** 203

 서론 204

 웰빙의 유지: 자본 접근법 205

 경제적 자본과 웰빙 207

 자연 자원과 웰빙 208

 인적 자본과 웰빙 213

 사회적 자본과 웰빙 215

 자본 stocks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추가적인 고려사항들 218

 How's Life?의 맥락에서 웰빙의 지속을 위해 제안된 측정 방법들 224

 향후 통계적 과제 227

 결론 228

 주 229

 참고 문헌 230

용어해설 239

표

 표 1.1. 중심 웰빙 지표들의 개요 30

 표 4.A1.1. 시간 빈곤의 결정 요소들 169

 표 5.1. 직업과 고용의 질의 중요 영역들 176

 표 5.2. 근로 요구와 근로 자원의 지표들 192

 표 6.1.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중심 체계 내 환경 자산의 분류 209

 표 6.2.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감시할 측정 방법 유형들 225

 표 6.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측정 테마와 예시 지표들 225

그림

 그림 1.1.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웹 애플리케이션 20

 그림 1.2. OECD 웰빙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24

 그림 1.A1.1. 국가별로 다른 웰빙영역별 장단점 39

 그림 1.A1.2. 전반적 웰빙 수행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 40

 그림 1.A1.3. 웰빙 수행도와 지표간 수행도 분산 사이의 상관관계 40

 그림 1.A1.4. 웰빙 수행도와 웰빙의 사회경제적 격차 간 상관관계 41

 그림 2.1.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 45

 그림 2.2. 1인 당 가구순금융자산 46

 그림 2.3. 소득 불평등 47

 그림 2.4. 고용률 49

 그림 2.5. 장기 실업률 49

 그림 2.6. 전체 경제 내 전일제 근로자들의 평균 연간 총 근로소득 50

 그림 2.7. 학력에 따른 고용률 51

그림 2.8.	1인 당 방의 개수	52
그림 2.9.	기본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54
그림 2.10.	주거 비용	55
그림 2.11.	기대수명	57
그림 2.12.	자기 보고 건강상태	58
그림 2.13.	가처분 소득별 자기 보고 건강 상태	59
그림 2.14.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61
그림 2.15.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시간	62
그림 2.16.	교육적 성취도	65
그림 2.17.	교육기대 년수	65
그림 2.18.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66
그림 2.19.	성인 인구의 역량	67
그림 2.20.	15세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인지 능력	68
그림 2.21.	인지된 사회 관계망 지원	70
그림 2.22.	교육 수준 별 사회 관계망 지원	70
그림 2.23.	투표율	72
그림 2.24.	규칙 제정에 관한 공식적·공개적 협의	73
그림 2.25.	소득별 투표율	74
그림 2.26.	대기 오염	76
그림 2.27.	수질에 대한 만족도	76
그림 2.28.	교육 수준별 수질 만족도	77
그림 2.29.	고의적 살인	79
그림 2.30.	자기 신고 피해자	79
그림 2.31.	삶의 만족도	81
그림 2.32.	교육 수준별 삶의 만족도	81
그림 3.1.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의 실질 GDP와 실질 가구소득의 추세	87
그림 3.2.	조정된 가구의 순가처분소득의 구성요소	89
그림 3.3.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90
그림 3.4.	소득 빈곤율	91
그림 3.5.	가구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92
그림 3.6.	유럽의 주거 비용	93
그림 3.7.	고용률과 장기 실업률	95
그림 3.8.	노동 시장의 청년층 및 저숙련 근로자	96
그림 3.9.	구직단념자들과 비경제활동경제인구	97
그림 3.10.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98
그림 3.11.	임시직과 정규직 고용	99
그림 3.12.	인지된 일과 가족의 갈등	100
그림 3.13.	총 연간 근로소득의 추세	101
그림 3.14.	자기 보고 건강 상태	103
그림 3.15.	미충족 의료수요	104

그림 3.16.	주관적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105
그림 3.17.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기대감	106
그림 3.18.	금융위기 발발 이후의 신뢰도	107
그림 3.19.	유럽에서의 시민 참여	108
그림 3.20.	다른 사람을 도울 능력	109
그림 3.21.	비공식적 지원	110
그림 3.A1.1.	1인 당 실질 GDP와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117
그림 4.1.	기대수명에서의 성별격차	126
그림 4.2.	자기 평가 건강상태와 자기 보고 일상활동의 제약 측면에서의 성별격차	128
그림 4.3.	건강수명년수 측면에서의 성별격차	130
그림 4.4.	대학의 전공 분야에서 성별격차	131
그림 4.5.	대졸자 고용률에서의 성별격차	133
그림 4.6.	성별 임금 격차	134
그림 4.7.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136
그림 4.8.	상대적 빈곤 인구의 성별 비율	137
그림 4.9.	독신 성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139
그림 4.10.	무급근로와 총근로에 할당된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	140
그림 4.11.	과거 10년동안의 주당 유급 및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	141
그림 4.12.	자녀의 유무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시간 빈곤율	144
그림 4.13.	유럽 국가들에서 일자리와 심리적 도움을 구할 때 사회 관계망에서의 성별격차	146
그림 4.14.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	147
그림 4.15.	살인율: 수준과 성별 격차	149
그림 4.16.	여성에 대한 배우자 폭력	150
그림 4.17.	안전인식 측면에서의 성별 격차	151
그림 4.18.	삶의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	153
그림 4.19.	감정 밸런스에서의 성별 격차	154
그림 5.1.	삶의 만족도와 노동 시장 지위	180
그림 5.2.	유럽에서의 한계 노동력	182
그림 5.3.	임시근로과 근무 기간	183
그림 5.4.	고용 기간, 임시직과 경기 순환 주기	185
그림 5.5.	연간 근로 소득 변동성	186
그림 5.6.	실업 수당	187
그림 5.7.	근로 빈곤	189
그림 5.8.	유럽의 직무 요구, 직무 자원과 근로자 건강 사이의 연관성	193
그림 5.A1.1.	직무 요구, 직무 자원과 근로자의 건강	200
그림 5.A1.2.	선정된 유럽 국가들에서의 근무 환경의 질	201
그림 6.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본 흐름과 웰빙 성과의 연관관계	207
그림 6.2.	선정된 환경 위험으로 인한 전세계 조기 사망건수	212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lidlibrary>



<http://www.oecd.org/oeccdirect/>

논평: 사람을 중심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측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How's Life?의 두번째 보고서는 OECD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2년 전에 출간했던 첫번째 보고서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였고 심화된 분석을 제시한다. 웰빙 측정을 위한 통계 데이터의 연구와 분석은 각국 정부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OECD의 사명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이었다. 이번 How's Life?의 발간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폭넓은 측면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How's Life?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측정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는데, 측정 방법을 전통적인 경제적 측정 방법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11가지의 인간의 웰빙 영역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 직업, 주거 환경, 건강, 기술, 가족 및 친구들에게 쏟는 시간, 공동체 내 타인과의 관계, 제도를 신뢰하는 정도와 정보를 갖춘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환경의 질, 폭력에 대한 경험과 폭력의 희생자로서의 경험, 감정, 삶에 대한 평가 등 인간 웰빙의 11가지 영역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국가의 수행도는 더 이상 GDP만을 통해서 평가되지 않는다. 오히려 How's Life?에서 사용된 새로운 측정 기준들은 각국의 다양한 웰빙 성과들이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번째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2년 간 웰빙에 관한 OECD의 연구는 전세계에서 웰빙이 측정되는 방법과 국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와 사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측정하는 것은 오늘날 더욱더 중요해졌다.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 최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경제적 생산과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 이외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경제적 웰빙과 비경제적 웰빙 모두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적 웰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근로자들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가구에서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하락을 했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자수가 거의 1천 6백 만 명 증가했고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의 숫자는 1천 6백 5십만명에 달한다. 반면에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상대적 소득빈곤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층에서 늘었다. 높아진 경제적 불안과 재정적 압박은 특히 저소득 가구와 교육 수준이 낮은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또 다른 웰빙의 측면들 역시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부정적으로 전개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금융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부 국가들에서 상당히 하락했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하여 정부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국가의 정치적 자원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이는 OECD 지역에서 현재 시민들의 40%(2006년 이래 최저 수준)만이 자신의 국가 정부를 신뢰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금융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의 10%-30%만이 자국의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위기 시작 이래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결속과 참여가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은 공공 정책 영역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에서 나타났으며 높아진 대인적 유대감과 다른 종류의 시민참여의 형태를 띠었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알게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지원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이에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등 가족이 재정적 지원과 현물 지원 모두의 출처이며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집세를 낼 형편 안되어 이사를 가야했던 많은 사람들은 친척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보고했다. 유럽에서 가구 내 높아진 결속력은 여성으로부터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해 적은 수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가운데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breadwinner)의 역할을 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웰빙 지수는 정책 입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웰빙 측정 항목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분야에 대한 새롭고 좀 더 폭넓은 시각을 정책 입안자들에서 제공할 수 있다. 직업, 건강 또는 교육 등 이러한 영역들 중 일부는 오랫동안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권 안에 있었지만 How's Life?에 포함된 개인 또는 가구 수준의 광범위한 성과 지표군과 여러 인구 집단에 걸쳐있는 지표들의 결합분포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지표군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정책 분야에서와 또한 여태까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권 밖에 있었던 다양한 새로운 분야들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How's Life 의 이번 판은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직장에서 웰빙,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 등 정책 입안을 위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웰빙에서의 세가지 측정 문제들을 상세히 연구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 수는 없나?

웰빙이 인구 집단 별로 어떻게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은 보다 적절하게 설정된 정책 대상에게 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근본적 질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양성 평등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생애주기(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 새로운 가족의 시작, 은퇴와 노년기)에 걸친 웰빙 지표들은 성(gender)

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의 웰빙 불평등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만을 살펴봄으로써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는 달리 양성 격차가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OECD 회원국가에서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살며 종종 교육수준이 높다. 그러나 여성은 낮은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직업 전망이 더 나쁘고 일자리를 구할 때 의존할 직업적 관계망이 더 적다. 여성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만 스트레스, 걱정,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남성보다 더 자주 경험한다.

직장 내 웰빙: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

오랫동안 정책의 초점은 대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맞추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상황이 전체 웰빙에 극히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갖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많이 받거나 역동적 경력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적 성취에 기여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참여와 높은 웰빙 의식은 자신들의 업무에 자율권이 있는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제대로 규정된 업무 목표를 부여 받는지의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중중해 주며 지지하는 관리 관행과 동료들로부터의 지지 역시 중요하다. 일자리와 직장에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사람들은 업무 압박과 감정적으로 힘든 업무를 더 적절히 관리하며 또한 더 건강하고 생산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업무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열악한 업무구조와 직장 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50%로 나타난 반면에 좋은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단지 15%로 나타났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웰빙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일은 현재의 웰빙을 개선하는 일이 미래 사람들의 웰빙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특별히 어려운 과제인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미래에 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하는 요소들 중 일부를 측정할 수는 있다. 이 일은 장기간 동안 웰빙을 산출하며 미래 세대에 전해질 자원들을 감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자원들은 네 가지 유형(경제적 자원, 환경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유형의 자원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의 개발을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자원(경제적 자원)에 대한 측정 항목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다른 자원들(환경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한 작업은 진행중이다. 웰빙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은 전체 인구에서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How's Life?는 이러한 이슈들을 선도하기 위한 통계적인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웰빙과 발전을 측정할 기존 측정 항목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측정 항목들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마틴 듀란(Martine Durand)
OECD 수석 통계학자,
OECD 통계국장

독자를 위한 가이드

표기 규칙

- OECD 와 EU OECD의 데이터는 두 영역내 국가별 수치에 대한 단순평균이다.
- 각각의 그림은 해당 기간을 명시한다. XXXX 또는 가장 최근 연도(이 경우 XXXX는 연도 혹은 기간임)는 이후 연도에 대한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신규 가입국 또는 주요 파트너 국가는 흰색이나 어두운 회색으로 제시되며 OECD 회원국들은 파란색으로 제시된다.

그림에서 국가별 ISO 코드가 사용됨

AUS	호주	GBR	영국	NOR	노르웨이
AUT	오스트리아	GRC	그리스	NZL	뉴질랜드
BEL	벨기에	HUN	헝가리	OECD	OECD 평균
BRA	브라질	IDN	인도네시아	OECD EU	OECD 유럽 평균
CAN	캐나다	IND	인도	POL	폴란드
CHE	스위스	IRL	아일랜드	PRT	포르투갈
CHL	칠레	ISL	아이슬란드	RUS	러시아
CHN	중국	ISR	이스라엘	SVK	슬로바키아
CZE	체코	ITA	이탈리아	SVN	슬로베니아
DEU	독일	JPN	일본	SWE	스웨덴
DNK	덴마크	KOR	한국	TUR	터키
ESP	스페인	LUX	룩셈부르크	USA	미국
EST	에스토니아	MEX	멕시코	ZAF	남아프리카 공화국
FIN	핀란드	NLD	네덜란드		

이 보고서와 보고서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상의 지위나 주권, 국가간 국경의 경계, 어떠한 영토, 도시 혹은 지역명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여 작성하였다.

요약

웰빙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OECD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는 웰빙에 필수적인 11개 핵심 영역을 사용하여 사람들 삶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11개의 핵심 영역에는 소득과 직업, 건강, 교육, 지역 환경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부터 개인적인 안전과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웰빙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서 국가 차원의 측정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OECD는 상이한 웰빙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사회 집단 간 불평등 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득, 교육, 건강 또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과 상관없이 웰빙이 사회에서 어떻게 공유되는지, 예컨대 성(gender)이 웰빙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How's Life?는 폭넓은 영역에서 비교 가능한 웰빙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별 웰빙의 상대적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국의 정부들은 자국 정책의 어젠다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웰빙의 모든 영역 중에서 명백히 가장 중요한 영역은 없으며 OECD 국가들 마다 웰빙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는 서로 다르다.

How's Life? 개관

OECD 국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웰빙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추세가 일자리 혹은 투표 참여율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더 중요한 사실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OECD 지역의 저소득 국가들은 주관적 웰빙과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 국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낮은 저소득 층은 거의 모든 웰빙 영역에서 성적이 좋지 않는데 그들은 덜 건강하고 공동체에 덜 참여하며 주관적 웰빙도 낮다. 소득, 교육, 환경 및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웰빙 영역의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실업률, 임시 근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재정적인 불안과 빈곤 상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웰빙의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다소 확실하지 않다.

삶의 만족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에서 크게 하락했고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도 급증했던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건강점수는 조금 변했거나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위기의 효과가 장기적으로만 가시화되어 나타날 수 있거나(예를 들어 이후에 건강 문제 발생 등), 특정한 인구 집단에에만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 통계 수치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단기적 영향 중 일부는 기존의 측정 방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웰빙의 단기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보다 시의적절하고 빈번도가 높으며 특정 그룹과 관련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웰빙의 단기적 변화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은 경기침체기 및 그 이후 시기 동안에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정보제공에 매우 중요하다.

성불평등 해결

정책입안자는 또한 정책이 전체 인구 중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양성격차와 관련한 문제가 그 적절한 예이다.

여전히 남성이 많은 영역에서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웰빙에서의 양성격차는 지난 수 십 년동안에 좁혀지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길지만 질병에 더 자주 걸린다.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은 뛰어나지만 좋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무급근로에 더 많은 시간 근로하며 직장의 최고위직에 도달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남성이 살인과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흔하나 여성은 배우자 폭력의 주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여성이 삶에 대한 평가를 남성보다 약간 높게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성평등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은 분명해졌다. 여성과 여자 아이들에게 전통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남성과 남자 아이들 역시 불확실한 직업 전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과제와 사회적 기대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의 웰빙의 측정은 남성과 여성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를 넘어서 각 성별의 특정 취약점, 기회와 불평등에 대한 좀 더 폭넓은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나은 웰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과 직장에서의 웰빙은 많은 OECD 국가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근로소득에서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결정하는 여러 이질적인 측면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부여 받는지 업무에서 제대로 정의된 목표와 지지해주는 동료의 존재 여부 등이 모두 고용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할 일련의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래의 웰빙

정책입안자와 일반 시민은 현재의 조치가 미래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한다. 웰빙 상태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일은 특별히 어렵는데 이는 미래 웰빙에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로서 OECD는 시간의 경과에도 웰빙을 지속시킬 자원들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가를 고찰하고 있다.

OECD는 출발점으로 최근 UN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OECD의 지속 가능한 개발 측정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작업결과를 기초로 할 것을 제안한다. 시간의 경과에도 웰빙의 지속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연,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자본 축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 자본 축적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필요한 지표의 종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공간적 수준(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에서 자본의 분배와 관리에 관한 정보 또한 중요하다. 통계적 과제의 다음 단계는 일련의 특정 지표들을 선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시한 계기판을 만드는 일이다.

제1장

OECD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 개념과 지표들

사람과 국가의 웰빙을 이끄는 동인은 무엇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웰빙의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개선할 분야는 무엇인가? 10년여의 간 웰빙과 발전을 측정하는 OECD 작업을 토대로 2011년에 시작된 “OECD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는 11개 영역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웰빙 측정을 위해 OECD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구별한다. 현재의 웰빙은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측면에서 측정된다. 본 장에서는 또한 How's Life? 첫번째 보고서 출간 이래 웰빙 측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통계학적 발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자산, 교육, 환경, 주관적 웰빙 등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다른 웰빙 분야에서의 통계학적 도전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된다. OECD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 법의 조건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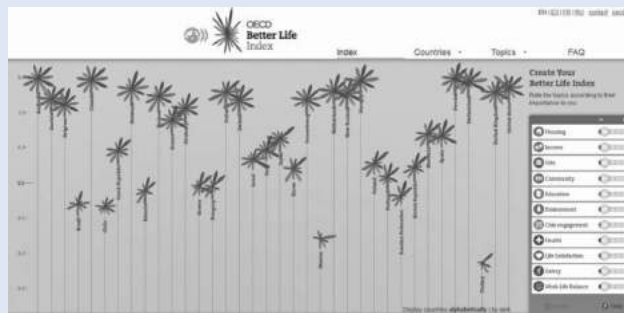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와 그 이후

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만일 나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웰빙(well-being)의 개선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웰빙은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등 사회 내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공유되는가? 오늘 더 나은 삶을 달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미래의 웰빙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웰빙과 사회적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OECD가 10여 년간 다루어 온 결과, “OECD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나오게 되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에게 중요시 되는 삶의 측면,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사람들의 삶을 규정짓는 측면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How’s Life?에 포함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웰빙 지표들과 분석 내용, 쌍방향 웹 애플리케이션인 “더 나은 삶 지수”로 구성된다(박스 1.1).

박스 1.1. 더 나은 삶 지수

더 나은 삶 지수(BLI)는 사람들을 웰빙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 나은 삶 지수(BLI, 그림 1.1)는 쌍방향 도구로 사용자들 스스로 11개의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그림 1.2).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들의 개인적 삶의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국가들의 평균 수행도를 볼 수 있고 자신들의 지수와 가중치 선택 내용을 네트워크 내의 타인과 그리고 OECD 와 공유할 수 있다. 2011년 5월에 시작된 이래 전세계 2백 6십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BLI사이트를 방문했다. 약 4만 4천개의 지수가 OECD와 공유되고 있다.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대체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만족, 건강, 교육이다.

그림 1.1.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웹 애플리케이션



주: 스크린샷은 BLI를 시각화한 것이다. 국가들은 웰빙 영역에 따라 11개의 꽃잎이 달린 꽃으로 표현된다(그림 1.2 참조). 사용자들은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여 이러한 영역들을 평가할 수 있다. 영역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들의 평가에 따른 중요도를 반영하여 꽃의 크기가 변한다. 동시에 사용자가 가장 높은 등급을 매긴 웰빙 영역에서 국가의 수행도가 좋을 경우(나뭇잎 경우), 국가의 순위가 올라간다(내려간다).

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www.betterlifeindex.org.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에는 다수의 방법론적 프로젝트와 연구 프로젝트도 포함되는데 웰빙 추세와 그 원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정보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¹

웰빙과 발전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정책 관련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 웰빙 측정은 현재 많은 통계기관(statistical offices)의 안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이는 일반인들의 삶에 있어 중요시되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를 웰빙 통계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자국의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기존의 이니셔티브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하려면 www.wikiprogress.org 참조). 이러한 이니셔티브들 중 몇몇은 OECD 지역 회의 시리즈와 2012년 10월에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통계, 지식, 정책 OECD 포럼에서 소개되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의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GDP 외의 지표와 분석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사용된 개념적 프레임워크와 지표들이 강하게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박스 1.2 참조).

박스 1.2. 웰빙과 발전 측정을 위한 최근의 국가적 이니셔티브

웰빙과 발전에 관한 작업은 학계나 정책 관련 집단에서 시작됐지만(로마클럽, OECD 글로벌 프로젝트 등) 웰빙에 대한 개념은 현재 여러 국가의 통계기관(NSOs)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각국의 통계국 또는 정부에 의해 시작된 최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¹

- **호주:** 호주통계국(ABS)은 2002년 처음으로 호주의 발전에 대한 계측(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을 출간했고 2010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했다. 2011년에 호주통계국(ABS)은 MAP를 개선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공동체와의 협의를 수행했다(MAP 2.0). 이러한 협의 과정에는 개인들과 공동체 지도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호주인들의 삶의 목적과 열망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다. 일련의 회의, 웹 기반 협의(web-based consultations)와 토론을 거치면서 수집된 피드백을 통해 예전에 MAP 이니셔티브에서 사용됐던 지표들이 제공했던 상황과의 격차가 일부 발견되었고, 진보의 새 영역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물은 발달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주통계국(ABS)에 의해 바로 이용되었다. 개정된 호주의 발달에 대한 계측(MAP)은 2013년 11월에 출간될 예정이다.
- **오스트리아:** 2012년에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How's Austria?)를 출범시켰는데, 데이터들은 물질적 부, 삶의 질,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3개의 영역에서 30개의 중심 지표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에 경제부는 오스트리아의 경제연구소(WIFO)와 공동으로 연구결과물(Mehrl's Wachstum, “성장을 넘어서(More than Growth)”)을 출간했다. 이 연구결과물은 특히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영역들에 대한 추가적 지표들로서 OECD의 How's Life? 지표군을 보완했다. 면접 조사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웰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과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한 순위를 매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후 지표들을 합산해서 오스트리아인의 종합적 웰빙 지수를 구하였다.
- **프랑스:** Stiglitz-Sen-Fitoussi보고서²가 출간된 이래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은 기존의 가구 조사에 삶의 질 변수들을 도입했고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복합 양식의 조사(multi-modal survey)를 도입했다. 이 조사는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Stiglitz et al., 2009)가 처음으로 모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질의 양상에 대한 복잡한 측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박스 1.2. 웰빙과 발전 측정을 위한 최근의 국가적 이니셔티브(계속)

- **이탈리아:** 2011년에 이탈리아 국가통계청(ISTAT)과 국가경제노동자문위원회는 기업, 노동조합, 민간사회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탈리아 사회 발전측정 공동 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정위원회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웰빙(BES)”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사회에 가장 적절한 웰빙 영역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의 공개적 의견수렴(온라인 조사를 이용함)을 기반으로 했다. 이 조정위원회는 2013년에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표들은 ISTAT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 **멕시코:** 멕시코 국가통계청(INEGI)은 3 단계 전략에 따른 일군의 웰빙 통계를 개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관련 국가, 지역 및 국제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장려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멕시코 국가통계청(INEGI)의 웹 페이지에 해당 하위섹션에서 입수 가능한 웰빙 통계치를 수집하고 보고하며 기존의 조사에 새롭게 포함된 다수의 질문들을 기반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가구 소득 및 지출 조사, 생활시간 조사, 시민의 신뢰 및 공공 인식 조사)을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웰빙 지표군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 **포르투갈:** 포르투갈 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tistica)은 최근에 웰빙 지수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수는 2013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포르투갈 통계청은 또한 2012년 이래 80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들을 해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 **영국:** 2010년에 영국 총리는 국가의 통계전문가들에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는 “국가적 토론(National Debate)”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가통계국(ONS)의 국가 웰빙 측정 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에 의해 운영됐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측정할 질문들에 대해 사람들 및 단체들과의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이 설립되었다. 참여 횟수가 3만 4천건을 넘어섰고 국가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얻은 최초의 결과는 2011년 6월에 출판되었다. 2012년 7월에 국가통계국(ONS)은 처음으로 연례 주관적 웰빙 추정치와 개정된 영역들 및 측정치들을 발표했다. 2012년 11월에 “2012 영국에서의 삶”에 관한 첫 번째 연례 보고서와 웰빙 지표들이 포함된 국가적 웰빙 “whee”가 발간되었다. 국가통계국(ONS)의 웰빙 측정치들은 환경식품농림부(DEFRA)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와 결합해서 영국 시민들이 국민으로서 중요시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미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주기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통계국(Scotland Performs)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성공적인 국가를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룬 진척사항을 측정하고 보고한다. 스코틀랜드 통계국(Scotland Performs)은 국가 수행도 프레임워크(National Performance Framework)에서 설정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제시한다.

박스 1.2. 웰빙과 발전 측정을 위한 최근의 국가적 이니셔티브(계속)

아래와 같은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 유럽의 유럽통계시스템위원회(ESSC)는 “GDP와 그 이면의 소통(GDP and Beyond Communication)”과 Stiglitz-Sen-Fitoussi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근거하여 “발전, 웰빙과 지속가능한 개발 측정 스폰서그룹(Sponsor Group on Measuring Progress,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설립했다. 유럽통계시스템위원회(ESSC)는 스폰서그룹의 몇 가지 권고들을 활용하여 EU를 위한 일련의 삶의 질(QoL) 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들은 EU 내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를 결합한 최초의 시도로 간주된다. 또한 이 지표들은 기존의 조사에 포함된 새로운 임시 모듈(EU-SILC 2013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모듈 등)로부터의 결과가 입수 되고 방법론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개선될 것이고 추가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보완될 것이다.
- 유럽 차원에서 EU의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관련 지표들은 전략적인 목표 달성과정을 감독하는 특정 중점 지표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 WHO/Euro는 유럽 내 웰빙의 측정과 웰빙 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럽 건강 2020(European Health 2020) 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일환으로서 웰빙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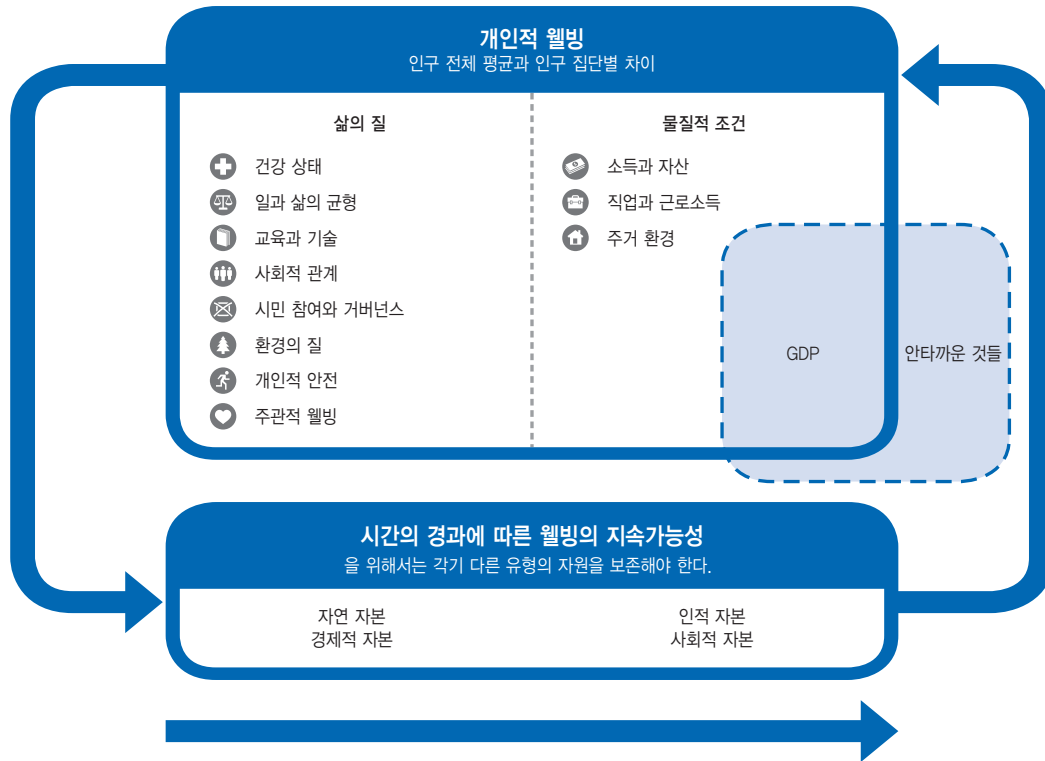
1. 유럽 국가들의 경우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quality_life/links#5도 참조할 것.

2. 2008년에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진보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설립했는데 이 위원회는 Joseph Stiglitz,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에 의해 주재되고 관장된다. 이 위원회는 2009년 9월에 웰빙과 진보의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과 관련한 약 30가지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출간했다(Stiglitz et al., 2009). How's Life? 는 이러한 권고 중 다수의 권고를 활용하고 있다.

웰빙의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그림 1.2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니셔티브에서 웰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하기 위해서 OECD가 사용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박스 1.3 참조).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구별한다. 현재의 웰빙은 물질적 삶의 조건(소득과 자산, 직업과 근로소득, 주거조건)과 삶의 질(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영역에서 성취된 성과의 측면에서 측정된다. 미래의 웰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결정하고 오늘날 취해진 조치들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 자원들을 관찰함으로써 평가되는데, 이 자원들은 다른 유형의 “자본”에 관한 지표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 제6장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How's Life?의 접근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그림 1.2. OECD 웰빙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출처: OECD(2011), How's Life?: 웰빙의 측정, OECD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웰빙과 발전을 측정할 최선의 방법들, Stiglitz-Sen-Fitoussi 보고서의 권고 내용,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과 OECD 통계 위원회에 파견된 각국의 통계국 대표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4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진다:

- 첫째,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사람들(개인과 가구 등), 그들의 상태와 그들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공동체에서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인·가구의 웰빙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스 1.3.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개념적 토대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Sen, 1985가 제안한 역량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다(Alkire and Sarwar, 2009; Anand et al., 2009; Anand et al., 2011 참조). 이 접근법은 좋은 직업을 갖는다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등 사람들이 하는 일(기능)과 사람들이 그 기능을 선택할 자유(역량) 모두의 웰빙에 대한 다차원적 정의에 근거한다. 이러한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조건과는 상관없이(즉, 성과를 달성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무시함) 웰빙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명 “결과주의 접근법(welfarist approach)”과는 다르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기능과 역량을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선택할 개별 대개체(individual agency)와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OECD 프레임워크는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를 망라하는데 이 영역들이 좋은 삶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웰빙의 증가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 프레임워크는 정책 입안가와 국가 통계청이 수집하고 사용하는 지표들을 통해서 역량 접근법이 운용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웰빙 조건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추이를 감독하기 위함이다. 프레임워크를 운용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첫째,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기능들과 역량들의 목록을 선정하고 둘째, 각 기능과 역량을 측정할 구체적 지표들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과 역량 측면에서, OECD는 물질적 삶의 조건들과 삶의 질 영역에서의 웰빙을 다수의 연구 문헌(Stiglitz et al., 2009; 검토를 하려면 Sen, 1998; Nussbaum, 2011 참조)에 의거하여 정의 내렸다. OECD 프레임워크 내에서 11개의 웰빙 영역은 기능이면서 역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건강은 그 자체가 기능이면서도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직업의 종류와 여가의 유형 등)을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역량이기도 하다. 선택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역량의 영역도 넓어진다.

개념적 관점에서 보면 OECD 접근법은 유엔개발계획(UNDP)가 인간개발지수(HDI)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접근법과 비슷하다. OECD 접근법은 인간개발지수(HDI)의 범위를 확대시켰는데 유엔개발계획(UNDP)이 고려했던 3가지 영역(소득, 건강, 교육)이외 추가적인 영역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출처: Boarini, R. and Mira d'Ercole(2013), “GDP 를 넘어서: OECD 관점”, 웰빙에 관한 재정 연구 특별호(근간 예정)에서 발췌함.

- 두 번째,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웰빙 투입(input) 또는 산출(output)이 아닌 웰빙 성과에 집중하는데 성과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OECD 접근법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정부가 지출을 하였는가 또는 몇 마일의 수도관을 건설했는가 아닌 사람들의 물에 대한 만족도에 중점을 둔다.
- 셋째, OECD 접근법은 평균적인 웰빙 수준과 함께 인구 내의 웰빙 분포, 특히 연령집단, 성별(gender)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웰빙 격차를 고려한다.
- 마지막으로, OECD 접근법은 웰빙의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는데, 개인적 경험과 삶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은 11개의 영역(소득과 자산, 직업과 근로소득, 주거,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으로 나뉜다. 이러한 영역들을 선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소득과 자산 영역은 경제적인 자원을 측정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인 자원을 현재 또는 미래의 다양한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과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일자리의 가용성과 질은 사람들의 웰빙과 관련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통솔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서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 주택에 대한 접근성과 주택의 질은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본질적 중요성 외에도 이들은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적 관계, 일자리·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다양한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교육과 기술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 욕구이자 열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다른 경제적 성과들과 비경제적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은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여가, 개인적 돌봄, 기타 다른 비업무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웰빙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공동체의 웰빙을 결정하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수행한 활동이 가장 즐겁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며,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는 등 기타 다수의 중요 목적을 달성할 때 유익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자연 환경의 질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그들이 여러가지 활동(자녀양육, 사회생활 등)을 수행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동일한 이유로 안전한 환경 즉 강도나 폭행의 위험이 낮은 환경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이 웰빙을 누리게 하는데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의 객관적 측면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그들의 주관적 웰빙을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11개의 영역은 보편적인 것, 즉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과 국가마다 다르다. 살고 있는 국가와 공동체에 따라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영역별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은 자국민들의 웰빙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이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수 있다(어떤 영역을 통합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며 또는 국가별로 특정 영역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문화를 자국의 웰빙 지표인 BES(Benessere Equo sostenibile; www.misuredelbenessere.it)의 12 번째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역들에서 성과를 감독하기 위해 사용할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의 구체적 상황, 역사, 도전과제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위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이 분야에서 스스로의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억지로 구속하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이 프레임워크는 의미 있는 국제적 비교를 위한 벤치마크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표의 선정

How's Life?에서 사용된 중요 지표들은 다수의 양적인 기준(개념적 그리고 정책적인 관련성, 기본 데이터의 품질, 사용된 개념과 조사 문항들의 비교가능성, 편차 빈도 등)에 각기 다른 정도로 부응한다(지표들과 지표의 선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보려면 박스 1.4와 OECD 2011 참조). 이러한 지표들의 선정은 How's Life?의 첫 번째 보고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1년 OECD 전문가들과 OECD 회원국의 국가통계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선택된 지표를 근거로 하며 범위를 약간 확대시켰지만 첫 번째 보고서와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

선택된 지표군은 OECD의 관점에서 볼 때 11개의 웰빙 영역의 성과들에 대한 현재로서 최선의 대리지표(proxy)로서 위에서 말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의 공식 데이터가 국가간에 충분히 비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How's Life?는 비공식적 출처에서 온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출처들은 표본 크기, 표집 틀, 데이터 수집 방법 측면에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폭넓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많은 국가들에 적용되는 일치된 설문지에 기초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² 비공식적 출처들에 기반한 지표들은 이 분야에서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비교가능한 공식적 통계들이 개발될 때까지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물들은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일부 주관적 지표들은 국가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 할 때 주의를 해야한다.

How's Life? 지표들은 실험적이며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은 측정 방법이 개발되고 다양한 웰빙 영역들을 아우르는 더 적절한 지표들에 대해서 국가가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 지표들은 변할 것이다.

지표들의 대시보드를 통한 웰빙의 측정

OECD에 의해 채택된 웰빙의 정의는 다차원적이다. 전통적으로 다차원적 개념은 일군의 지표들(dashboard)을 통하거나 종합 또는 복합 지표를 통하여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종합 지표는 종합화를 하면서 야기되는 정보의 손실과 단일 지수에 도달하기 위해 영역별/하위요소별로 적용되는 가중치에 대한 자의적 가정 때문에 자주 비판을 받는다(Stiglitz et al., 2009; Fleurbaey, 2009 참조).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사용자가 자신의 웰빙에 중요시 하는 정도에 따라 영역별로 다른 가중치를 주어 자신만의 종합적 지표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의적 가중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박스 1.1).

박스 1.4. How's Life?의 2011년 보고서와 2013년 보고서에서의 중심 지표들

그림 1.1에 나타난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지표들의 선정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지표들의 선정을 위해 고려되는 결정적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i)개인 또는 가구 단위에서 웰빙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ii)웰빙 성과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닌 웰빙 성과 자체를 측정해야 한다; iii)분석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서 인구 집단별 웰빙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iv)성과들의 복합적인 분포를 측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한 영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개인이 다른 영역에서도 나쁜 성과를 경험하는 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심 지표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표준적 통계 요건들을 충족하는 지표들이 선택되었다: 표면적 타당성(face validity: 해당 개념의 직관적 측정방법을 제시해야 함)을 가짐; 요약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춤(구체적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님); 변화를 수용하고 정책적 개입에 민감함; 국가간 비교가 가능함; 통계분야와 그리고 학계에서 웰빙의 측정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짐; 많은 국가들을 다룸; 빈도가 매우 높고 시의 적절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함(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려면 OECD, 2011 참조). 현재 선택된 지표들은 대개 위의 기준들을 충족하지만 양질의 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선택된 지표들의 질은 향상 될 것이다.

2011년 판 How's Life?는 중심 지표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질이 상당히 우수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과 국가별 웰빙의 감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과 보완적 증거를 제공하는 부차적 지표들(해당 영역의 좀더 구체적 측면들을 다루는 지표들로서 많지 않은 국가를 다루거나 중심 지표들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출처에 근거함)로 구분했다. 대부분 지표들이 공식 통계(OS)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에 소수의 지표들은 비공식적 통계(NOS)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2011년에 각 영역에 대한 중심 지표들을 다음과 같다:

- 소득과 자산: 가구 1인 당 순가처분소득(OS); 가구 1인 당 순금융자산(OS)
- 직업과 근로소득: 고용률(OS), 장기 실업률(OS), 전일제 근로자의 연평균 총소득(OS)
- 주거 상태: 개인당 방의 개수(OS), 기본 시설이 없는 가구(OS)
- 건강상태: 기대수명(OS), 자기 보고 건강상태(OS)
-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근로자(OS),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OS)
- 교육과 기술: 학력(OS), 학생들의 인지능력(OS)
- 사회적 관계: 사회 관계망 지원(NOS)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참여율(OS), 규칙제정에 대한 협의(OS)
- 환경의 질: 대기의 질(OS)
- 개인적 안전: 고의적 살인(OS), 자기보고 피해율(NOS)
-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NOS)

OECD 국가의 국가 통계청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5개의 새로운 중요 지표들이 2011년에 사용되었던 지표들을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동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박스 1.4. How's Life?의 2011년 보고서와 2013년 보고서에서의 중심 지표들(계속)

- 주택의 구입능력(*affordability*)을 측정하는 주택 비용(*OS*)
-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 기회를 측정하는 교육기대년수(*OS*)
- 대기의 질을 측정하는 중심 지표에 의해서는 파악되지 않는 환경의 한 가지 특정한 측면 예를 들면 (물)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수질에 대한 만족도(*NOS*)
- 고용 불안과 불안정을 측정하는 단기 고용기간(*OS*)
- 성인인구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성인 역량(*OS*)

지표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출처는 제2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지표들과 지표들의 해석과 관련된 찬반양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OECD, 2011을 참조할 수 있다.

종합 또는 복합 지표의 또 하나의 도전과제는 어느 수준에서 합산을 하느냐이다. 개념적인 면에서 볼 때 개인 단위에서 웰빙 성과들을 합산한 복합지표(*synthetic index*)가 웰빙 성과의 국가 평균을 합산한 종합지표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복합 지표가 개인 단위에서 성과들의 복합적인 분포(즉 소득 분포의 하위에 속한 사람들이 건강, 기술 등의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성취도를 경험하는 지를 고찰하는 것 등)와 개인의 선호도에 근거한 가중치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Schokkaert and Decanq, 20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복합지표는 개인 단위의 데이터와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동일한 설문조사로부터 입수 가능한 경우에만 구축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How's Life?는 종합 또는 복합 지표를 구축하지 않으며 그 대신 25개의 중점 지표들로 구성된 지표군을("Dashboard") 제시한다.³

지표군 접근법은 각 웰빙 영역에 대한 분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어떤 영역이 국가의 전반적 웰빙 수행도를 이끄는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에,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모습을 띄고 있고 웰빙 성과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How's life? "교통 신호등(*traffic light*)" 접근법을 이용하여 25개의 중점 지표들(전체 인구의 평균적 웰빙 성과를 측정함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한다(표 1.1). 교통 신호등은 11개의 웰빙 영역들(가중치를 주지 않음)을 가지고 국가들을 비교한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표 1.1의 상위 20% 국가들은 동그라미(녹색 신호등을 나타냄), 중간 60%는 삼각형(노란 신호등), 그리고 하위 20%는 다이아몬드(붉은 신호등)로 나타난다.

교통 신호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 스위스, 호주, 노르딕 국가들,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은 가장 좋은 수행도를 보인다.
-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체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은 보통의 수행도를 보인다.
- 터키, 브라질, 멕시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그리스, 칠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도를 보인다.

교통 신호등 접근법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들간의 상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가들의 발전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이 접근법은 데이터 분석 기법이 아닌 국가를 군집화 하기 위해 설정된 전통적 기준에 의존한다(예: 클러스터링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s Life?** 지표들에 대해 발견된 패턴들은 일정한 시점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며, 다른 순위 매기기 혹은 통합 방법론을 통해 얻은 결과와 잘 일치되는 경향이 있다.

웰빙 수행도는 다양한 그리고 대개는 상호 연관된 요소들의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다양한 웰빙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들을 보여준다(부록 1.A1의 표 1.A1.1 부터 1.A1.3까지 참조). 웰빙을 견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부록 1.A1는 단순한 설명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슈에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다.

How's Life? 의 통계적 과제: 2011년 이래 진전

How's Life?의 중요한 목적은 향후 통계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이 과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How's Life?**의 첫 번째 보고서는 **How's Life?**의 각 웰빙 영역에서 더 나은 측정 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다수의 도전과제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표 1.1. 중심 웰빙 지표들의 개요

*"동그라미"는 상위 20%에 속하는 국가들, "다이아몬드"는 하위 20%의 국가들, "삼각형"은 중간 60%에 속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연도	물질적 삶의 조건들									삶의 질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거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상태	
	가구 순가처분 소득	가구 순금융 자산	고용률	개인 근로 소득	고용 기간	장기 실업률	개인당 방의 개수	주거 지출	기본 시설이 없는 가구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기대 수명	자기 보고 건강
2010	2010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00년경	2011	2011
호주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브라질			▲		◆				◆	◆		◆	
캐나다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연도	물질적 삶의 조건들									삶의 질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거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상태	
	가구 순가처분 소득	가구 순금융 자산	고용률	개인 근로 소득	고용 기간	장기 실업률	개인당 방의 개수	주거 지출	기본 시설이 없는 가구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기대 수명	자기 보고 건강
	2010	2010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11	2000년경	2011	2011
그리스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표 1.1. 중심 웰빙 지표들의 개요(계속)

"동그라미"는 상위 20%에 속하는 국가들, "다이아몬드"는 하위 20%의 국가들, "삼각형"은 중간 60%에 속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연도	삶의 질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관적 웰빙
	학력	교육 기대 연수	학생들의 인지 능력	성인 인구의 역량	사회 관계망 지원	규칙 제정에 대한 협의	투표 참여율	수질에 대한 만족도	대기 오염	신고된 살인	자기 보고 피해율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0	2009	2009	2012	2008	2000년경	2012	2009	2010	2010	2012	
호주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브라질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연도	삶의 질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관적 웰빙
	학력	교육 기대 년수	학생들의 인지 능력	성인 인구의 역량	사회 관계망 지원	규칙 제정에 대한 협의	투표 참여율	수질에 대한 만족도	대기 오염	신고된 살인	자기 보고 피해율	삶에 대한 만족도
2010	2010	2009	2009	2012	2008	2000년경	2012	2009	2010	2010	2012	
슬로바키아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269>

2011년에 발견되었던 도전과제들 중 다수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 졌다. 특별히 아래의 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 **소득과 자산:** 2013년 6월에 OECD는 가구자산에 관한 미시통계 지침(<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을 발간했다. 동 지침서는 자산 통계를 생산할 때 국가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개념적, 정의적,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현재 입수 가능한 국가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서로 별개이지만 경제적인 웰빙으로서 연계되어 있는 영역인 가구소득, 소비, 자산에 관한 미시통계의 결합 분석을 지원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가구소득, 소비, 자산의 분포에 대한 OECD 프레임워크)(<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또한 2011년에 출범한 국민계정 프레임워크 내의 격차를 측정하는 OECD-유럽통계청 전문가 그룹(EG DNA)은 가구소득, 소비, 자산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미시적 출처와 거시적 출처 사이의 심층 비교를 최근에 완료했으며 국민계정의 총계와 일치하는 가구 소득, 소비, 저축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적 가구 계정을 개발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또한 최초로 가계 금융 및 소비 조사(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를 수행했는데 이 조사는 유로통화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자산과 재정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 **직업과 근로소득:**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지표(ILO, 2012)의 개념과 정의에 관해서 최근에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 매뉴얼은 고용의 질에 대한 통계상 과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 매뉴얼은 ILO 양질의 일자리 야젠다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발달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개발될 지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적·현실적 지침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UN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유럽통계청/ILO와의 협력을 통해서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UNECE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다양한 영역들을 측정하기 위한 운영 지침을 개발 중이다(UNECE, 2010).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방법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동 보고서의 제5 장은 고용의 질과 동 분야에서의 다양한 통계적 격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도전과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직업과

근로소득 부문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ILO에 의해 착수되었는데 이는 국제노동통계관회의(ICLS)의 고용/실업 통계에 관한 표준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에 개정이 완료되면 무급 노동과 한계근로자에 대한 측정 방법이 개선될 것이다.

- **건강상태:** UN유럽경제위원회-세계보건기구-유럽통계청의 도시 건강상태 측정 대책위원회(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와 장애통계에 관한 워싱턴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은 “기능”을 측정하는 6가지 세트의 문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병적상태에 관한 국제적 비교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고 병적상태와 광범위한 삶의 질 문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항들은 2020 인구조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UN통계위원회에 의해 권고되었지만,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지표들의 공통 벤치마크를 제공하려면 그 시행이 장려되고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건강면접조사(EHIS)는 EU에서 2014년에 수행될 것인데 인지된 건강상태와 장애, 건강 결정요인, 의로서비스(미충족 의료 수요 포함)에 대한 개별국가 수준과 EU 국가들 간의 일치된 조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 **교육과 기술:** OECD에 의해 수행된 새로운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PIAAC)는 일군의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성인인구의 기술수준, 기술분포, 다른 상황에서의 기술 활용에 대한 평가·감독·분석하는 일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조사는 기술의 측정뿐만 아니라 기술 축적의 동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술이 사람들의 웰빙에 좀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 **일과 삶의 균형:** 생활시간 조사(Time Use Survey) 전담반은 유럽통계기관장 회의(CES)에 의해서 2010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목적은 생활시간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하여 최신기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편찬하고 조사결과와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2013년 6월에 발표된 지침은 다음의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통계 관련 분야에서는 추가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분야는: i) 생활 시간 조사의 정책적 타당성; ii) 생활 시간 사용에 대한 주요 통계적 측정 방법의 가용성과 비교가능성; iii) 생활 시간 조사의 주기; iv) “약식”생활 시간사용 일지와 전체 생활 시간 사용 일지의 활용; v) 활동 분류 등이 포함된다.
- **환경의 질:**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체제는 UN통계국, 유럽통계청, OECD,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몇몇 국가통계청이 참여한 국제적 전담반(task force)의 공동 사업으로 UN통계위원회에 의해 2012년에 국제적 통계표준으로 승인되었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환경과 경제 간 연관관계를 설명하고 이 연관관계의 사회경제학적 측면을 다루는 총체적 접근법(systemic approach)을 제안하고 있다.⁵
- **주관적 웰빙:** 2013년 3월에 OECD는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일련의 OECD 지침을 발표했다(www.oecd.org/statistics/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htm). 이 지침은 주관적 웰빙 데이터의 수집·출판·분석에 대한 권고를 제시한다. 이 지침은 어떻게 주관적 웰빙의 측정 방법들이 정책 수립과 관련될 수 있고, 국가 통계기관들이 기존 평가 방법들의 유용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있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한다. 이 지침에는 또한 국가 기관과 국제 기관이 가구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기본 조사 표준이 들어있다. 2013년에 주관적 웰빙과 관련한(EU-SILC: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 특별한 표준을 EU에서도 활용했는데, 이 측정 표준은 삶의 전반적 경험과 관련된 다수의 주관적 변수들에 대한 EU 수준과 개별 EU 국가 수준(대부분 국가의 경우 하위 국가적 수준)에서의 일치된 조사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웰빙 변수들은 거버넌스와 기본적 권리, 물질적 삶의 조건들, 정신건강, 생산적이며 가치있는 활동들, 여가와

사회적 관계, 자연과 생활 환경, 경제적·물리적 안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집될 것이며 그 결과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에서의 수행도에 대한 결합적인 분포 연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결론

본 1장은 How's Life?의 근거가 되는 OECD 웰빙 측정 체계를 제시하였고 그 측정 체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OECD 국가들과 국제적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대한 설명을 했다. 본 장은 또한 웰빙 지표들을 소개하였는데 지표들의 선정에 대한 기준과 지표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강조했다. 이 지표들은 “교통 신호등” 형태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How's Life? 중요 지표들에 의해 측정된 국가의 전반적 웰빙 성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장은 How's Life? 2011년 판 발간 이래 웰빙 측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소득과 자산, 교육, 생활의 환경적 질, 주관적 웰빙의 영역에서 특히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특히 비교 가능한 측정 항목들의 체계적 수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측정 체계의 시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주

1.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oecd.org/progress를 참조하십시오.
2. 예를 들면 갤럽세계조사(GallupWorld Poll),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가 있다.
3.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웰빙 성과들이 합산되어 만들어지므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는 성과들의 결합분포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4. 단순화를 위해서 교통신호등표는 전체 인구의 How's Life? 중심 지표들(예:학력)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평균을 기준으로 표현된다(예:가구평균소득). 그러므로 교통신호등은 전체 인구에 대한 웰빙 성과분포를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한다. 제2장은 How's Life?의 일부 지표들의 성과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특정 인구 집단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는 4가지의 계정, 즉 i) 흐름계정(flow accounts); ii) 축적 계정(stock accounts); iii) 활동/목적 계정(activity/purpose accounts); iv) 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체계(SNA)의 경제 계정을 조정한 계정을 통합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측정”에 관한 내용을 보려면 제6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문헌

Alkire, S. and M.B. Sarwar (2009),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Poverty and Well-being*,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xfor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Oxford.

Anand, P., M. Durand and J. Heckman (2011), “Editorial: The Measurement of Progress – som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174, pp. 851-855.

- Anand, P., G. Hunter, I. Carter, K. Dowding, F. Guala and M. van Hees (2009), “The Development of Capability Indicator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Capabilities*, No. 10, pp. 125-152.
- BES (Benessere Equo Sostenibile), www.misuredelbenessere.it/index.php?id=38.
- Boarini, R. and Mira d’Ercole (2013), “Going Beyond GDP: An OECD Perspective”, *Fiscal Studies Special Issue on Well-Being*, forthcoming.
- European Commission (2013), *Beyond GDP: Measuring progress and true wealth, and the well-being of nations*, www.beyond-gdp.eu/ (accessed 22 July 2013).
- Eurostat (2013), *Quality of Life Indicator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quality_life/introduction (accessed 22 July 2013).
- Fleurbaey, M. (2009), “Beyond GDP – The Quest for a Measure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7(4).
- Fleurbaey, M. (2006), “Capabilities, Functionings and Refined Functioning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7/3, pp. 299-310.
- ISTAT (2011) (Itali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teering Group on the Measurement of Progress in Italian Society, http://en.istat.it/salastampa/comunicati/non_calendario/20101227_00/Cnel_EN.pdf.
- Nussbaum, M.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2), *Highlights and Conclusions*, 4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Measuring Well-Being for Development and Policy Making, www.oecd.org/site/worldforumindia/OECD-World-Forum-2012-India-proceedings.pdf.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9344-en>.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2/2012 of 24 January 2012,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177/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Community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as regards the 2013 list of target secondary variables on well-being,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022:0009:0015:EN:PDF>.

Schokkaert, E. and K. Decancq (2013), *Beyond GDP: Measuring Social Progress in Europe*, www.kuleuven.be/euroforum/viewpic.php?LAN=E&TABLE=DOCS&ID=857.

Sen, A. (1998),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Holland Publishing, Amsterdam.

Stiglitz, J.E., A. Sen and J.P. Fitoussi (2009),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the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New Press.

부록 1.A1

전체 웰빙 성취도에서 국가의 상대적 장단점 평가

그림 1.A1.1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들은 여러 다른 영역들에서 좋은 수행도를 보임으로써(혹은 나쁜 수행도를 보임으로써) 골고루 좋은 전반적 웰빙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와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수행도가 좋지만 호주가 캐나다보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영역에서 더 수행도가 높고 소득과 자산,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노르딕 유럽국가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는 최고이지만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는 스위스와 캐나다에 뒤진다. 전체적으로 같은 수행도(즉, 삼각형(노란 신호등)이 1/3 이상임)를 보인 국가들이라 해도 특정 웰빙 영역의 수행도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교육과 기술에서 프랑스보다 낮지만 건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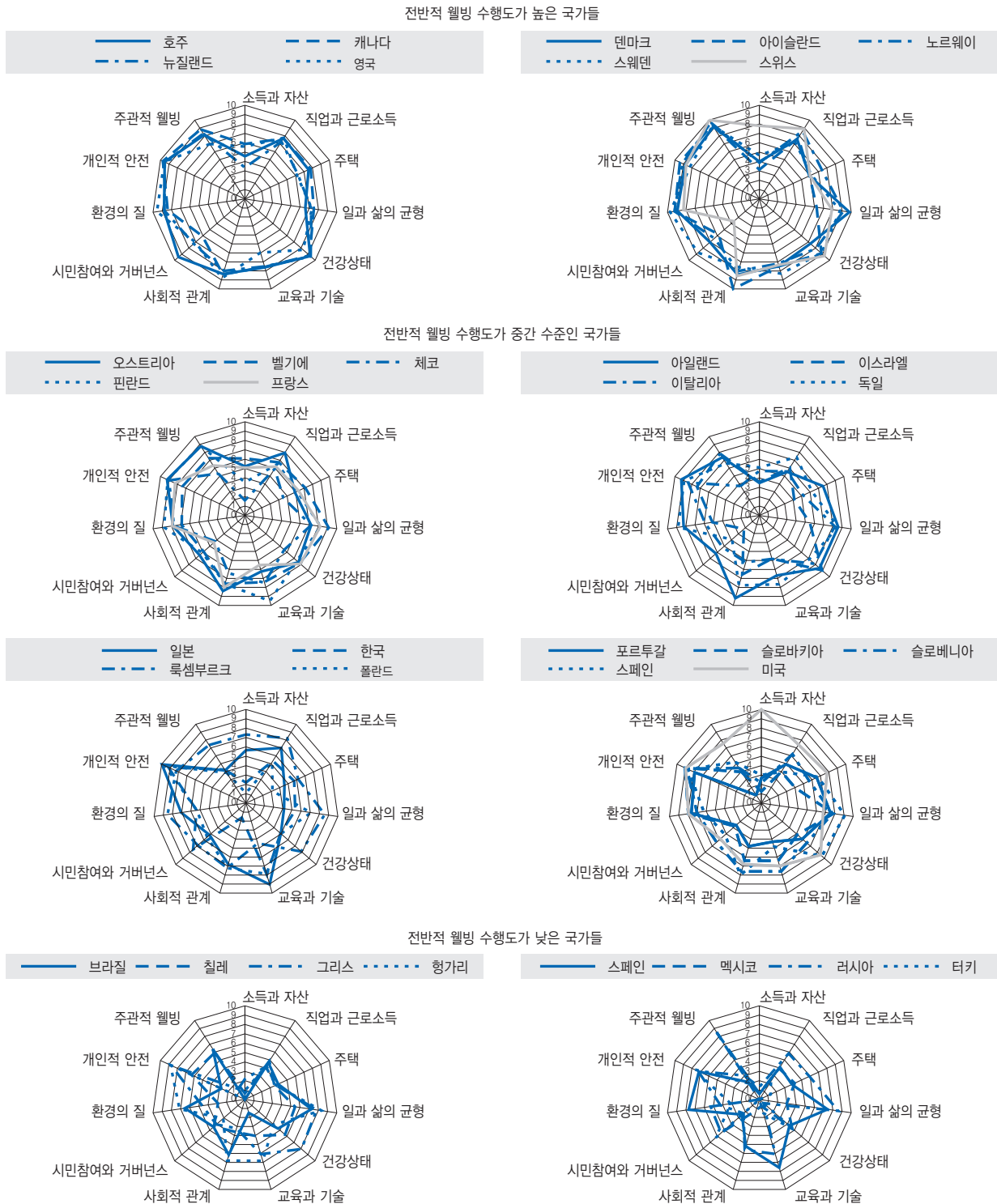
사례분석 통해서 다양한 성취도의 이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패턴이 드러난다.

- 건강상태, 주관적 웰빙,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직업, 교육 영역에서 비교적 좋은 수행도를 보인 국가들은 전체적 웰빙 성취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그림 1.A1.2).
- 균형잡힌 웰빙 패턴은 전체적으로 높은 웰빙 수행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데(그림 1.A1.3) 즉 11개 영역에서 균등한 수행도를 보인 국가가 전체 순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 마지막으로 전반적 웰빙 수준은 소득 또는 교육적 불평등 부문의 웰빙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것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그림 1.A1.4).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불이익과 평균적 웰빙 성과와의 관련성은 1인 당 GDP수준을 통제를 한 이후에도 평균 웰빙 성과와 이동빈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한 발견된다. 이동빈곤은 아동의 발달과 웰빙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쳐서 평생성과(long-life outcomes)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조를 하려면 OECD, 2009 참조).*

*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초기 웰빙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화되고 성인기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A1.1. 국가별로 다른 웰빙영역별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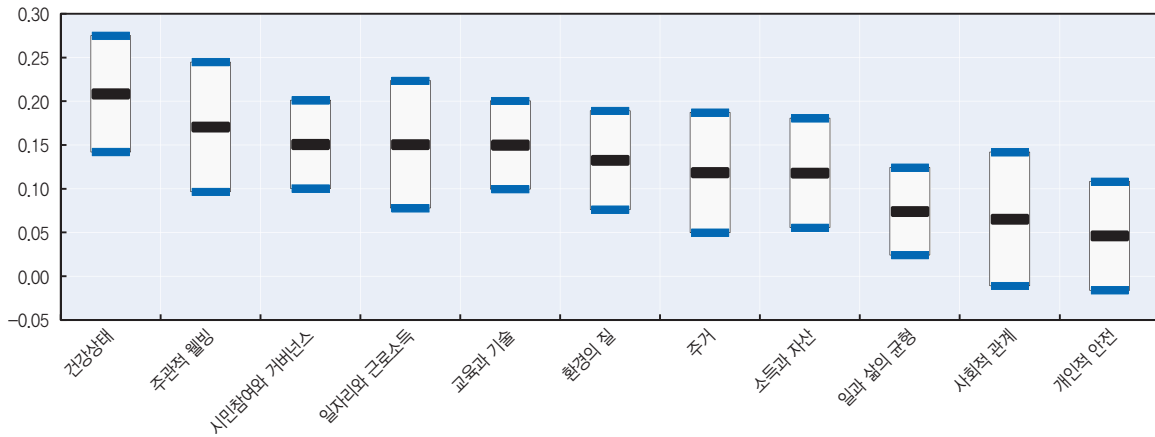


주: 위의 그림들은 How's Life? 의 11개 웰빙 영역에서의 표준화된 수행도를 보여준다. 수행도는 각 영역에 포함된 중요 지표들의 단순평균으로 계산되며 표 1.1에서 제시되었다. 점수는 비율척도 변환을 거쳐 표준화되며 0부터 10까지로 표현된다.

출처: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597>

그림 1.A1.2. 전반적 웰빙 수행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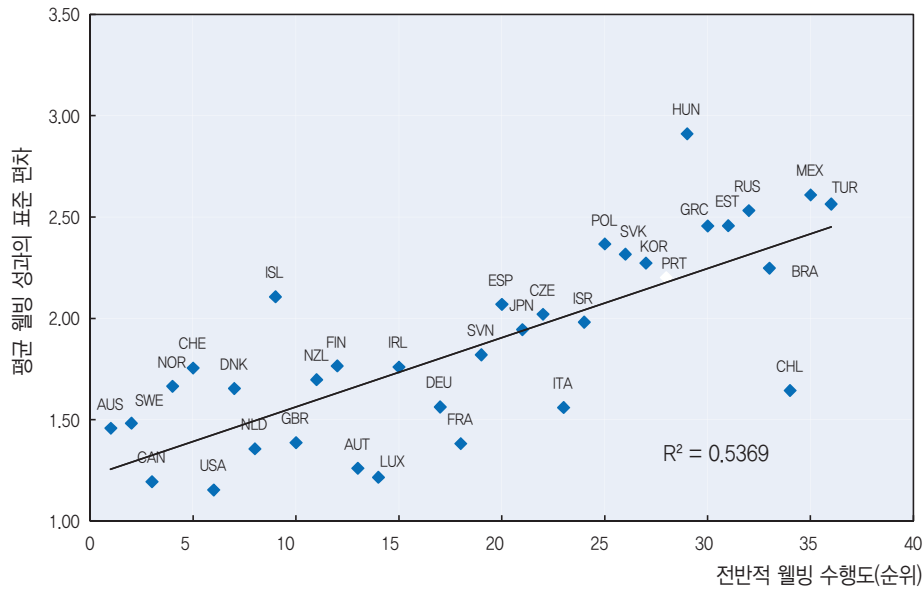


주: 그림은 11개 웰빙 영역에 대한 전반적 웰빙 수행도의 탄력성(elasticities)을 보여주는데 웰빙 영역(표준 점수)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순위(동일 가중치 부여)를 회귀시킴으로써 얻는다. BLI 계산을 위해 동일 가중치를 선택한 것은 예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이 그림은 점추정(굵은 검정선)을 나타내며 95%의 신뢰구간을 보인다.

출처: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616>

그림 1.A1.3. 웰빙 수행도와 지표간 수행도 분산 사이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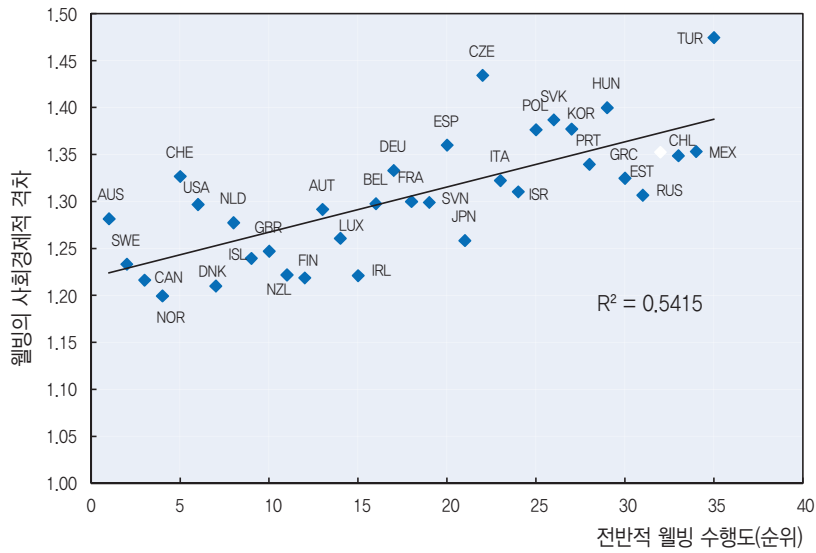


주: 순위는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방법론(동등가중치)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가중치의 선택은 예시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출처: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635>

그림 1.A1.4. 웰빙 수행도와 웰빙의 사회경제적 격차 간 상관관계



주: 그림은 전반적 웰빙 수행도 측정치(동일가중치를 부여한 BLI 순위)와 사회경제적 격차(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개인 대비 낮은 개인의 지표 값 비율)의 평균 측정치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가 입수 가능한 How's Life? 영역들에서 웰빙 성취도이다. 사회경제적 격차의 평균 측정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보려면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654>

제2장

한눈에 보는 How's Life?

OECD 국가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본 장에서 웰빙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OECD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국가들의 웰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진단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웰빙 영역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OECD 웰빙 프레임워크 내의 11개 영역에서의 발전은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국가간 패턴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국가 내에서 인구 집단별 웰빙의 수행도 역시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된다. OECD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 법의 조건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한다.

본 장은 국가간 격차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며 가능한 경우 How's Life? 중심 지표들에 근거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 성과의 차이에 관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증거는 평균적 웰빙 패턴과 전체 인구 내 웰빙 분배에 관한 엄선된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개의 중심 분야 내에서의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11개 영역을 다루며 주제별로 구성된다(제1장 참조).

소득과 자산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개인의 웰빙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자원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많은 다른 목적들을 추구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증대시키며 경제적·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How's Life? 중심 소득 지표인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은 국가간 격차(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가 크다(그림 2.1). 2011년에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OECD 국가 중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 수준이 가장 낮았던 칠레의 거의 4배였다.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은 지난 10여년간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증가하였는데 미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995년 이래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이 그리스에서 감소했고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1인 당 가구금융자산의 국가간 격차(정의를 보려면 박스 2.1 참조)가 가구순가처분소득(HNADI)의 경우보다 더 크다(그림 2.2) 2009년에 1인 당 가구금융자산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미국에서 소득의 약 3배였음) 노르웨이와 동유럽국가들이 가장 낮았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가구금융자산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증가하여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던 반면 아일랜드, 스위스, 그리스에서 감소했다

박스 2.1. 소득과 자산의 측정

위에 제시된 두 개의 중심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은 가구에서 자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가구 구성원이 소비할 여력이 되는 최대 금액이다. 가구 구성원의 총 소득(근로소득, 개인사업 소득과 자본소득, 타 부문으로부터 받은 당좌 현금이전)과 정부로부터 가구가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을 더한 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가구에서 내는 사회보장기여분과 가구에서 소비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으로써 계산된다.
- 1인 당 순금융자산은 국민계정체계(SNA)의 정의에 따라 화폐용 금(monetary gold), 현금과 예금,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 대여금, 주식과 기타 자기자본(투자펀드에서 발행한 주식 포함), 기술적 보험준비금, 기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서 가구금융부채를 뺀 액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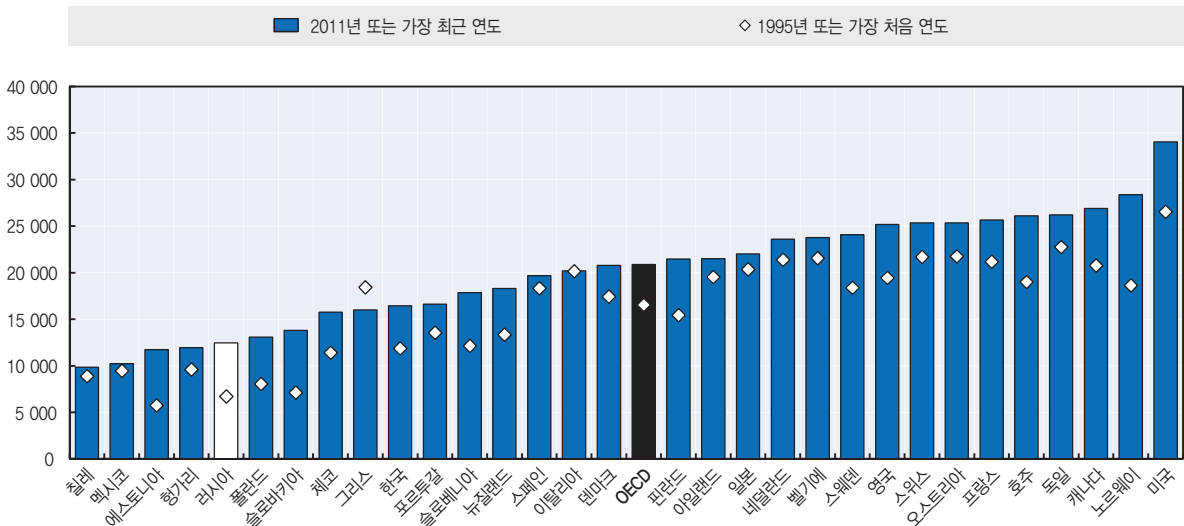
박스 2.1. 소득과 자산의 측정(계속)

두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가구들과 가구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들을 합산한 것이다. 두 지표는 OECD에 의해 수집된 국민계정통계치에 근거하며 해당 환율(구매력 등가: PPP)로 표현된다. 여기에 나타난 지표들은 GDP와 생산성과 같은 경제전반 지표들과 일관성을 갖는다. 사용된 소득 개념은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파악이 가능한 가구의 소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측정 방법이다. 그러나 동 측정치는 주택, 토지, 준기업(quasi-corporations)의 경제적 생산에 기여하는 자산 등 가구의 물질적 웰빙에 매우 중요한 여러가지 자산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비금융자산들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소수의 국가들의 경우에만 입수 가능하다.

여기서 보여진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단지 소수의 국민계정체계만이 가구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관들을 배제시킨 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나타난 소득 지표의 범위는 가구조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된 지표의 범위보다 더 넓다. 둘째, 가구의 구조와 욕구의 차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1인 당보다는 소비단위 당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셋째, 국민계정데이터는 어떻게 경제적 자원이 분배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미시적 형태의 가구 데이터와 거시적 형태의 가구 데이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OECD는 국민계정 프레임워크 내의 가구 간 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유럽통계청과 함께 수행했다. OECD는 또한 최근에 가구 소득, 소비, 자산의 분배에 관한 통계 체계와 가구 자산에 관한 미시적 통계를 위한 지침을 출간했다.

그림 2.1.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

2005년 구매력평가지수(단위: 미달러)



주: 가구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관이 가구에 포함된다. 구매력평가지수(PPP)는 가구의 실제 개인 소비를 나타낸다. 가장 처음으로 자료가 가능한 연도는 스페인의 경우 2000년, 아일랜드와 러시아는 2002년, 멕시코는 2003년, 칠레는 2008년이다.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스위스,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가 가능한 연도는 20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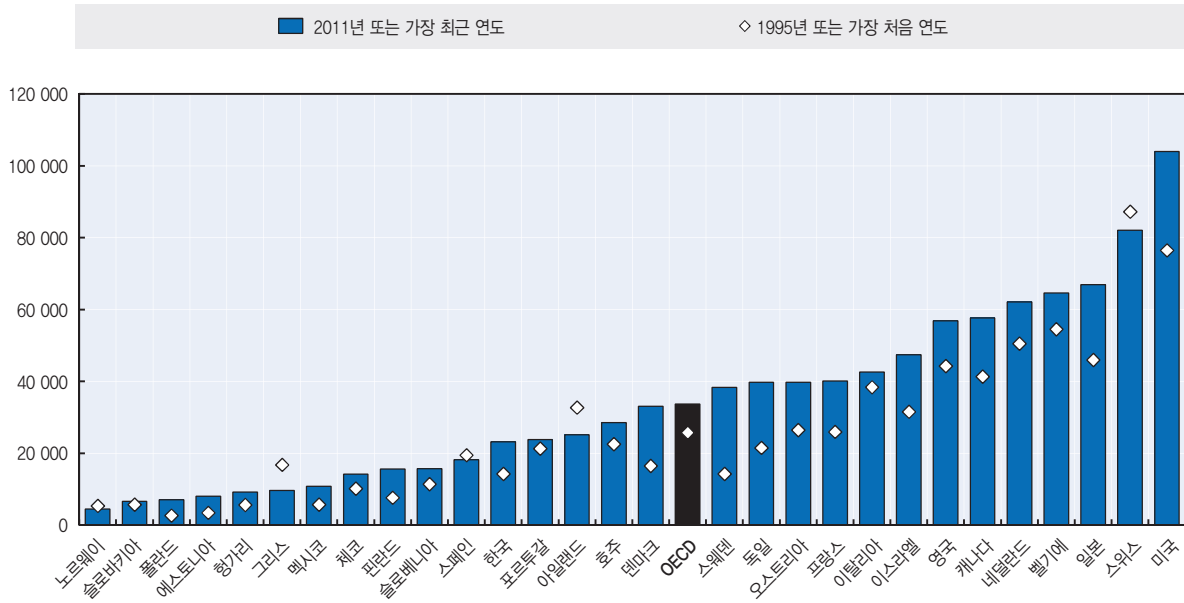
출처: OECD(2013a),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673>

이러한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순금융자산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가구 전체 순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비금융자산(토지와 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2. 1인 당 가구순금융자산

2005년 구매력평가지수(단위: 미달러)



주: 가구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관이 가구에 포함된다. 구매력평가지수(PPP)는 가구의 실제 개인 소비를 나타낸다. 가장 처음으로 자료가 가능한 해는 멕시코의 경우 1997년, 스위스는 1999년,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는 2001년, 한국은 2002년이다.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가 가능한 연도는 2010년이고 멕시코의 경우는 2009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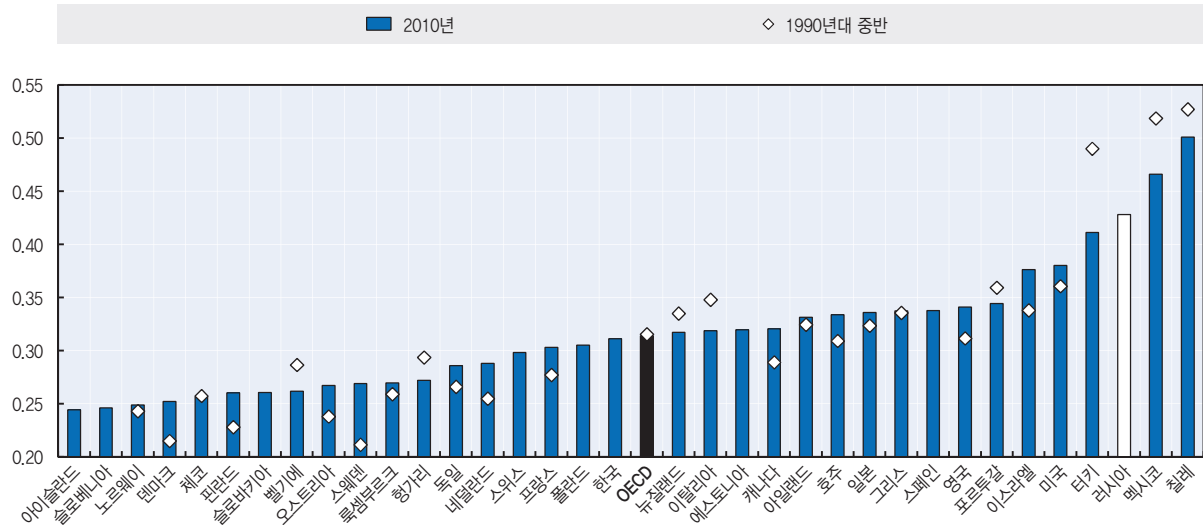
출처: OECD(2013a),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692>

여기에서 제시된 소득과 자산 현황은 한 국가의 평균적인 물질적 삶의 표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2.3). 칠레, 멕시코, 러시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유럽국가와 노르딕국가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주: 러시아의 경우 가장 가능한 최근 연도 자료는 2008년이다.

출처: OECD(2013d), "소득 분배", OECD 사회와 복지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711>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에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동유럽국가와 노르딕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이 추세는 많은 다른 유럽국가들(1990년대 중반 이래 영국, 프랑스 등),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는 약간만 관찰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멕시코와 터키에서 크게 감소했던 반면 벨기에, 헝가리, 뉴질랜드, 이탈리아에서는 그 감소 정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근로소득

개인의 열망과 역량에 부응하며 충분한 근로소득을 지불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전세계 모든 사람의 보편적 바램이다. 직업은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고 사회적 그리고 직업상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창조한다. 게다가 실직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주관적 웰빙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는 고용률이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 고용률은 남부유럽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스위스와 노르딕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2.4). 1990년대 중반이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OECD 국가들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고용률이 1995년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이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도 고용률이 상당히 증가했다. 대조적으로 고용률은 1995년 이래 터키, 미국과 체코에서 뚜렷이 감소했다.

2011년에 장기 실업률(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대체로 낮았다(그림 2.5). 장기 실업률이 한국과 멕시코에서는 거의 전무하지만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페인에서는 8%를 넘었다.

박스 2.2. 직업과 근로소득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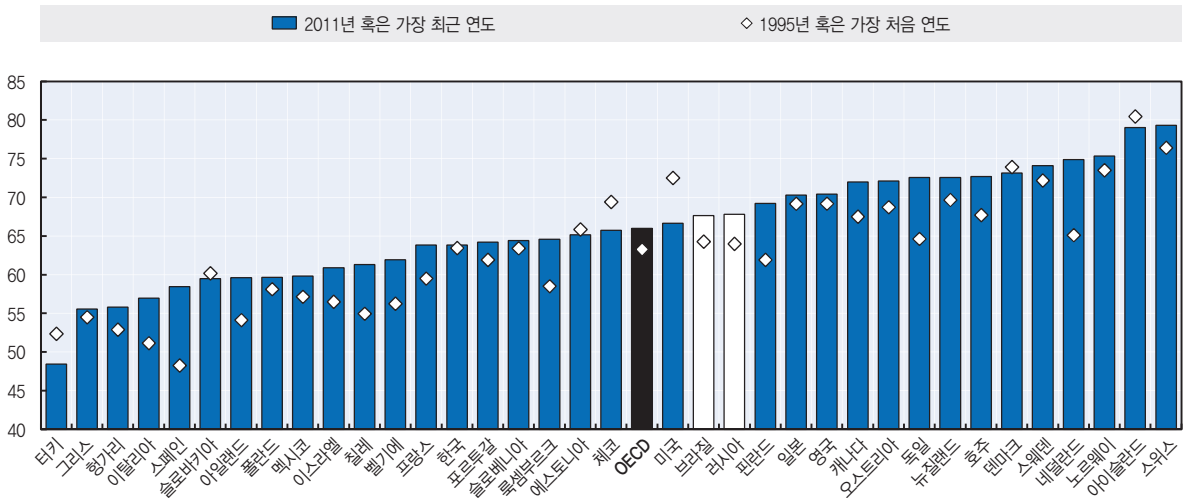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3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고용률**은 지난 주에 수입이 있는 일자리에서 최소 1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생산연령인구(대부분 OECD 국가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고용률에는 또한 현재 일자리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으며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중에 일시적 휴직(자녀양육 휴가, 병가, 연차 휴가 등)상태이나 정규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용률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LFS)를 근거로 산출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일치한다.
- **장기 실업률**은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전체 노동인구(고용상태인 사람과 실업상태의 사람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업자는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할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조사(LFS)를 근거로 산출한다.
-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연간총근로소득**은 모든 경제 부문 및 모든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연간임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자들의 총 보수가 포함되는데, 세금,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분, 생명보험료, 노조 회비와 기타 납부의무와 관련해서 고용주가 공제하기 전의 액수가 포함된다. 이 지표는 총임금 지불액수를 경제 전체의 전일제근로자 수로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전일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에 전체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종일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의 비중을 곱하면서 구하는데, 이는 국가마다 다양한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고용률과 장기 실업률 각각의 지표를 통해 일자리의 가용성과 실업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데이터의 품질은 양호하지만 고용률과 장기 실업률의 변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는 경기순환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4. 고용률

15세~64세 고용자가 동일 연령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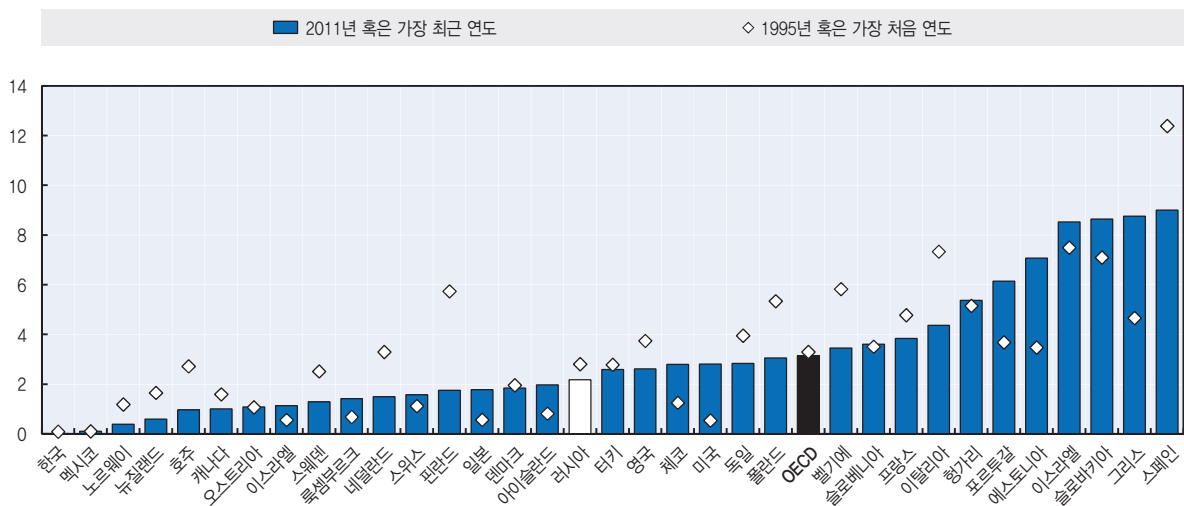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처음 연도는 칠레의 경우 1996년, 브라질은 2001년, 슬로베니아는 2002년이다. 가장 최근 연도는 브라질의 경우 2009년이다.

출처: OECD(2013e), OECD노동인구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730>

그림 2.5. 장기 실업률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 가장 최근 연도는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2년이다.

출처: OECD(2013e), OECD노동인구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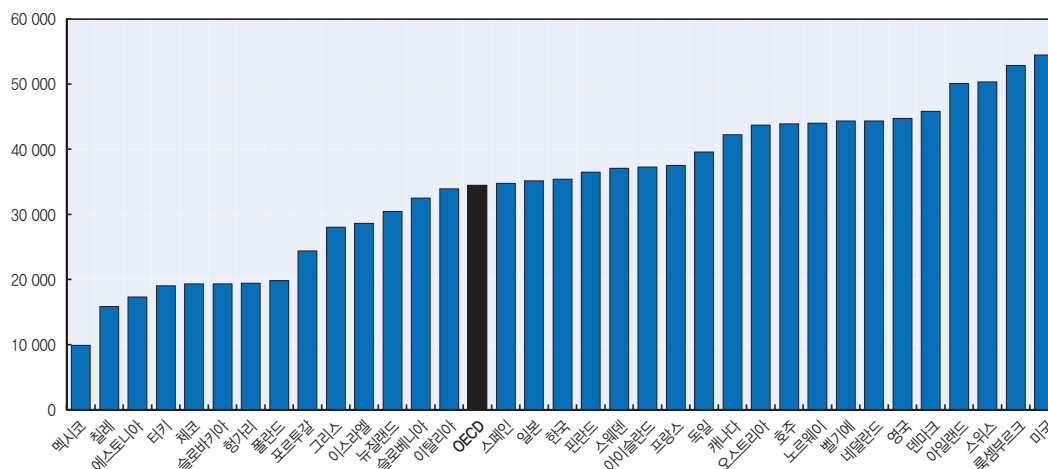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749>

1990년대 중반 이래 장기 실업률은 특히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에 예외가 된 국가는 미국,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이다.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연간총근로소득(정의를 보려면 박스 2.2 참조)은 OECD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그림 2.6). 2011년에 평균연간총근로소득은 미국과 룩셈부르크에서 멕시코의 5배였고 동유럽국가들의 2배 이상이었다. 1995년에 평균개인근로소득이 전체 OECD 지역에서 특히 동유럽국가들과 노르딕국가들에서 증가했다(OECD, 2012).

그림 2.6. 전체 경제 내 전일제 근로자들의 평균 연간 총 근로소득

2011년 구매력평가지수(단위: 미달러), 2011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경우 2010년, 체코, 독일, 스웨덴은 2009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2008년, 네덜란드는 2005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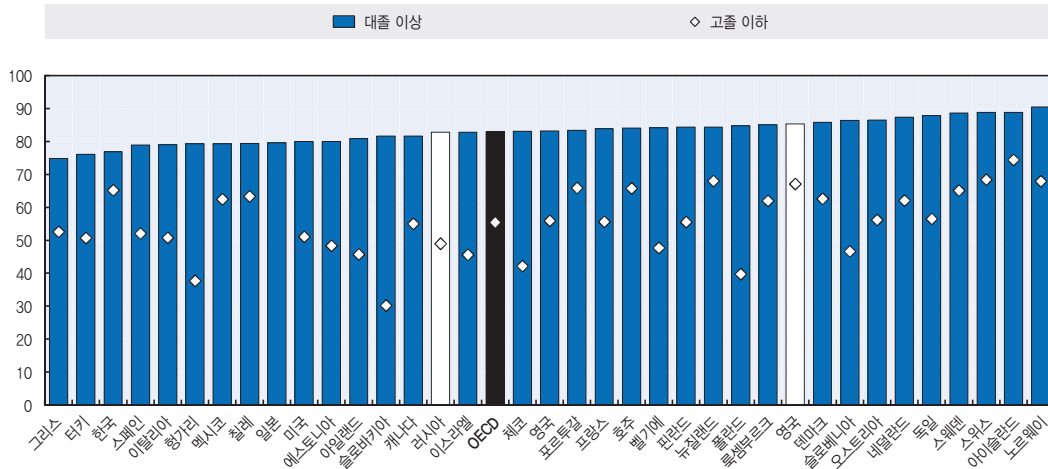
출처: OECD의 표 G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2012 OECD 고용 전망, OECD 출판국,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768>

고용률은 젊은이, 여성, 노인의 경우 더 낮다. 건강한 사람들이 만성 질환과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더 자주 고용된다. 고용률은 또한 교육을 통해 상승하며(그림 2.7) 고용 면에서의 양성격차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제4장 참조). 2000년 이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학력이 고졸 이하인 사람 사이의 고용 격차는 OECD 지역에서 대체로 안정된 상태이다. 그 격차는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에서 크게 감소했고 슬로베니아,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한국에서 크게 증가했다(OECD, 2013c).

그림 2.7. 학력에 따른 고용률

15세-64세 고용자가 동일 연령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1년



주: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에 대한 데이터는 조사된 인구의 표본 크기가 작은 것을 고려하여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출처: OECD(2013), 2013 한눈에 본 교육: OECD 지표, 파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787>

OECD 국가들에서 장기 실업률은 대개 젊은이,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높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또한 자국민보다 이민자의 장기 실업률이 훨씬 높다. 근로소득에서의 양성격차가 크지만 이러한 격차는 같은 남성과 여성 집단 내에서도 매우 크다. 근로소득은 직업, 교육, 경험, 기타 개인적 특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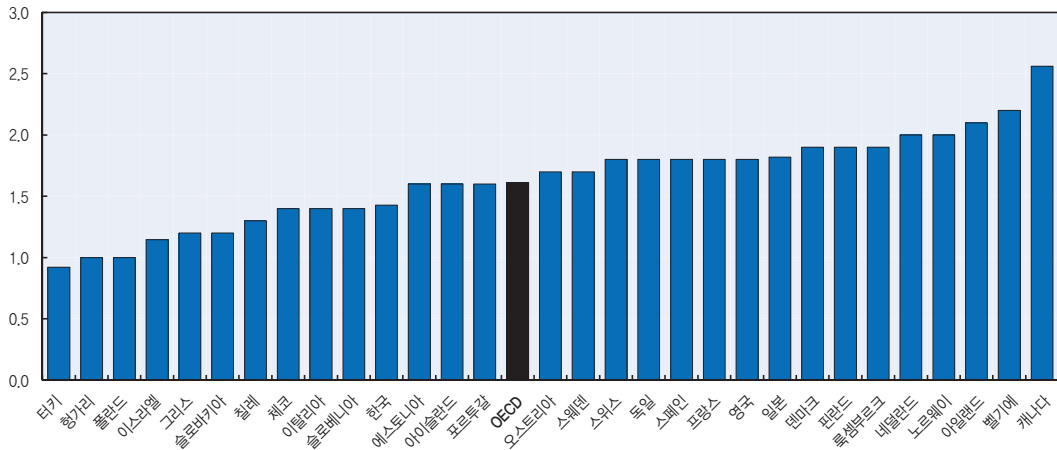
주거 조건

주택은 물질적 삶의 기준의 주요 요소이다. 이는 악천후로부터의 피난처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안전감, 사적인 자유,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한다. 주택은 또한 가족을 이루고 친구를 만나는 등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주거 지표(정의를 보려면 박스 2.3 참조)를 통해 나타난 주거현황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 당 방의 개수에서 OECD 국가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가구들은 1인 당 방의 개수가 평균 2개 이상인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터키, 헝가리, 폴란드에서 사람들은 방의 개수가 1인 당 1개 미만인 좁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8).

그림 2.8. 1인 당 방의 개수

평균 개수, 2011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터키의 경우 2010년을, 캐나다의 경우는 2006년을 의미한다.

자료: 소득 및 거주 조건에 관한 EU 통계(EU-SILC); 국가통계청(NSOs);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806>

주택내 기본적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정의를 보려면 박스 2.3 참조)은 모든 OECD 국가에서 높지만 (응답자의 1%-2%만이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고 보고함)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2.9). 가장 열악한 거주 조건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와 일부 동유럽국가(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발견되며 아시아 국가들(즉 일본과 한국)에서 특히 터키에서는 인구의 거의 13%가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스 2.3. 주거 조건의 측정

위에 제시된 주거 조건에 대한 세 가지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주택 내 1인 당 방의 개수는 어떤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혼잡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표는 한 주택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방의 개수(부엌, 다용도실, 화장실, 차고, 상담실, 사무실과 상점은 제외)로 나눔으로써 측정된다.
- 기본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주거 환경에서의 결핍과 단점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의 부재에 중점을 두는데 사람들의 위생에 해롭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가족용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 밖에 위치한 수세식 화장실은 감안하지 않는다. 샤워 시설 또는 욕조도 구비된 룸 안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포함된다.
- 보정된 가처분소득에서 주거와 주택 유지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계정체계(SNA)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의 실제 및 귀속 임대료, 주택의 유지보수(기타 서비스 포함)를 위한 지출, 수도세, 전기세, 가스 및 기타 연료에 대한 지출, 집기와 가구 및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 주택의 정기적 보수를 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출에 대한 합계를 내서 가구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가구들과 가구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박스 2.3. 주거 조건의 측정(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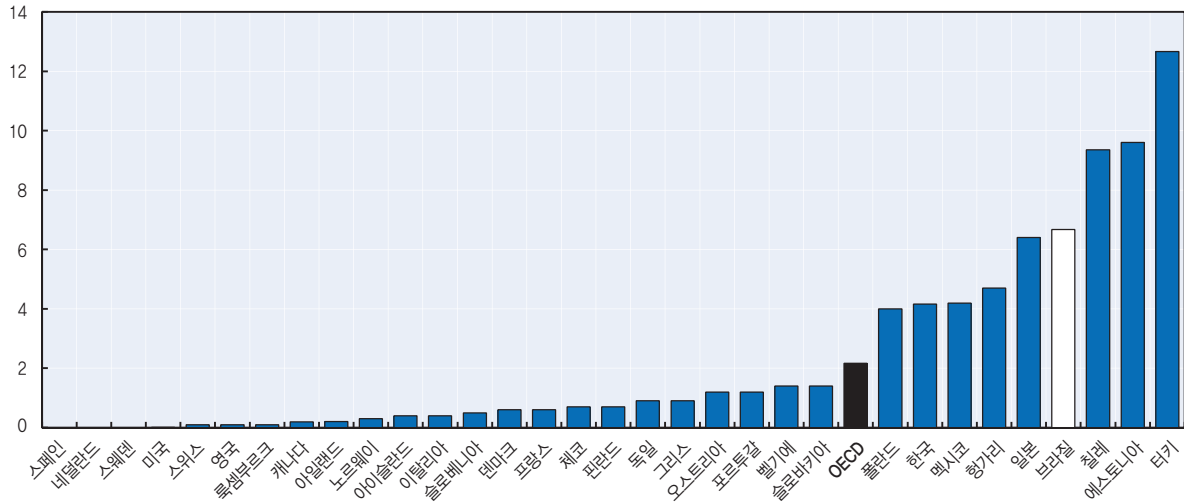
주택 내 1인 당 방의 개수와 기본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데이터는 EU 국가의 경우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결과로부터 수집하고 비EU 국가의 경우 비교가능한 국가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집하고 있다. 주거와 주택의 유지에 소비된 가치분 소득의 비율 데이터는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로부터 수집한다. 가구의 혼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동 지표는 주택의 규모와 주택의 위치 사이에서 가능한 상쇄효과는 감안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가구들은 가난한 동네에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작은 주택에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주택 내의 1인 당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한 이상적 지표는 이용가능한 방의 개수뿐만 아니라 전반적 크기(예: 1인 당 평방미터 등)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의 크기는 시골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대개 작아서 국제적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주택 혼잡도 지표들은 가구 조사에 보고된 인지된 공간 부족 정도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본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지표는 “적절한 주택(decent housing)”의 개념을 대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proxy measure). 그러나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상적인 지표는 주거 조건의 다른 기본 측면들(예: 적절한 전기와 배관 설비, 바닥과 문의 품질, 구조적 손상과 적절한 난방)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주거환경 지표들은 또한 가구 보유 기간, 가계예산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 주거 관련 지출이 가계 가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유형의 주거 지출(예: 가계 대출과 관련된 지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 특성들(예: 소음에 대한 노출도, 실외 공해, 공공 서비스의 근접성)에 대한 측정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거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는데,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표가 극소수이며 국가간 일치된 주거설문조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9. 기본 시설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1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브라질,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스위스의 경우 2010년, 미국의 경우 2009년, 일본의 경우 2008년, 캐나다의 경우 1997년을 가리킨다. 동 지표는 칠레의 경우 주택 내 화장실의 부재를, 멕시코의 경우 개인적 주거공간, 터키의 경우 내부 주거 단위, 미국의 경우 지표는 수세식 변기가 없는 주택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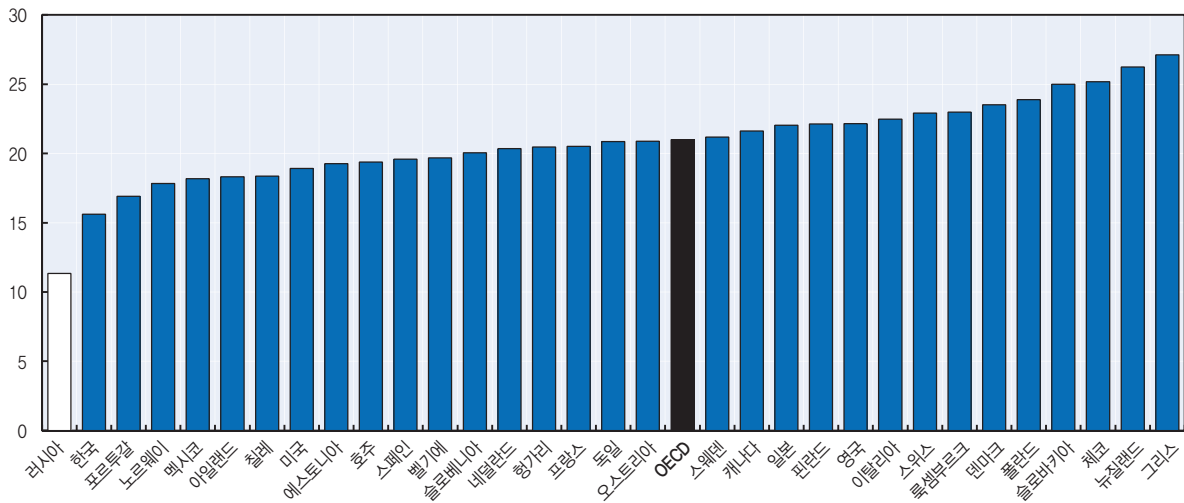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칠레,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의 국가통계청(NS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825>

주택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구 예산의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한다. 2011년에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21%를 거주비와 주택 보수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한국과 포르투갈에서 가구 소득의 1/6 미만을 주거비에 지출하며(한국: 16%, 포르투갈: 17%) 그리스와 뉴질랜드에서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1/4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스: 27%, 뉴질랜드: 26%).

그림 2.10. 주거 비용

가구 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1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러시아의 경우 2010년을, 룩셈부르크는 2009년을 가리킨다.

출처: OECD 자료(2013a)에 근거한 OECD 계산,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844>

유럽국가들에서 개인당 방의 평균 숫자는 개인의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실내 수세식 변기 부재를 보고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는 노인들이 오래된 주택에서 살기 때문이다(OECD, 2011).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열악한 주거 조건에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OECD, 2011; 유럽통계청, 2013).

건강상태

건강하고 질병과 장애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 중의 하나이다. 건강한 상태는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적당한 소득을 벌고, 폭넓은 영역에서 가치 있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기대수명(정의를 보려면 박스 2.4 참조)은 OECD국가들과 기타 주요 국가들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기대수명이 80세를 초과하는 많은 국가들 중(OECD 국가들의 절반 이상)에서 가장 높은 기대수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박스 2.4. 건강상태의 측정

위에서 제시된 건강상태에 관한 두 개의 중심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기대수명은 오늘 태어난 사람이 현재 연령별 사망률에 근거하여 평균적으로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을 나타낸다. 기대수명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평균 수명으로 계산된다.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수집된 공식적 국가통계에 근거한다.
- 자기 보고 건강상태는 “좋은” 또는 “매우 좋은” 건강 상태인 것으로 보고한 16세 이상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당신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좋음/좋음/그저 그러함/나쁨/매우 나쁨”의 범주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데이터는 국가 공식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일반적 가구 조사 또는 좀더 구체적인 건강 면접조사(Health Interview)을 기반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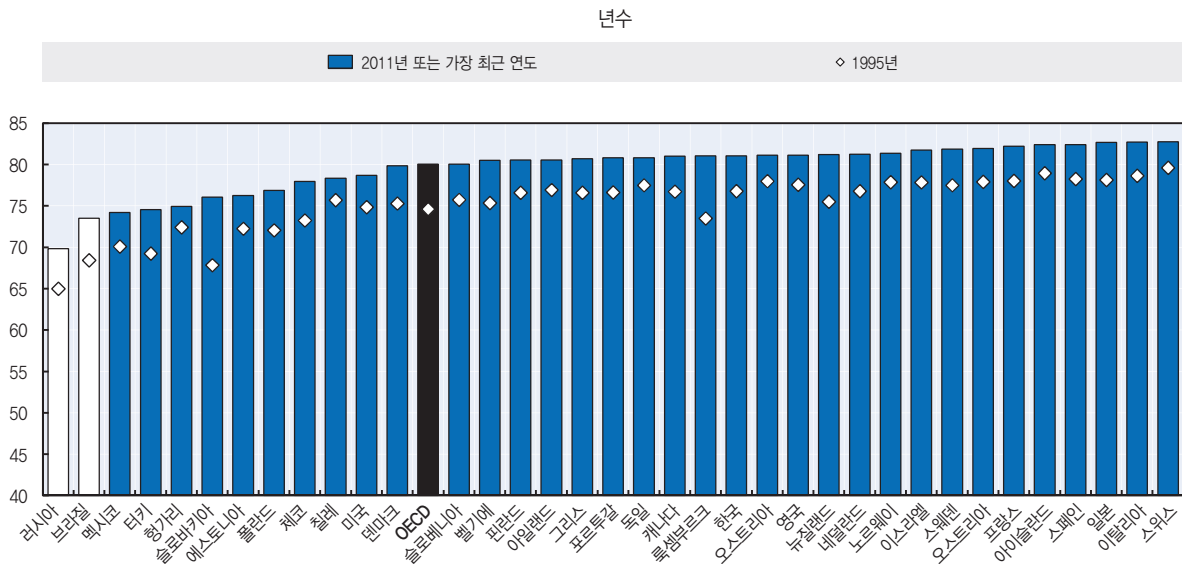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주어진 집단에서 기대되는 수명의 추정치를 제공할 뿐인데 이는 특정 출생 집단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측정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기대수명 추정치들은 성별로만 분해될 수 있으며 학력과 소득별 기대수명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는 거의 드물다. 이는 이러한 기대수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을 인구조사 혹은 일회성 조사에서 나온 기록들과 연계시키는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병적 상태(건강의 부재)는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병적 상태가 일시적인지 또는 만성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적인 추적 조사(longitudinal follow-up)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병적 상태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현재의 통계 시스템은 OECD 국가들에서 고르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양한 측정 체계들이 제안되었고 그것들 중 일부는 곧 시행될 것이다(제1장 참조).

주관적인 건강상태(self-perceived general health status)에 대한 지표들은 모든 OECD 국가들 간의 폭넓은 비교가 가능한 소수의 병적 상태 지표들 중의 하나이다. 동 지표들은 폭넓은 병적 상태의 영역을 단일한 측정치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동 지표들을 통해 응답자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건강상태 지표들은 병적 상태의 기본 개념에 대한 불완전한 대리지표(proxy)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 지표가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존하며 문화적 편견 또는 다른 상황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응답 척도의 차이(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간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 보고식 장기적 질병과 자기 보고식 일상 활동의 제약과 같은 지표들은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만 입수가 가능하다.

미국, 터키 그리고 다수의 중유럽국가들이 포함된 두 번째 국가 집단의 기대수명은 74세에서 80세 사이이다. 기대수명은 브라질과 특히 러시아에서 낮는데 러시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0년이 낮다(그림 2.11). 1995년 이래 기대수명은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상당히 증가했고 한국과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2.11. 기대수명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2012년이며 캐나다의 경우 2009년이다. 체코,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와 스위스의 경우 시계열 자료가 단절되어 1995년과 가장 최근 연도의 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호주, 벨기에, 칠레,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미국에 대한 데이터는 추정치이다.

출처: OECD(2013f), "OECD 건강데이터: 건강상태", OECD 건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863>

2011년에 건강상태가 좋거나 아주 좋다고 답변한 성인인구(정의를 보려면 박스 2.4 참조)의 비율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85% 이상이었고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우는 50%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단지 세 명의 응답자 중 한 명만이 건강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라고 응답했다. 자기보고 건강상태는(self-reported health)은 일본과 한국에서 큰 감소를 기록했고 터키와 동유럽국가들에서 상당히 증가했다(그림 2.12). 이러한 변화들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데 노인인구가 다른 집단보다 낮은 건강상태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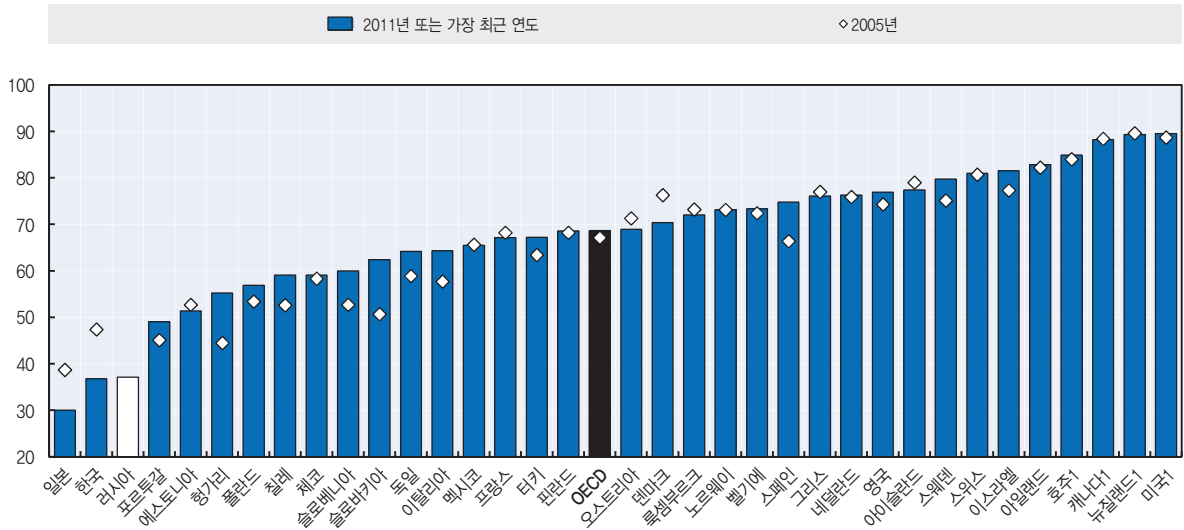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남성보다 나쁜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건강상 문제로 인해 더 자주 고통 받는 경향이 있다(제4장). 병적 상태에 대한 자기 보고 측정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꾸준히 악화되며 노인들은 일상 활동을 제약하는 건강상 문제를 가장 자주 경험한다(OECD, 2011).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건강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불우한 환경의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종종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선택하며(예: 흡연과 비만의 더 높은 발생률) 적절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교육수준 별 기대수명 추정치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점을 보여준다(OECD, 2013c). 교육 수준별 기대수명의 격차는 특히 동유럽국가들에서 크며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사회 계층별 차이(social gradient)는 또한 자기 보고 건강상태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모든 OECD 국가에서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매우 좋은/좋은” 건강상태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다(그림 2.13).

사회경제 집단별 자기 평가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tatus)의 격차는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 특히 크고 이스라엘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다.

그림 2.12. 자기 보고 건강상태

"좋은/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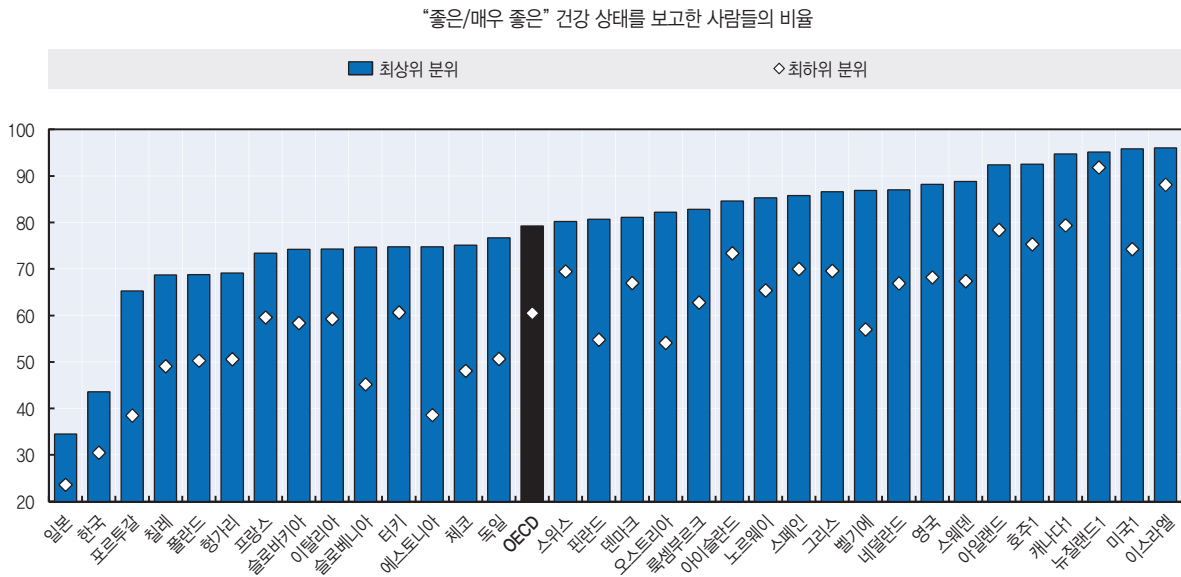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아일랜드와 일본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9년,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이다. OECD 수치는 이 표에서 나타난 국가들의 단순 평균이다.

1. "1"로 표시된 국가들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는 응답 범주(reporting-scale)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추정치에서 상향편의(upward bias)가 나타날 수 있다.

출처: OECD(2013f), "OECD 건강데이터: 건강상태", OECD 건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882>

그림 2.13. 가처분 소득별 자기 보고 건강 상태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아일랜드와 일본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9년,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이다. OECD 평균은 이 표에서 나타난 국가들의 단순 평균이다.

1. "1"로 표시된 국가들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결과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는 응답 범주(reporting-scale)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추정치에서의 상향편의(upward bias)가 나타날 수 있다.

출처: OECD(2013f), "OECD 건강데이터: 건강상태", OECD 건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01>

일과 삶의 균형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웰빙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즉 일을 너무 적게 하면 원하는 삶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충분한 근로소득을 얻는 것을 어렵게 하지만 과도한 근로로 인해 건강이나 개인 생활이 훼손된다면 결과적으로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의 웰빙에도 중요한데 특히 아동의 웰빙은 부모의 근로능력과 양육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일과 개인생활 사이에 시간을 균형있게 할당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 내에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낮지만(정의를 보려면 박스 2.5 참조) 국가별로 격차가 매우 크다(그림 2.14) 터키는 매우 장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단연 높은 국가인데 근로자의 거의 50%가 주당 50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일하며, 멕시코와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는데 거의 1/5의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한다.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정기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약 1%-2%에 불과하다. 신흥경제국 중 유일하게 자료제공이 가능 가능한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 지난 10년간 매우 장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OECD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안정된 상태이며 덴마크, 슬로베니아, 폴란드, 브라질, 이스라엘, 터키에서 감소했고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에서 증가했다.

박스 2.5. 일과 삶의 균형

위에서 제시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두 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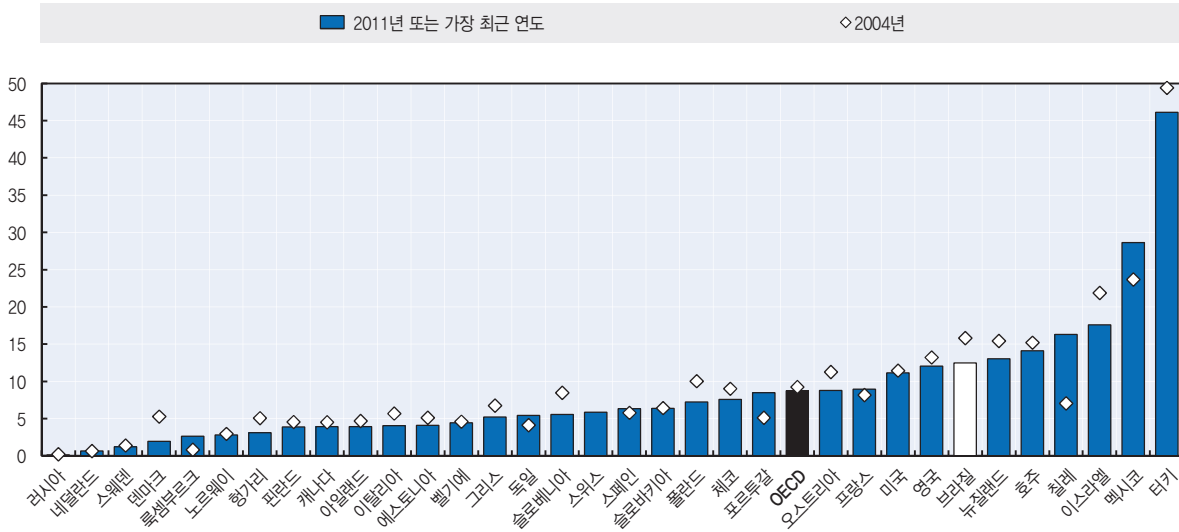
- **주당 5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 이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장시간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시간 수에 대한 기준은 50시간으로 설정되는데, 출퇴근, 무급노동, 기본적 욕구(잠과 식사 등) 충족에 쓰여진 시간을 감안하면 대개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활동을 위해서 매우 적은 시간(1일 1시간 또는 2시간)만이 남겨진다. 또한 최대 근무시간(maximum working time)에 관한 규정이 있는 국가들에서 최대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당 48시간으로 제한된다.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 **전일제 근로자가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동 자료는 생활시간 사용 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는데 조사 참여 응답자에게 특정 기간에 하루 또는 며칠간 활동 일지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수집한다. 일부 국가와 일부 특정 활동의 경우 조사 간의 비교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보여진 데이터는 OECD에 의해 사후에 조율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비교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중심 지표들은 개인과 가족의 웰빙에 기여하는 비근로 활동(non-work activities)에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에 대한 직접·간접 측정방법을 제공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은 필요, 개인적 선호, 살고 있는 문화·사회·정책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국가간 비교는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표의 대부분은 균형 잡힌 시간 사용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근로 외에 사용된 시간의 질을 반영하지 않아 사람들의 개인적 즐거움 또는 인지된 시간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생활시간 사용조사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매 5년 또는 10년 마다) 대체적으로 추정치가 적시에 제시되지 않는다.

근로에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여가, 가족이나 개인적 돌봄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OECD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14.9시간을 여가, 개인적 돌봄(잠, 식사, 위생, 병원 가기 등: 그림 2.15; 정의를 보려면 박스 2.5 참조)을 위해 사용한다. 일본의 근로자들은 여가와 개인적 돌봄(잠을 포함)에 가장 적은 시간인 하루 총 14 시간을 사용한다.

그림 2.14.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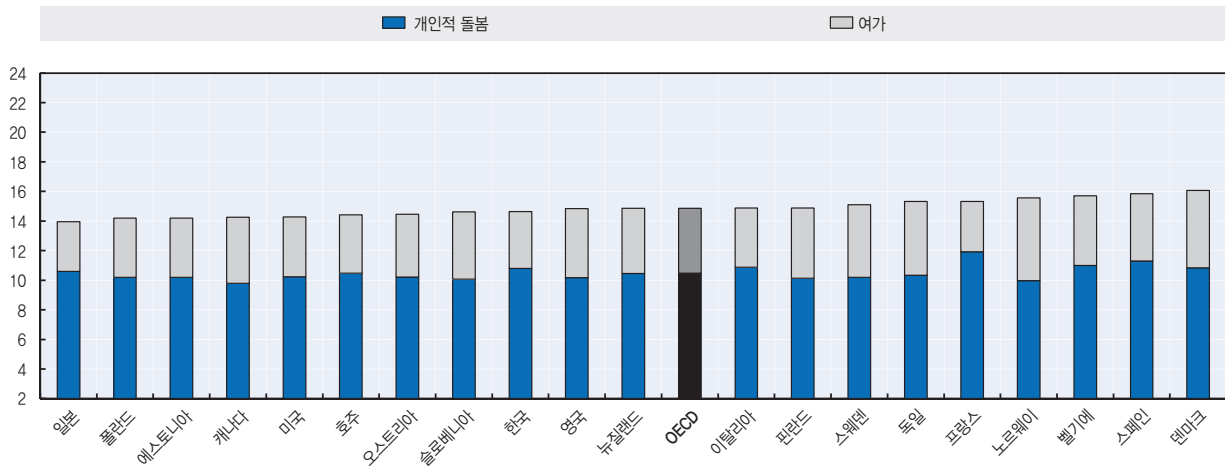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미국의 경우 분업을 위해 사용한 상시 근로 시간을, 다른 국가들의 경우 모든 일에 대한 상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처음 연도는 칠레의 경우 1996년, 헝가리의 경우 1998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1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2년, 체코와 핀란드의 경우 2004년이다. 브라질의 경우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09년이다.

출처: OECD(2010), “노동력 통계: 요약표”, OECD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286-en>; 스위스 연방통계청.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20>

그림 2.15.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 시간

전일제 근로자의 하루 당 시간의 수,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프랑스의 경우 1998년-1999년, 포르투갈의 경우 1999년, 에스토니아의 경우 1999년-2000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00년-2001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 독일의 경우 2001년-2002년, 이탈리아의 경우 2002년-2003년, 폴란드의 경우 2003년-2004년, 벨기에의 경우 2005년, 호주와 일본의 경우 2006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8년-2009년, 한국의 경우 2009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년-2010년,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2010년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1일 1 440분으로 표준화되었는데, 생활시간 사용의 합계가 1440분이 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빠지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분에서 40분)이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되었는데 그 데이터는 시간제 근로자들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며 오스트리아는 예외적으로 연령제한이 규정되지 않았다.

출처: OECD 생활시간 사용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39>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는 하루에 대략 16시간이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사용된다. 여가의 비중 역시 OECD 국가간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가장 높고(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이 여가에 사용됨) 프랑스와 일본에서 가장 낮다(하루 3시간 30분 미만이 여가에 사용됨).

성(gender)은 일과 삶의 균형에서 불평등의 핵심 결정요인이다(OECD, 2011; 제4장, 그림 4.10). 남성이 유급노동과 출퇴근에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더 적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이는 가정에서 무급 활동(예: 가사, 육아, 노인 수발)에 여성이 더 오랜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생활시간과 그 시간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무급노동은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무급노동에 비해 즐거움이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는 직장일과 가정일을 양립하는 것을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시간부족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기술

교육과 기술은 개인별 웰빙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이를 통해 배움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충족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또한 사람의 물질적 삶의 조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 교육은 또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한다.

OECD 국가들에서 25세에서 64세까지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정의를 보려면 박스 2.6을 참조) 소수의 국가는 예외이다(포르투갈, 터키와 멕시코는 비율이 40% 미만이다, 그림 2.16). 덴마크(전체 인구 중 최소 고등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지난 10여 년 간 약간 감소함)를 제외한 전체 OECD 국가와 브라질에서 평균 교육 수준이 증가하였고 국가간 상당한 수렴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현재 5세된 아동은 최소 17년간 더 공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6 참조).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서 현재 5세 된 아동은 평균 19년 이상을 더 지속적으로 공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멕시코와 터키는 15년만을 기대할 수 있다(그림 2.17).

인지 능력은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과 과학 과목의 평균 점수로 측정되며(정의를 보려면 박스 2.6 참조) 그 결과는 국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18). 브라질, 멕시코, 칠레에서 읽기 능력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핀란드, 한국과 일본에서 훨씬 높다. 수행도가 가장 높은 OECD 국가들과 가장 낮은 OECD 국가들 사이의 격차는 상당하며(국제성취도평가(PISA)의 척도로 123포인트) 이러한 격차는 2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지 능력에 해당되는 크기이다.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은 향후 인구 전체의 인지능력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 성인 인구의 역량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새로 시작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문자해독능력, 수리력, 첨단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성인들의 숙련도를 평가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OECD 지역 내 성인 역량은 국가간 격차가 큰데(그림 2.19) 특히 수리력 부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스 2.6. 교육과 기술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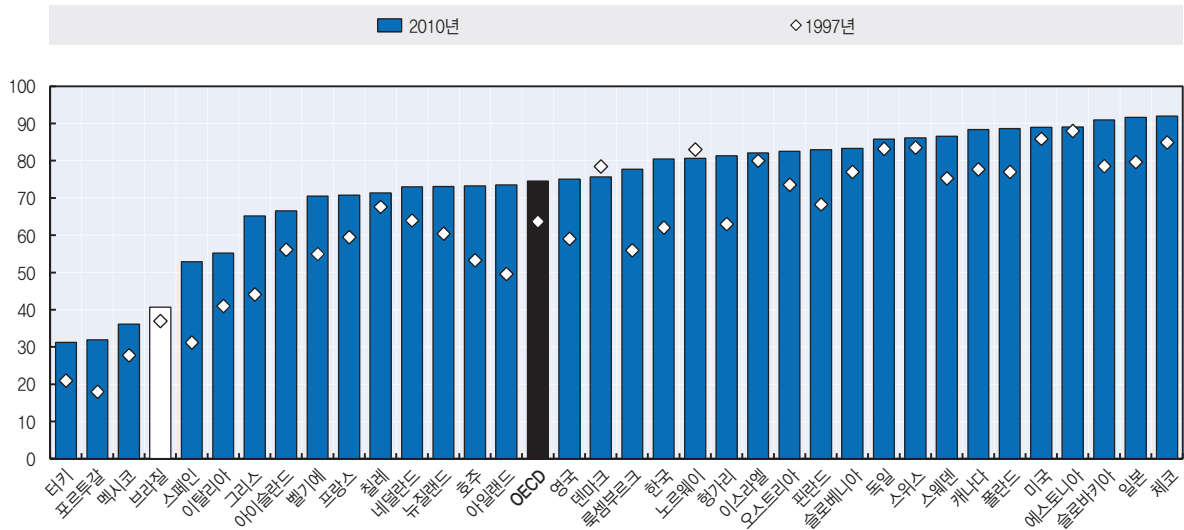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된 교육 성과에 대한 네 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성인 인구의 교육적 성취도는 25세부터 64세의 인구 중 최소 고등학교 학위(국제표준교육분류법(ISCED)의 정의에 따름)를 가진 성인의 숫자를 말한다. 이 지표의 기초 데이터는 국가의 학력범주(NEAC)에 관한 연례 OECD 설문조사문항을 통해 수집되며 노동력 조사(LFS)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교육 기대년수는 5세 아동이 39세가 될 때까지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교육 기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현재의 학교등록 상황에 근거하여 계산되는데 5세부터 각 연령의 순등록률(net enrolment rate)을 계속 더해서 구한다.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전환(school-work transition)에 관한 연례 OECD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마련되며 노동력 조사(LFS)가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된다.
-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평균 점수는 OECD가 관장하는 국제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15세 학생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제공한다.
- 성인 인구의 수리력과 문자해독률 평균 점수는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성인역량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s Competences: PIAAC)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OECD성인역량조사(OECD Survey of Adult Skills)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으며 16세부터 64세 성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람들의 교육과 역량에 관한 이상적 측정치들은 전체 인구의 인지적/비인지적 능력을 반영하고, 표준화된 점수를 기반으로 하고, 현대 사회에서 사는데 필수적인 광범위한 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현재 지식상태를 나타내며 이상적인 측정치에 대한 대리지표에 불과하다. 동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습득된 능력들만을 측정하며 이 능력들이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인지적 능력만을 측정하며 비인지적 능력과 섬세한 능력은 파악하지 않는다. 교육 및 사회적 발달에 관한 OECD 프로젝트는 후자(비인지적 능력과 섬세한 능력)에 관한 대리지표를 개발 중이다.

그림 2.16. 교육적 성취도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25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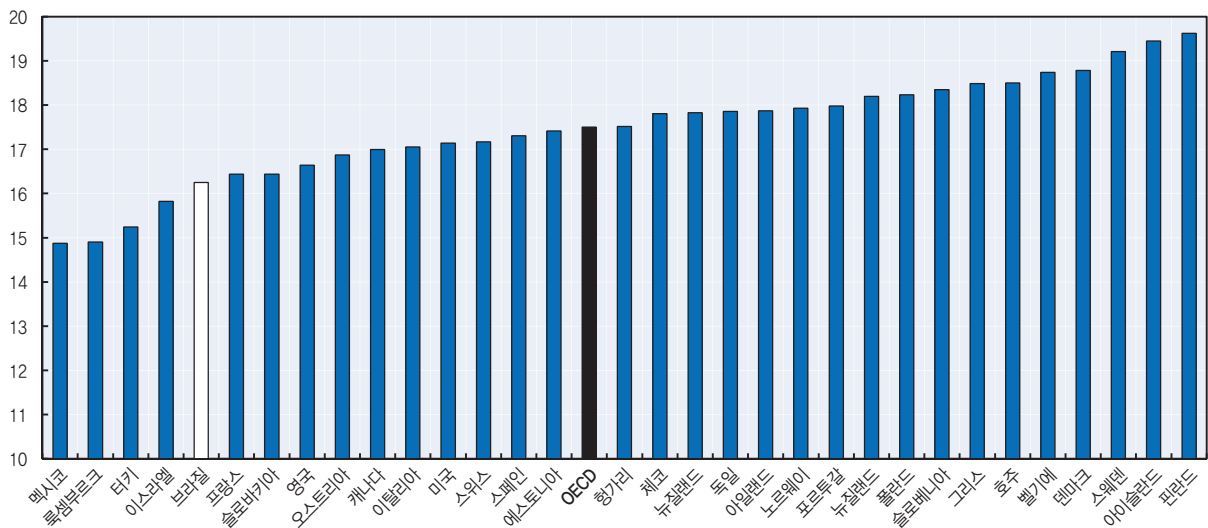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처음 연도는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1998년, 룩셈부르크의 경우 1999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2년,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 2007년이다. 노르웨이와 스위스의 경우 1997년과 2008년의 데이터는 엄격한 비교가 불가능한데 분류의 변경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09년이다. 일본에 대한 2010년의 수치는 OECD 추정치이다.

출처: OECD(2012a), 한눈에 보는 교육 2012: OECD 지표들,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2-en>,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58>

그림 2.17. 교육기대 년수

5세부터 39세까지 기대되는 추가적인 교육 기대 년수,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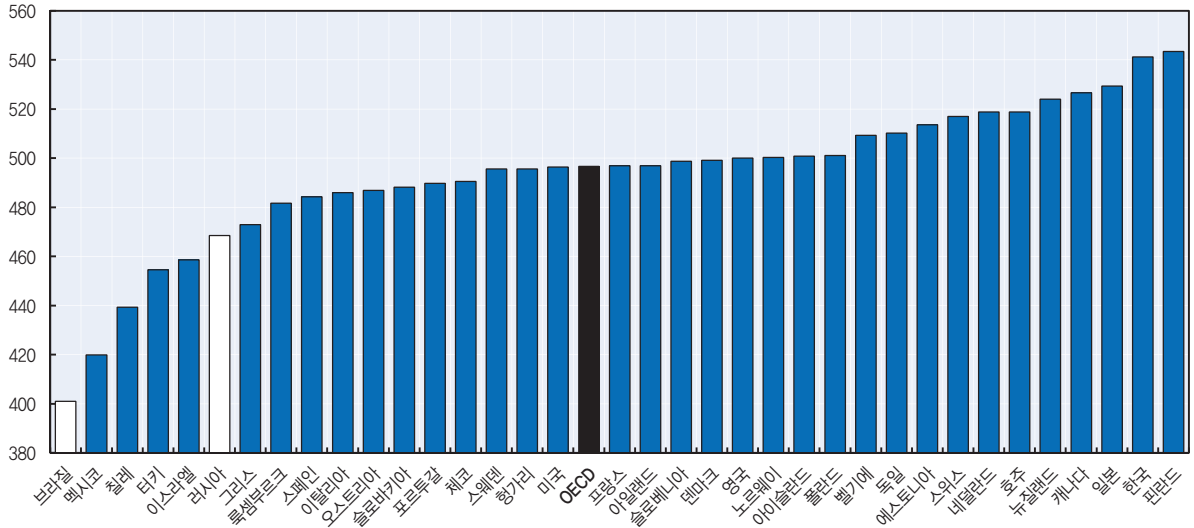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캐나다의 경우 2009년, 러시아의 경우 2008년을 의미한다.

출처: OECD(2012a), 한눈에 보는 교육 2012: OECD 지표들,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2-en>,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77>

그림 2.18. 15세 학생의 인지 능력

읽기, 수학, 과학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평균 점수



주: PISA 점수는 OECD 평균을 500으로 표준화한 기준을 근거로 측정된다.

출처: OECD(2011)을 근거로 한 계산, 한 눈에 보는 PISA 2009,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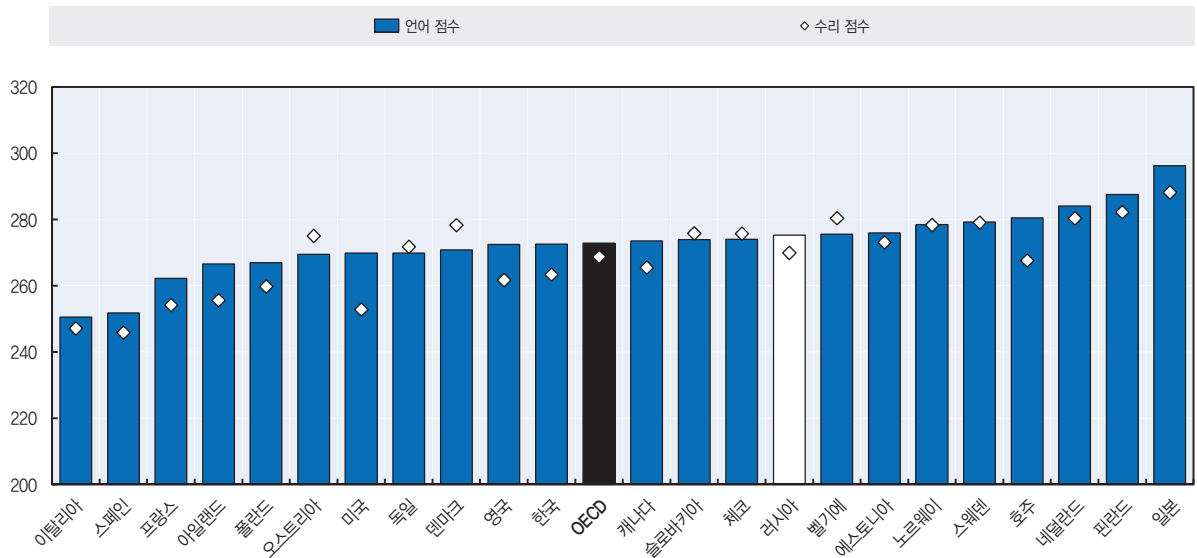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7996>

일본과 핀란드는 수리력과 문자해독능력 부문에서 숙달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두 부문의 수행도가 모두 낮다. PIAAC로 측정된 성인의 역량은 PISA 점수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교육적 성과는 인구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교육적 성취도는 젊은 여성일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높다. 15세의 남학생은 읽기 부문에서 여학생에 비해 현격히 수행도가 떨어지며(제4장과 OECD, 2011 참조),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 2.19. 성인 인구의 역량

16세부터 64세 성인의 문자해독능력과 수리력의 평균 점수,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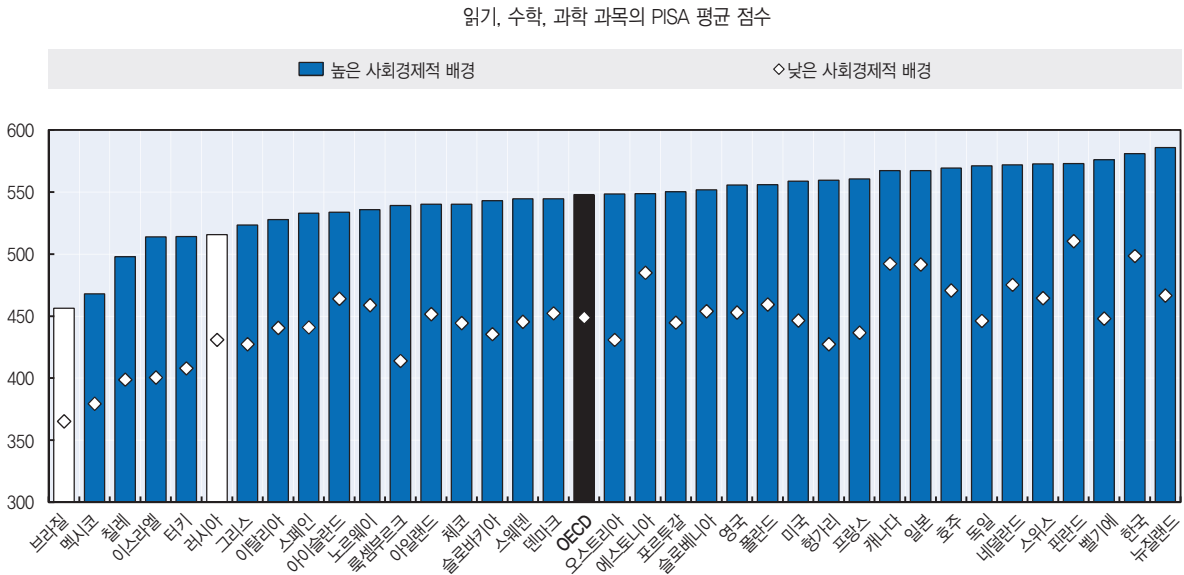
주: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랜더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의 자료이다.

출처: OECD(2013h), OECD 역량 전망 2013:성인 역량 조사의 첫번째 결과, OECD 출판국, 파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015>

15세 여학생은 수학 부문에서 남학생보다 수행도가 다소 낮는데 수행도 면에서의 양성 격차는 수학이 읽기 부문보다 적다. 이민자의 자녀들은 내국인 학생들보다 수행도가 나쁜 경향이 있다(OECD, 2011). 또한 개인의 교육적 성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데(그림 2.20) 특히 헝가리,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상관관계가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성인 여성보다 더 많은 역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리력 영역에서 더 뛰어나다(OECD, 2013d).

그림 2.20. 15세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인지 능력



주: 그림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PISA 지수의 경제사회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분위)과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PISA 지수의 경제사회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분위)을 가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의 평균 PISA 점수를 보여준다.

출처: OECD를 근거로 한 계산(2010), 한 눈에 보는 PISA 2009,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034>

사회적 관계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얻는 본질적 즐거움 외에도 사회적 관계는 개인과 사회적 웰빙을 위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갖는다. 폭넓은 지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또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는 공유된 가치(타인에 대한 신뢰와 상호성 규범 등)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 성장, 민주적 참여, 범죄 수준 등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OECD 국가들 전체에서 약 90%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존할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그림 2.21). 사회적 지원망(정의를 보려면 박스 2.7 참조)은 터키, 멕시코, 한국, 그리스에서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위스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와 멕시코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아이슬란드와 아이슬란드의 4배 이상이다.

박스 2.7. 사회적 관계의 측정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심 지표는 인지된 사회 관계망 지원을 말한다. 이 지표는 “만약 당신이 곤란에 처한 경우 도움 받기를 원할 때마다 의존 할 친척 혹은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의 비중을 나타낸다. 이 질문은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의 종류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인지된 사회 관계망 지원에 대한 일반적 측정치를 제공한다. 이 지표에 관한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데이터가 동일한 질문을 통해 수집되며 검증을 거친 질문에 의존하지만 표본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들을 비교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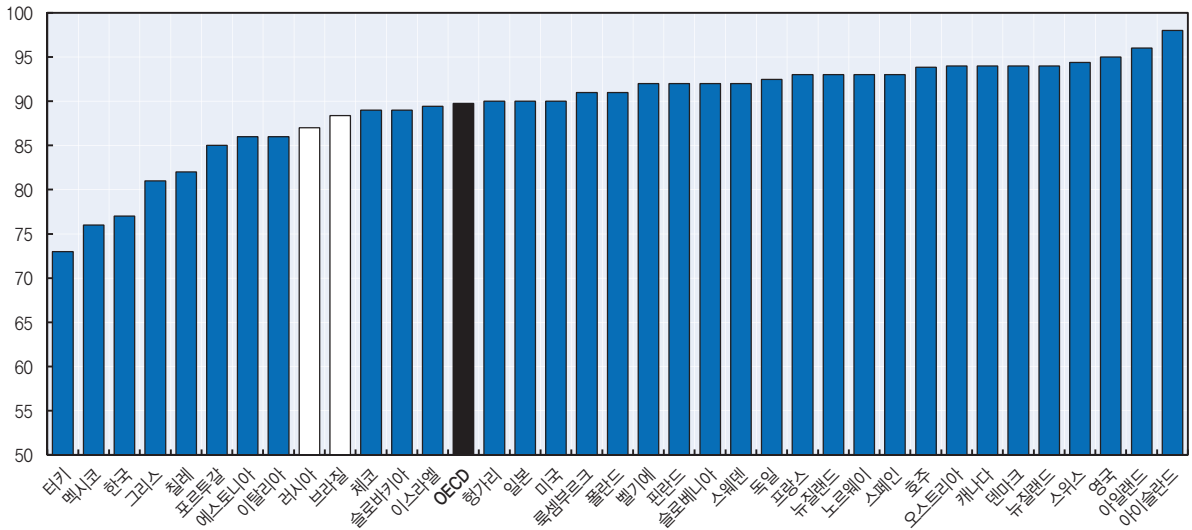
이상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표들은 폭넓은 다양한 관계들, 관계들의 질, 결과적 성과들을 설명해야 하는데 개인적 차원(정서적·경제적 지원, 일자리 기회, 사회적 고립 등)과 사회 전체적 차원(타인에 대한 신뢰, 관용, 민주적 참여, 시민참여)에서 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는 가장 흔한 접근법 중의 하나는 단체에 소속된 회원수(스포츠 클럽, 종교 단체, 직장 단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 자원봉사 단체의 밀집성 등 간접지표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 방법들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 관계망(formal networks)에 대한 참여에 한정하고 있으며 친구들/친척들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회원지위와 그것이 사람들의 웰빙에 미치는 중요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결과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 관계망과 개인들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공식적 조사로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s)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공식적 통계의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Scrivens and Smith, 2013).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 관계망은 근로생활의 후반부에 이를 때까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65세를 넘으면서 다시 강화된다. 이러한 “유(U)자형 패턴”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 노인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지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적 지위는 사회 관계망 지원에도 영향을 끼치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존할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 사회 관계망 지원의 격차는 소득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기를 비교할 때 역시 존재한다.

그림 2.21. 인지된 사회 관계망 지원

의존할 친척 또는 친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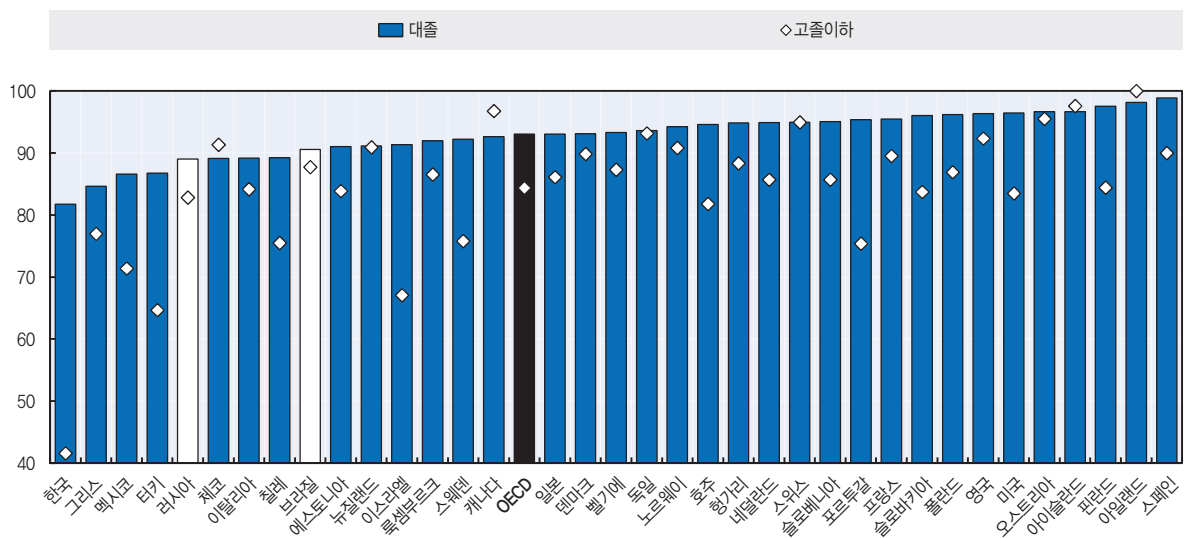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칠레와 영국의 경우 2011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053>

그림 2.22. 교육 수준 별 사회 관계망 지원

의존할 친척 또는 친구가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 2012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칠레와 영국의 경우 2011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072>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시민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의 기능 수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시민참여는 또한 사람들의 개인적 효용감과 자신들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를 통해서 개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포용이 개발된다.

투표율(정의를 보려면 박스 2.8 참조)은 OECD 국가별로 크게 다른데(그림 2.23, 패널 A) 이는 선거제도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다. 호주의 투표율은 OECD 지역에서 가장 높는데 이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스 2.8.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의 측정

위에서 제시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두 개의 중심 지표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투표율**은 주요한 국가 선거에 대한 참여 정도를 측정한다. 투표율은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인구 대비 선거기간 동안 투표한 사람들의 수의 비중(투표의 유·무효는 상관없음)으로 정의된다. 투표제도의 제도적 특징은 국가별로 그리고 선거의 종류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준 지표는 각국에서 가장 많은 투표자가 참여한 선거(의회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를 의미한다. 투표율은 투표연령인구(대개 18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됨)와 비교해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국가별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투표된 표의 숫자는 국가통계청과 국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집된다. 투표율은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DEA)에 의해 집계된다.
- **규칙 제정에서의 공식 협의과정** 지표는 법규를 기획하는 핵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과 협의를 하는지 그리고 협의 결과를 법과 하위 규정의 초안을 작성할 때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법규관리체계에 관한 OECD의 조사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마련되며 조사의 응답자는 OECD 국가들의 정부관리들이다. 지표는 일반 국민, 기업, 시민사회 단체들이 법규와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협의 절차에 관한 시민의 의견이 공개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에 기초하고 있다. 기초 데이터는 규정부관리제도에 관한 OECD의 조사에 기반하여 마련되며 OECD에 의해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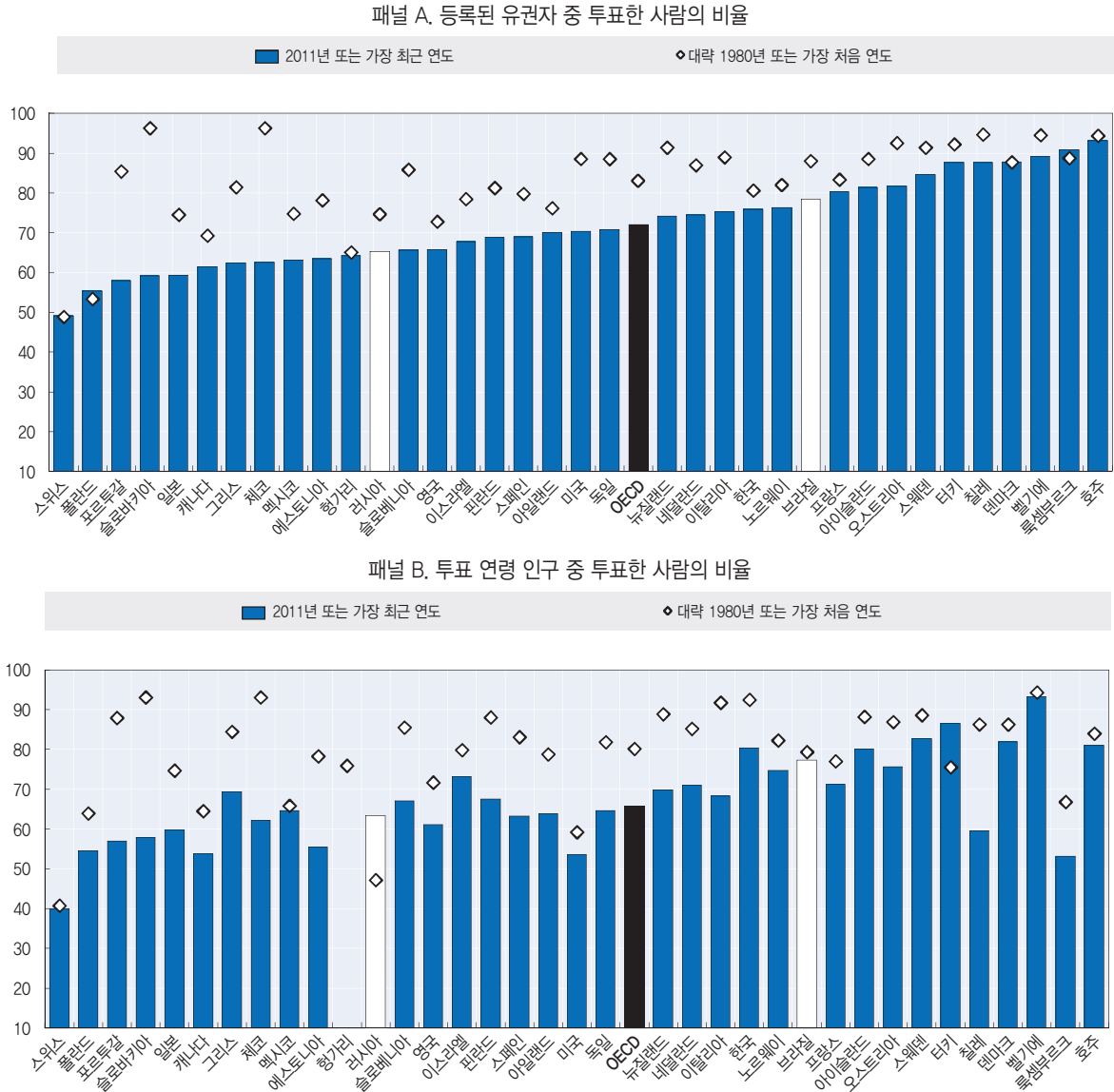
시민참여에 관한 이상적 지표들은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 활동과 정치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질에 관한 지표들은 공공 정책들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투명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기관을 신뢰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투표 참여는 이러한 활동들 중 단지 일부에 대한 대리지표이다. 투표제도가 가진 제도적 특징의 국가간 차이는 투표율 지표에 관한 국가간 비교에 영향을 끼친다.

규칙제정에 관한 협의 지표는 시민들을 정치생활에 참여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정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 지표는 협의의 투명성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을 측정하며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방해하는 몇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조합, 고용주 협회, 또는 소비자 단체 등 사회 집단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동 지표는 일반 대중과의 협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지표는 협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데, 협의 시스템의 제대로 된 작동 여부는 국가별 상황에 달려있고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제도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협의 방법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눈에 보는 How's Life?

스위스는 빈번한 선거의 시행으로 인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은 노르딕 국가들에서 높고 동유럽국가들에서 낮다. 외국인이나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그림 2.23, 패널 B).

그림 2.23. 투표율



주: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포르투갈과 미국의 경우 입수 가능한 최초 연도는 1980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1981년, 핀란드,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1982년,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1983년, 룩셈부르크의 경우 1984년, 칠레, 폴란드, 브라질의 경우 1989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1990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1992년, 러시아의 경우 1993년,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97년이다.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의 경우 2013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러시아의 경우 2012년,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영국, 브라질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의 경우 2008년이다. 핀란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브라질, 러시아의 경우에 국회의원(의회) 선거 대신에 대통령 선거를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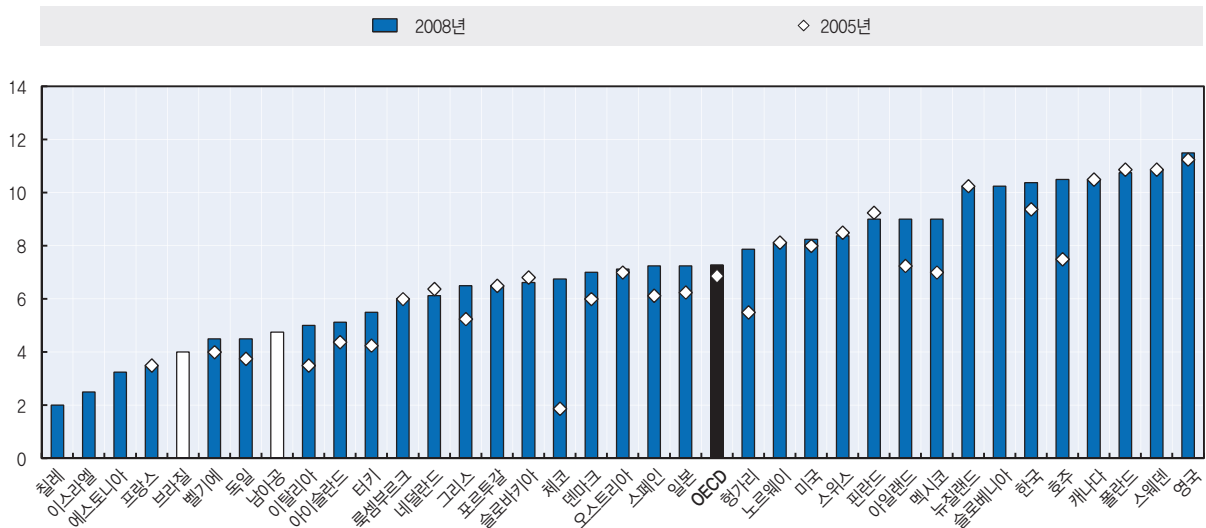
출처: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DEA), www.idea.i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091>

많은 국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투표율 하락을 경험했는데 동 국가들은 이전의 수십 년 동안 투표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시민참여의 하락 현상은 기타 주요 경제 대국들에서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러시아에서 투표율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급상승했다(그림 2.23, 패널 A).

그림 2.24. 규칙 제정에 관한 공식적·공개적 협의

종합지수, 2005년과 2008/09년



주: 종합지수는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한 공개적이며 공식적 협의의 핵심 요소들의 숫자에 따라 상승한다. 그러나 협의 과정이 효과적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출처: OECD(2009),규제관리체계 지표: 2009보고서,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429442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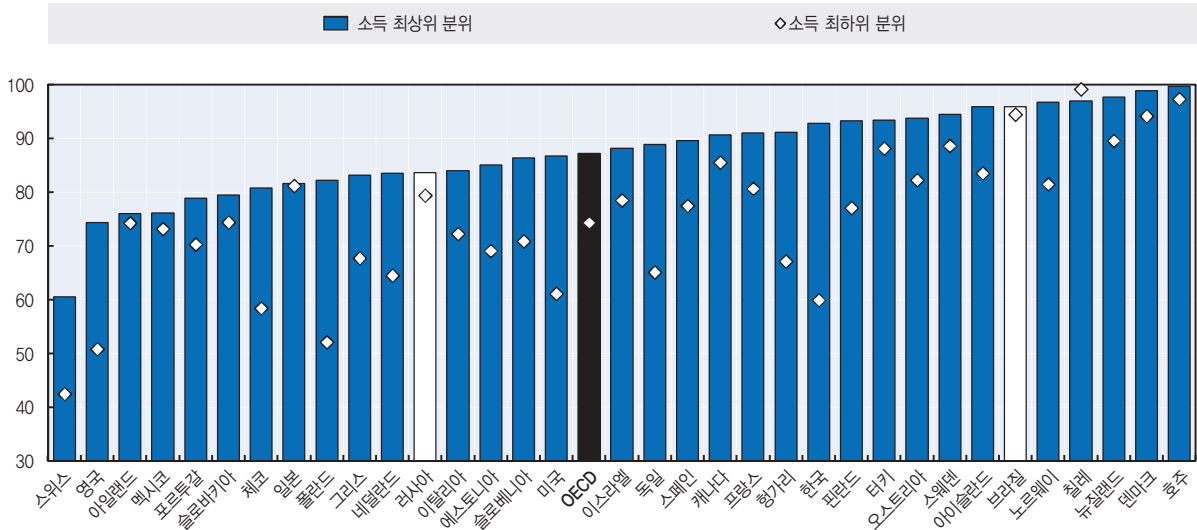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110>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규칙 제정에 관한 시민과의 협의(정의를 보려면 박스 2.8 참조)는 더 공식화되고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행 측면에서의 국가간 격차는 여전히 크다(그림 2.24). 협의의 개방성은 호주, 체코, 멕시코, 헝가리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에서 약간 감소했다. 이 지표가 규칙 제정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제도적 노력들을 파악하지만 시민들의 효과적인 참여 혹은 협의가 최종 채택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권이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보편적 권리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비해 대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OECD, 2011). 교육 수준별 격차도 크다. OECD 국가들 전체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미만의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12 포인트 높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은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그림 2.25).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투표율 격차는 영국, 폴란드, 스위스, 미국, 한국에서 특히 크며 브라질, 칠레, 일본,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그림 2.25. 소득별 투표율

등록된 유권자 중 투표한 사람의 비율, 2009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의 경우 2011년, 브라질, 체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0년,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2008년,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폴란드, 스위스의 경우 2007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웨덴의 경우 2006년, 영국의 경우 2005년, 러시아의 경우 2004년, 벨기에의 경우 2003년, 헝가리의 경우 2002년, 덴마크의 경우 2001년을 자료이다.

출처: 선거제도비교연구(CSES)의 모듈 2와 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129>

환경의 질

삶의 질은 건강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환경 오염물질, 유해 물질, 소음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환경은 또한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지구 환경의 악화와 자연자원의 고갈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숨쉬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PM10)(정의를 보려면 박스 2.9 참조)는 모든 OECD 국가들에게 크게 감소했지만(그림 2.26) 많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연간 제한치인 입방 미터 당 20 µg을 여전히 크게 상회한다. 이 농도는 칠레에서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에서 가장 낮다. PM10 농도는 러시아, 이스라엘과 동유럽국가들(에스토니아,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에서 크게 하락했는데 경제구조의 변화와 청정자동차엔진 기술의 도입의 결과 대기 오염물질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2012년에 OECD 국가들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9).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물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터키,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수질에 만족한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낮다. 러시아에서 두 명의 응답자중 한 명만이 수질에 만족한다고 보고했다(그림 2.27).

대기중 미세먼지 오염과 심장 및 호흡기 질환 사이의 연관성은 많이 요인들(직업, 나이, 성별, 기저질환, 흡연, 건강상 습관, 체질량, 교육과 소득 등)이 매개가 된다.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국가적, 지역적

연구는 특정 인구 집단이 대기 오염과 기타 환경적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우 어린 연령층과 매우 나이가 많은 연령층은 나머지 인구 집단에 비해 더 위험하다(OECD, 2011). 원래부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대기에 떠있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박스 2.9. 환경의 질 측정

위에서 제시된 환경적 질에 대한 두 가지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대기의 질**은 주민이 10만 명 이상인 도시 거주 지역에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미세먼지(PM10)의 연간 대기중 농도를 도시 인구 가중평균으로 측정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 및 고형 입자 물질로 이루어지며, 황산염, 질산염, 원소탄소, 유기탄소물질, 나트륨, 암모니아 이온을 포함하는데 농도는 다양하다. 미세먼지(PM10)는 초미세먼지(PM2.5)와 같이 더 작은 입자로도 구성되는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제시된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통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 **수질에 대한 만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특별히 물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파악한다. 이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의 수질이 만족스러운가 혹은 불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수질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중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환경의 질”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하며, 이상적인 지표들은 다수의 환경 매개체(토양, 물, 공기), 환경적 서비스와 편의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 환경적 위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입수 가능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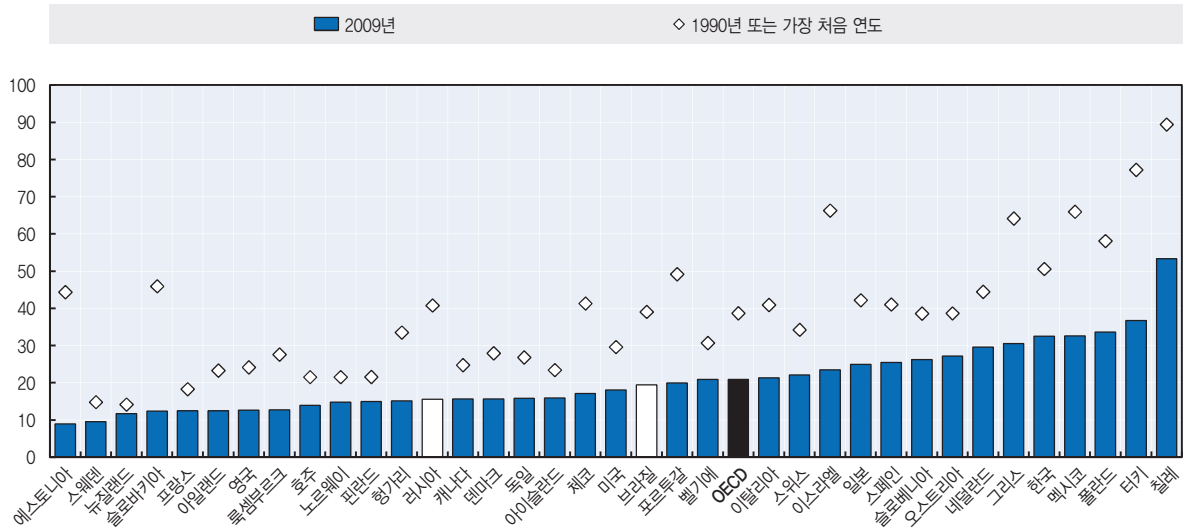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인데 대기의 질은 오염물질의 복잡한 혼합 결과물로 시간의 경과, 공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대기 오염의 지표는 양질의 시계열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국가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오염 감시 및 통계적 기법의 개선으로 대기 오염 측정 능력이 향상되었고 오염이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첫째, 데이터는 연간 수치와 관련되므로 더 작은 시간 단위(시간 또는 월별)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 둘째, 대기오염 데이터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노출된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 개인별 노출도는 상당히 다르며 거주지, 근무지, 직업, 생활습관,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

환경의 질에 대한 주관적 데이터는 환경적 상태와 거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질에 대한 만족도 지표는 갤럽세계조사의 데이터에 근거하는데 이 조사는 비공식조사로서 샘플 수가 적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동 측정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PM₁₀ 농도의 높은 미세먼지의 단기적 영향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만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오염된 환경에 대한 취약성과 노출도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의 결과(영양상태, 노출도 증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는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이 환경적 질에 대한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그림 2.28).

그림 2.26. 대기 오염

미세먼지(PM₁₀) 농도,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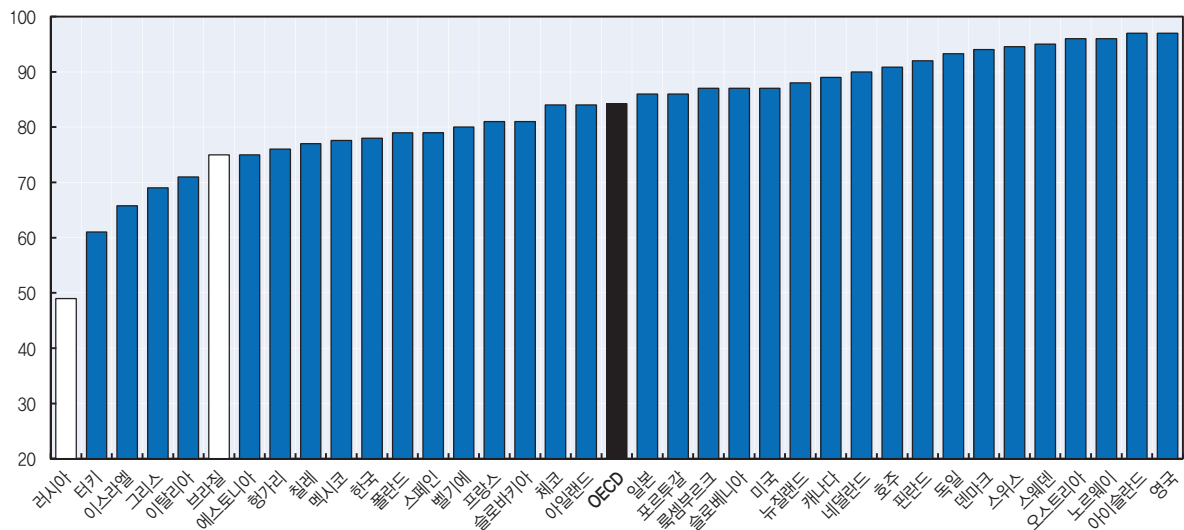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013년에 주민이 10만명 이상의 도시 주거지역에서 도시인구 가중치를 부여한 미세먼지(PM₁₀)의 수준을 보여준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데이터가 제공이 가능한 가장 처음 연도는 1994년이다.

출처: 세계은행, 데이터: PM₁₀, 국가 수준치(입방 미터당 마이크로그램,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PM10.MC.M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148>

그림 2.27. 수질에 대한 만족도

전체 인구 중 만족감을 표시한 사람의 비율, 2012년 또는 가능한 최종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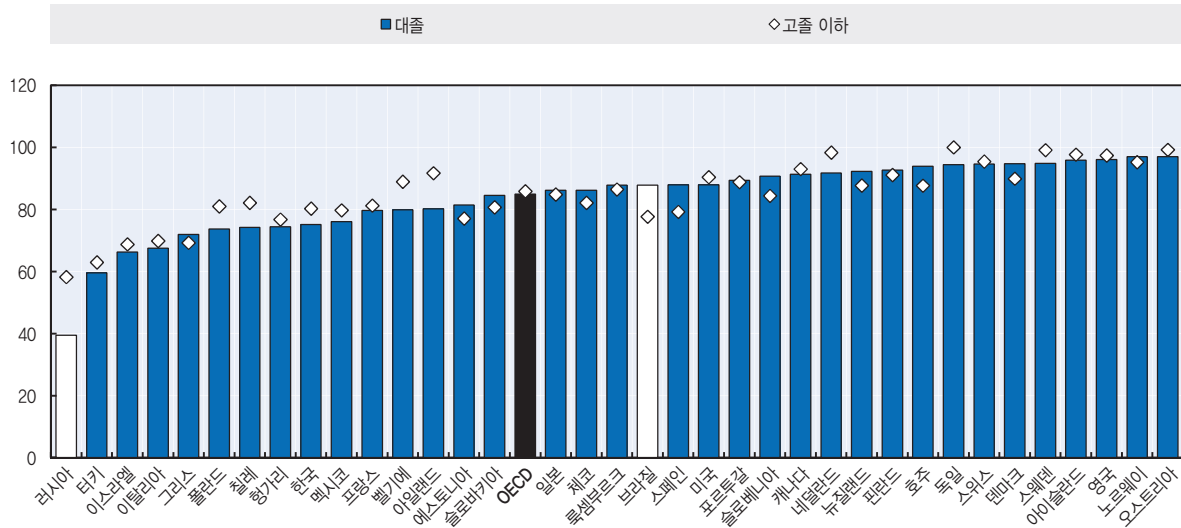
주: 칠레, 일본, 한국, 영국, 브라질은 2011년도 자료임.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167>

그림 2.28. 교육 수준별 수질 만족도

고학력층과 저학력층 사람들 중 만족감을 표시한 비율, 2012년 또는 가용한 최종 연도



주: 칠레, 일본, 한국, 영국, 브라질 데이터는 2011년 자료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186>

개인적 안전

신체적 안전은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인 사람들의 생명에 관한 광범위한 위협이 포함된다. 어떤 형태의 범죄는 인명 손실을 초래하며 다른 형태의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범죄는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non-victims)의 웰빙에도 큰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 대중의 걱정과 염려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살인률(정의를 보려면 박스 2.10 참조)은 낮는데 OECD 평균(10 만 명 당 2.23건의 살인)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살인률은 미국에서 OECD 평균의 2배이며,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에서는 이보다도 더 높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률이 OECD 국가들에서 하락했거나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지만 룩셈부르크와 한국은 예외였고 특히 멕시코에서는 살인률이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살인률이 급감한 나라는 브라질, 러시아, 에스토니아이다(그림 2.29).

2012년에 OECD 국가들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4%)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의 피해자(정의를 보려면 박스 2.10 참조)였음을 보고했다(그림 2.30). 자기 보고 피해자율은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미국, 터키의 경우 2 퍼센트 포인트 미만이다. 그러나 자기 보고 피해자율은 브라질, 칠레에서 그 두 배이며 멕시코에서는 훨씬 높다(13%).

남성 대상 살인률은 여성 대상 살인률보다 대개 훨씬 더 높다(제4장). 살인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남성이다(OECD, 2011).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높은 살인률은 갱과 마약밀매 등 범죄 활동의 패턴을 반영한다. 여성은 가정 폭력과 배우자 폭력의 주된 대상이며 남성보다 범죄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 접촉 범죄와 재산상 범죄의 경우에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범죄 피해 발생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불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박스 2.10. 개인적 안전의 측정

위에서 제시된 개인적 안전에 대한 두 개의 중심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신고된 살인율**은 매해 인구 10만 명 당 경찰에 신고된 고의적 살인 건수를 측정한다. 이 데이터는 유엔마약범죄사무국 (UNODC)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내무부/법무부, 인터폴, EU 통계청, 지역 범죄예방 관측소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 **자기 보고 피해율**은 지난 12개월 동안 폭행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 제시된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개인적 안전에 관한 이상적 지표들은 개인에 의해 경험된 다양한 범죄와 범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심각성에 따라 범죄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에 관한 공식 기록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간 범죄로 간주되는 기준의 차이와 기록 관행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활동에 기반한(police-based) 공식적 통계는 전체 상황 중 일부만을 알려주는데 이는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숨은 범죄 수치”). 살인은 국가간 비교가능성, 과소보고, 분류 체계의 차이 등 위에 언급된 문제점들에 의해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형태의 범죄이다. 대부분의 폭력 살인은 어떤 형태의 무기 사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에 관한 통계는 한 국가의 무장 폭력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현황을 반영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인률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접촉 범죄만을 나타낸다.

범죄 피해 조사는 살인 이외의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여기서 제시된 지표는 폭행을 가리키며 피해자와 공격자간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적은 표본 크기가 특징인 비공식 조사(갤럽세계조사)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 인구 중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측정하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의 범죄피해조사는 일부 국가에 존재하지만, 공동의 기준과 방법론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적 조사(국제 범죄 피해조사)로부터 입수 가능한 데이터는 2000년대 중반에 관한 것으로서 소규모 표본을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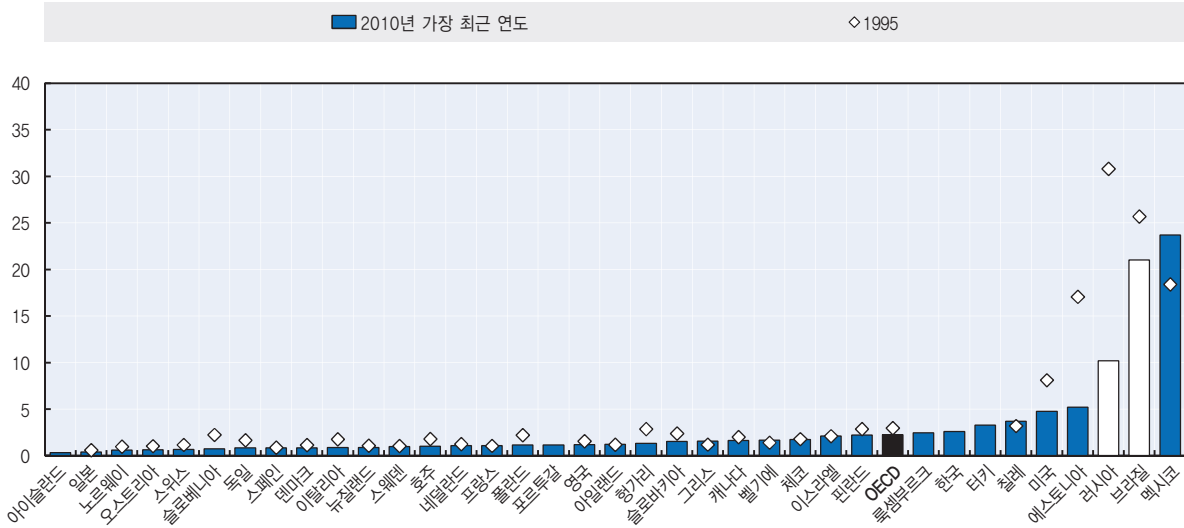
피해 조사는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만약 일관성 있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범죄 수준의 변화에 관한 측정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한계 때문에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사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의 수치에 대한 대리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해석 때문에 어떤 범죄는 과소추정되거나 과대추정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성폭행이나 배우자 폭력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둘째, 피해자 조사의 정확성은 피해자가 지나간 범죄를 기억해내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해낼 가능성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부패와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범죄는 가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멕시코 통계청(INEGI)/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최근 보고서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범죄 통계의 가용성과 품질을 개선할 로드맵(roadmap)을 제시한다(<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3/2013-11-Crime Stats-E.pdf>).

그림 2.29. 고의적 살인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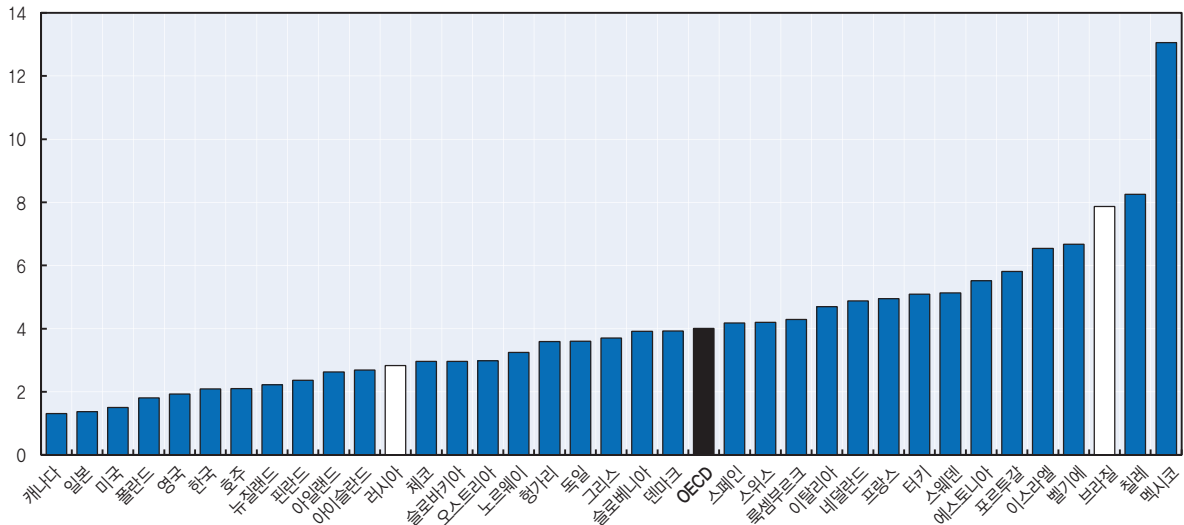
주: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의 경우 2009년, 룩셈부르크, 터키의 경우 2008년이다. 영국에 관한 데이터는 세 개의 관할지역(잉글랜드 &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수집되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수치들은 세 지역의 비가중 평균이다.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www.unodc.org; 유럽통계청 2011, 범죄와 범죄심리학 통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대한 자료임,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crime/introduc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205

그림 2.30. 자기 신고 피해자

지난 12개월 사이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비율, 2010년



주: 데이터는 멕시코의 경우 2012년, 칠레의 경우 2011년, 에스토니아와 스위스의 경우 2009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도 자료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224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상황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상황 자체 만큼 중요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최고의 판단자라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통틀어서 삶에 대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국가들과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국가들(정의를 보려면 박스 2.11 참조) 사이의 격차는 11점 만점에 대략 3점이다(그림 2.31).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헝가리, 포르투갈,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OECD 지역에서 사람들은 평균 6.2점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예: 일본과 한국)은 경제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예: 칠레, 브라질, 멕시코)은 기대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 조사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과 무관한 기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OECD 국가들(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은 삶의 만족도에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예: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칠레, 브라질)은 훨씬 격차가 큰 분포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분포를 보이는 국가들은 삶의 만족도의 평균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멕시코, 칠레, 브라질은 비교적 격차가 큰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이지만 삶의 만족도의 평균 수준은 서로 매우 다르다.

박스 2.11. 주관적 웰빙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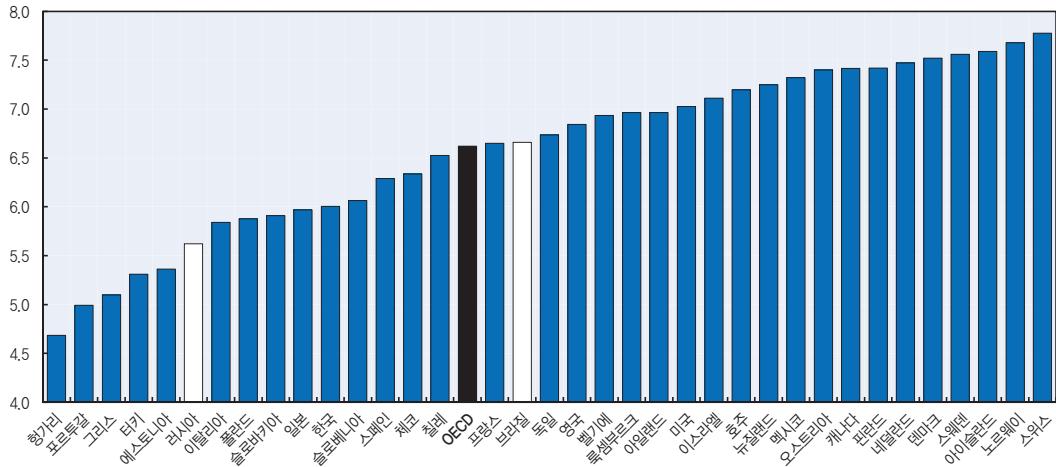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의 중심 지표인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이 지표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자기 기대성취를 위한 노력적도”로도 알려짐)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삶(10점)과 최악의 삶(0)과 비교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점수는 여러 다른 범주의 응답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된다. 동 보고서의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비공식조사임)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표에서 얻은 증거는 주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상적 지표들은 살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려주고 다른 국가와 인구 집단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캔트릴 사다리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선의 측정 방법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캔트릴 사다리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성격, 기분, 문화적 규범, 상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 중 일부 요소들(성격과 기분 등)은 국가간 평균 수준의 비교를 위해 대체로 무시될 수 있는데 표본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문화적 요인들이 응답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시 주의해야 한다.

주관적 웰빙이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대규모이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근거로 해야하며 시간이 지나도 국가들간에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은 주관적 웰빙 데이터의 수집·발표·분석에 관한 국제적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지침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 및 경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정신적 웰빙의 “번영상태(eudaimonic)”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 지침은 또한 국가 기관과 국제 기관이 자체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관적 웰빙에 관한 다수의 기본적 조사 모듈을 포함한다.

그림 2.31. 삶의 만족도

칸트릴 사다리, 2012년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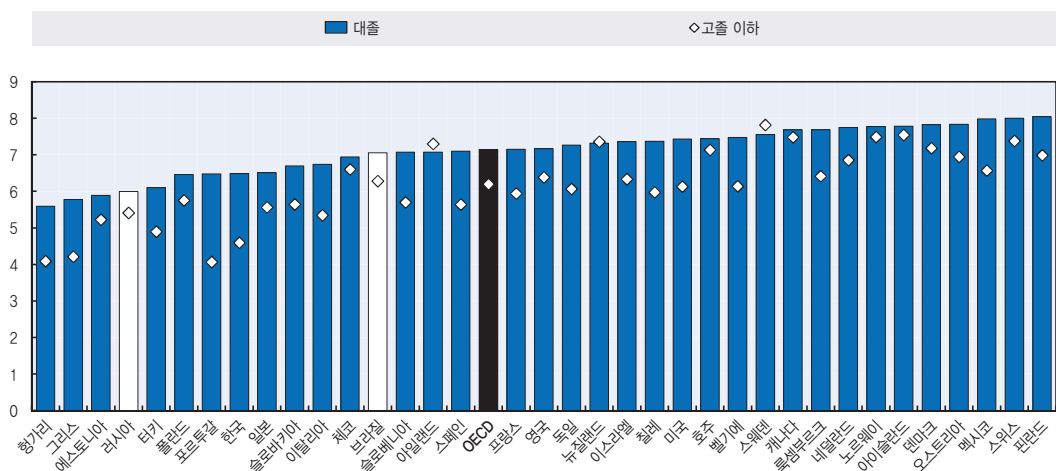
주: 칸트릴 사다리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측정된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11 참조). 칠레의 경우 제공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11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243>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낮은 교육 수준은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그림 2.32). 이 효과는 포르투갈, 한국, 그리스, 헝가리에서 강하다. 삶의 만족도와 교육 간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소득과 건강 상태를 통제하는 경우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Boarini et al., 2012 참조). 이는 교육이 삶의 다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주관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32. 교육 수준별 삶의 만족도

칸트릴 사다리, 2012년 평균치



주: 칸트릴 사다리는 0에서 10까지의 숫자로 측정된다(정의를 보려면 박스 2.11 참조). 칠레의 경우 제공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2011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262>

결론

본 장은 11개 영역에서의 평균적 웰빙 성과가 국가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본 장은 또한 관련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웰빙 성과의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었다. OECD 국가들간에는 평균적 웰빙 성과 측면에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데 모든 웰빙 영역에 해당된다. OECD 전체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다수의 웰빙 부문에서 상당한 진보가 있었으나, 이 추세는 일부 웰빙 영역들(예: 직업과 선거 참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국가들 간에 웰빙 성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How's Life? 영역들에서 인구 집단간 웰빙 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 Antoni, C.A. and Matthew O. Jackson (2005), "Like father, like son: Social networks,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social mobility", *Working Papers*, No. 124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Boarini, R. et al.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2/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9b9ltjm937-en>.
- EU (2013),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lfs>.
- EU (2011),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 EU (2011),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crime/introduction>.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 IDEA (201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www.idea.int/ (accessed 23 July 2013).
- Ioannides, Y.M. and L. Datcher Loury (2004). "Job Information Networks, Neighborhood Effects, and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2, No. 4, pp. 1056-1093, December,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OECD (2013a),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na-data-en>.
- OECD (2013b),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3c),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3d),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accessed on 23 July 2013).

- OECD (2013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2887730>.
- OECD (2013f), "OECD Health Data: Health status",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 OECD (2013g),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 OECD (2013h),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OECD (2013i),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2a),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 OECD (2012b),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2-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0a), "Labour Force Statistics: Summary tables",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23data-00286-en>.
- OECD (2010b), *PISA 2009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 OECD (2009),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2009 report*,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4294427.pdf.
- Scrivens, K. and C. Smith (2013),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An Agenda for Measure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United Nations (2012),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3/2013-11-CrimeStats-E.pdf>.
-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ww.unodc.org/.
- World Bank, Data: *PM₁₀, country level (micrograms per cubic meter)*,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EN.ATM.PM10.MC.M3>.

제3장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 동안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금융위기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가구소득과 자산, 일자리, 주거 조건이 악화되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금융위기는 가난과 불평등을 확대시킨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젊은이와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구직 단념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났고 고용된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일과 생활 사이의 갈등이 증가했다. 명백히 부정적인 추세가 주관적 웰빙과 시민참여 영역에서도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수준이 상승했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했고,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건강과 사회적 관계 등 다른 웰빙 영역들의 추세는 확실치 않다. 웰빙의 단기적 추세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가구의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으로서 사용되는 통계적 기반의 적시성과 빈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된다. OECD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 법의 조건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한다.

서론

본 장은 제1장에 제시된 **How's Life?** 웰빙 체계를 이용하여 2007년 말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 이후에 나타난 광범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웰빙 성과들의 추이를 평가한다.¹ 이러한 추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2007-2012년 기간을 중심으로 **How's Life** 지표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 다루는 지표 영역들은 소득과 자산, 일자리와 근로소득, 건강상태,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가 이 장에서 고찰되지 않는 다른 웰빙 영역들(예: 교육과 기술 또는 개인적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Dao and Loungani, 2010; Chowdury et al., 2013; OECD, 2013)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가시화 된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해 통계적 증거를 제시할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본 장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본 장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가 웰빙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관한 체계적 추론 또는 분석(기타 다른 원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한 경제 위기의 영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장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의 웰빙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증거는 위에서 선택된 영역들에 관한 **How's Life?** 중심 성과 지표들에 주로 의존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웰빙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가 웰빙에 미친 모든 영향들을 파악하기에 충분히 상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지표들이 충분히 자주 그리고 적기에 집계되지 않았고 위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특정 인구 집단(예: 실업자)이 아닌 인구 전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분리된 지표들과 같은 보조 지표들이 입수 가능한 연구로부터의 증거와 함께 사용되어서 사람들의 웰빙에서의 최근 추세에 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본 장은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 대해 다루지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웰빙 성과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이 두 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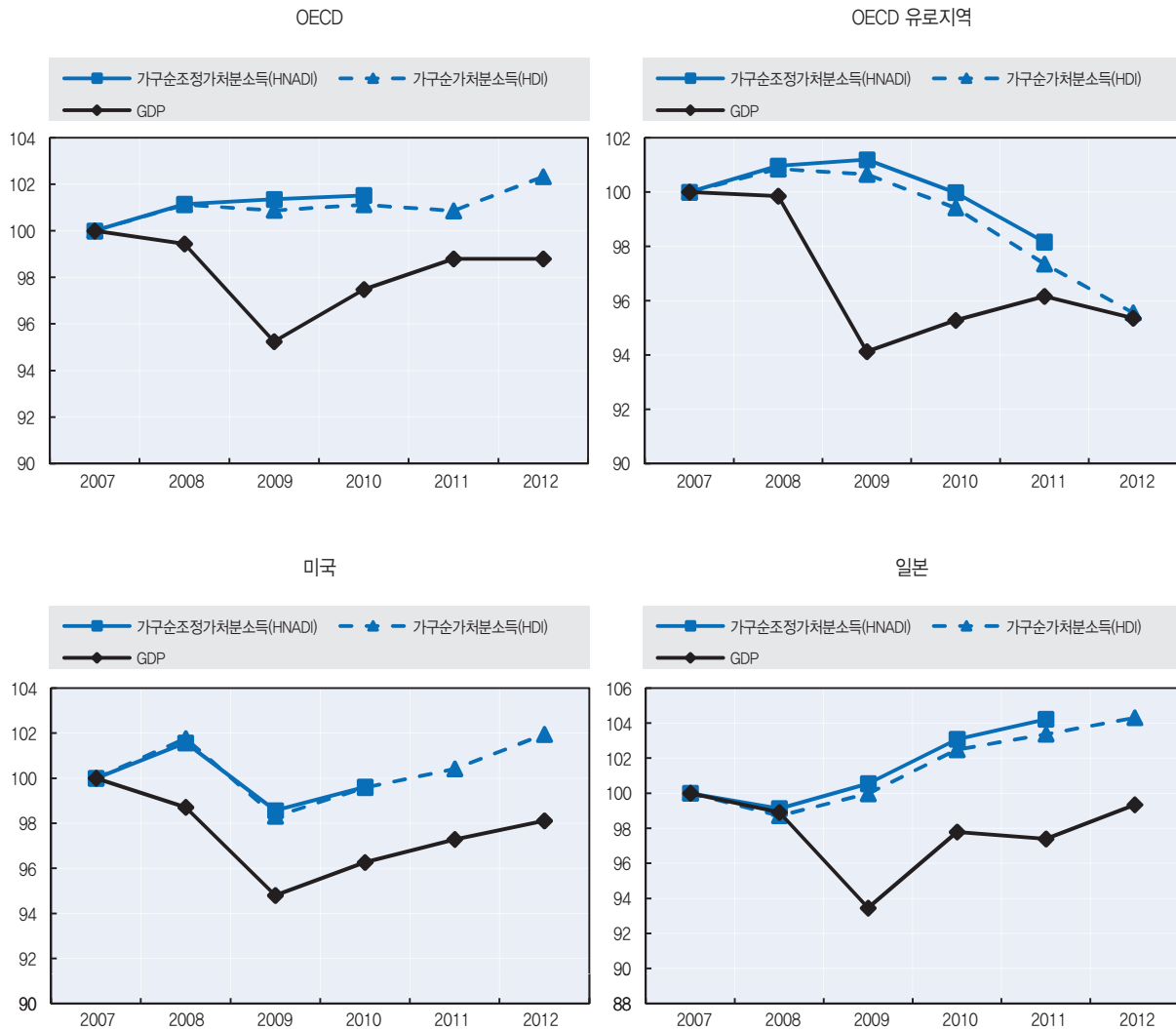
본 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의 증거만을 논의한다. 본 장은 다른 경제위기나 금융위기 또는 일부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부채위기(**sovereign debt crisis**)의 구체적 특징들에 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관찰되었던 웰빙 성과들이 지속 가능한지에 관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며, 웰빙 지표들에서 관찰된 변화들이 일부 국가들에서 “평형으로의 회귀(**return to some equilibrium**)”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소득과 자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1인 당 실질 GDP는 전체 OECD 지역에서 연간 거의 2.5%가 하락했고 2010년 이후 성장이 다시 둔화되었다. 2010에서 2011년 사이에 1인 당 실질 GDP는 1%가 증가했고 2012년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2012년에 1인 당 실질 GDP 수준은 전체 OECD 지역에서 위기전 수준보다 여전히 1%가 낮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인 당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NADI; How's Life?**의 중심 지표)의 국민계정 측정치는 1인 당 실질 GDP보다 강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여주었는데 매우 완만하지만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그림 3.1).

그림 3.1.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의 실질 GDP와 실질 가구소득의 추세

1인당, 2005년 구매력평가지수(단위: 미달러), 2007년=100



주: 가구의 역할을 하는 비영기관도 가구에 포함되나 뉴질랜드는 예외이다. 가구의 민간 소비가 가구 순가처분소득(HDI)을 추정하기 위한 가격수정인자(deflator)로 사용되었고, 실제 개인별 소비가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HNADI)을 추정하기 위한 가격수정인자(deflator)로 사용되었다. OECD 평균에서 칠레,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터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 전체의 1인 당 실질 GDP에 대한 데이터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의 OECD 추정치를,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의 OECD 추정치를 근거로 한다. OECD 전체에 대한 실질 가구순가처분소득에 대한 데이터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의 경우 2011년의 OECD 추정치를 근거로 한다. 2012년의 모든 수치들은 OECD 경제 전망 93호에 근거한 추정치이다. 2012년 OECD 가구순가처분소득 추정치에서 그리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OECD(2013a),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뉴질랜드 통계; OECD(2013), OECD 경제 전망: 통계와 예측(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16097408>; OECD(2013), OECD 경제 전망, Vol. 2013/1,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3-1-en;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281>

특히, 1인 당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은 1인 당 실질 GDP는 가장 급격히 감소한(4% 감소) 2009년에 1%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들에서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이 변화한 시기와 규모는 큰 차이가 있다. 유로 지역에서 경제위기가 실질가구소득에 끼친 영향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 늦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더 극심했는데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이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했다.

2009-2012년 사이에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이 연간 1% 이상 감소했고 2011년에는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이때에 1인 당 실질 GDP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실질 GDP와 1인 당 가구순가처분소득 모두가 다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유럽에서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그리스(2010년과 2011년 모두 10% 이상)이었으며, 아일랜드(2010년 약 3%, 2011년 4% 이상), 헝가리(2009년 4%, 2010년 3%), 이탈리아(2009년 3%, 2010년과 2011년 모두 약 1%), 포르투갈(2011년 5%), 스페인(2010년 4% 이상, 2011년 3%)이 그 뒤를 따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는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의 상당한 증가(연간 2% 이상)를 경험했다.

미국에서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시기와 규모면에서 GDP의 변동을 더 면밀히 반영하는데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과 1인당 실질 GDP는 2009년에 약 4% 감소했으나 이 두 부문의 총량적 성장은 2010년에 재개되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말에는 1인 당 실질 GDP가 위기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며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은 2007년 대비 2% 증가했다. 기타(비유럽) OECD 국가들에서 실질가구순(조정)가처분 소득은 1인 당 실질 GDP보다 일반적으로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그림 3.1), 캐나다와 호주(부록 3.A1의 그림 3.A1.1)에서 그러한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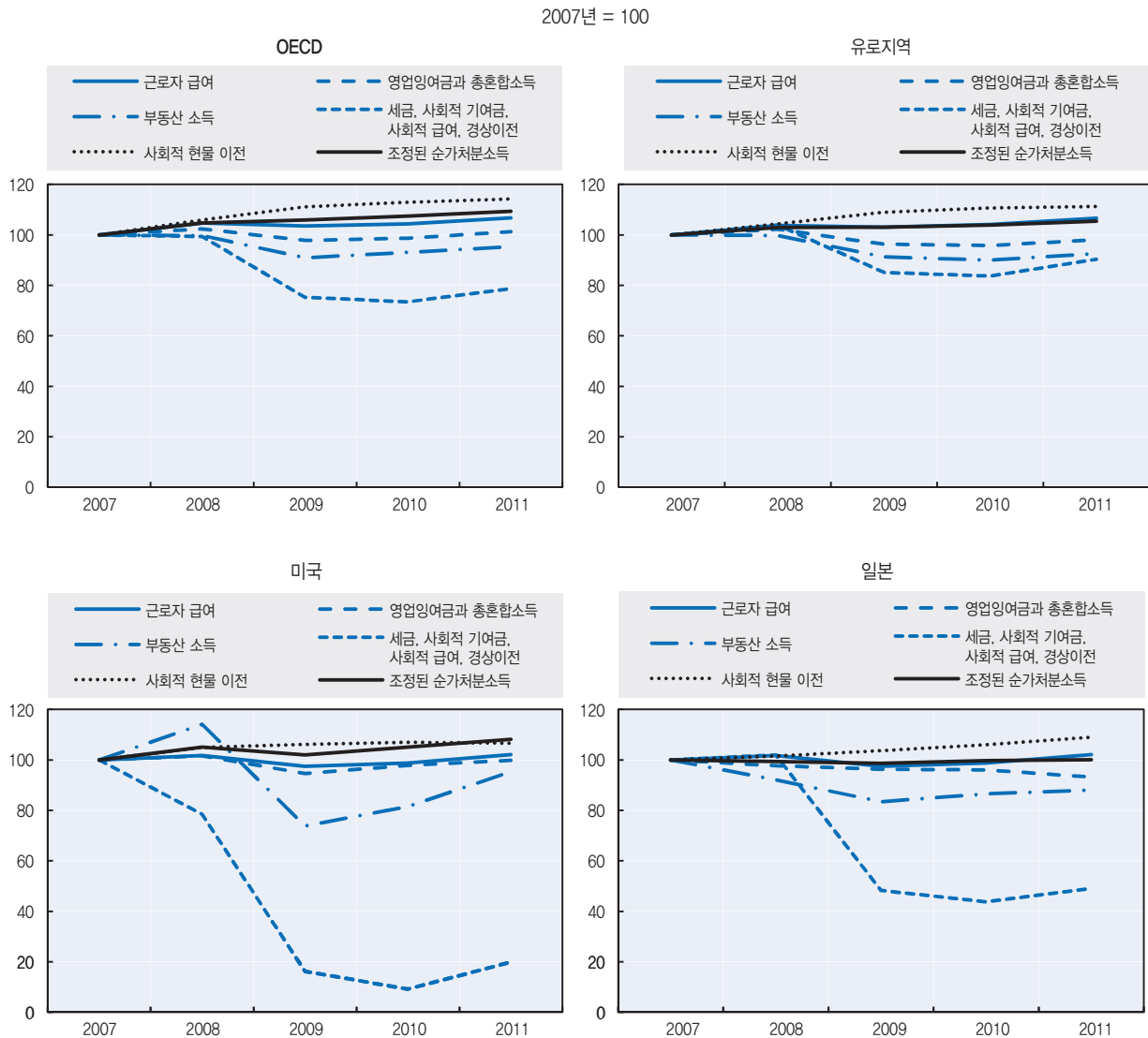
OECD 국가들 간의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이 각기 다른 유형을 보이는 것은 가구조정가처분소득을 구성하는 두 개의 커다란 요소인 일차소득(근로자 급여 총액, 부동산 소득, 영업잉여금)과 이차 소득(사회적 현물이전 수령액, 공공부문으로부터의 현금이전, 가구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서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OECD 지역 전체적으로, 가구의 1인 당 일차소득은 2009년에만 감소했고(2.6%) 2010년부터 계속 증가했다(연간 1% 이상, 그림 3.2). 1인 당 일차소득의 감소는 영업잉여금(2009년에 4%)과 부동산 소득(2009년에 9%)이 급격한 하락 때문인 것으로 이는 근로자 임금의 완만한 하락(2009년에 1% 하락)과 대조된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가구에 의해 지불된 순이전은 20%가 감소했지만 사회적 현물이전은 10%가 증가하였다.

유로 지역에서 1인 당 일차소득의 하락은 OECD 전체의 1인 당 일차소득의 하락과 비슷한 패턴을 따랐지만 영업잉여금은 2010년에도 하락이 계속되었다(그림 3.2). 그러나 OECD 지역 전체에서 널리 나타났던 패턴과는 대조적으로, 세금과 이전 소득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2009년까지만 일차소득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였고, 2010년부터는 가구가 지불하는 순이전(net transfers)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사회적 현물이전은 정책 상태를 유지하였다.

미국에서 2009년에 발생한 가구 분원 소득의 커다란 감소(8%)는 부동산 소득의 폭락(40%), 개인사업과 주택 소득의 큰 하락(7%), 근로자 급여의 감소(4%)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차적 소득(정부가 가구에 재분배하는 소득)은 위기 직후에 상당히 증가했다(그림 3.2). 비슷한 패턴이 일본에서 발생하여 일차소득은 2009년에 근로자 급여(4%)와 부동산 소득(9%)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했던 반면에 이차적 소득은 가구가 지불한 순이전의 큰 감소로 인해 상당히 증가했다.

그림 3.2. 조정된 가구의 순가처분소득의 구성요소



주: OECD는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2013a)를 근거로 한 계산,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00>

1인 당 이차소득의 변동은 재정 정책에서의 자동 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와 자유재량적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요소가 경제 위기의 초기 단계부터 2009년까지 가구 소득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일반 정부 부채 역시 2010년에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재정 건전화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었고 일부 국가들에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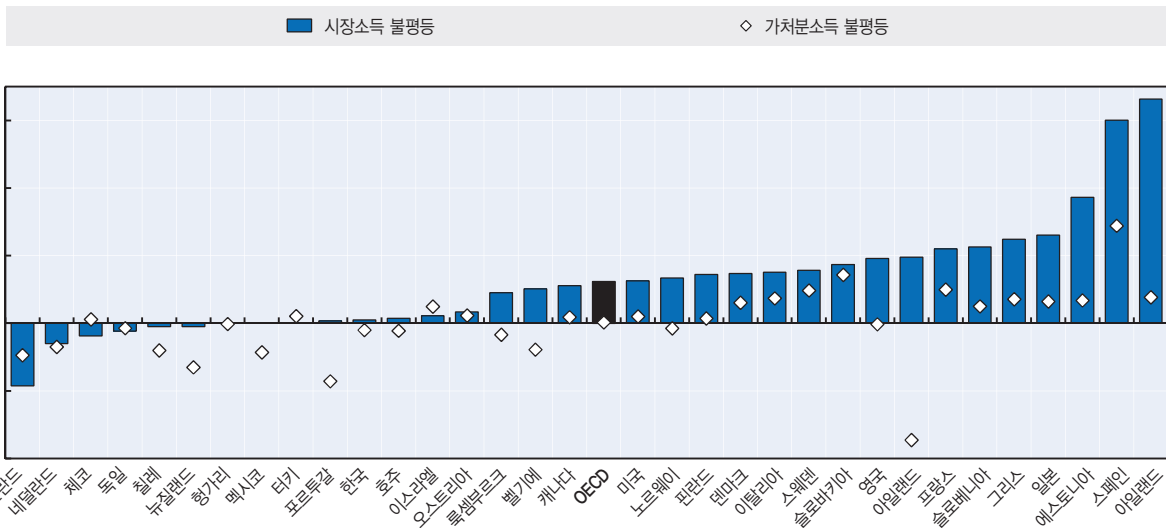
정부의 구조적 근본 적자의 감소는 유로 지역에서 가장 컸으며 이는 1인 당 실질가구가처분소득의 큰 하락과 상관관계가 있다.

가구 소득에 관한 거시적 통계의 이러한 변화들이 성격이 다른 가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가구 마이크로데이터²에 따르면 평균 가구소득은 2007년에서 2010년(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데이터가 입수 가능했던 최종 연도)사이 실제로 연간 2% 하락했다. 저소득 가구들은 분포도의 상단에 위치한 가구들보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았다(OECD, 2013d).

소득 불평등에 관한 표준적 측정방법인 지니계수에 의해 측정된 가구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2010년에 이르기까지 3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조금 상승했으나 OECD 지역 전체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그림 3.3).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변동폭은 세전소득의 불평등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지니계수는 2010년에 이르기까지 3년간 1.4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이전의 12년간 기록되었던 것보다 더 큰 증가 수준이다. 시장소득불평등의 증가폭은 아일랜드(8%)와 스페인(6%)에서 특히 컸으며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그리스, 슬로베니아, 프랑스에서도 상당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측정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반영하는데,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재정 부양책(fiscal stimulus)에 의한 세금 및 혜택제도가 위기 기간 동안의 부정적 영향을 대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OECD, 2013d).

그림 3.3. 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지니 계수의 퍼센트 변화, 2010년과 2007년 비교



주: 2007년 데이터는 칠레와 일본의 경우 2006년,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2008년 데이터이며, 2010년 데이터는 헝가리, 일본과 터키의 경우 2009년, 칠레의 경우 2011년 데이터이다. 2010년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잠정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시장소득은 헝가리,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 보고되었다.

출처: OECD(2013b), "소득 분배", OECD 사회 및 복지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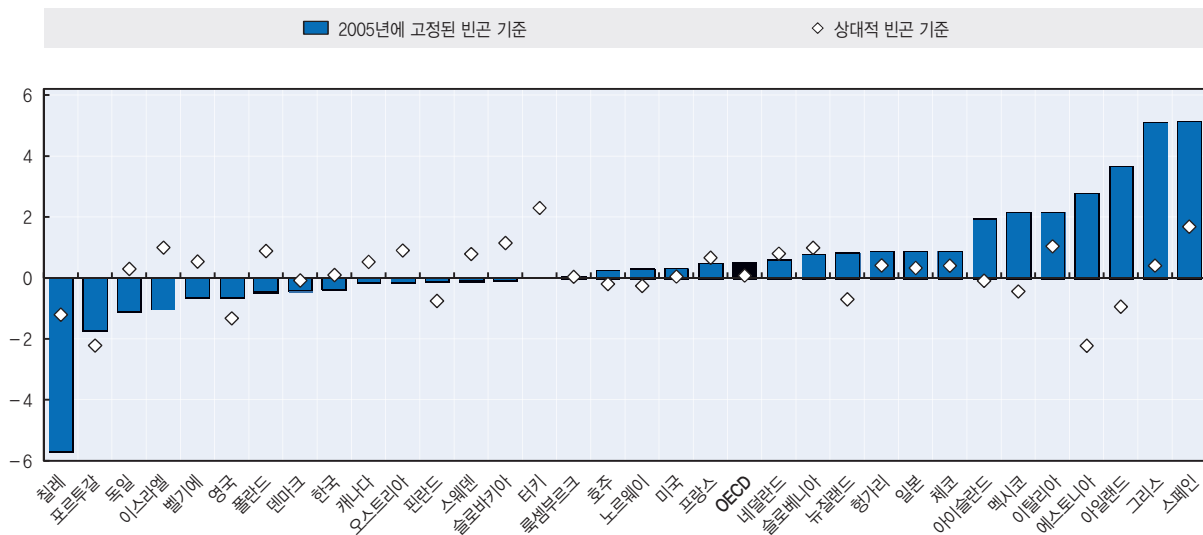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19>

소득 수준의 최하단에 위치한 가구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전개과정이 확실히 보인다(그림 3.4). 중위가구소득 (median household income)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된 상대적 소득 빈곤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OECD 지역에서 대체로 안정된 상태를 보였지만 터키와 스페인에서 크게 증가했고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 크게 감소했다.³ 평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이의 상대적 소득 빈곤은 증가했던 반면에 노인들 사이에서는 감소했다

(OECD, 2013d). 그러나 2005년 중위소득의 50%에 고정된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후 연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했을 때 OECD 지역의 빈곤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더 많이 증가해서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에서 5 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다. 국가계정 내의 가구가처분소득의 하락은 유로 지역에서 대부분 2010년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고정된(anchored)” 빈곤의 상승폭은 좀 더 최신 자료 입수가 가능해지는 2010년 이후에 더 커질 것이다.⁴

그림 3.4. 소득 빈곤율

2007-2010년 기간의 상대적 그리고 “고정된” 빈곤률의 퍼센트 포인트 변화



주: 2007년 데이터는 칠레와 일본의 경우 2006년, 호주,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경우 2008년 데이터이며, 2010년 데이터는 헝가리, 일본, 터키의 경우 2009년, 칠레의 경우 2011년 데이터이다. 2010년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잠정적 데이터를 의미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시장소득은 헝가리,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세금을 제하고 보고된다. 상대적 소득 빈곤율의 변화는 매해 중위소득의 50%에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측정된다. “고정된” 빈곤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는 2005년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의 연도에도 동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고정된 빈곤(anchored poverty)”에 대한 추정치는 스위스와 터키의 경우 입수가 불가능하다.

출처: OECD(2013b), “소득 분배”, OECD 사회 및 복지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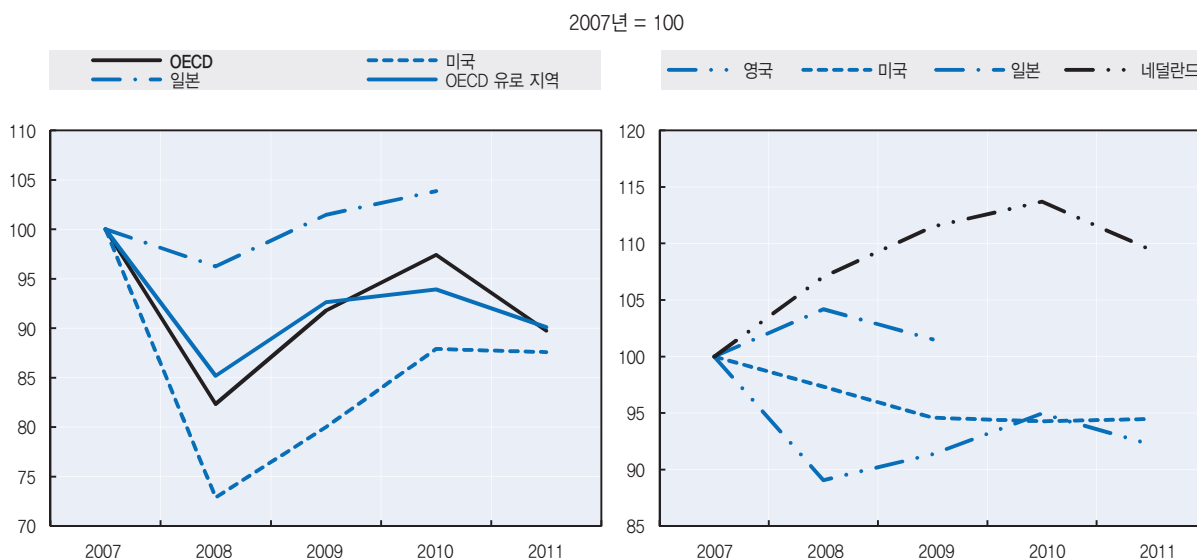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가구들은 커다란 금융손실을 경험하여 가구의 지급불능과 개인 파산 건수가 급증했는데,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개인 파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50% 증가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20% 증가했다. 개인 파산은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더 낮은 비율이지만 역시 증가했다 (Creditreform, 2012). 미국에서 2009-2011년 사이의 개인 파산의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추정되며 캐나다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Allen and Damar, 2012).

전체 OECD 지역의 경우 1인 당 순금융자산(the How's Life?의 중심 지표)은 2008년에 거의 20%가 감소했다(그림 3.5, 좌측 패널). 이후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연간 7.5%가 회복됐고 2011년에 7%가 다시 하락했는데 금융시장의 회복 덕분에 순금융자산이 2012년에는 성장세로 돌아서게 되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추세는 OECD 국가들이 2008년 위기 초기 단계에 경험한 충격과 이후 가계수지의 회복에서 나타난 다양한 패턴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에서 가구는 금융위기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순금융자산이 2008년에 30% 이상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유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러한 3개국이 경험했던 손실보다는 작은 금융손실을 입었지만 2011년의 순금융자산은 여전히 위기 이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룩셈부르크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구 순금융자산이 하락하지 않은 유일한 두 국가이다.

OECD 국가에서 비금융자산이 가구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대차대조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려면 금융자산이외에 비금융자산을 관찰해야 하지만 비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는 더 제한적이고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렵다.⁶

그림 3.5. 가구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주: 가구순금융자산은 미달려화 기준 2005년 1인 당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표현된다.

출처: OECD(2013a)에 근거한 계산,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국민계정의 1인 당 주택가치는 2007년 이래(2011년까지) 크게 하락했다(그림 3.5, 우측 패널).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슷한 정보가 입수 가능한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주택 관련 재산은 2007년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⁷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동안 가구의 비금융자산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007-2012년 사이에 OECD 지역에서 주택의 실질가격은 15% 이상 하락했고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은 중위소득 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거용 주택이 중위소득 가구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Smeeding, 2012).

글로벌 금융위기가 특히 최빈층 가구의 대차대조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증거가 있지만(Fondeville et al., 2010 등) 이 분야에 대한 비교가능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구 자산의 분배에 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로부터의 증거는 가구 자산 분배의 변화가 가구 소득 분배 관련 변화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구 평균 순자산(mean household net worth)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가 감소했는데 중위 순자산(median net worth)이 40% 급감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자산불평등이 증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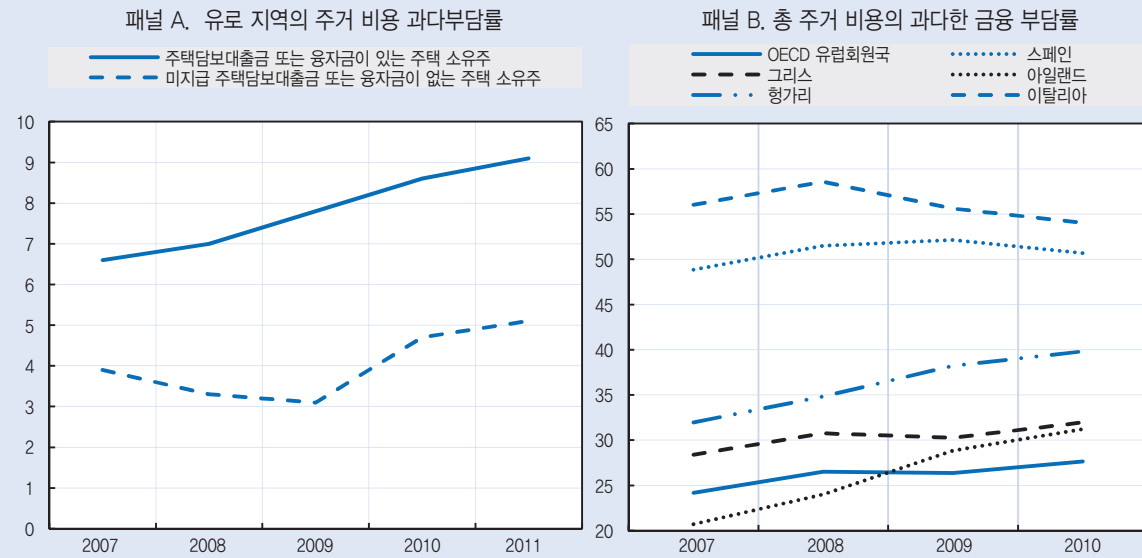
것으로 소비자 재정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에서 측정됨). 미국 소비자재정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 기간 동안 중산층 가구의 자산 손실이 가장 컸던 반면에 최상위 가구는 경기침체 기간 중 잃었던 자산을 2010년에 모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주택 시장에서 중산층이 입은 손실이 매우 컸고 영구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중산층의 주택(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가치는 2006년의 최고치에서 전국적으로 30%가 하락했고 이후 회복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Smeeding, 2012). 캐나다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최저소득 가구가 다른 계층의 가구보다 더 높은 파산율을 경험했다(Allen and Damar, 2012).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수지에 악영향을 끼친 것 외에도 가구의 주거 비용지불 능력을 약화시켜서(박스 3.1) 가구의 금융 불안을 확대시켰다.⁸

박스 3.1. 글로벌 금융 위기가 유럽과 미국의 주거조건에 미친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구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거 조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가구의 주거 비용을 지불할 능력에서 나타났다. 유럽에서 총 주거 비용(주거수당은 제외됨)이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약간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 중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 스페인,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에서는 더 많이(7%-9% 증가)증가했다(그림 3.6). 주거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도 2007년 이래 증가했는데 특히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등 가구가처분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에서 증가했다(그림 3.6, 패널 B).

이와 유사하게 2012년에 실시된 유럽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에 따르면 주거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6개월 이내에 현재의 주거지에서 이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는 매우 높다”고 보고한 유럽인들의 비율이 2007년에 4%에서 2011년에 거의 6%로 상승했다.

그림 3.6. 유럽의 주거 비용



주: 패널 A는 유로 지역에서 총 주거 비용(주거 수당은 제외함)이 균등화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패널 B는 총주택비용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고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76>

박스 3.1. 글로벌 금융 위기가 유럽과 미국의 주거조건에 미친 영향(계속)

유럽에서 자기 보고 주택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 역시 최저 소득 분위 계층의 경우에 더 크게 악화됐는데 주택가격 또는 실질 GDP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의 경우 특히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페인, 아일랜드).

열악한 주거 환경(물이 새는 지붕, 습기찬 벽·바닥 또는 기초토대, 녹슨 창틀 또는 바닥 등)에서 거주하는 빈곤 가구의 비율 또한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했다(유럽통계청, 2013). 유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거 환경도 악화되었는데 사회 주택(social housing)에 할당된 공공 예산이 축소되었고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EU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2012a & 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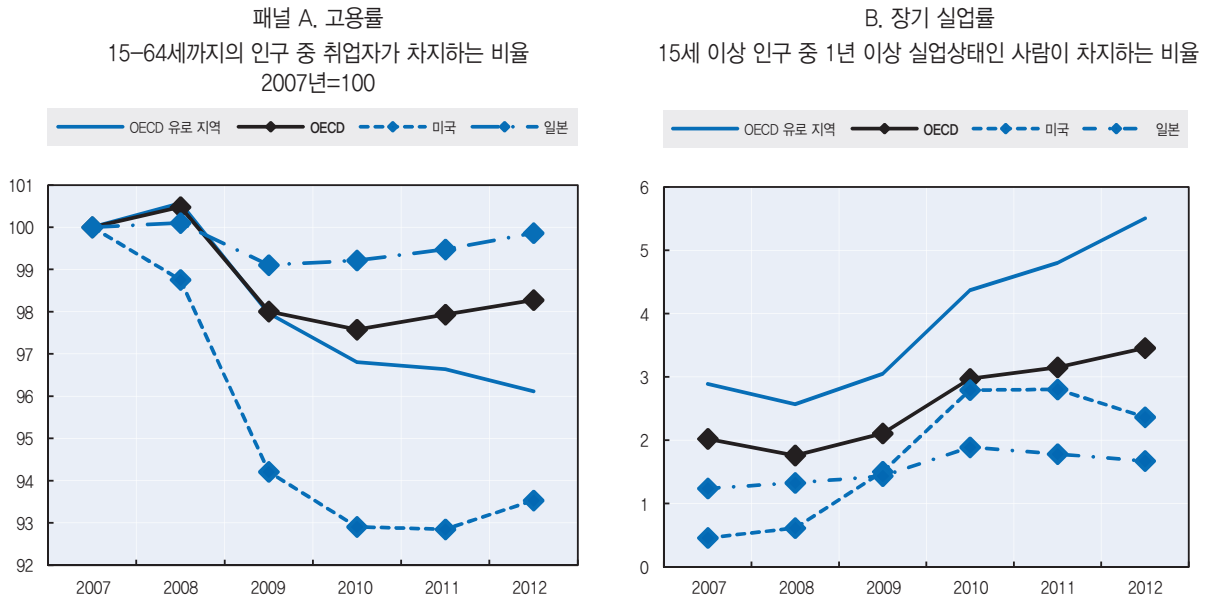
미국에서 재정적 압박 이외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거 환경에 미친 영향은 아래와 같다:

- 더부살이(doubling up)를 위한 이사가 늘어남. 더부살이는 개인 또는 가족이 다른 가구에 이사해 들어감으로서 다세대 성인가구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한다. 미국에서 약 20%의 가구가 “들어가는 가구” 또는 “받아들이는 가구”로서 더부살이의 영향을 받았다. 2008-2011년 기간 동안 더부살이 전수는 2004-2007년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Collins and Smeeding, 2012; Seltzer et al., 2012).
- “하향 이동(moving down)”을 위한 이사가 늘어남. 하향 이동은 실직 또는 기타 부정적 요인이 주택 위기(압류 또는 퇴거 등)를 촉발시켜서 가구가 주택 소유주에서 임차인 혹은 무상임대(rent-free)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에 더부살이하는 미국 가구의 약 18.5%가 하향 이동도 경험했다(Berger et al., 2012).

직업과 근로소득

고용 조건과 노동시장 조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이후 눈에 뜨게 악화되었다. 2007-2011년 기간 동안 고용률(How's Life? 중심 지표 중 하나)은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미국, 에스토니아, 덴마크에서 4 퍼센트 포인트에서 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고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서 10 퍼센트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그림 3.7, 패널 A). 2011년 이래, 고용률은 미국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유로지역에서는 더 하락하여 두 지역에서의 1인 당 실질 GDP가 서로 평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내내 OECD 지역에서 실업 기간(unemployment spells)이 증가하여 장기 실업률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 장기 실업률의 증가세는 특히 유로 지역에서 컸고(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2.6%에서 5.5%로 증가함) 일본에서는 좀 더 적었다(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1.3%에서 1.7%로 증가). 미국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관찰되었던 장기 실업률의 급상승이 2010년에 멈추었고 2012년에는 하락했다.

그림 3.7. 고용률과 장기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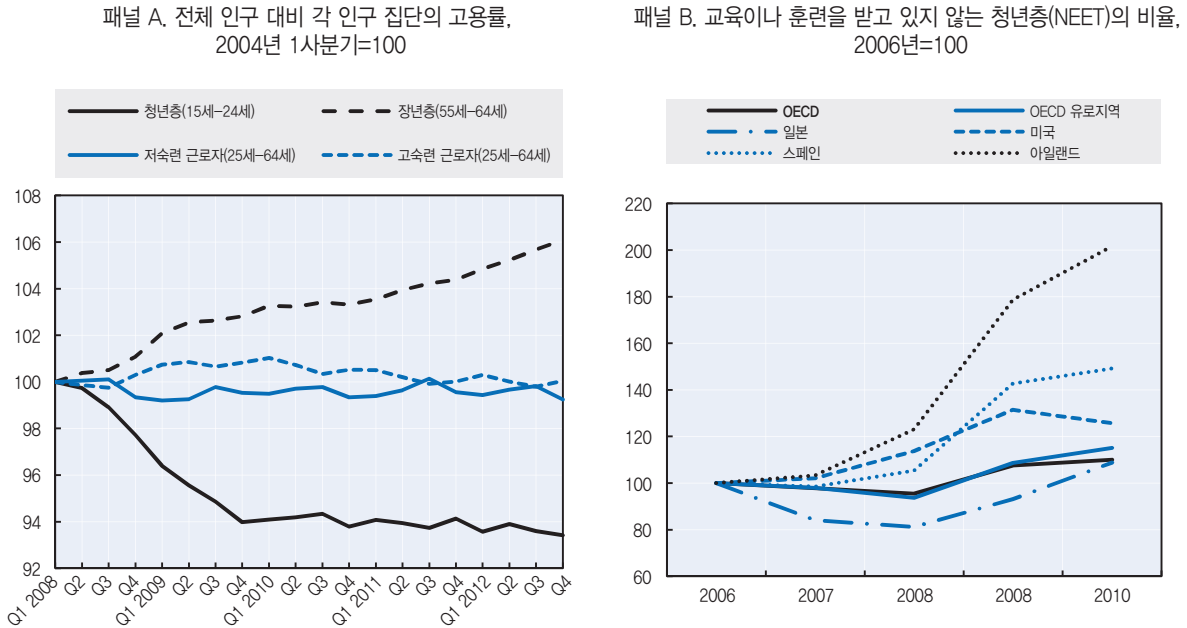
출처: OECD(2013c), 노동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OECD 계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395>

고용률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두 집단은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였다(그림 3.8, 패널 A). 또한 2007-2010년 사이에 고용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청년층(NEET)의 비율 역시 OECD 지역에서 1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으며(그림 3.8, 패널 B) NEET율이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미 높았고 아일랜드(7 퍼센트 포인트)와 스페인(6 퍼센트 포인트)에서 가장 큰 증가가 관찰되었다. 청년층의 NEET율이 상승한 것은 청년 실업률의 상승을 주로 반영하고 있지만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OECD, 2012a).

실업률의 변화는 고용률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OECD 지역 전체의 실업률은 2008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됐다. 청년층이 OECD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에 16%를 웃돌았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12%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림 3.8. 노동 시장의 청년층 및 저숙련 근로자



주: 패널 A에서 OECD 지역의 연령별 데이터는 34개국의 가중평균이며 교육 수준별 데이터는 30개국의 가중평균(호주, 칠레, 일본, 뉴질랜드 제외)이다.

출처: OECD(2012a), OECD 고용 전망 2012,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en(패널 A); OECD(2012b), 한눈에 보는 교육2012: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2-en>(패널 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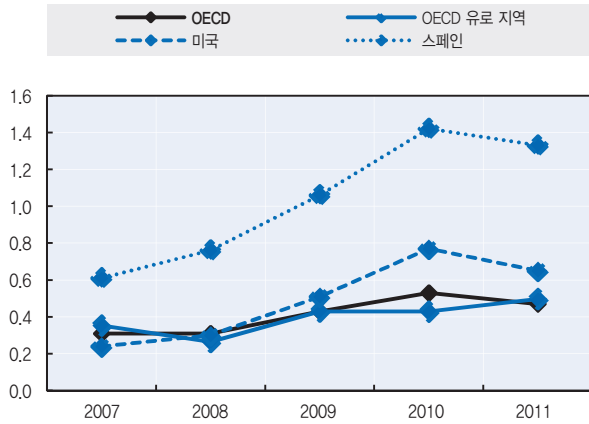
청년 실업률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 30% 이상이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45%를 초과했다. 일반적으로 평균 실업 기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증가하여 실업 상태로 보낸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실업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도 낮아졌다(OECD, 2012a).⁹ 실업상태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낮아진 결과 OECD 국가들의 장기 실업률(12개월 이상 실직 상태; How's Life?의 두번째 지표)이 상승했다(그림 3.7, 패널 B). 장기 실업률은 특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과 미국에서 상승했다.

실업률의 상승 외에도 많은 OECD 국가들은 또한 노동 인구에서 구직 단념자들(일하기를 원하며 근로가 가능하지만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 구직 단념자의 정의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2011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스페인과 미국에서 약 0.4%가 상승했으며, 2012년에는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림 3.9, 패널 A). 그러나 유로 지역에서 구직 단념자들의 비율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OECD 지역 전체적으로 특히 저숙련/반숙련(low and medium-skills)기술을 가진 젊은층과 핵심 연령 근로자들의 비경제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의 비고용(non-employment)이 증가한 이유의 대부분을 설명해준다(그림 3.9, 패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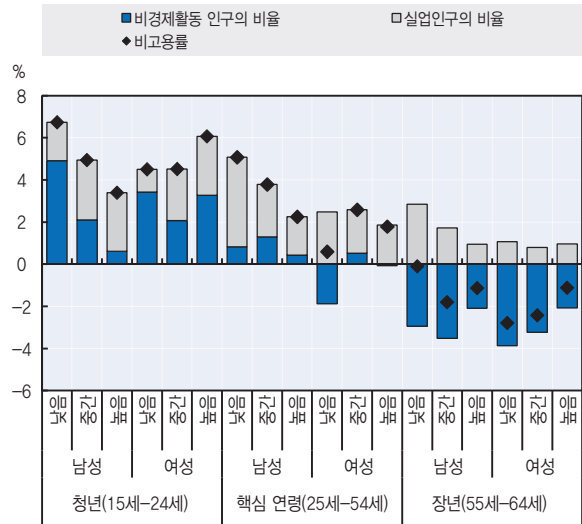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고용 상태였던 사람들의 근로 조건도 악화되었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2007-2011년 사이에 OECD 지역 전체적으로 약 1퍼센트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기 발발 5년 전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함, 그림 3.10).

그림 3.9. 구직단념자들과 비경제활동경제인구

패널 A. 구직단념자의 비중



패널 B. 해당 노동시장 상황에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의 퍼센트 변화, OECD 평균, 2007년 4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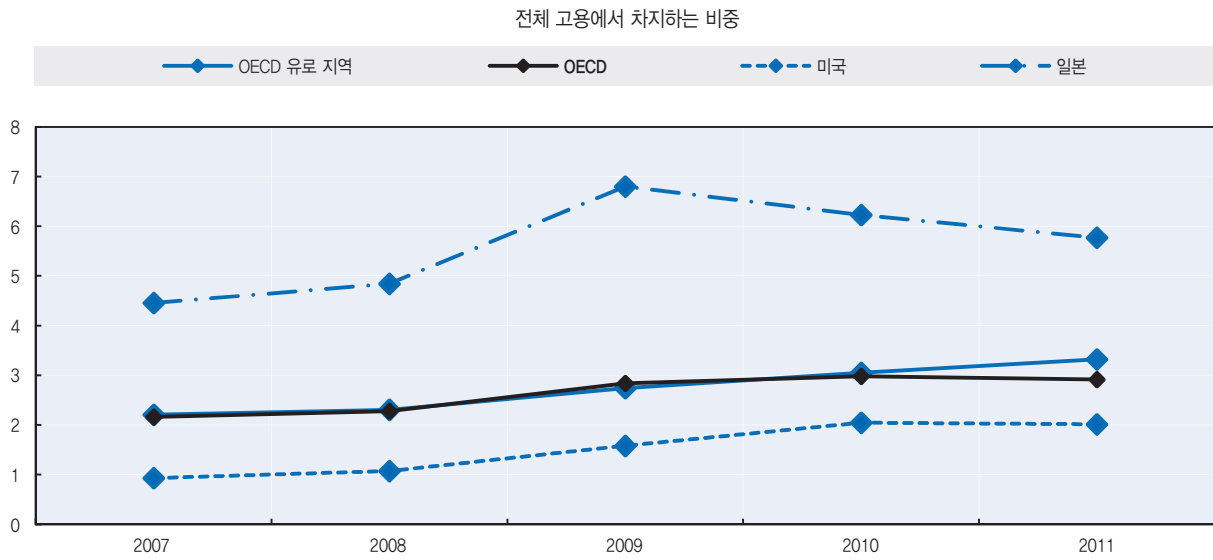
주: 패널 A에서 구직단념자는 일자리를 원하고 근로 활동이 가능하며 지난 12개월 동안에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지난 12개월 이내에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직위가 종료된 이후) 현재 고용 하거나 혹은 자격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OECD 유로 지역은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12개국만을 포함하고 있다.

패널 B에서 OECD 평균은 28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 미국)자료의 가중평균이다.

출처: OECD 노동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OECD(2013), 고용 전망, OECD 출판국,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433>

그림 3.10.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출처: OECD(2013c), 노동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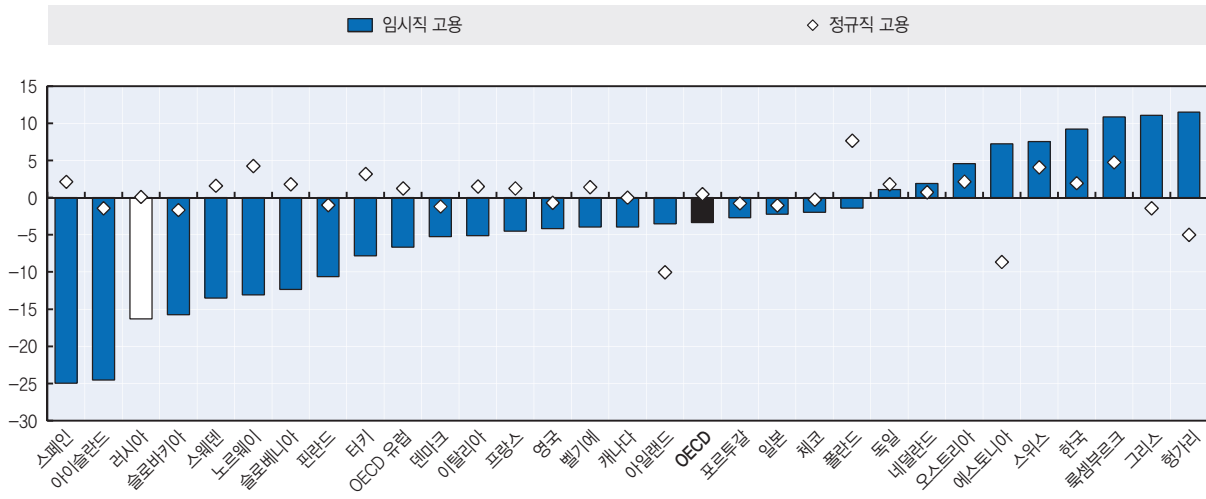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452>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였던 임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그림 3.11, 패널 A). 임시직 근로가 스페인, 아이슬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룩셈부르크, 그리스, 헝가리에서는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에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임시직 근로가 OECD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그림 3.11, 패널 B) 이는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의 시기에 무기근로계약(open-ended contracts)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는 것을 고용주들이 꺼려하였기 때문이다(OECD, 2012). 임시 근로는 특별히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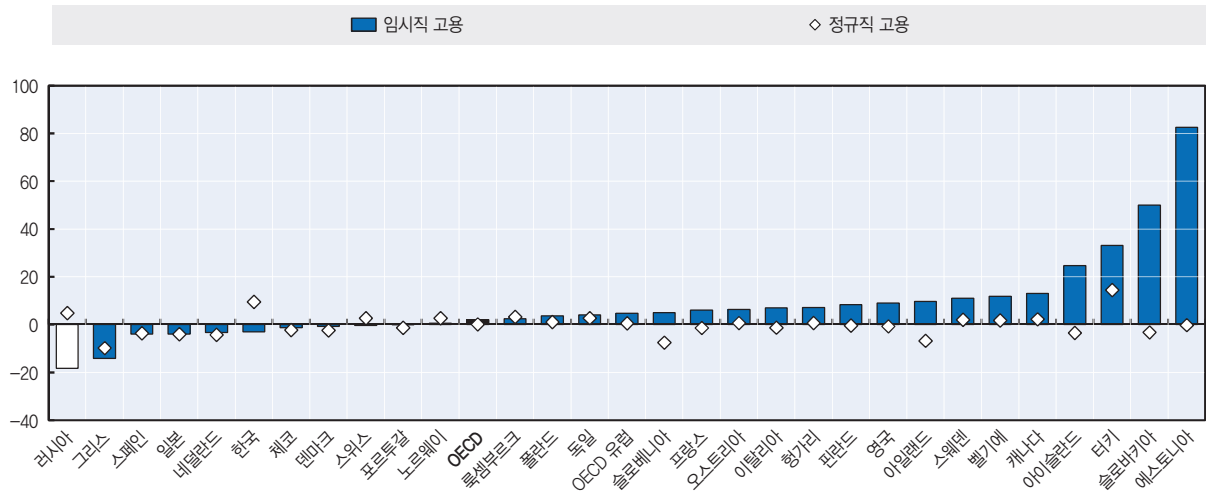
유럽에서 인지된 노동강도가 위기기간 동안에 늘어났다는 증거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인지된 직무의 질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Gallie et al., 2013).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직무 업그레이딩을 하거나(좀 더 책임의 직무로 이동함; Talhin, 2013)과 직무 통제능력이 확대(근로자의 헌신도를 늘리려는 고용주의 노력을 반영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그림 3.11. 임시직과 정규직 고용

패널 A. 2007-2009년 기간 동안 임시직과 정규직 고용의 퍼센트 변화



패널 B. 2009-2011년 기간 동안 임시직과 정규직 고용의 퍼센트 변화



출처: OECD(2010), "노동 시장 통계: 정규직 일자리 고용", OECD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296-en>; OECD(2013c), 노동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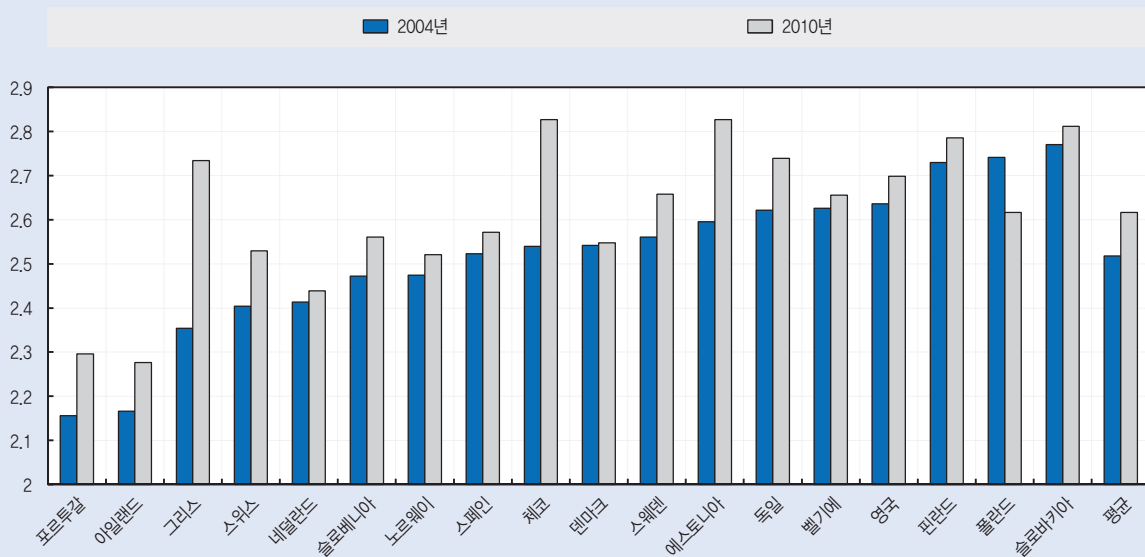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 또한 동일한 조사에서 나온 증거는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Goos et al., 2013 참조)와 특히 재년과 직원해고를 경험한 회사에서 업무 압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높아진 노동 강도는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스 3.2).

박스 3.2. 유럽국가들의 일과 삶의 균형

유럽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일과 삶의 불균형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3.21) 이는 늘어난 업무 압박, 규정외 근로시간의 증가, 인지된 일자리 불안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cGinnity and Russell, 2013). 인지된 업무 압박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해야 한다.”와 “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두 문항을 근거로 유럽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할 때 업무 압박은 2004년(금융위기 발생 전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에서 2011년(위기 발생 이후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몇몇 유럽 국가에서 증가했다. 업무 압박은 남유럽국가들, 프랑스, 기타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특히 크게 증가했다. 늘어난 업무 압박은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단행된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실업 또는 임금감소의 피해를 입은 가구의 재정적 압박 증가로부터도 기인하고 있다(Gallie and Zhou, 2013). 늘어난 업무 압박은 또한 규정외 근로시간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특히 그리스, 스페인, 에스토니아 등 금융위기의 피해가 심각했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규정외 근로시간은 특별히 가정내 의무(family commitments)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nes et al., 2006).

그림 3.12. 인지된 일과 가족의 갈등

0부터 5까지로 측정됨, 평균점수, 2004년과 2010년



주: 이 그림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비근무 시간에 얼마나 자주 업무문제로 걱정하는가?”, “근무 시간 후 집에서 쉴 때 여가를 즐길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얼마나 자주 일 때문에 배우자 또는 가족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느끼는가?”, “얼마나 자주 배우자 또는 가족이 당신의 업무 압박에 대해 진저리를 치는가?”. 각 질문에 대해 0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고 0점은 “결코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 5점은 “항상 그렇다”라는 답변이 나올 경우이다. 그림의 자료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의 응답 결과에 기초한 국가 평균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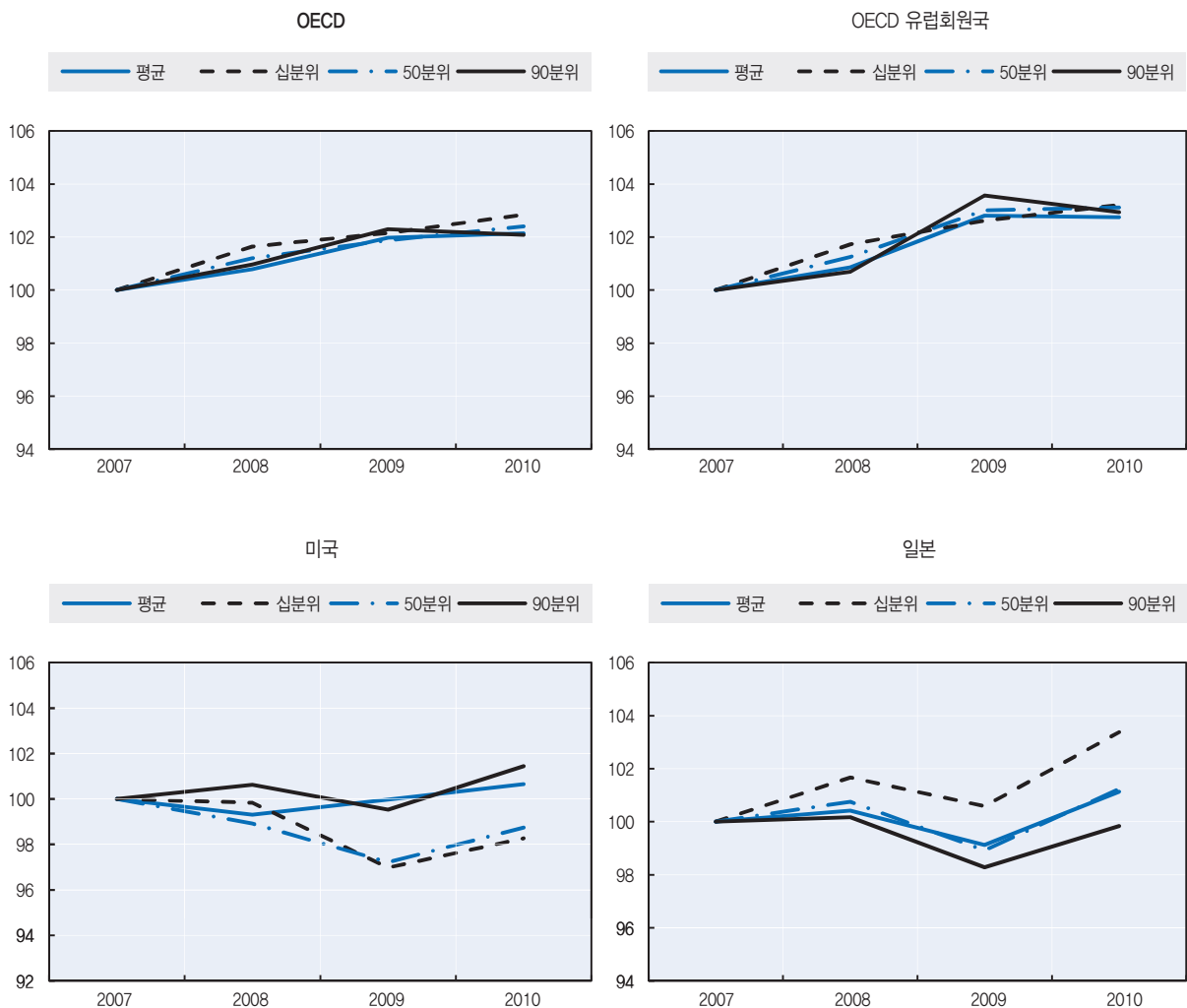
출처: McGinnity and Russell(2013)에 근거한 유럽 사회조사에 대한 OECD 계산; Gallie, D. and Y. Zhou(2013), “직무 통제력, 노동 강도와 업무 스트레스”, D.(ed.)(ed.), 경제 위기, 근로의 질과 사회적 통합. 유럽의 경험, 옥스포드 대학교.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490>

OECD 지역 전체에서 실질 근로소득은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계속 증가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는 느렸다(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1%가 증가했으나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연간 0.5%가 증가함, 그림 3.13, 우측 상단 패널). OECD 지역과 OECD 유럽 회원국들의 근로소득 분포도를 관찰해보면 비슷한 상향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소득 분배의 하단과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반면에 소득 분배의 상단에 위치한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계속 늘어났다(그림 3.13, 좌측 패널 하단).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상위 소득자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반면에 저임금 근로자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었다(그림 3.13, 좌측 패널 하단).

그림 3.13. 총 연간 근로소득의 추세

전체 경제 내 전일제/전년제 임금 근로자, 2007년=100



주: OECD 평균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과 미국이 포함된다. OECD 유럽 회원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과 영국이 포함된다.

출처: OECD(2010), “근로소득 - 총 근로소득: 십분위율”, OECD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30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509>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러나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구성효과(예: 위에서 설명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점에 임시 근로의 감소)가 감추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효과 외에도 근로소득에 좀 더 장기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대개 이전의 직무와 비교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잃지 않은 비슷한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낮은 급여를 받는다(Dao and Loungani, 2010; von Watcher et al., 2009). 지속적인 근로소득의 손실은 “경기순환적 다운그레이딩”(근로자들은 예전보다 열악한 일자리를 받아들여게 됨)이나 특정 산업 기술의 가치 하락에 기인할 수 있다. 경기침체가 개인 소득에 끼치는 영향은 청년들에 의해 경험되는 실업 기간에 특히 나타나는데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도 나타나며(Kahn, 2010; Schmieder et al., 2009)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청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건강상태

많은 연구 결과는 경제적 위기가 종종 개인의 건강 상태에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직과 재정적 압박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박스 3.3).

박스 3.3. 경제 위기 동안의 보건 성과

경기 침체기 동안 건강 상태가 받는 영향(health impacts)은 고려 대상이 되는 인구 하위집단, 질병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발전 수준 등 다수의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Stuckler and Suhrcke, 2012). 빈곤, 과도한 부채, 실업, 고용불안, 직무 스트레스는 모두 국민 보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한다(세계보건기구(WHO), 2011).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요소들에 노출시키는 경제상황의 변화는 보건 성과를 더 위태롭게 한다.

실직의 경험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Barnes et al., 2009; Browning and Heinesen, 2012)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교통사고·자해로 인한 입원 혹은 사망의 위험성 증가와도 상관관계가 있다(Eliason and Storrie, 2009; Browning and Heinesen, 2012).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 연령 인구는 경기 침체기에 사망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Edwards, 2008). 고용 불안에 대한 노출이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자기 보고 건강 상태와 가벼운 정신 질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Ferrie et al.,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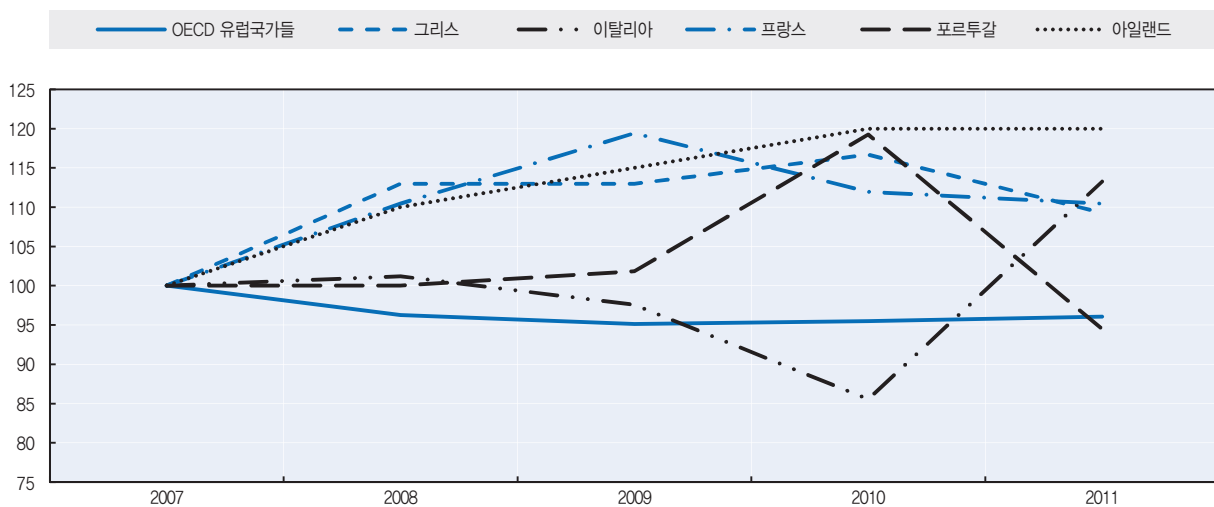
질환과 사망의 일부 원인이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원인들을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Crombie(1990) and Ruhm(2000)는 경기 침체기에 자살률이 상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Kentikelenis et al.(2011)와 Stuckler et al.(2011)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일부 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난 유사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1970-2007년 사이에 Stuckler et al.(2009)가 관찰했던 26개의 유럽국가들에서 65세 미만의 인구 가운데 1%의 실업률 증가는 0.8%의 자살률/살인률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3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실업률 증가는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사망건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도 사람들의 기대수명 또는 총사망률(all-cause mortality rates)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Gerdtham and Ruhm, 2006; Stuckler and Suhrcke, 2012).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들은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특별히 취약계층(실업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빈곤층 또는 과다 채무자 등)의 보건 성과를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 실직은 심장마비와 기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ulgard et al., 2007), 장기적으로 실업 기간을 경험한 근로자의 사망률이 직장을 잃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Sullivan and von Watcher, 2009).

그러나 경제적 위기가 인구 전반의 건강상태에 끼치는 영향은 분명치 않다. 실제로 경기침체는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소득의 실제 손실 혹은 손실의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하고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Catalano, 2009). 이는 How's Life?의 건강에 관한 중심 지표들(기대수명, 자기 보고 건강 상태)이 인구 전반의 건강 상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 일부를 설명해준다. 예컨대 2007년 이래 기대수명의 상승세가 중단된 OECD 국가는 없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일부 유럽국가들(예: 그리스(2007년-2010년), 포르투갈(2010년), 이탈리아(2011년), 아일랜드(2007년-2011년); 그림 3.14)에서 자기 보고 건강 상태의 악화가 뚜렷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증거를 OECD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림 3.14. 자기 보고 건강 상태

나쁜 건강 상태를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07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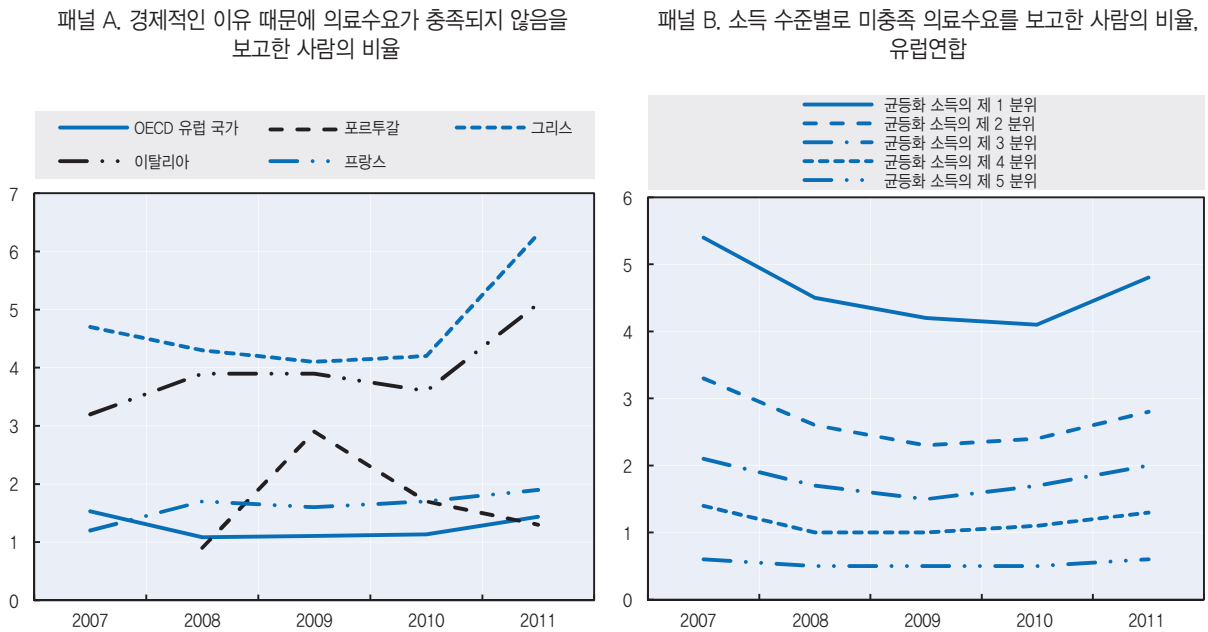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528>

또한 극심한 경제 위기가 건강 상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과 세대를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만 보이게 된다(박스 3.2). 그러므로 미래 세대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 문제들에 대해 조기 경보를 보낼 수 있는 추가적 지표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표들 중 하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이다. 유럽 내 자기 보고 미충족 의료수요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증가했고(그림 3.15, 패널 A), 그리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이러한 증가는 최하단 소득 분위에 속한 사람들에서 가장 뚜렷히 나타나서(그림 3.15, 패널 B)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치료 받는 것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여준다(Sumner and Wolcott, 2009). 이점에 있어서 재정건전화 전략이 보건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인구 하위 집단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

그림 3.15. 미충족 의료수요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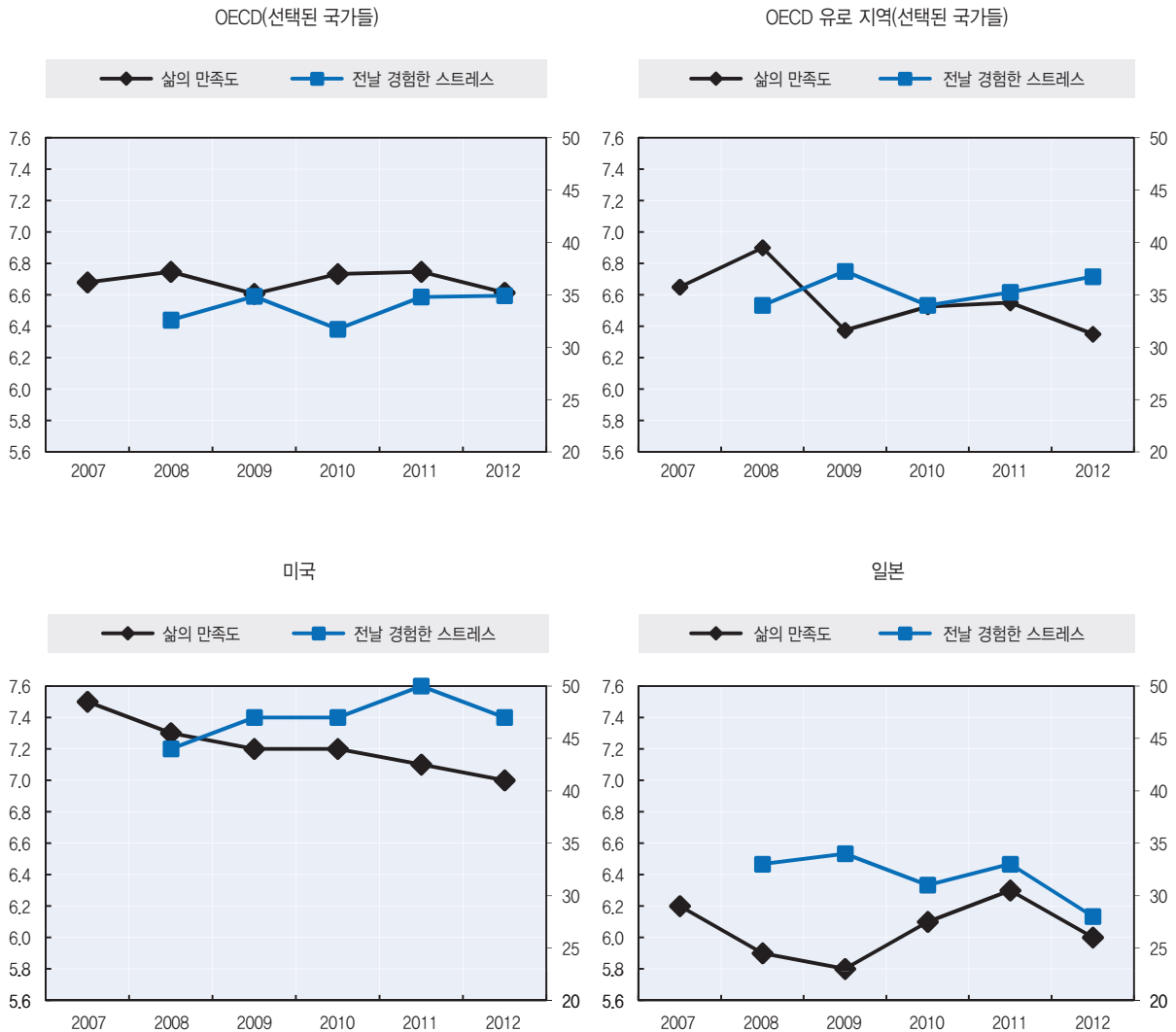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547>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에 악화되었다. OECD 지역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How's Life?의 중심 지표)는 2009년에 하락했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자 2010년에 증가했으나 2011년에 다시 하락했다(그림 3.16). 삶의 만족도 하락은 유로 지역 특히 금융 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들에서 특별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2012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에 삶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그리스에서 20% 이상, 이탈리아에서 약 12%, 스페인에서 10%가 하락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헝가리(6%), 미국(7%), 터키(5%), 뉴질랜드(5%), 벨기에(4%)와 덴마크(4%)에서도 하락했다. 이에 반하여 삶의 만족도가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4% 이상 상승했고 멕시코, 러시아와 스웨덴에서 5% 이상 상승했다.¹¹ 또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분노, 스트레스와 걱정(부정적 정서)의 감정이 증가하고 기쁨, 만족감(긍정적 정서)은 감소하고 있다.¹²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 전날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숫자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자기 보고 스트레스의 커다란 증가(10 퍼센트 포인트 이상)가 핀란드, 헝가리, 터키에서도 관찰되었고 반면에 독일과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보고한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우연적 요소(예를 들면 뉴질랜드의 지진의 경우처럼)에 기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통로는 실업률의 상승이다. 실업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인데, 실직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실직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사회 조사 결과가 유럽 국가들에서 재정적 압박은 실업률 상승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시사함에 따라 배우자의 실직과 조사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하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Russell et al., 2013).

그림 3.16. 주관적 웰빙과 글로벌 금융위기



주: 삶의 만족도는 캔트릴 사다리(좌축이 y 축임)를 기준으로 어제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우축)을 측정한다. OECD 평균에는 완벽한 시계열 자료가 제공 가능한 국가들만(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포함된다. OECD 유로 지역에서 선택된 국가들은 완벽한 시계열 자료가 제공 가능한 국가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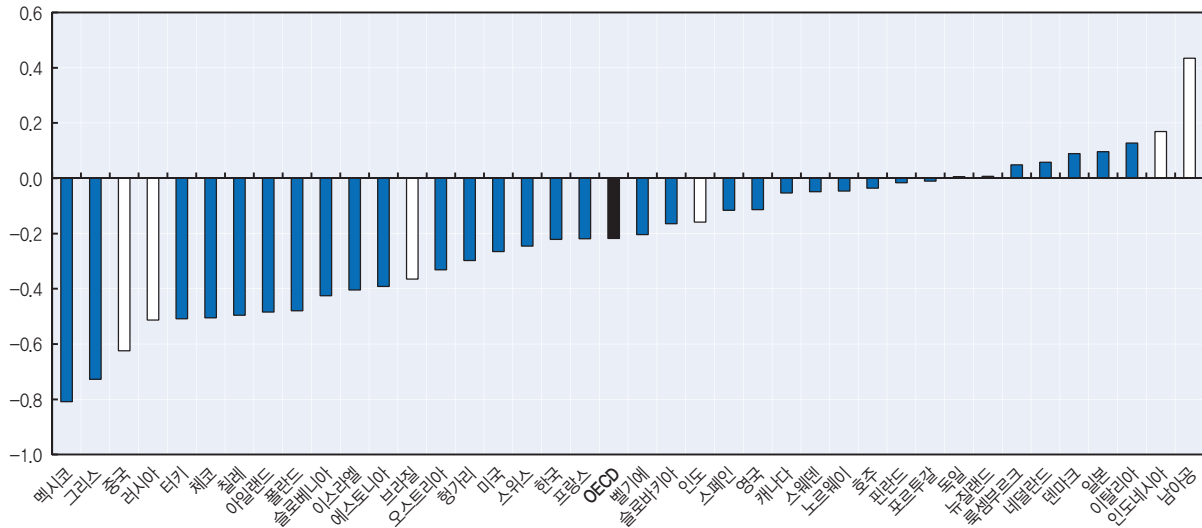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566>

또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접촉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만 실업자들의 낮아진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데 그리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금융위기로 발생한 재정적 압박과 어려운 실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중요 원인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속적 경제적 충격이 주관적 웰빙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tevenson and Wolfers, 2008). 또한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의 하락, 악화되는 건강 상태, 그리고 사회적 접촉의 감소 또한 주관적 웰빙이 하락한 이유를 설명한다(Gallie et al., 2013; Eurofund, 2012).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미래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사람들의 장기적 기대감 역시 악화되었다. 그림 3.17은 평균적으로 현재부터 5년 이후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위기 발발 이후 몇 년 동안 하락했음을 보여주는데, 사람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 일치하는 패턴이다(Eurofund, 2012).

그림 3.17. 주관적 웰빙에 대한 기대감

5년 후 기대되는 삶의 만족도와 2012년 현재의 삶의 만족도 사이의 차이, 2005년의 차이와 비교함



주: 이 변수의 양의 값(미래에 대한 낙관론 측정치)은 낙관론이 2005년보다 2012년에 더 높았음을, 즉 최근에 낙관론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이 지표의 음의 값은 차이가 2012년보다 2005년에 더 높았음을 의미하며 최근에 낙관론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만족도 간의 차이로써 계산되므로 이 지표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왜곡할 수 있는 국가 특유의 문화적 효과들을 암묵적으로 보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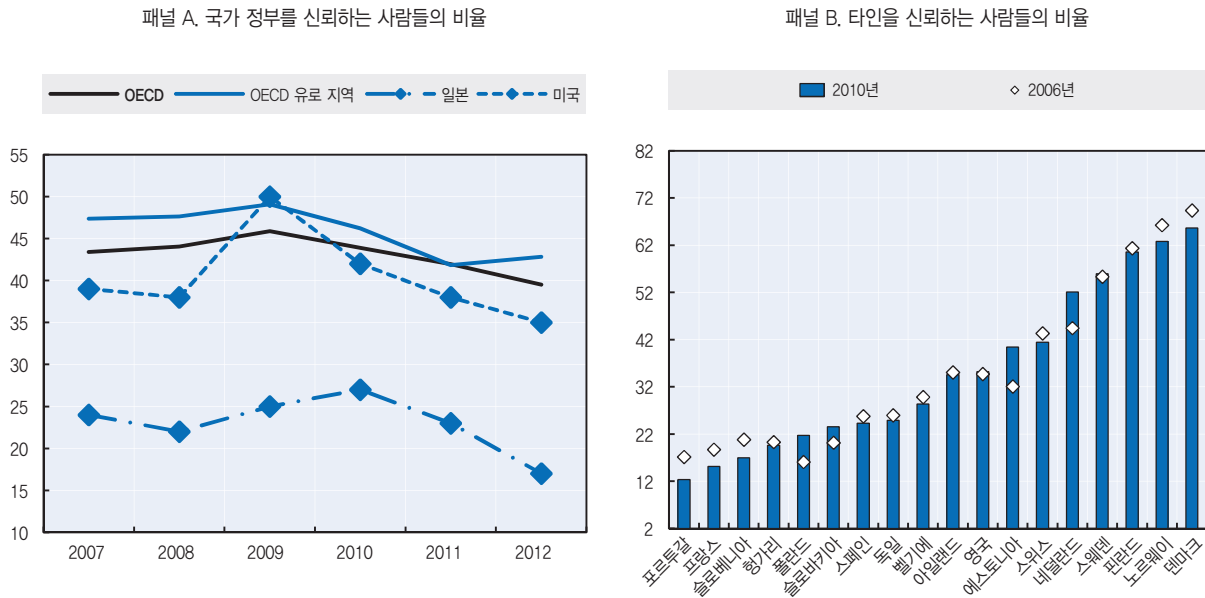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585>

시민참여

사람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했다.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는 금융 위기가 많은 국가들의 정치적·제도적 자본을 훼손시키고 있으며(Roth, 2009; Stevenson and Wolfers, 2011; Eurofund, 2013) 특히 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olavieja, 2013; Eurofund, 2013).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How's Life?의 부차적 지표)는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하락했고(그림 3.18, 패널 A) 기타 기관(금융 기관, 사법부, 언론 등)에 대한 신뢰 역시 비슷한 하락을 기록했으며 적어도 유럽 국가들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그림 3.18, 패널 B; Eurofund, 2013). 사람들의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는 많은 요소들(정치적 성향, 교육 및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속적인 일시적이든 경제적 압박의 경험이 사람들의 정치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금융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8. 금융위기 발발 이후의 신뢰도



주: 패널 A는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표를 보여주며 인구 비율은 2006년을 100으로 설정한다. 패널 B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0부터 10까지의 점수에서 7 이상을 가리킴)의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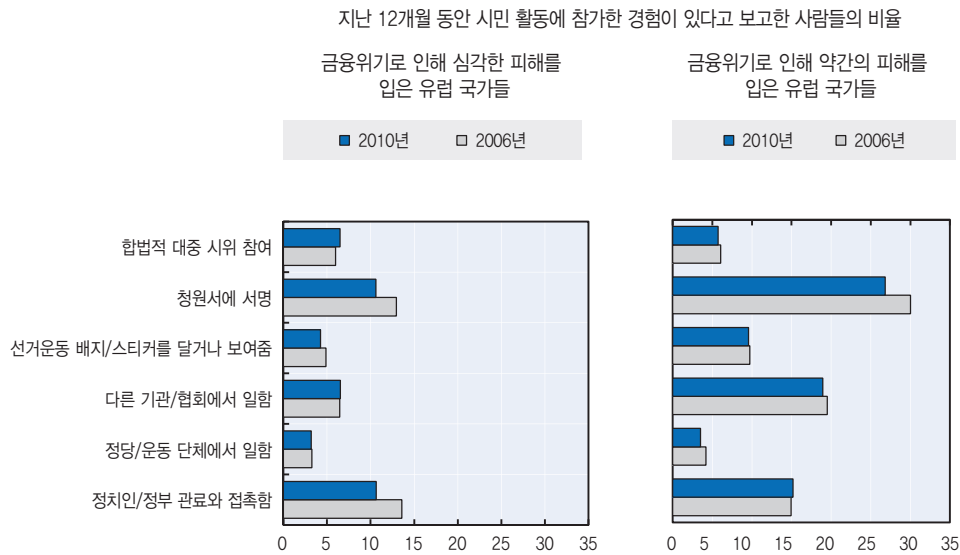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패널 A); 유럽사회조사, www.europeansocialsurvey.org/(패널 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604>

Polavieja(2013)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유럽사회조사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현재 또는 예전에 실업상태였던 사람과 재정적 압박을 경험중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뢰와 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금융위기 동안 정치적 정당성의 뚜렷한 약화는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GDP 감소 규모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시민참여와 정치 참여의 중요한 동인이지만(OECD, 2011), 금융위기 이후 시민 참여와 정치 참여의 추세는 혼재 양상을 띤다. 금융위기의 많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가들과 그외의 지역에서 2011년과 2012년에 관찰되었던 대규모 사회 운동과 시위는 정치 참여 증가의 하나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도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가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유럽사회조사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그림 3.19), 이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무급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유럽공공보건연맹(EPHA), 2012; 다음 섹션 참조). 시민 참여의 패턴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금융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하락하고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예: 정부 관료와의 접촉은 위기 전보다 줄어듦)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9. 유럽에서의 시민 참여



주: 우측 패널은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금융 위기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의 평균 값을 보여준다. 좌측 패널은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등 금융 위기의 온건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의 평균 값을 보여준다.

출처: 유럽사회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europeansocialsurvey.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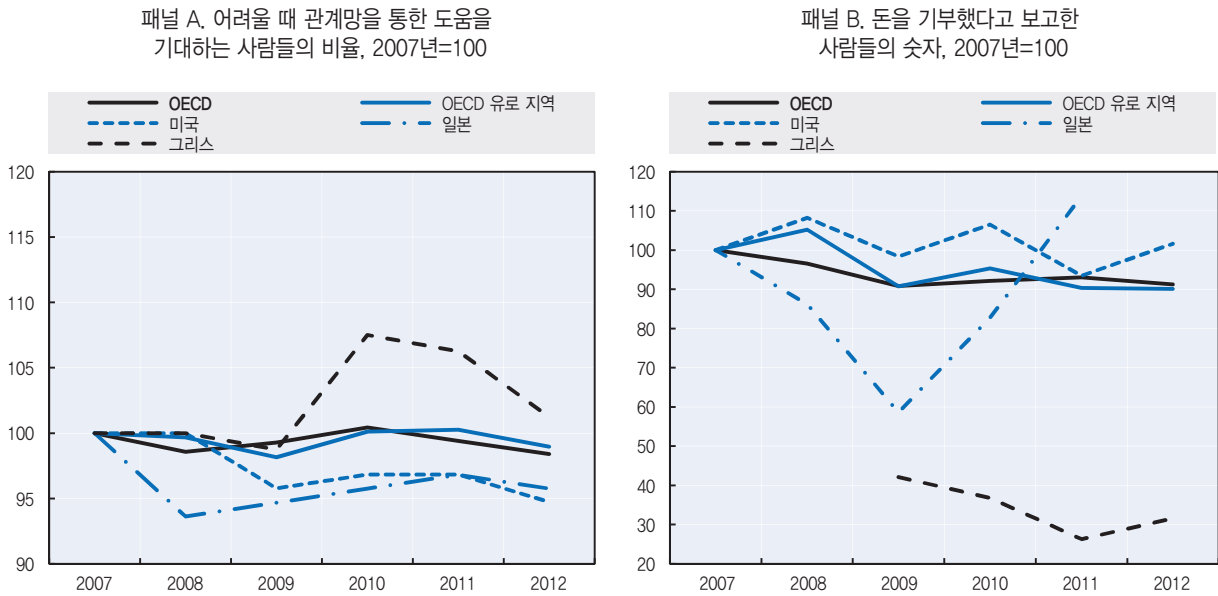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2007년 이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타인으로부터 기대되는 지원(How's Life? 중심 지표)이 급감했다(그림 3.20, 패널 A). 감소폭은 유로 지역보다 미국과 일본에서 더 컸다. 이는 사람들이 금융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OECD 지역 전체에서 어려울 때의 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2010년에 개선되었고 2011년에 안정화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지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가 국가의 경제적 상태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지는 시간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다소 다른 추세를 일본에서 볼 수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지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2011년은 일본에서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해이다. 돈을 기부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에게 대한 측정치를 살펴보면 2006년 이래 OECD 지역 전체에서 뚜렷한 하향세가 나타난다(그림 3.20, 패널 B). 돈을 기부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유로 지역 특히 그리스에서 더 크게 감소했다.

반면에 모르는 사람을 도왔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그림 3.21, 패널 A). 마찬가지로 시간을 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증가했는데(그림 3.21, 패널 B) OECD 지역 전체의 추세는 다소 확실치 않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특히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 사람들이 어려울 때 공식 단체가 아닌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이 의지한다고 보고했다(Eurofund, 2013).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실직한 사람들은 비공식적 구직 수단(친구, 친척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실직 기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재고용시 임금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Bentolila et al., 2010).¹³

그러나 모든 것을 고려하면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증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관계망(personal networks)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최후에 의지하는(last-resort)”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20. 다른 사람을 도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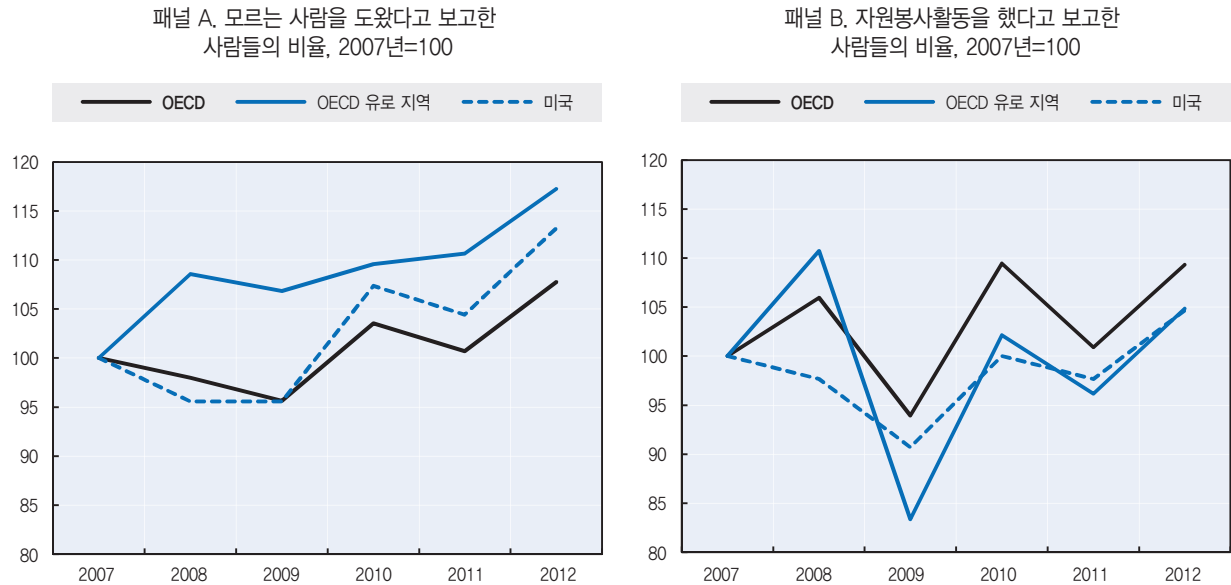


주: 시계열 자료가 호주(패널 B의 경우에만),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경우 입수가 가능하지 않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642>

그림 3.21. 비공식적 지원



주: 시계열 자료가 호주,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경우 입수가 가능하지 않다.

출처: 갤럽세계조사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661>

향후 통계적 과제

본 장에서는 몇몇 단기적인 웰빙 성과에 대해 제한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웰빙의 단기적인 변화를 감독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통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전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예산삭감과 공식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정책 결정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체제 상황에 대한 증거, 그리고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웰빙 성과에 대한 증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통계적 도전과제들은 다음의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 **데이터 수집 빈도:** 사람들의 웰빙과 관련된 통계는 대개 연간 또는 더 낮은 빈도로 수집된다. 노동인구 통계와 (일부 국가의 경우) 가구 소득 관련 국가계정 분기 데이터를 제외하면, 다른 웰빙 영역에 관한 분기별 입수가 가능한 통계는 없다. 월간 소비자 조사는 가구의 재정 상태에 관한 정성적 질문들을 포함하는데 재정/생활 상태에 관한 가구의 심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관한 단기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미래에 좀더 연구되어야 하지만, 몇가지 한계점(경제 외적인 웰빙은 다루지 않음; 소규모 표본에 대한 조사가 수행됨)이 있다. 이는 가구 상태의 단기적 변화를 감시할 통계적 토대가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적 토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도가 높은 전담 조사를 시행하거나, 기존의 월간 또는 분기별 조사 도구에 특정 질문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가용한 통계의 시의성.** 연도별 데이터 수집이 시행된다 해도 여기에서 얻는 정보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입수 가능하게 된다. 이 도전과제는 가구 경제 자원의 분배에 관한 정보의 경우 그리고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된 뚜렷한 정책 목표가 있는 국가들 또는 지역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웰빙의 여러 영역들에 관한 좀 더 시의적절한 측정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 추정치의 발표, 상호보완적 조사 문항의 사용, 관심이 가는 현상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할 대안적 도구(예: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최근 유럽통계청의 EU-SILC(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 데이터의 시의성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준년도 말에 물질결핍에 관한 잠정치표들을 배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표본크기:** 금융위기 또는 기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영향은 대개 인구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 소규모로 시행되며 비확률표본(non-random samples)에 근거한 조사 데이터의 경우에 도전과제를 제기하는데, 많은 비공식 조사의 경우에도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를 늘리는 투자를 해야하고 비공식적 생산자에게 더 포괄적인 조사표본틀(survey frame)에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통계의 시계열 속성:** 어떤 경우에 국가들의 수행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통계치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난 변화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과 국민전체에 조기경보 신호를 제공하는데 더 적합한 구체적 조사(예: 불리한 경제 상황에서 개인들과 가구들이 활용하는 대응 전략에 대한 조사)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본 장은 2007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사람들의 웰빙의 일부 측면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단기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 영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은 특별히 유로지역의 가구 소득과 자산, 주거 상태, 일자리와 근로소득, 주관적 웰빙, 시민참여에서 나타난 부정적 추세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 고찰한 기타 웰빙 영역들 예컨대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추세는 확실하지 않다. 본 장에서는 개인적 안전 등 비교 가능한 증거가 거의 없는 일부 웰빙 영역들은 논의하지 않았다.¹⁴ 이 부문에서 대한 논의는 미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장은 사람들의 웰빙의 단기적 추세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들을 정리해놓았다.

주

1.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는 주로 “미국 경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미시통계의 경우 사용된 소득 개념은 1인 당 가구가치분 소득으로 가구원 균등화(제공된 탄성을 통해서)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소비의 규모의 경제와 동일 가구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원 공유 측면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여러가지 개념적 그리고 측정 방법의 차이 때문에, 평균가구가치분 소득의 거시(국민계정제도(SNA)에 근거함)와 미시(설문조사 또는 행정 기반의 통계)적 측정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마이크로데이터로부터 얻은 평균 가구소득의 성장률이 SNA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성장률보다 높지만 이는 성장의 규모에 달려있다
3. 이 빈곤 추정치들은 가치분소득 균등화 지수에 대한 개념을 근거로 한다. 이 빈곤 추정치들은 다른 균등화 지수를 이용해서 균등화된 가구가치분소득에 기반한 빈곤 추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
4. 국민계정 데이터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유로 지역에서 발생했던 가구가치분 소득의 누적 하락 중 0.25 미만이 2010년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에 발생했다.

5. OECD 분기 재정 계정 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를 참조하십시오.
6. 주택에 관한 가구 대차대조표(SNA) 데이터는 OECD 19개국에 대해서만 입수 가능한 반면 토지에 관한 데이터는 9개국에 대해서만 입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주택에 관한 SNA 값은 주택이 지어진 토지의 가격변화를 배제함으로써 주택 시장 활황과 불경기의 전체적 영향을 파악하지 않는다. 가구 자산의 분배에 대한 조사가 몇몇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반면에 이러한 데이터의 비교 가능한 보고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7. 이러한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이다.
8. 주택에 관한 How's Life? 중심 지표들 중 어느 것도 경제 위기의 전개과정과 연관될 수 있는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의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9. 실업 탈출의 가능성(매해)은 단기 구직자(12개월 미만 실업 상태)와 장기 구직자(1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경우 모두 하락했지만 기본 패턴은 다르다(OECD, 2012a).
10.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의 가장 직접적 충격 중 하나는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인 당 의료비의 연평균성장률은 4.6%였지만 2010년에 유럽 전역에서 0.6%가 감소했는데 이는 1975년 이래 최초의 절대치 감소였다(OECD, 2012c). 의료비의 커다란 감소는 아일랜드(7.9%), 에스토니아(7.3%), 그리스(6.7%)에서 기록되었지만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가 둔화되었다. OECD 지역 전체에서 의료비 지출은 2010년과 2011년에 안정적 상태였다. 급성 환자 치료 자금을 보호하라는 압력 때문에 예방 지출이 특히 지출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OECD, 2012c) 이는 보건 성과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는 또한 일부 OECD 국가들에서의 공공 및 민간 보건 재정의 재조정을 초래하여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본인 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의 비율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OECD, 2012c).
11. 이러한 하락들은 동기간에 나타난 가구가처분 소득의 하락과 비슷하지만 삶의 평가와 소득 간 계수의 크기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가 물질적 상태 이외의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 갤럽세계조사에 의해 측정된다.
13. Bentolila et al.(2010)는 교섭 실업기간을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단축시키지만 적어도 2.5%의 급여 삭감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14. 개인적 안전의 최근 추세에 대해 입수 가능한 정보는 없지만 경제상황과 범죄 및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당한 양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저/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실업이 만연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극심하고 갑작스런 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기간 중의 높아진 스트레스는 더 많은 폭력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는 실업과 재산 범죄율 사이의 상당한 상관관계를, 폭력 범죄와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데 보고서별로 상관관계의 크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2012)는 강도와 같은 재산 범죄는 위기 기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서 경제적 스트레스 기간의 어떤 상황에서 2배 증가하기도 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살인과 차량 절도의 증가 역시 관찰되며 반면에 범죄의 감소가 관찰된 국가는 없었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참고 문헌

- Allen, J. and E. Damar (2012), “Household Insolvency in Canada”, *Bank of Canada Review, Ottawa*.
- Barnes, M., A. Mansour, W. Tomaszewski and P. Oroyemi (2009). “Social Impacts of Recession: The Impact of Job Loss and Job Insecurity on Social Disadvantage”, *ISER Report*, The Social Exclusion Task Force, Cabinet Office, London.
- Bentolila, S., C. Michelacci and J. Suarez (2010), “Social Contacts and Occupational Choice”, *Economica*, No. 77, pp. 20-45.
- Berger, L.N., J.M. Collins and T.M. Smeeding (2012), “Exiting Homeownership: A First Look at Potential Influences of the Housing Crisis and Great Recession on Exits from Owner-Occupied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aper presented at OECD Seminar, 12 March, Paris.
- Browning, M. and E. Heinesen (2012), “Effect of job loss due to plant closure on mortality and hospitalizat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 31, pp. 599-616.
- Catalano, R. (2009), “Health, Medical Care, and Economic Crisi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o. 360, p. 8.
- CECODHAS (2012a), “Housing affordability in the EU: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trends”, *CECODHA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Research Briefing*, Year 5, No. 1.
- CECODHAS (2012b), “Impact of the crisis and austerity measures on the social housing sector”, *CECODHAS Housing Europe’s Observatory Research Briefing*, Year 5, No. 2.
- Chowdury, A., I. Islam and D. Lee (2013), “The Great Recession, jobs and social crises: policies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40, No. 3.
- Collins, J.M. and T.M. Smeeding (2012), “Doubling Up and Moving Down: Residential Change and the Great Recess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rombie, I.K. (1990), “Can Changes in the Unemployment Rates Explain the Recent Changes in Suicide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9(2), pp. 412-416.
- Dao, M. and P. Loungani (2010), “The Human Cost of Recessions: Assessing it, Reducing it”, *IMF Staff Position Note*, No. SPN/10/17, Washington, DC.
- Edwards, R. (2008), “Who is hurt by procyclical morta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67, pp. 2051-2058.
- Eliason, M. and D. Storrie (2009), “Job loss is bad for your health – Swedish evidence on cause-specific hospitalization following involuntary job lo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68, pp. 1396-1406.
- EPHA (2012), *Study on the Impact of the Crisis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EU – Risks and Opportunities*,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Brussels.

- Eurofound (2012), *Thir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 Quality of life in Europe: Impacts of the crisi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errie, J.E., M. Shipley, S. Stansfield and M.G. Marmot (2002), “Effects of chronic job insecurity and change in job security on self reported health, minor psychiatric morbidity, physiological measures, and health related behaviours in British civil servants: the Whitehall II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56, pp. 450-454.
- Fondeville, N., E. Ozdemir and T. Ward (2010), “Over-indebtedness: New evidence from the EU-SILC special module”, *Research Note*, No. 4/2010, Applica, Brussels.
- Gallie, D. and Y. Zhou (2013), “Job Control, Work Intensity and Work Stress”, in D. (ed.), *Economic Crisis, Quality of Work and So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 Gerdtham, X. and C.J. Ruhm (2006), “Deaths rise in good economic times: Evidence from the OECD”, *Economics and Human Biology*, Vol. 4(3), pp. 298-316.
- Goos, M., A. Salomons and M. Vandeweyer (2013), “Job Polarization During the Great Recession and Beyond”, *EuroForum KU Leuven Policy Paper Series*, Leuven.
- Kahn, L. (2010), “The Long-Term Labou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ur Economics*, Vol. 17(2), April.
- Kentikelenis, A., M. Karanikolos, I. Papanicolas, S. Basu, M. McKee and D. Stuckler (2011), “Health effects of financial crisis: omens of a Greek tragedy”, *The Lancet*, Vol. 378(9801), pp. 1457-1458, [http://dx.doi.org/10.1016/S0140-6736\(11\)61556-0](http://dx.doi.org/10.1016/S0140-6736(11)61556-0).
- Liu, Y. and C. Rosemberg (2011), “Dealing with Private Debt Distress in the Wake of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A Review of Economics and Legal Toolbox”, *IMF Working Paper*, No. 13/44, Washington, DC.
- McGuinness, F. and H. Russell (2013), “Work-Family Conflict and Economic Change”, in D. Gallie (ed.), *Economic Crisis, Quality of Work and So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Oxford.
- OECD (2013a),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na-data-en>.
- OECD (2013b), “Income Distribution”,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 OECD (2013c),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lfs-lfs-data-en>.
- OECD (2013d),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Policy Briefs on Inequalities*, OECD, Paris, www.oecd.org/els/soc/OECD2013-Inequality-and-Poverty-8p.pdf.

- OECD (2013e),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3f),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 OECD (2012a),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3-1-en.
- OECD (2012b),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 OECD (2012c),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3896-en>.
- OECD (2012d), "Health Spending Grinds to a Halt", *OECD Health Data*, www.oecd.org/health/healthgrowthinhealthspendinggrindstoahalt.htm (accessed 28 March 2013).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Polavieja, J. (2013), "Economic Crisis, Political Legitimacy, and Social Cohesion", in D. Gallie (ed.), *Economic Crisis, Quality of Work and So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Roth, F. (2009),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on Systemic Trust", *CEPS Working Document*, No. 316, July.
- Ruhm, C.J. (2000), "Are Recessions Good for Your Heal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5(2), pp. 617-650, <http://dx.doi.org/10.1162/003355300554872>.
- Russell, H., D. Watson and F. McGuinness (2013), "Unemploy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Gallie (ed.), *Economic Crisis, Quality of Work and Social Integr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Seltzer, J.A., Q.L. Charles and S.M. Bianchi (2012), "Doubling Up When Times are Tough: A Study of Obligations to Share a Home in Response to Economic Hardship",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1, pp. 1307-1319.
- Smeeding, T. (2012), "Income, Wealth and Debt and the Great Recession", Stanford Center on Poverty and Inequality, Stanford, CA.
- Stevenson, B. and J. Wolfers (2011),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over the Business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101:3, pp. 281-287.
- Stuckler, D. and M. Suhrcke (2012), "Will the recession be bad for our health? It depend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74, pp. 647-653.

Stuckler, D., S. Basu, M. Suhrcke, A. Coutts and M. McKee (2011), “Effects of the 2008 recession on health: a first look at European data”, *The Lancet* (Correspondence), Vol. 378, pp. 124-125.

Stuckler, D., S. Basu, M. Suhrcke, A. Coutts and M. McKee (2009), “The public health effect of economic crises and alternative policy responses in Europe: an empirical analysis”, *The Lancet*, Vol. 374, pp. 315-323.

Sumner, A. and S. Wolcott (2009), “What is the Likely Poverty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Bulletin*, Vol. 5, September.

UNODC (2012), *Monitoring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Crim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von Wachter, T., J. Song and J. Manchester (2009), “Long-Term Earning Losses due to Mass-Layoffs During the 1982 Recession: An Analysis Using Longitudinal Administrative Data from 1974 to 2004”, mimeo,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부록 3.A1

국가별 관련 증거

그림 3.A1.1. 1인 당 실질 GDP와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성장률, %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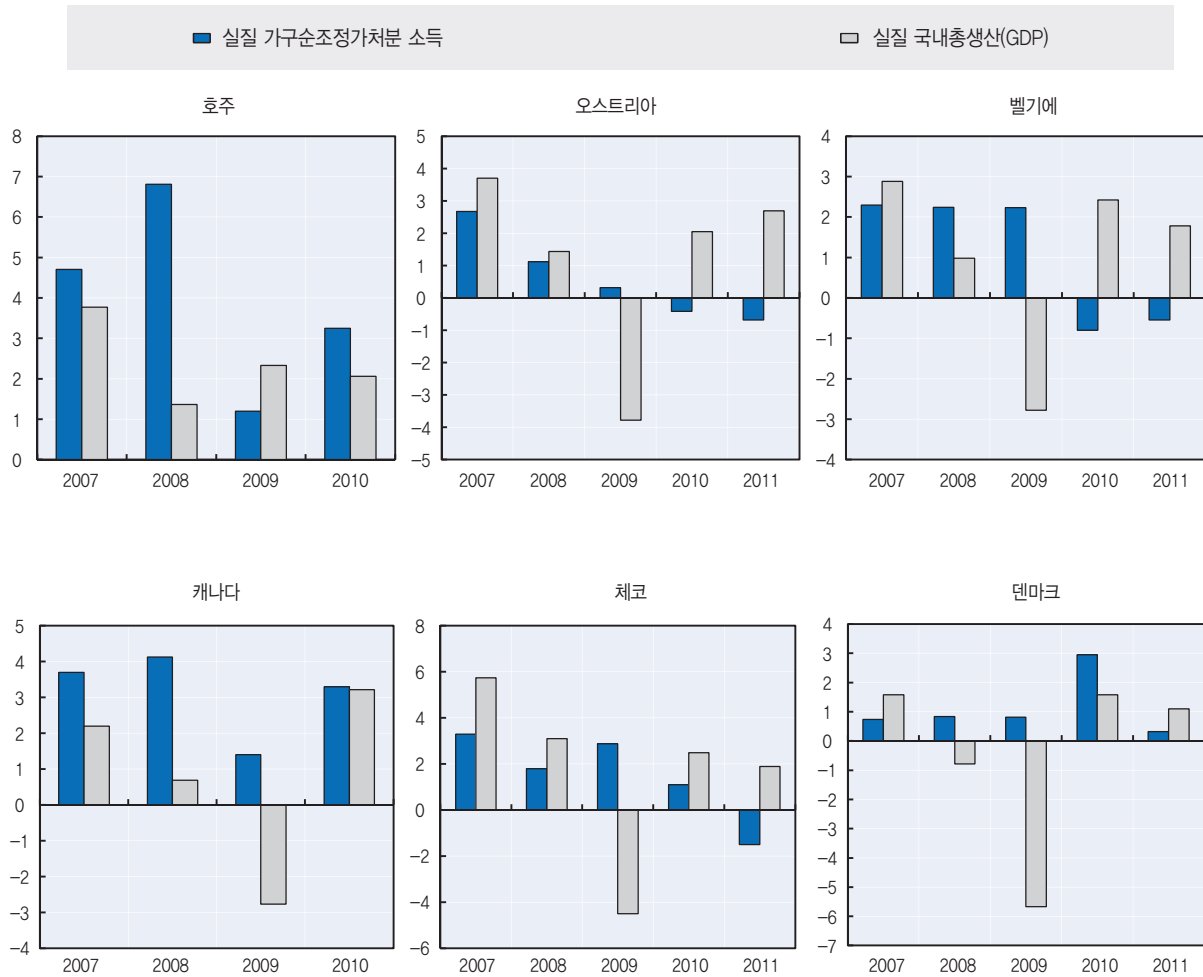


그림 3.A1.1. 1인 당 실질 GDP와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계속)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성장률, %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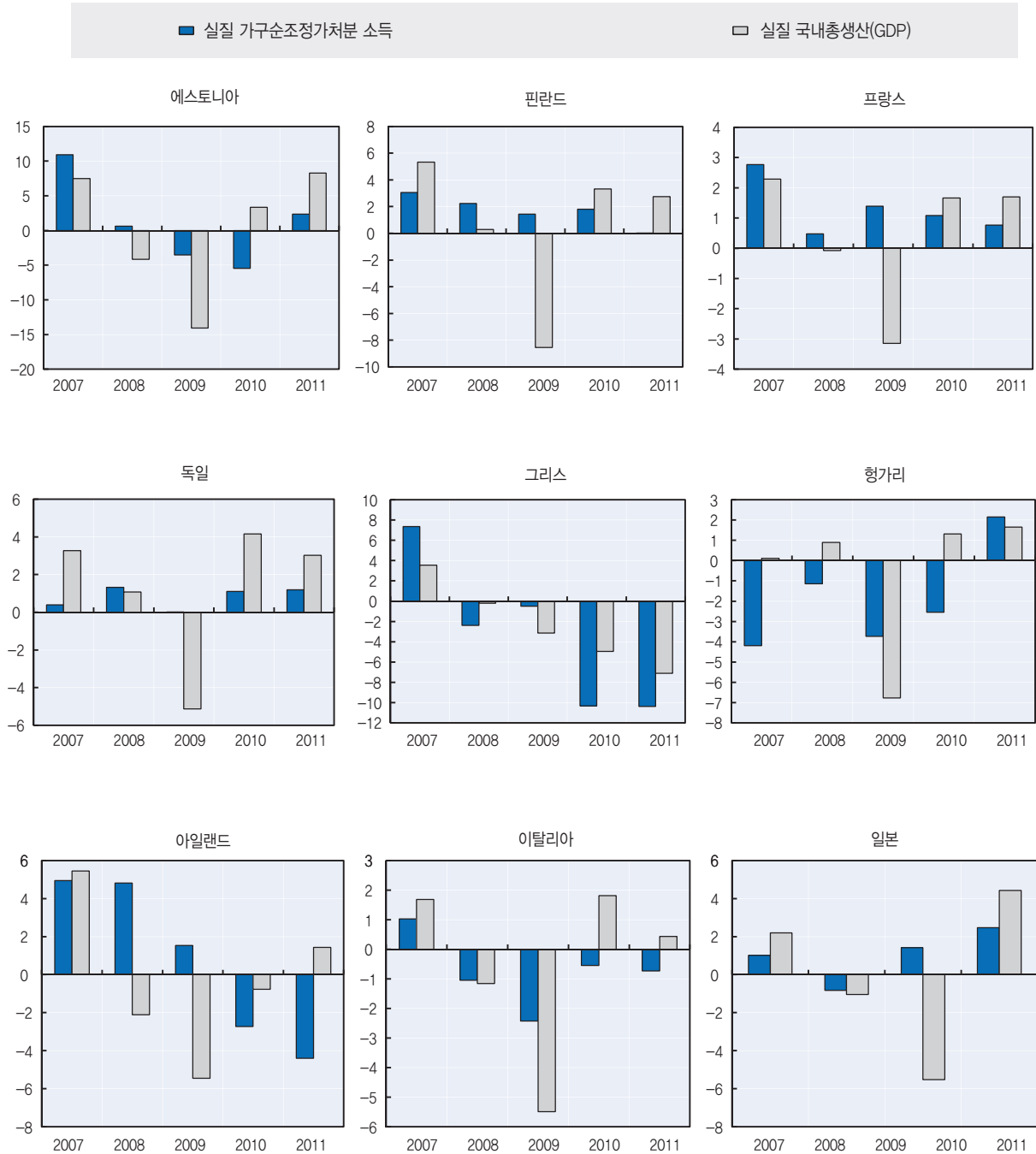


그림 3.A1.1. 1인 당 실질 GDP와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계속)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성장률, %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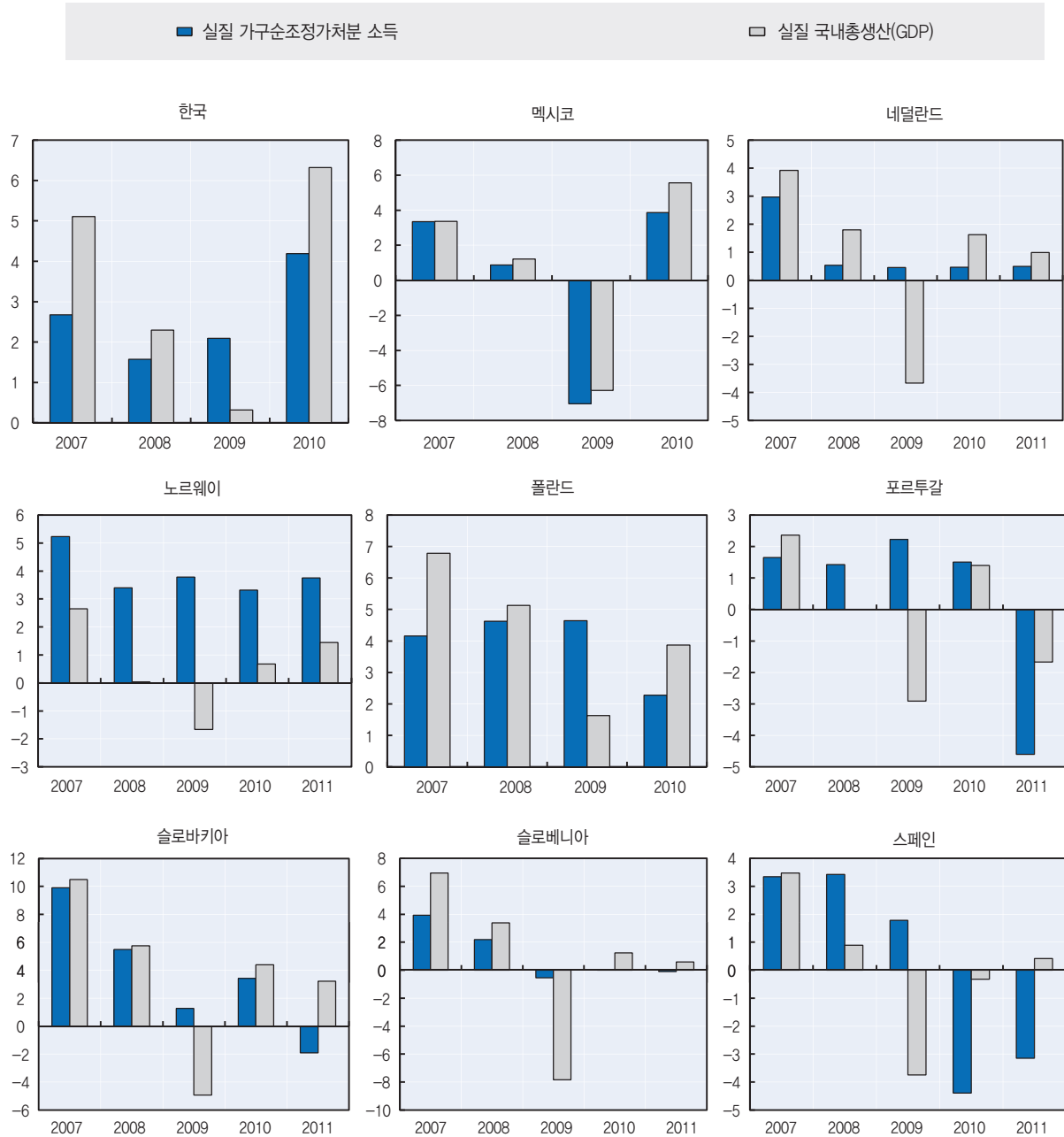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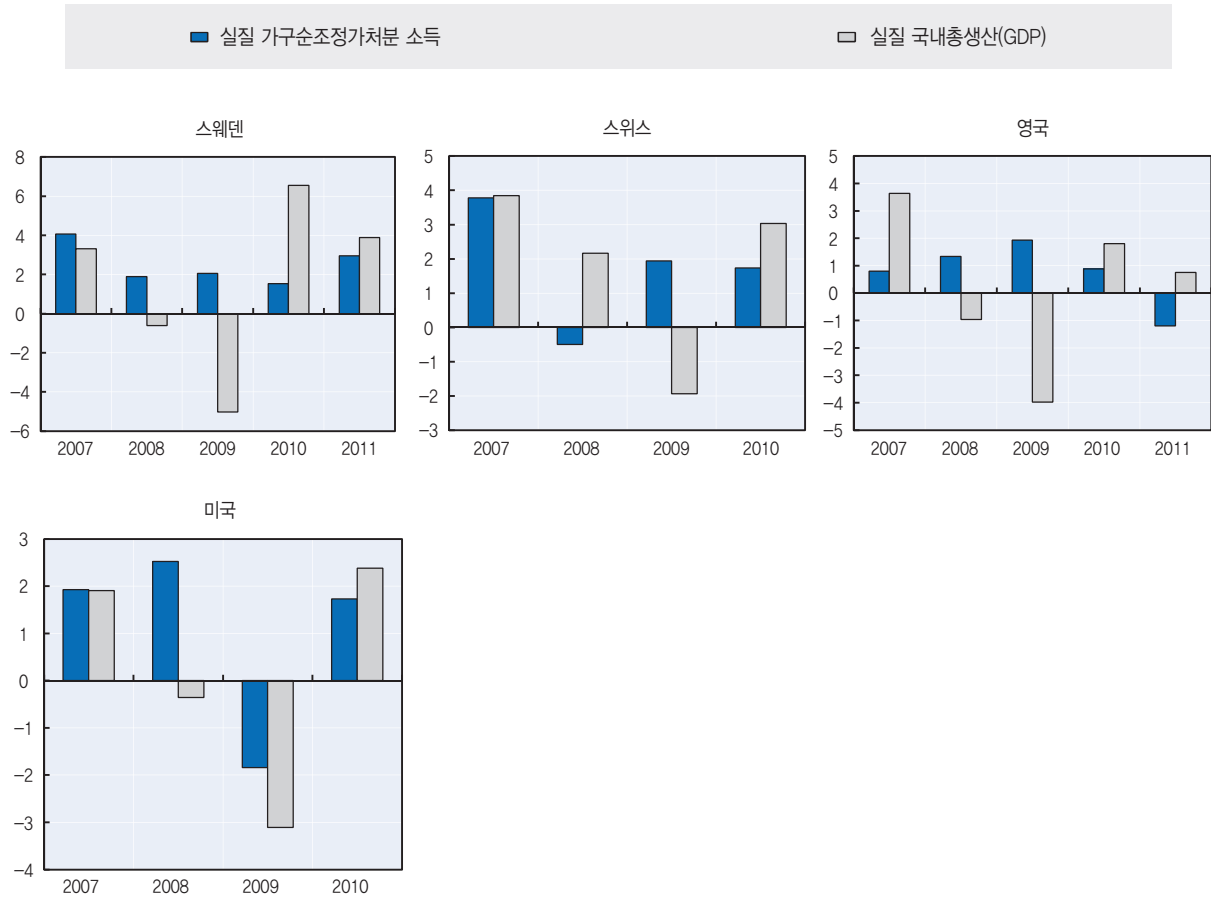


그림 3.A1.1. 1인 당 실질 GDP와 실질 가구순조정가처분소득(계속)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성장률, % 변화



출처: OECD(2013a), OECD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680>

제4장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웰빙 부문의 양성평등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처한 전통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남성은 불확실한 직업 전망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과제와 사회적 기대에 적응해야만 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다수의 분야에서 계속 수행도가 더 높지만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누구도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을 능가하지 못하며 웰빙 부문의 양성격차는 최근 수십 년 간 줄어들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더 자주 아프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지만 훨씬 나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분야에서 여전히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무급근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직장의 최고위직에 도달하거나 창업을 하기가 더 어렵다. 남성이 살인과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흔하나 여성은 배우자 폭력의 주된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적 통계의 수집과 배포가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진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데이터 및 지표는 여전히 불충분하거나 다수의 중요한 웰빙 부문에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된다. OECD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 법의 조건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한다.

성불평등과 웰빙

지난 100년간 여성 지위가 놀랍도록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균등하거나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양성평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양성불평등은 정치·경제적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 불평등한 기회,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한, 여성 가구주 가계의 높은 빈곤률, 심각한 가정폭력의 높은 발생률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확실히 드러난다.¹

그 결과 다수의 웰빙 성과들에서 양성격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러한 양성격차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만 국가별 그리고 전세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저개발 국가들에서 여아와 여성은 경제적 자산, 교육 또는 기본적인 보건 시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경험하는 반면에 대부분 선진국에서의 양성격차는 차별적 사회 제도와 여성의 기회를 방해하고, 경제·사회·정치적 활동의 완전한 참여를 저해하고, 그 결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성고정적 역할에 관한 신념의 형태로 여전히 잔존해 있다.

여성에 대한 권한부여와 여성의 웰빙 개선은 가족과 사회의 건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 아동 보건 성과는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여성의 토지 소유권이 없는 국가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이 평균 60%가 더 많고, 여성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의 숫자가 평균치보다 85%가 높다(OECD, 2010a). 고소득 국가들에서 엄마의 교육 수준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OECD, 2012b). 마찬가지로 이른 결혼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것은 엄마와 자녀 모두에게 청년기의 몇가지 성과(예: 인적 자본 축적, 근로소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십대 엄마의 자녀는 청년기에 낮은 교육 성취도, 높은 파괴적 행동의 위험, 높은 경제적 비활동의 위험, 스스로 십대 엄마가 될 가능성의 높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D'Onofrio et al., 2009; Leigh and Gong, 2010). 이는 아동기의 가족 구조, 많은 십대 엄마들에 의해 경험되는 낮은 삶의 수준, 그리고 함께 사는 배우자들의 낮은 근로소득의 결과일 수 있다(Francesconi, 2008). 마지막으로, 성불평등은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Bandiera and Natraj, 2013).

양성평등이란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와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성분석(gender analysis)은 성인지적 관점과 어떻게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적 측정은 양성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양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나은 계획과 조치를 만들고, 제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성인지적 통계를 개발하고 주류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박스 4.1) 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측정 기법과 데이터가 다소 제한적이며 제대로 활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박스 4.1. 성인지적 통계의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들

각국 정부들은 성인지적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1985년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여성회의(Third 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참석자들은 젠더 이슈(gender issue)를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배포할 국가 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재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많은 국가통계청과 국제기관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비교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통계 책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995년에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은 국가·지역·국제적 통계기관에게 개인과 관련된 통계는 성별과 연령별로 수집·분석·제공하고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점, 이슈, 질문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좀 더 최근에 OECD와 한국정부에 의해 조직되어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투자를 위해 성별로 분리된 데이터를 수집·배포하고 일치화시키며 충분히 활용하려는 노력을 촉진·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공공 지출의 혜택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대상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증거와 자료(EDGE)” 이니셔티브는 부산에서 채택된 양성평등 약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UN 여성통계국에 의해 주도된 “양성평등을 위한 증거와 자료(EDGE)” 이니셔티브는 UN 회원국들, 지역 위원회, 세계은행(World Bank), OECD,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의 역동적 협력(partnership) 프로그램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한 필요가 있는 중요 분야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국가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의 중점 영역으로 선택된 분야는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 자산소유권이다. EDGE와 관련된 활동들에는 기초교육/고용 지표를 포함한 국제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기업가정신과 자산소유권 지표에 관한 표준 및 지침의 개발, 10개 개발 도상국에서의 관련된 데이터의 시범 수집이 있다.

성인지적 통계의 주류화를 더 촉진하고 여전히 열악하게 감시·측정되고 있는 양성불평등 관련 영역에서의 통계적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OECD는 2012년 말에 원스톱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OECD Gender Data Portal)”를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OECD 지역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3E 영역(교육, 고용, 기업가정신)에서의 양성불평등에 대해 조망한다. 이 포털은 새롭게 개설된 “OECD 양성평등” 웹사이트(www.oecd.org/gender)의 일부인데 성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양성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출판물인 “양성격차 줄이기: 이제 행동하라(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를 게재하였다.

출처: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0)와 OECD(2012a)에서 각색됨.

예를 들어, 성별과 관련된 웰빙의 지표들 중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자원의 측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자원은 가구 단위에서만 측정되며 가구 내 자원 공유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한 전체 가구의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특징들과 동일시 되어왔고 종종 가구주는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가정되며 대부분 남자이다(UNECE, 2011).²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섹션은 OECD 웰빙의 개념적 체계에서 선택된 웰빙 영역 즉 건강, 교육, 직업과 근로소득, 소득,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에서의 성별 격차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격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양성평등의 발달을 더 잘 감독하기 위해서 좁혀져야 할 통계적 격차를 밝힌다. 마지막 섹션은 본 장의 주요 발견내용들을 요약한다.

웰빙에서의 성별 격차의 측정

OECD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본 장은 양성격차가 존재하는 주요 영역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다른 **How's Life?**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성별격차 측정 방법의 합의된 측정 기준에 근거하는데 여기에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정책과의 연관성, 성별 차이 측정의 신뢰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How's Life?**의 중심 지표들은 원칙적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웰빙 성과의 성별 격차를 강조하는데 반드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웰빙에서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몇 개의 추가적 측정항목을 사용한다.

성인지적 지표들은 여성과 남성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이며, 다음 단계는 왜 이러한 차이점들이 발생하고 차이점들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일부 차이점은 불가피하지만 기타 많은 차이점들은 제도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기인한다. 여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양육에 훨씬 더 적합하고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하면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포함된다. 웰빙 성과에서 양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한 경우 경제학적 혹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도 논의한다.

성 역할은 대개 아동기에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가족과 학교에 의해 주입되며 사춘기와 청년기에 계속 남아있고 이후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 강화된다(Ridgeway, 2011). 이 섹션에서 제시되는 분석은 생애주기에 걸친 젠더이슈(학교생활부터 새로운 가족의 시작, 노동시장 진입과 이후의 삶까지)를 다루며 경제적 성과(소득, 임금, 직업)와 사회적 성과(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를 고찰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종 집단은 아니다. 같은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데 남녀간 차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별(gender)이 다른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징들(예: 나이, 건강상태, 태어난 나라, 소득)과 상호작용을 해서 웰빙 성과를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성별(gender)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다른 원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낮은 웰빙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확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웰빙의 성 분석(gender analysis)은 남성과 여성간 그리고 같은 성 내에서의 불평등성을 관찰해야 한다. 실제로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의 범위는 제한적인데 각 성별 집단 내의 불평등에 관한 제곱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제시된 웰빙에서의 성별 차이점에 대한 증거는 최근의 OECD 출간물(예: “양성격차 줄이기: 이제 행동하라(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보고서), 젠더에 초점을 맞춘 OECD 이니셔티브(예: “OECD 양성평등 이니셔티브”와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 다른 국제 기관의 주력 출간물(예: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2012, UN의 세계의 여성 2012: 추세와 통계)을 기반으로 한다.

남성과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비교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모든 OECD 국가들은 기대수명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기록했다.³ 2011년에 전형적인 OECD 국가의 신생 여아는 82세 이상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는 1960년에 태어난 여아보다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2011년에 태어난 신생 남아는 77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1960년에 태어난 남아보다 역시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한국, 멕시코, 터키(각각 28.7년, 16.7년과 26.3년을 더 살 것으로 기대됨)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터키와 멕시코의 기대수명이 OECD 평균을 향해 급속히 수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을 이제 넘어섰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영아사망률의 상당한 감소, 개선된 공공 의뢰서비스 제공, 교육수준 향상을 권장하는 정책, 경제적 성과의 개선에 일부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격차의 정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국가간 다르다. 여성의 기대 수명 상의 우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크게 증가하여 1980년 중반에 최고치인 6.8년에 도달했고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에서 평균 5.5년으로 감소했다. 이는 남성 흡연률의 하락과 여성 흡연률의 증가(Flandorfer et al., 2010), 남성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급감을 일부 반영한다.

OECD 지역에서 기대수명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수 현황은 국가별로 다르다(그림 4.1). 2011년에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은 터키의 77.1세부터 일본의 85.9세까지였던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52.8세)과 인도(67.1세)에서는 훨씬 낮았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 태어난 여아는 특별히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85년 이상).

남아의 경우 기대 수명은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에서는 71.2세이며 아이슬란드에서는 80.7세로 가장 높으면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이스라엘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남성의 기대수명은 51.4세인 반면에 인도, 러시아에서 남자는 64세를 살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수명에서의 성별격차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좁혀졌지만(4년 미만으로) 프랑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는 7년 이상이었다. 기대수명에서의 성별격차는 에스토니아(10.1년)와 러시아(11.6년)에서는 심지어 늘어나기도 했다.

같았다. 핀란드에서는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고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많은 대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고할 가능성도 높았다(그림 4.2, 패널 B). 2012년에 이탈리아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 활동에서의 제약을 보고할 가능성이 두배 높았다. 비슷한 성별 격차가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발견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 한국, 일본, 아일랜드에서는 남성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서로 다른 생물학적 요인들, 생활습관과 건강행동이 건강상태와 사망률의 성별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Verbrugge and Wingard, 1987; Case and Paxson, 2005). 건강과 사망률에서의 성별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눈에 띄는 생물학적 원인은 호르몬, 자가면역(남성이 감염에 더 취약함)과 유전적인 요인이다(Waldron, 1995; Crimmins and Finch,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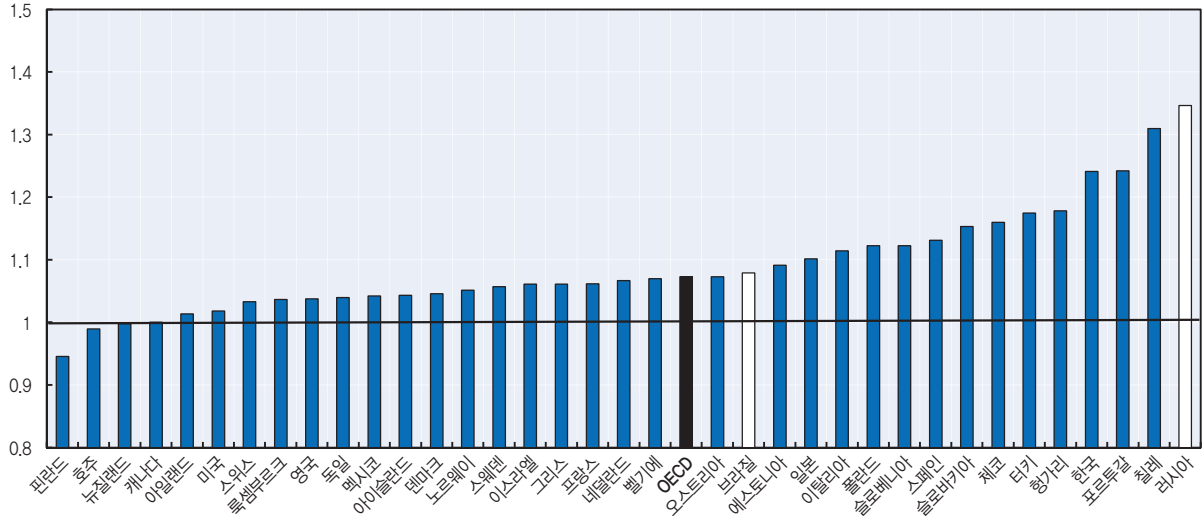
건강행동에서의 성별격차는 또한 병적상태와 사망률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Green and Pope, 1999), 의료진에게 증상을 말할 가능성이 높고(Kroenke and Spitzer, 1998) 더 높은 의료서비스 활용률을 보이는(Bertakis et al., 2000) 반면에 남성은 질병이 나중 단계로 진행될 때까지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Galdas et al., 2005; Juel and Christensen, 2007).

병적 상태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생활습관과 연관이 있는데 흡연, 비만, 식습관, 신체활동의 부족이 그러한 부담의 많은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스웨덴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남성의 흡연률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영국에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 흡연에서의 성별격차는 일본, 한국, 터키,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특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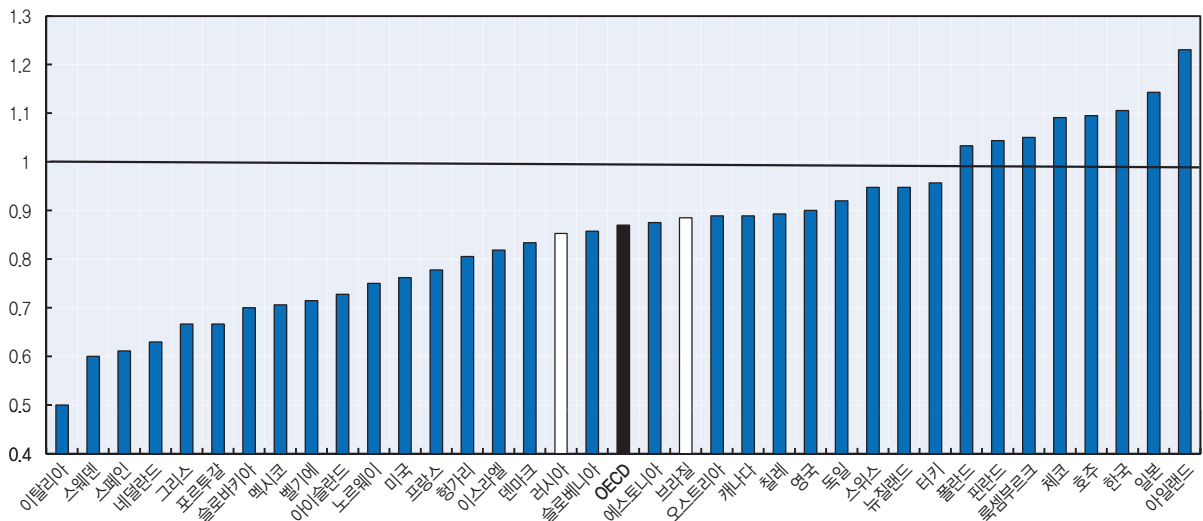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림 4.2. 자기 평가 건강상태와 자기 보고 일상활동의 제약 측면에서의 성별격차

패널 A.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한 남성 대 여성 비율, 2011년 또는 최근 가용 연도



패널 B. 일상 활동의 제약을 보고한 남성 대 여성 비율, 2012년 또는 최근 가용 연도



주: 패널 A는 스스로 건강 상태가 양호 또는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남성대 여성의 비율을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뉴질랜드의 경우 2012년, 아일랜드, 일본의 경우 2010년, 칠레의 경우 2009년, 칠레의 경우 2009년,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을 의미한다. 패널 B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 활동의 제약을 보고한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호주,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이다. 데이터는 스위스의 경우 2009년이다.

출처: EU(2011),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OECD(2013c), "OECD 보건 데이터: 건강 상태",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패널 A); 갤럽세계조사의 데이터에 근거한 OECD의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패널 B).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718>

지난 10년 동안, 여성 흡연률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감소했는데 대개 남성 흡연율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그러나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2000년 이래 여성 흡연률은 거의 또는 전혀 하락하지 않았다(OECD, 2013d).

OECD 국가들에서 비만의 경우 획일적인 성별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평균적으로 비만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가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독일, 한국에서는 남성의 비만율이 더 높다. 남성 비만율은 덴마크, 캐나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 비만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OECD, 2010b).

신체적으로 안 좋은 건강상태는 종종 장기적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다.⁶ 우울증은 고소득 국가들에서 장애의 가장 주된 이유인데 치매 역시 10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정신장애의 전반적 발병률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의 동일한데 우울증은 여성들 사이에 좀 더 흔하며 약물남용장애는 남성들 사이에 좀 더 흔히 발생한다(OECD, 2008). 자살율은 한 국가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측정치로서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이 여성보다 3배에서 4배가 높으며 이러한 성별격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이다. 한국이 예외적인데 여성의 자살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자살미수로 인해 성별격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고 그러므로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OECD, 2011a; OECD, 2012c).

국가적 보건 조사와 기타 출처를 통해서 수집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중요 영역에 대한 데이터는 건강기대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서 보내는 생애기간에 관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Sullivan, 1971). 유럽에서 건강수명년수(HLY) 측정방법은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더 긴 수명을 누리며 사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인정되어 왔다.

건강수명년수(HLY)는 특정 연령의 사람이 장애 없는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남은 년수를 계산하는데, 수명표(life table)로부터 얻은 사망률 데이터와 연례 EU-SILC 조사의 장기적 활동 제약에 관한 자기 보고 측정치로써 얻어진 인구 집단별 장애 발병률 추정치를 이용한다(OECD, 2011b; OECD, 2012d).⁷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과 남성이 건강상의 제약없이 살 것으로 기대되는 년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2011년에 유럽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여아와 남아가 모두 양호한 건강상태에서 62.4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었다(그림 4.3).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여성은 전 생애기간에서 더 높은 비율(여성의 경우 25%, 남성의 경우 19%)의 기간 동안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건강수명년수(HLY) 측면의 성별격차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여성이 우위였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래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수명년수(HLY)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따라잡았고 읽기 점수가 더 높다

또 다른 영역에서 보면 여아와 여성이 교육 측면에서 남아와 남성의 수행도를 능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2 OECD 보고서 “양성격차 줄이기: 이제 행동하라”에서 개괄할 것처럼 여자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졸업률이 더 높다. 성공을 참여와 유지가 아닌 성과 측면에서 측정한다면, 남아가 읽기에서 두드러지게 성과가 낮으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Hibel et al., 2010). 여자아이들이 수학에서 남자아이들에 비해 성취도가 다소 떨어지나 여아와 남아 간 학업 성취도 격차는 수학이 읽기보다 적다. 과학과 관련된 국제성취도평가(PISA)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과학 수행도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거의 혹은 전혀 차이가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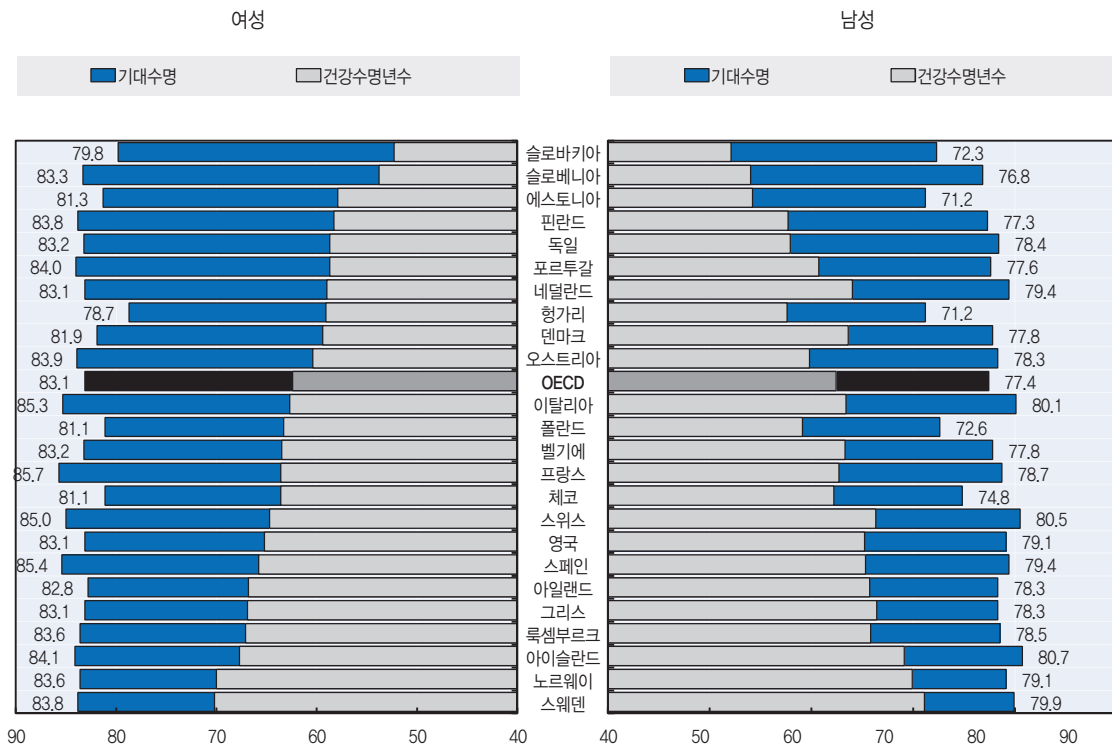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않는데 여학생은 12개국에서 남학생을 능가했으며 남학생은 8개국에서 여학생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OECD, 2009).

수행도가 낮은 학생과 수행도가 높은 학생의 성별격차가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읽기에서 수행도가 가장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 성별격차가 매우 큰데, 많은 남학생들은 기본 독해 능력이 부족하지만 글을 읽고 이해 못하는 여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림 4.3. 건강수명연수 측면에서의 성별격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연수, 2011년 혹은 최종 가용 연도



주: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수명연수의 오름차순으로 분류된다. 건강수명연수에 대한 데이터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을 가리킨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건강수명연수에 대한 데이터는 추정치이다.

출처: OECD(2013c), "OECD 보건 데이터: 건강 상태",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유럽통계청(2013), "2011년 건강 수명 연수", 유럽통계청 보도자료, No. 35,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05032013-BP/EN/3-05032013-BP-EN.PDF.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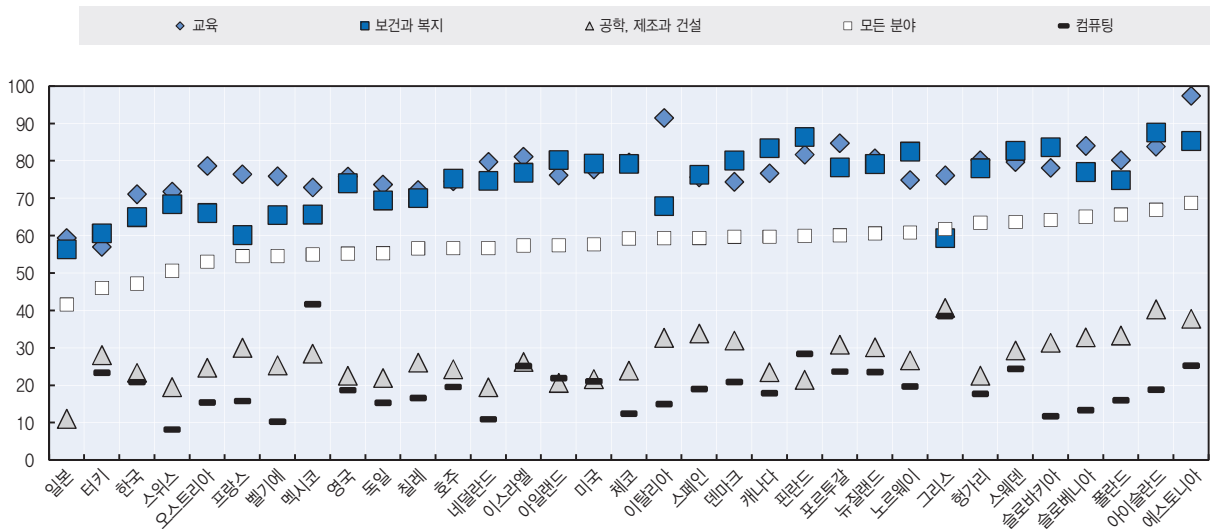
수학에서 수행도가 가장 낮은 학생들 사이의 성별격차는 미미하지만 수행도가 높은 학생들 사이의 성별격차는 상당히 크다. 과학에서 성별격차가 대체로 적는데 수행도가 가장 낮은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은 반면에, 남학생이 수행도가 높은 학생들 중에 더 많다(OECD, 2012a).

대학에서 남학생이 과학 관련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뛰어난 학업 수행도는 취업 전망이 더 좋은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젊은 여성들은 대학에서 전공분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그림 4.4). 전공 분야 선택에 있어서 성별격차는 노동인구에서 성별 분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여성에게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이 교육, 보건, 복지 분야에서 졸업생의 대다수(대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함)를 차지하는 반면 공학, 제조, 건설 분야는 전체 졸업생의 30% 미만이 여성이다. 전공 분야별 남녀의 분포가 국가별로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이 매우 다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은 OECD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 전공 분야에서의 성별격차를 줄이려는 많은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의 상황은 약간 변했을 뿐이다(OECD, 2012b).

그림 4.4. 대학의 전공 분야에서 성별격차

일반대학(tertiary-type A and advanced research programmes)에서 여성에게 수여된 학위의 비율, 전공 분야별, 2010년 또는 가용 최종 연도



주: 여성에게 수여된 대학학위 비율의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가 매겨진다. 최근 자료 제공이 가능한 연도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2009년이다.

출처: OECD(2012b), 한눈에 보는 교육 2012: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756>

전공 분야별 졸업생 분포는 어떤 과목과 근로 분야는 “여성적”이며 다른 과목과 근로 분야는 “남성적”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등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상적 형태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성별규범이 전공분야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Connell, 2005). 약간의 변화가 확인되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이 우세인 다수의 학문영역은 여전히 여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성에 대한 정형화된 행동과 기대가 수학능력에 대한 여학생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학과 관련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Turner et al., 2004; Frenzel et al., 2010).

남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이 더 용이하다

교육의 목적은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지식의 습득에도 있다. 교육의 목적은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벌고,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며,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할 때 다른 궤도를 경험한다. 2010년에 OECD 국가들에서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의 16%가 고용상태가 아니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ET” 인구).⁸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 NEET로 평가되는 비율이 젊은 남성보다 평균 4 퍼센트 포인트 높았다.

캐나다,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딕 국가에서 NEET 인구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간 거의 동일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페인에서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NEET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 격차는 적다. 이와는 반대로 터키, 멕시코, 브라질은 성별 격차가 가장 크며 NEET 상태의 여성이 비율이 가장 높다.

NEET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경제 내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는 젊은이의 높은 비율,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행동적 문제점이 포함된다. 십대 임신, 조혼과 가사에 대한 책임이 일부 국가에서 여성의 NEET 비율이 높은 원인이다.⁹

유급 및 무급 근로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

고용률에서의 성별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고 있다

교육 수준의 상승이 많은 OECD와 비 OECD 국가들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하거나 종종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와 고용률은 여전히 남성보다 상당히 낮다. OECD 지역에서 고용에서의 성별격차는 남성보다 높은 여성 고용 증가율 덕분에 1990년대에 좁혀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는 변함이 없었다. 최근 경제 위기의 초기 몇 해 동안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고용에서의 성별 격차가 줄었는데 이는 남성이 주로 일하는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특히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우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여성이 고용 완충장치(buffer; 수요가 늘면 고용되고 수요가 줄면 해고됨)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 시각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배우자가 실직을 하면 여성이 사실상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제위기 기간 동안 여성 가장이 거의 10%로 증가했다(유럽 위원회, 2013).

금융위기 발발 이래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여성과 남성 실업률이 거의 비슷해져 감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실업률은 2007년 5.5%에서 2009년 약 9%로 증가했다. 동기간 중에 여성 실업률은 6%에서 8%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일하는 서비스 부문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여성이 아닌 남성의 실업이 감소했는데 2012년 4분기에 OECD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실업률이 모두 대략 8%였다(국제노동기구(ILO), 2012; OECD, 2013b).

OECD 국가들에서 유급 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4%가 낮다(OECD, 2012a).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줄었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여전히 평균 9퍼센트 포인트 높다(그림 4.5). 대학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용률 격차는 칠레, 체코,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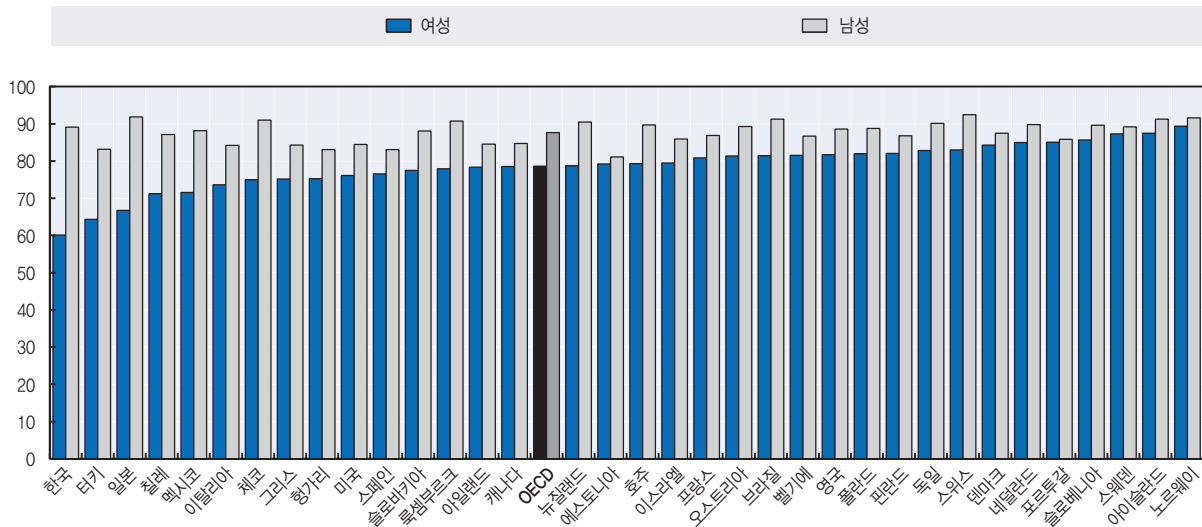
특히 뚜렷하여 29 퍼센트 포인트나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의 전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여성의 고용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여성은 상당한 부문별·직업별 분리를 겪으며 남성보다 적게 번다

어떤 직업군에서 지나치게 많은 혹은 적은 여성들이 일을 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전공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일부 반영한다. 직업군에 관한 비교 가능한 정보는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경우에만 입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모든 근로 여성 중 최소한 절반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분류한 110개 직업군중 11개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반면에 남성 중 절반이 20개여개의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한 여성화(특정 부문의 근로자중 여성의 비중이 높음)가 존재하여 서비스직이 여성 고용의 평균 80%를 차지하는데 이는 남성의 60%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림 4.5. 대졸자 고용률에서의 성별격차

25세에서 64세까지의 대졸자 인구의 고용률, 성별, 2010년



주: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고용률을 오름차순으로 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출처: OECD(2012b), 한눈에 보는 교육 2012: OECD 지표,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eag-2012-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775>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과학, 기술, 공학 부문의 일자리에 고용된 노동 인구의 25% 미만을 차지하여 이러한 낮은 진출도는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OECD, 2012a). 더 나아가 공공 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며 여성들은 보건과 교육 등 사회 부문의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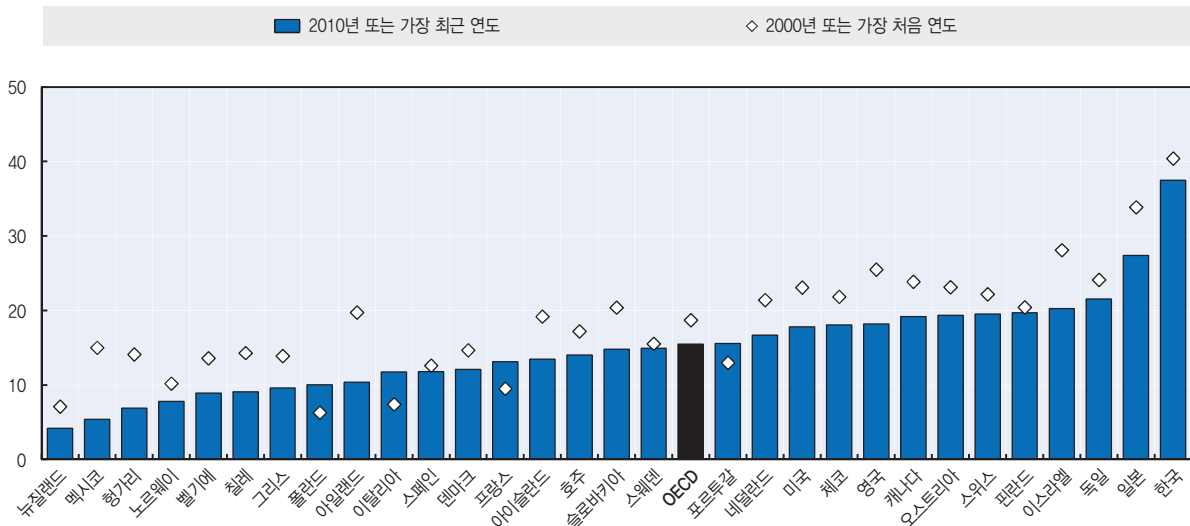
상당 부분의 여성들이 저임금 직업군에서 일하는 것이 남녀간 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이다(Blau and Kahn, 2000; Flabbi and Tejada, 2012). 여성의 임금은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보다 낮다(그림 4.6).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그 격차의 범위는 멕시코, 헝가리, 뉴질랜드의 경우 10% 미만에서 일본과 한국의 30% 이상까지 다양하다. 지난 10년간 남녀간 임금격차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좁혀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만 예외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녀간 근로소득 격차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자녀 양육 책임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남성 대비 여성의 근로 시간이 적다는 점, 임시직과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이 많다는 점이다. 여성은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하기 위하여 흔히 시간제로 일한다. 시간제 근로자들도 포함시킬 경우 세금 공제 후 임금(take-home pay)의 남녀간 격차는 자료 제공이 가능한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두배가 되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는 세배가 된다. 여성은 또한 가임기와 자녀 양육기 동안에 남녀간 임금격차의 가파른 상승(일명 “모성 벌금”)을 경험한다. 전일제로 근무하는 가임 연령대에 속한 여성 가운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성별임금 격차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훨씬 높다. 자녀를 낳음으로써 받는 급여상 불이익은 평균 14%로 한국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가 가장 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는 거의 없다(OECD, 2012a).

그림 4.6. 성별 임금 격차

퍼센트, 전일제 근로자



주: 임금 격차는 남성 중위 임금과 여성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 중위 임금으로 나눈 수치이다. 이 계산에서 사용된 근로소득의 추정치는 전일제 임금/월급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을 의미한다. 자기 사업 여성과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 자료 원천과 이 계산에서 사용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www.oecd.org/employment/outlook 참고. 성별 임금 격차의 오름차순으로 국가 순위가 매겨진다.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최초 연도는 폴란드의 경우 2005년,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2004년, 슬로바키아의 경우 2002년, 이스라엘의 경우 2001년이다.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최근 연도는 캐나다, 헝가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경우 2011년, 네덜란드의 경우 2005년이다. OECD 수치는 멕시코와 칠레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보여준 수치들의 단순평균이다.

출처: OECD(2013f), 온라인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OECD(2013b), OECD 젠더 데이터 포털, www.oecd.org/gender/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794>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근로소득 분포도의 최상위에 속한 임금 격차가 최하위보다 크다.¹⁰ 최상위 여성 근로소득자는 최상위 남성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적으로 21%를 덜 번다. 이러한 격차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이 근거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즉 여성은 최고위직에 이르는 경력 사다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 유리천장은 여전히 깨질 것 같지 않은데 고용 부문의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OECD, 2012a).

최근의 증거는 임금 증가와 고용률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더 양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cemoglu and Autor(2011)와 Autor and Dorn(2013)은 미국에서 전통적인 중간숙련 일자리(middle-skill job)부문에 임금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결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고용은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로 주로 이동했으며 저숙련 고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남성의 고용은 직무 분포도의 양쪽 꼬리 부분으로 이동했으며 고숙련 고용이 아닌 저숙련 고용이 좀 더 많이 증가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추세가 유럽연합에서도 보여진다(Goos et al., 2009).

기업가 중 여성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노동시장 성불평등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OECD 지역에서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을 소유한 남성의 숫자가 여성의 숫자의 세 배이다. 여성이 소유한 기업은 대개 소규모이며 적은 자본금으로 운영된다(OECD, 2012c).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이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은 남성보다 최대 60%가 낮으며 여성은 대기업 소유주들 가운데 거의 보이지 않는다(OECD, 2012a). 기업가로서 여성은 사업 네트워크 접근성과 경영경험 등과 같은 핵심 자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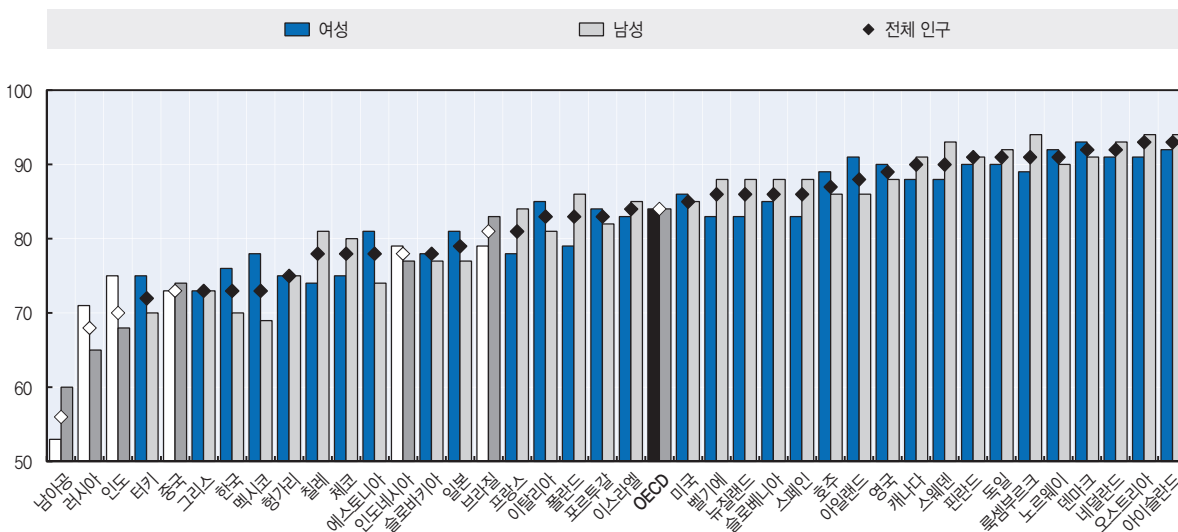
기업가에 대한 고정관념(예를 들어 기업가의 지위는 남성의 직무라는 믿음)과 여성들의 역할 모델이 적은 것이 여성이 기업가가 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고하고, 자신에게는 성공적 기업가가 될 능력이 없다고 믿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Coleman and Robb, 2012). 이러한 문화적 장애물과 함께 여성 기업가들은 특정한 시장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난하거나 경험이 적은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불충분한 신용이 결정적 시장실패이다.

여성과 남성은 자신의 직업에 똑같이 만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OECD는 성별 임금 격차의 정도를 추정하는데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그 관심이 직업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를 측정하고 논의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림 4.7 은 OECD 국가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¹¹ 근소한 차이로 좀 더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직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는 멕시코, 에스토니아, 한국, 터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다. 이에 반해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에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국가는 폴란드, 칠레, 룩셈부르크,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이다.

그림 4.7. 직업 만족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성별, 2012년 혹은 가장 최근 연도



주: 국가의 순위는 전체인구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매겨진다. 데이터는 호주,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의 경우 2011년이다.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는 입수가 가능하지 않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813>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일자리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만족한 여성 근로자의 역설(paradox of the contented female worker)”로 문헌에서 요약되고 있다(Agassi, 1982). 여성이 받는 낮은 임금과 노동 시장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무 분리는 여성의 높은 직업 만족도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가치를 두는 직업상의 특징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거듭 나타나고 있다.¹² 특히 여성들이 보이는 높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는 표준 고용과 근로소득 통계에서 보통 측정되지 않는 직업상의 특징을 반영한다. 몇몇 OECD 국가들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여성은 대개 근로소득을 직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지 않는 반면(Clark, 1997), 남성의 직업 만족도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여성보다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loane and Williams, 2000; Donohue and Heywood,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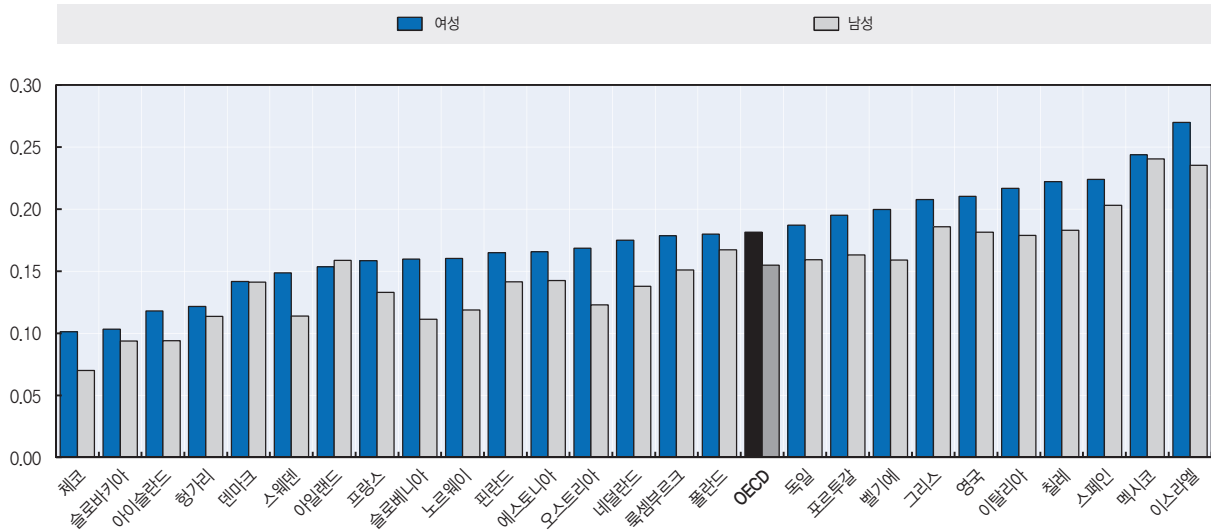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근무 일정의 유연성,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업무의 유의미성을 직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Bender et al., 2005; Skalli et al., 2008).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여성이 일과 가족의 삶을 병행하고자 하는 바람의 결과물일 수 있다(Garey, 1999).

여성 한부모와 여성노인이 빈곤 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임금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남녀간 임금 격차는 성에 근거한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구 수준의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총액을 나타낸다. 그림 4.8에서 가구 소득에서의 성별격차에 관한 단순 지표는 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빈곤 가구는 그림 4.8에서 보여주듯이 총 균등화 가구 소득(세금 공제전)이 국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로 정의된다.¹³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빈곤 가구에 여성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에서만 이러한 측정치에서 성별 격차가 미미하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칠레, 미국에서 그 격차는 상당하다.

그림 4.8. 상대적 빈곤 인구의 성별 비율

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2012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빈곤 가구는 총 균등화 소득이 국가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이다. 총 소득은 가구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1) 가구 구성원들의 임금, 월급, 개인사업 소득; 2) 자본 및 재산 소득, 개인 연금, 사적 퇴직연금, 모든 종류의 민간 이전; 3) 공적 원천으로부터의 사회 보장 이전. 총 소득은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으로서 총 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눔으로써 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득 구성요소는 특별히 총 소득과 순 소득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의 차이로 인해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사이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칠레에 대한 자료는 2009년이다. 빈곤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오름차순으로 하여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 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과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832>

표 4.8.에서 보여준 빈곤인구비율 지표의 한계는 모든 소득이 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선호도, 필요 또는 소득 출처에 상관없이 똑같은 물질적 웰빙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는데 있다.¹⁴ 점점 더 많은 연구결과가 가구 내 자원들이 가구원의 소비 필요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Lise and Seitz, 2011). 가구 내 불평등의 존재를 간과함으로써 개인간 불평등의 실제 수준을 상당히 과소평가할 수 있고(Haddad and Kanbur, 1990) 전반적 불평등의 추세에 관한 결론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다.¹⁵

가구 내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은 없다.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 (EU-SILC)는 가구 내 자원의 공유와 경제적 결정의 통제권에 관한 조사 문항을 도입했다. 유럽에서 최소한 2명의 성인이 있는 가구의 30%는 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득을 벌여온 사람의 사적 자원으로 취급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⁶ 자신의 개인 소득을 가구의 공용 예산과 분리한다고 보고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성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여성보다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평균 15%가 높음, OECD, 2012a 참조) 소득의 부분적 공유는 가구 내 소비 불평등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규모는 무급 근로의 가치에 관한 문화적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여가나 취미를 위해서 돈을 쓸 자유의 차이는 유급근로 여성과 무급근로 여성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급 고용이 된 여성의 60%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반면에 무급직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47%에 불과하다. 소득이 성인 가족 구성원 간에 완전히 공유될 가능성은 빈곤 가구일수록 결혼을 한 노부부일수록 더 높다(Pontieux, 2012).

성인 여성의 높은 빈곤율은 취약한 가구에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과 강한 연관이 있다(그림 4.9). 특히 여성은 한부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28개 OECD 국가들의 평균 89%). 상대적 빈곤율은 모든 가족 형태를 통틀어 평균 20%이며, 가족 내에 성인 남성이 1명밖에 없는 가구의 경우는 31%이며, 가족 내에 성인 여성이 1명밖에 없는 가구의 경우는 39%이다.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훨씬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며(그림 4.9, 패널 A) 여기에도 국가간 중요한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은 또한 노년에 혼자될 가능성과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더 높는데(그림 4.9, 패널 B), 이는 연금 수급권을 위해 비축된 금액이 적고 연금액수가 낮기 때문이다(OECD,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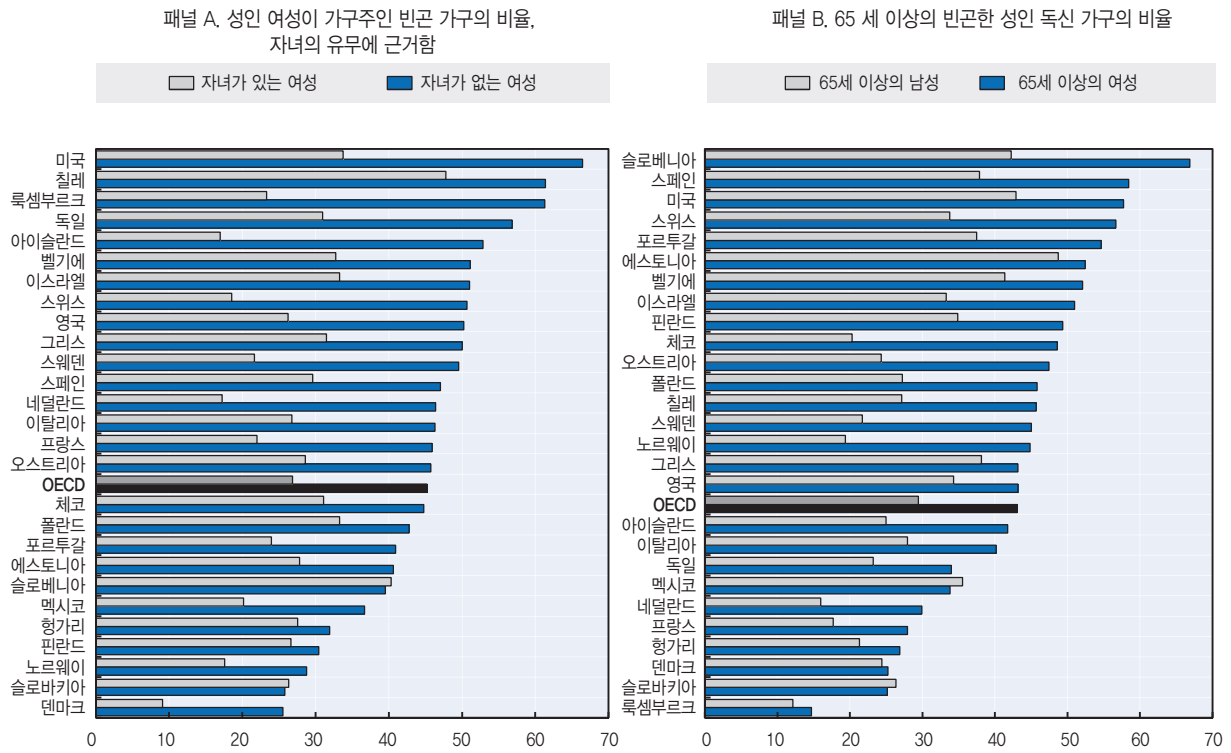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자산 소유와 채무의 측정치와 같은 물질적 상태에 대한 기타 지표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노출도 측면에서 성별 격차에 관한 중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 관한 한 연구(Schmidt and Sevak, 2006)에서는 결혼한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중위자산이 한부모가 가장인 가구의 중위 자산의 4 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독신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결혼한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는데 특히 자산 분포도의 하단에 위치한 경우 그렇다. 그러나 성별 불평등의 국제적 비교를 위한 자산 관련 데이터는 현재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물질적 생활 상태에 관한 자기 인식 평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여성이 물질적 결핍의 위험이 높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국가간 차이는 크다. 핀란드에서 2010년에 독신 여성(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음)의 10%만이 생계를 유지하지 힘들다고 말했지만 그리스의 경우 6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독신 성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자녀의 유무와 성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2010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사회적 현물 이전 이후의 균등화 소득이 국가 중위 소득의 60% 미만인 성인 독신 가구의 비율로, 독신 성인의 성별, 연령 그리고 자녀의 유무에 근거한다. 총 소득은 가구 단위에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1) 가구 구성원들의 임금, 월급, 개인사업 소득; 2) 자본 및 재산 소득, 개인 연금, 사적 퇴직연금, 모든 종류의 민간 이전; 3) 공적 원천으로부터의 사회 보장 이전. 총 소득은 가구원 수 균등화 소득으로서 총 소득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눔으로써 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득 구성요소는 특별히 총 소득과 순 소득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의 차이로 인해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사이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 칠레에 대한 자료는 2009년이다.

출처: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에 근거한 OECD 계산,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and public-use micro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851>

여성은 가정에서 더 많은 무급근로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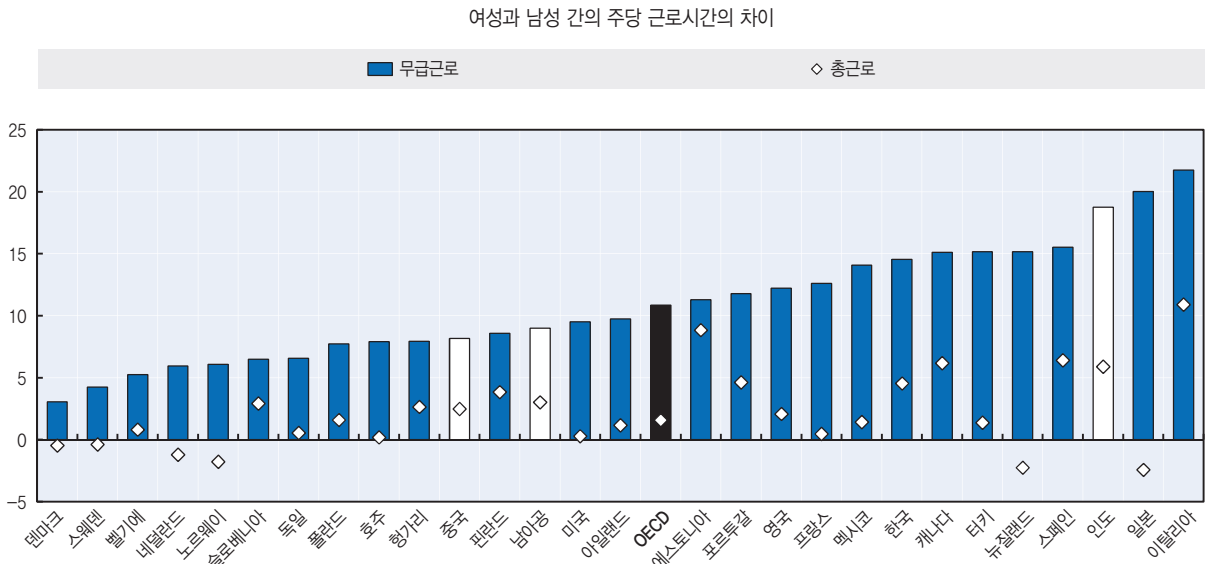
생활시간 사용 측면에서 남녀간 불평등은 크고 지속적이다. 여성이 유급 노동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계속 떠안고 있다. 시간은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무급근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록 대개 여가시간이 줄어들며 웰빙에 악영향을 미친다. 생활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은 생활시간 조사의 이용 가능성이 향상된 덕분에 과거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된다(Miranda, 2011). 생활시간 사용 일지는 무급근로에 의해 생산되는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OECD 전지역에서 여성은 주당 평균 24.5시간의 유급근로를 수행하며 31.5시간의 무급근로를 수행하는 반면에 남성은 33.7시간(여성보다 30% 더 많음)을 유급근로에 사용하고 21시간(여성보다 50% 더 적음)을 무급근로에 할애한다(그림 4.10) 유급근로와 무급근로를 합친 총 근로 시간은 여성이 더 높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다(OECD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국가 평균 주당 2.3시간을 여성이 더 일함). 국가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이탈리아 여성은 이탈리아 남성보다 주당 11시간의 일을 더하는 반면에 일본 남성은 일본 여성보다 주당 2.4시간을 더 일한다.

그림 4.10. 무급근로와 총근로에 할당된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



주: 무급 근로에서의 성별 격차의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일본, 미국의 경우 2011년, 캐나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의 경우 2009년-2010년, 터키의 경우 2008년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호주, 중국, 네덜란드, 터키의 경우 2006년,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2005년, 폴란드의 경우 2003-2004년, 독일의 경우 2001-2002년이다. 데이터는 덴마크의 경우 2001년, 슬로베니아, 스웨덴의 경우 2000년-2001년, 남아공의 경우 2000년, 헝가리의 경우 1999년-2000년, 인도와 포르투갈의 경우 1999년이다. 무급 근로와 총 근로의 구체적인 정의를 보려면 Miranda, V.(2011), “요리, 보육, 자원봉사: 전세계 무급 근로”OECD 사회·고용·이주 노동 보고서, No. 11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kgjrm8s142-en>. 참고

출처: 국가 생활시간 사용 조사를 근거로 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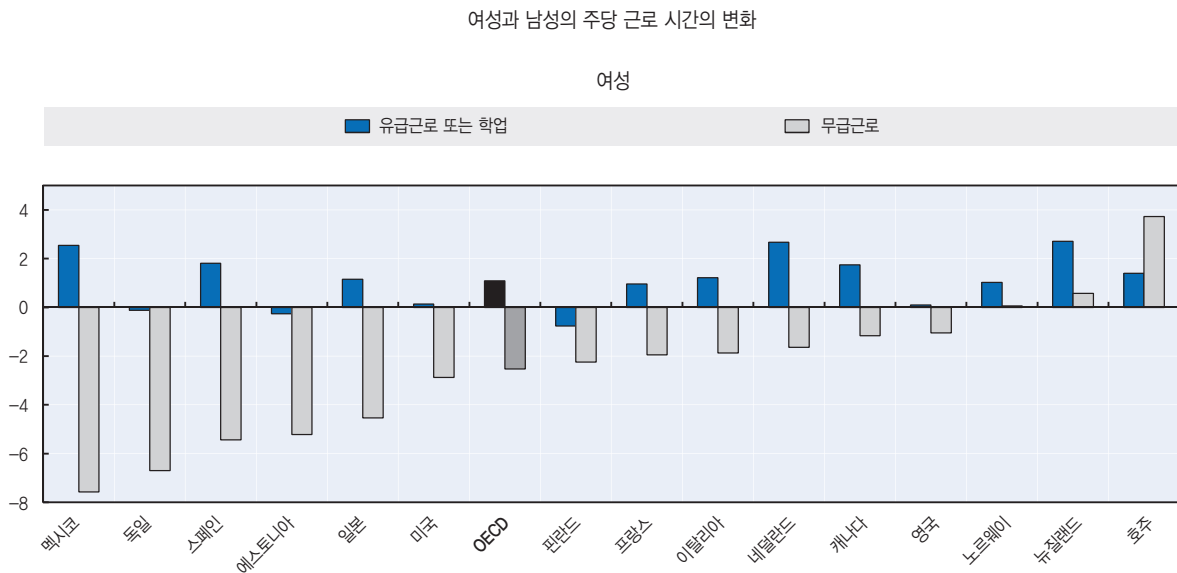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870>

총 근로작업량에서의 성별 격차는 “부수적 활동”을 감안하며 더 크다. 그림 4.10은 생활시간 사용 일지에서 여성과 남성에 의해 보고된 주된 혹은 “1차적” 활동만을 나타내며 동시에 수행된 다른 활동은 감안하지 않았다. 여성은 가정 내에서 다중작업을 남성보다 더 많이 수행한다(Sullivan and Gershuny, 2012). 16개의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부수적 활동에 평균 18%의 시간을 더 사용한다(여성 주당 25.6시간 사용하고 남성은 21시간을 사용함). 특별히 자녀양육은 보통 다른 과제와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1차적 활동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이 동시에 수행하는 활동은 또한 남성과 다르다. 예를 들어 여성은 두 가지의 무급 가사 노동(예: 자녀양육과 요리)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에 남성은 무급과제를 수행하며 여가를 즐길(예: 신문을 보며 자녀를 보살핌(Sayer, 2007; Sullivan and Gershuny, 2012)) 가능성이 더 높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다중과제를 더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Offer and Schneide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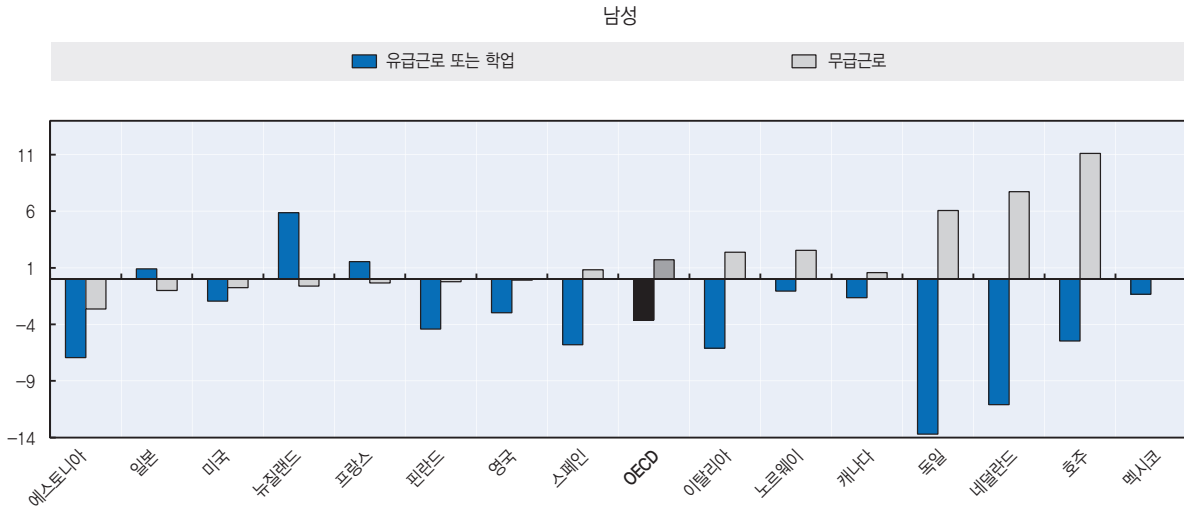
가사와 자녀양육에 소비된 시간이 과거보다 더 균형이 잡혔다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사용은 지난 수십년간 느린 속도이기는 하지만 변화하였다(그림 4.11). 여성의 경우 분명한 추세가 나타나는데 유급고용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무급근로는 감소하고 있다. 여성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1시간을 더 유급근로에 사용하며 무급근로에 사용하는 시간은 2.6시간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남성의 유급근로는 주당 평균 4.5시간 감소했고 무급근로는 2시간 늘었다. 그러나 남성에 의해 수행된 무급근로의 증가가 모든 국가에서 관찰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집 밖에서 근로한 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남성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2011년에 주당 52시간으로 늘어났다. 유급 및 무급근로의 이러한 성별 추세는 선행 연구결과를 확증해 준다(Aguiar and Hurst, 2007; Gimenez-Nadal and Sevilla-Sanz, 2012).

그림 4.11. 과거 10년동안의 주당 유급 및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주: 주당 무급근로에 할당된 시간의 변화를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03년-2011년, 일본의 경우 2001년-2011년, 뉴질랜드의 경우 1999년-2011년, 스페인의 경우 2003년-2010년, 이탈리아의 경우 2002년-2010년,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2010년이다. 데이터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의 경우 2000년-2010년, 프랑스의 경우 1999년-2010년, 멕시코의 경우 2002년-2009년이다. 데이터는 호주의 경우 1997년-2006년, 네덜란드의 경우 1995년-2006년, 영국의 경우 1995년-2005년, 독일의 경우 1992년-2002년이다. 무급근로와 총근로의 상세한 정의를 보려면 Miranda, V.(2011), "요리, 보육, 자원봉사: 전세계 무급근로" OECD 사회·고용·이주 노동 보고서, No. 116,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5kghrjm8s142-en>를 참조하시오

출처: 다국적 생활시간 연구(MTUS) 마이크로 데이터(www.timeuse.org)에 근거한 OECD 계산, 공공 이용 생활시간 사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국가 통계국의 도표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889>

여성의 무급근로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가사노동의 “아웃소싱(외식, 포장 식품의 구매, 아동 보육 서비스의 활용, 세탁 등 가사일에 대한 서비스 구매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동 절감 기구가 개발되고 가구에서 이러한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사노동에 소비된 시간을 줄이는데 확실히 기여했지만 선행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기기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Bittman et al., 2004). 국가간 추세가 상이한 것은 전통적 성역할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끼친 정책(육아 휴직등)이 다르게 변천해왔기 때문이다(OECD, 2012a).

무급근로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을 덜 즐겁게 보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유급근로가 보통 가사일이나 자녀양육보다 덜 즐거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Krueger et al., 2009).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자주 가정 밖에서 초과근무를 하거나 규정의 시간에 근무하는데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낼 시간 가능성을 제한한다(Presser et al., 2008). 가사일의 불공평한 공유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성의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가사일에 대한 커다란 책임이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와 관련된 결정, 투입가능한 시간, 자신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기회와 자원의 접근성에 대한 성별 불평등을 강화한다(OECD, 2012a; 세계은행, 2012). 둘째,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는 “이중 부담”을 진 여성의 과도한 작업량은 시간 부족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시간의 빈곤은 노동시장이나 가사를 위해 일하는데 소요한 시간을 제하고 나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빈곤한 개인들은 재량껏 쓸 수 있는 시간 또는 여가 시간(총 가용 시간에서 개인적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과 유급/무급근로에 사용하는 시간을 뺀 시간)의 수준이 국가 중위 수준의 60%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된다(Kalenkoski et al., 2011).¹⁷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15개국 중 단지 3개국(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남성이 시간 빈곤률이 여성보다 높다. 시간의 빈곤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슈이다. 그림 4.12는 시간 빈곤은 가구에 자녀가 있으면 보통 2배가 되고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빈곤에 대한 취약성은 가족과 직업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가족 친화적 근무 관행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성별 이외에 개인적 특징(연령, 고용상태, 교육, 배우자의 고용상태)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은 한 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경우 여성의 자유재량 시간이 주당 2.3시간이 감소하고(남성의 경우 1.7시간), 시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3.5% 증가함을 보여준다(남성의 경우 2.6%, 구체적인 결과를 보려면 부록 4.A1 참조). 저소득 개인들의 시간 빈곤율이 더 낮지만 그 관계는 확실치 않다. 유급근로를 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돈으로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보모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교육과 시간의 빈곤 사이의 연관성은 국가간 차이가 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가사일을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녀양육에 쏟는 시간은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에 관한 주관적 지표들은 시간 빈곤에 관한 객관적 지표들에 대한 유용한 보완 정보를 제공한다. 2007년에 시행된 유럽국가의 시간활용 조사에서 여성들에게 유급근로, 가족과의 접촉, 기타 사회적 접촉, 개인적 취미에 “너무 많은”, “너무 적은”, 또는 “적당한 양”의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한 결과 여성은 자신의 시간 할당에 대해 남성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고했다. 불균형과 스트레스의 인지 측면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여성이 가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의식(생활시간 사용일지에서 측정되지 않음)은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여성의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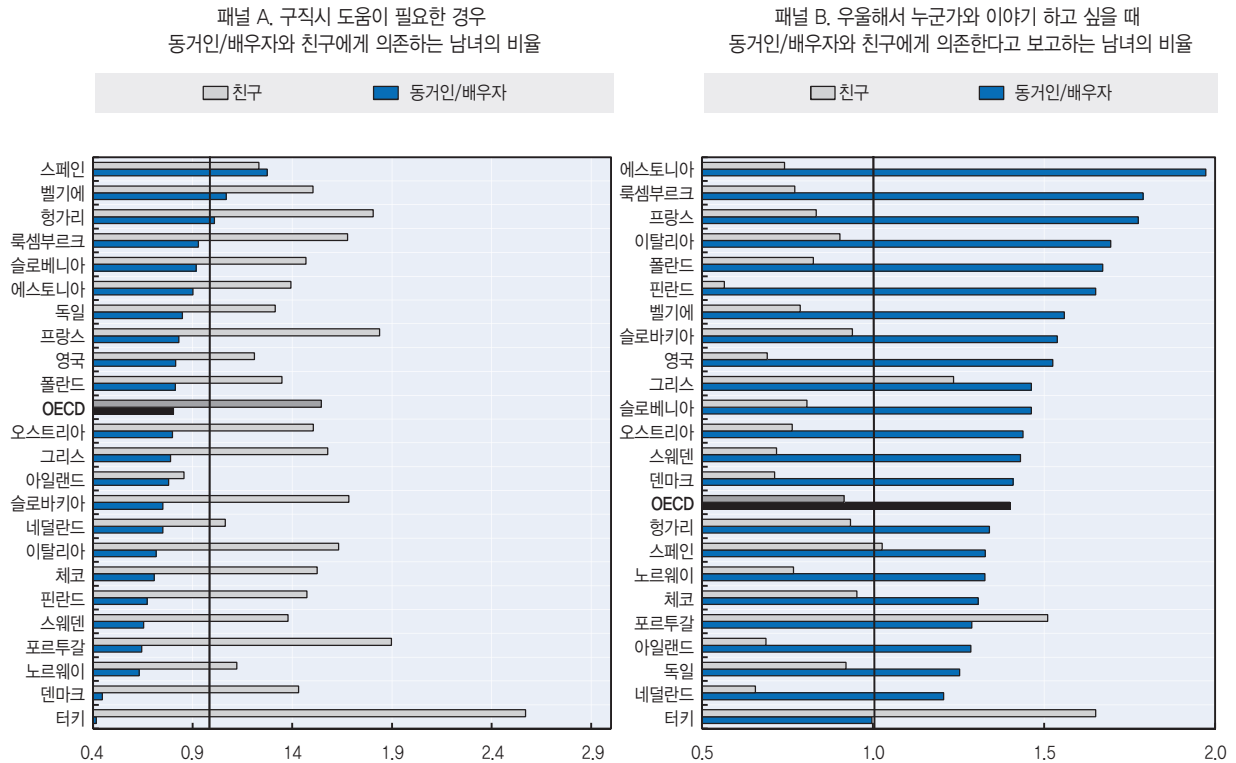
대조적으로 남성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 대개 보통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 관계망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표현을 하고 친밀하며 지지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반면에 남성의 상호작용은 대개 수단적인 경향이 있다(Hanasono et al., 2011). 일반적으로 여성의 우정은 친밀감과(특히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할 때) 개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남성의 우정은 공유된 활동과 과제 지향성에 초점을 맞춘다(Prentice and Carranza, 2002; Ridgeway, 2009).

유럽 삶의 질 조사(EQLS) 자료는 위에서 서술된 관계망의 형식 면에서 일부 성별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⁰ 구직활동시 도움을 얻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배우자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그림 4.13, 패널 A).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19%의 여성(남성의 경우 14%)이 일자리를 찾을 때 배우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했던 반면 14%의 여성은 친구에게 의존한다고 보고했다(남성의 경우 21%). 그러나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 여성이 배우자와 친구 모두에게 똑같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 여성은 친구보다 배우자에게서 훨씬 더 큰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4. 웰빙에서의 양성격차: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림 4.13. 유럽 국가들에서 일자리와 심리적 도움을 구할 때 사회 관계망에서의 성별격차

2007년



주: 패널 A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배우자/동거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남녀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다. 성별 격차는 친구에게 의존할 때 아일랜드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동거인/배우자에게 의존할 때 룩셈부르크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패널 B에서 심리적 도움을 구할 때 배우자/동거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남녀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다. 성별격차는 모든 국가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출처: EU로부터의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2007), 유럽 삶의 질 보고서(데이터베이스), www.eurofound.europa.eu/surveys/eqls/2007/index.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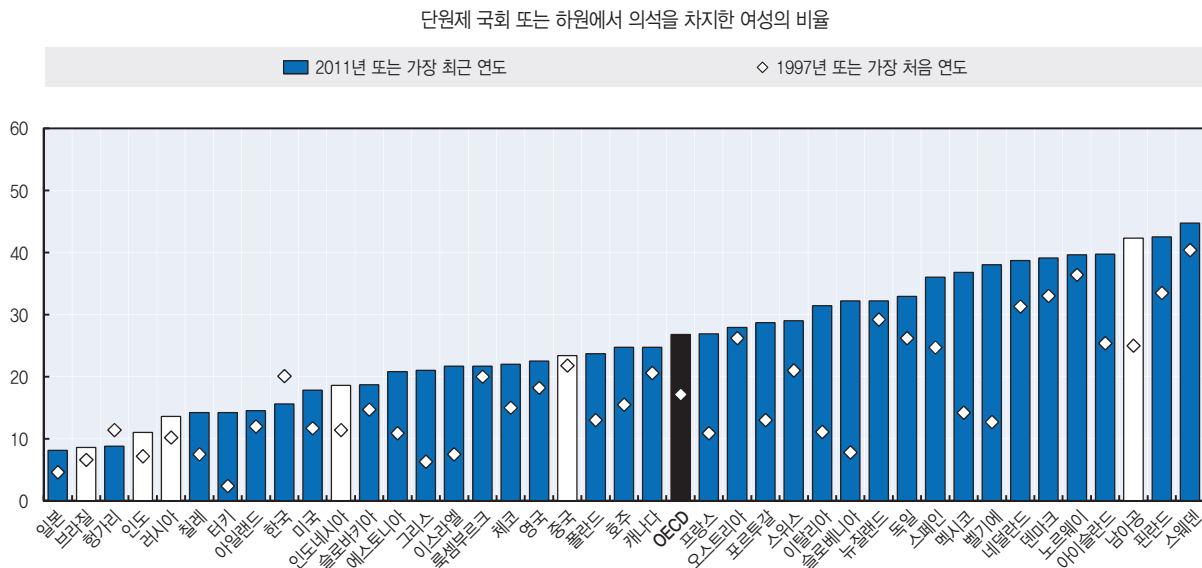
남성의 경우에 그들은 배우자보다 친구들에게 체계적으로 더 많이 의존한다(헝가리가 예외인데 남성은 친구와 배우자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에서 남성은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배우자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 사이의 격차가 터키, 슬로베니아, 동유럽국가들(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크다.

심리적 도움을 얻을 때는 앞서의 분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4.13, 패널 B). 이 경우, 분석대상 모든 국가들에서 훨씬 많은 비율의 남성이 친구보다 배우자로부터 심리적 도움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배우자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 사이의 격차가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가장 크다(35 퍼센트 포인트 이상).

정치 부문의 여성 진출도가 여전히 낮다

오늘날 전세계의 대부분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수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그림 4.14).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국회 의석의 27%를 현재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15년 전의 17%에서 상승한 비율이다. 여성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이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 뚜렷이 증가했지만 2005년부터는 계속 느리게 증가 혹은 감소하고 있다. 노르딕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단원제 국회 또는 하원에서 여성 비율이 평균 42%로 가장 높다. 스페인, 멕시코, 벨기에는 총 의석의 36%-38%를 여성이 차지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여성 의원 비율이 20% 미만으로 뒤쳐져 있다.

그림 4.14. 국회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



주: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는 중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의 경우 2013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미국의 경우 2012년, 호주, 벨기에, 브라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0년, 칠레,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와 남아공의 경우 2009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8년이다. 자료 제공이 가능한 가장 처음 연도는 호주, 체코,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1996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위스의 경우 1995년, 브라질, 덴마크,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남아공과 스웨덴의 경우 1994년, 칠레의 경우 1993년, 한국의 경우 1990년이다. 미국 데이터는 하원에서 모든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 비중이다. 남아공 자료에서는 임시로 임명된 36명의 특별 대표를 제외한다.

출처: OECD(2013b),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 www.oecd.org/gender/data/; IPU(2013), 국제의회연맹(데이터베이스), www.ipu.org/wmn-e/classif.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946>

다수의 제도적 특징(선거제도, 할당 제공 등), 문화적 요소(종교, 성별 규범 등)와 사회경제적 요인(경제적 발전, 고등 교육에서 여성의 비중)이 여성이 정치에서 대표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태도의 차이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Ruedin, 2012). 최근 연구는 또한 여성의 유급 노동력으로서의 참여와 여성의 정치 진출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예컨대 노동 인구에서 여성 숫자가 늘어나면 정당이 영입할 수 있는 여성 후보의 풀이 확대된다(Stockemer and Byrne, 2012).

남성이 살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경제·사회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형태의 폭력도(아동기나 이후에 경험하는 신체적, 성적 혹은 정서적 폭력 등 무엇이든)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은 범죄에 대한 노출도, 안전에 대한 인식, 폭력이 삶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²¹

많은 비율의 범죄가 신고되지도 않고 기록되지도 않는데 이는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 살인은 경찰기록이 상당히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상황을 보여주는 소수의 범죄중 하나이다. 비록 살인이 특히 다른 대인범죄 및 대물범죄와 비교할 때 횡수가 적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살인이 많은 다른 가벼운 유형의 범죄들과 연관됨을 보여준다(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2011).

그림 4.15는 고의적 살인(의도적으로 타인을 죽게 만드는 불법 행위)의 수준(패널 A)과 성별 피해자의 평균 분포를 보여준다(패널 B).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살인율은 낮다(10만 명 당 2.5건의 살인).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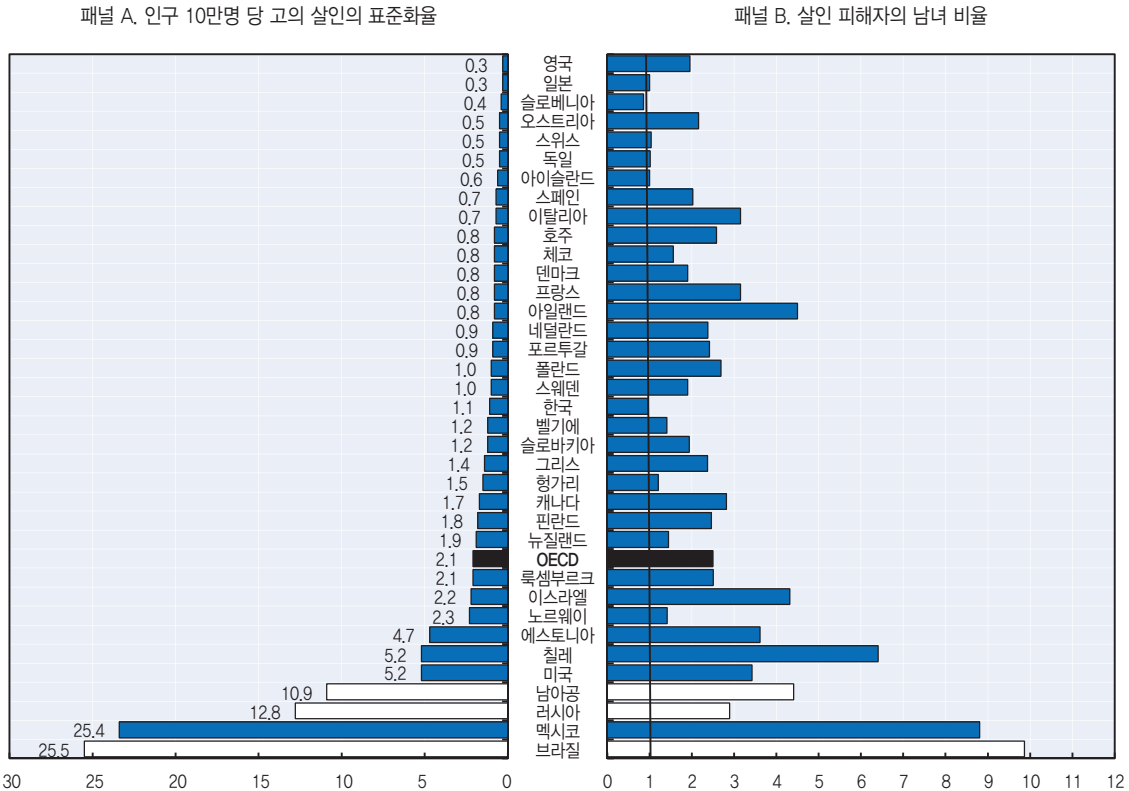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 에스토니아, 칠레에서 살인율이 두배 이상이 되고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그보다도 더 높다. 남성이 고의적 살인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한국과 슬로베니아에서는 예외인데 여성 살인율이 남성 살인율보다 약간 높다). 전반적 패턴은 이렇지만, 살인 피해자의 성별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살인율이 비교적 높은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여성은 전체 살인 피해자의 단지 10%를 차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살인율이 비교적 낮은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은 전체 살인 피해자의 평균 35%를 차지한다.²³ 이렇게 다른 성별 구조는 국가별로 살인범죄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남성 피해자의 다수는 총기 및 조직 범죄가 연루된 살인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여성은 가정/배우자 폭력의 주된 피해자이다

여성은 살인 피해자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배우자/가정 폭력의 주된 피해자이다. 배우자/가정 폭력은 가정 밖의 폭력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끔찍한 피해를 끼치는데 피해자에게서 거주할 안전한 장소와 신뢰할 사람을 앗아가고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Robeyns, 2003). 유럽에 관한 입수 가능한 데이터는 2008년에 살인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의 절반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된 반면에(35%는 남편 또는 전남편에게 17%는 친척에 의해 살해됨), 5%의 남성 피해자만이 처 또는 전처에 의해서 그리고 약 10%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으로부터의 연구는 여성 살인 사건의 40%에서 70%는 배우자/가정 폭력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2011; 유엔, 2010).²⁴

그림 4.15. 살인율: 수준과 성별 격차

2011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데이터는 브라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2010년 자료이다. 데이터는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공의 경우 2009년 자료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8년이다. 터키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 가능하지 않다.

출처: OECD 자료(2013c)에 근거한 OECD의 계산, "OECD 보건 데이터: 건강 상태", OECD 보건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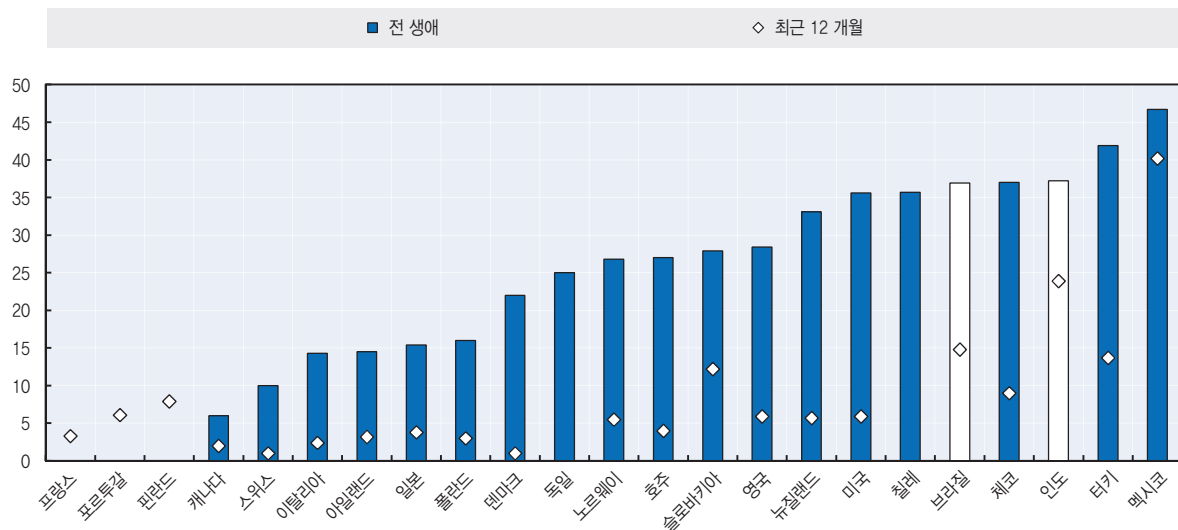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965>

살인은 여성에 대해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별에 근거한 폭력과 비교해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United Nations, 2010). 살인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1명이라면 훨씬 많은 여성이 신체적 상해를 입으며 성추행을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다. 배우자/가정 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폭력이 피해자, 피해자의 주변,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 대상 조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이 현상의 정도와 빈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16은 선택된 국가들에서 일생동안 그리고 데이터 수집 전 12개월 동안 여성에 대해 가해진 배우자 폭력의 발생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주의해서 해석하고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방법론, 정의와 수집 방법의 차이 때문에) 높은 비율의 여성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 배우자에 의해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를 당했음을 보여준다. 일생 동안 신체적 그리고/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6%(캐나다)에서 40% 이상(47%:멕시코, 43%:터키, 37%: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전 12개월 동안의 폭력 경험에 관하여 보면 슬로바키아(12%)와 터키(14%)에서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최근의 학대를 보고했고 이 비중은 인도(24%)와 멕시코(40%)에서 더 높았다.

그림 4.16. 여성에 대한 배우자 폭력

배우자의 신체적 그리고/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 2010년



주: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0년, 캐나다의 경우 2009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2008년,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2007년, 이탈리아, 멕시코의 경우 2006년이다. 핀란드, 인도의 경우 2005년-2006년, 영국의 경우 2005년, 칠레, 폴란드의 경우 2004년이다.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의 경우 2003년, 호주의 경우 2002년-2003년, 뉴질랜드의 경우 2002년, 일본의 경우 2000년-2003년이다. 브라질(가톨릭 교구)의 경우 2001년이다. 과거 12개월 동안의 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칠레와 독일의 경우 제공 가능하지 않다. 전체 생애의 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의 경우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에 대한 데이터는 5년간 발생률을 의미한다. 핀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에 관한 데이터는 신체적 그리고/또는 성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출처: UN 여성 기구(2013)으로부터의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률 데이터: 국가에 의한 조사(2012년 12월 기준, UN 여성 기구 편찬)",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를 위한 UN 기구, www.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vawprevalence_matrix_june2013.pdf and General Social Survey on Victimiz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8984>

배우자 폭력은 모든 문화, 국가와 연령 집단에서 발생한다. 배우자 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배경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요소들은 발생 위험을 높인다. 불우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 상황이 배우자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위험을 높인다(부록 4.A2).

최근 연구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특정 형태의 배우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Kelly and Johnson, 2008), 부상과 공포의 심각성 측면에서의 양성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oltzworth-Munroe, 2005).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의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

배우자 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여성의 높은 노출도는 여성들이 보고한 낮은 안전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다(Ferraro, 1996). 그림 4.17는 살고 있는 도시나 이웃에서 혼자 밤에 길을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을 보여준다.²⁵ OECD 국가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에 홀로 걸을 때 안전하게 느끼지만 국가와 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90%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이 비율은 그리스, 칠레, 멕시코에서는 50%로 나타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 명 중 한 명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에서 혼자 밤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안전인식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멕시코, 터키, 인도, 중국에서 가장 낮고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 감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하다(Kahneman and Krueger, 2006; OECD, 2013e). 긍정적 정서의 평가방법은 행복, 기쁨,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경험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박스 4.2. 여성과 남성의 삶의 만족도 추세

갤럽세계조사(Gallup World Poll)는 2005년 이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동 조사를 통해 삶의 만족도 추세를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는 미국과 다양한 유럽 국가들(서유럽 국가들은 예외)에서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Stevenson and Wolfers(2009)는 1970년대부터 실시된 미국 종합사회조사(US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측면에서 모두 남성보다 다소 덜 “행복”하게 된 것을 발견했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 하락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지난 40년간 가족 구조의 변화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독신 여성의 비율이 상승한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주관적 웰빙이 하락한 또 다른 이유로 오늘날 여성은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한 생활과 더 많은 목표들을 양립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은 좋은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고 또한 성취해야 할 경력을 가져야 할 필요를 전보다 더 많이 느끼는데 이러한 다중의 목표 때문에 여성의 시간과 자원은 항상 부족하다. 더욱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거둔 성과 측면에서 성별격차를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나에서 삶의 만족도를 얻고 있거나 (과거에는 주로 다른 여성과 비교했음) 자신의 삶에 대하여 높아진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기 보고 삶의 만족도에서 관찰된 추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행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한다. Krueger et al.(2007)은 생활 시간 사용 데이터와 사람들이 참여한 다양한 활동에서의 감정적 경험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로서 남성들의 경우 불유쾌한 활동에 사용한 시간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 가사노동에 할당된 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유쾌한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Stevenson and Wolfers(2009) 과 Bertrand(2011)로부터 각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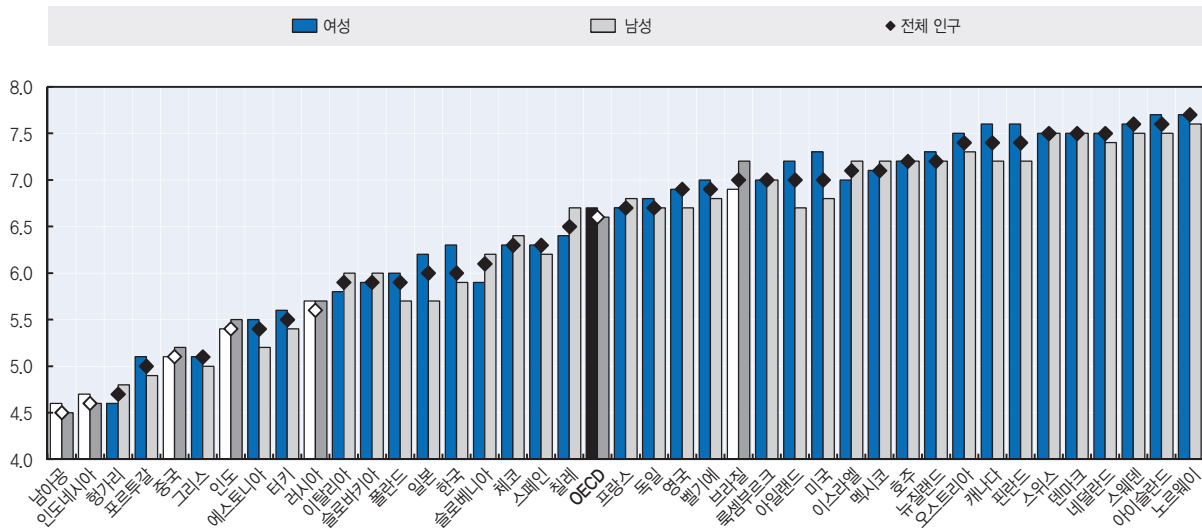
부정적 감정은 걱정, 슬픔 또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느낌 또는 정서적 상태의 경험을 통해 파악한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결합해서 어떤 사람의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을 초과하는 정도를 기록하는 “감정의 밸런스(affect balance)”를 가지고 측정하기도 한다(e.g. Diener et al., 2010; Boarini et al., 2012; OECD, 2013e).

2/3 이상의 OECD 국가들과 기타 주요 경제 대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4.19).²⁸ 감정의 밸런스에서의 성별 격차는 칠레,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에서 가장 높다(10 퍼센트 포인트 이상).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한다는 최근 연구와 일치한다(e.g. Costa et al., 2001; Tesch-Romer et al., 2008).

위에서 제시된 삶의 만족도와 감정 밸런스에 대한 연구결과는(여성은 삶의 만족도에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감정 밸런스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주관적 웰빙의 측정방법에 따라 성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극단적 응답을 더 거리낌없이 보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여성이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감정 밸런스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Boarini et al., 2012). 그러나 삶의 만족도와 감정 밸런스는 주관적 웰빙의 서로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4.18. 삶의 만족도에서의 성별 격차

칸트릴 척도의 성별에 따른 중간 값, 2012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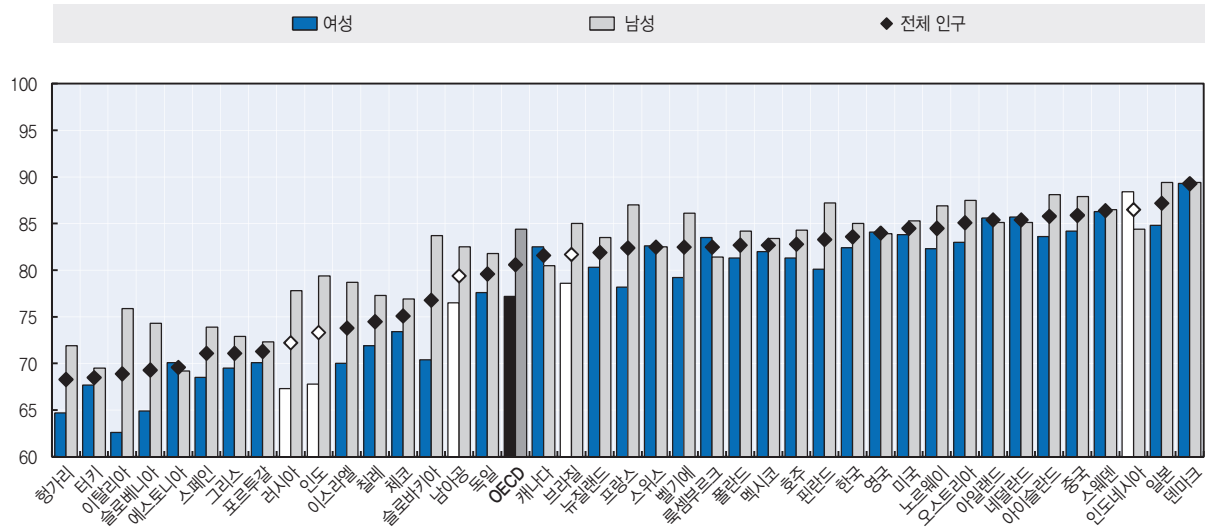
주: 전체 인구의 삶의 만족도를 오름차순으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다. 칸트릴 척도는 0에서 10까지의 점수로 측정되며 10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브라질, 칠레의 경우 2011년, 스위스의 경우 2009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022>

그림 4.19. 감정 밸런스에서의 성별 격차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보이는 사람들의 퍼센트, 2010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주: 전체 인구의 긍정적 감정 밸런스를 오름차순으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09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이다.

출처: 갤럽세계조사로부터의 데이터에 근거한 OECD 계산,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041>

삶의 만족도가 생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반영하는 반면 감정 밸런스는 특정 기간에 경험된 감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때때로 더 부담스럽고 즐거움이 덜한 과제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OECD, 2011b).

향후 통계적 과제

비록 성인지적 통계가 대부분 국가 통계 체계의 대세가 되었지만 성별 지표들의 생산과 편찬은 여전히 전통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⁹ 많은 분야에서 성별 차이는 아직도 다뤄지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각기 다른 상황과 구속요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방해한다. 긴급히 다뤄져야 할 우선순위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³⁰

- **노동 통계.** 양성 임금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근로소득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OECD는 전세계 임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어려웠고 행정 데이터는 노동 인구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었다. 유급 및 무급 산업, 수당, 경제 외적인 보상 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완벽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가구 내 자원 할당에 있어서 성차별.** 가구내 소득과 자원 할당에 관한 지표는 여전히 부족하고 몇 안되는 국가들에서만 입수가 가능하다. 가구 내 자원 할당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서 가구주에 관한 문항들은 누가 가구 소득을 제공하며, 누가 소득이 어떻게 사용될 지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소득 수준의 적절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 등 좀더 명확한 질문들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면접조사에 참석한 모든 가구 구성원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데 이는 의사결정의 실질적 중심이 누구인지에 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무급노동.** 여성은 무급 양육과 가사일의 거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체제(SNA)가 이러한 활동들을 생산 범주 밖에 두기 때문에 경제 및 노동 통계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여성에 의해 수행된 근로의 많은 요소들이 눈에 띄지 않으며 여성의 경제에 대한 전체적 기여도가 국민계정에서 저평가된다. 생활 시간 사용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이 수행하는 서로 다른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생활 시간 사용 조사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약 5년 간격으로 실시된다(미국은 제외). 그 사이에 혹은 조사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무급노동과 생활 시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응답 부담이 낮은 조사 방법들(미리 코드화된 생활 시간 사용 카테고리가 적혀진 “약식(light)” 일지 등)을 통해 수집될 수 있다 (UNECE, 2013).
- **성별에 근거한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 성별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국가통계국과 국제 기관에 의해 다수의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여성의 보건과 가정 폭력에 관한 다국적 연구(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UN 보고서인 세계 여성(World’s Women), 여성에 대한 국제적 폭력에 관한 조사(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가 포함된다. 이러한 늘어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근거한 폭력에 관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며 데이터가 종종 다른 방법론, 정의와 설문문항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에 마무리되어 출간 예정인 여성 폭력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한 UN 지침(UN 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은 국가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EU 기본권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가 시행한 조사 결과는 올해 말에 입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27개의 EU 회원국들 간의 비교 가능한 성별에 근거한 폭력 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신뢰할 만하고 비교 가능한 지표들과 함께, 배우자 폭력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가구, 공동체 차원에서 각기 다른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별에 근거한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를 만드는 위험을 늘리거나 줄이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배우자 폭력이 여성의 신체적·생식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예: 사망자 추정치, 폭력에 의한 질환과 장애를 조정한 손실 년수 등)과 배우자 폭력이 건강 이외에 삶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예: 가정 밖에서 일할 능력과 자산을 통제할 능력)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 폭력에 관한 공식 기록이 부재한 상태에서 보건 분야의 통계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보건데이터가 학대당한 여성을 보호하는 비정부 기관에 의해서 기록되고 보관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비전통적 형태의 성별에 근거한 폭력(스토킹, 정서적 학대, 직장 내 차별과 폭력 등)에 적절한 측정 내용, 범주, 운용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론상의 작업이 필요하다.

- **웰빙 성과의 결합분포.** 여러가지 불리한 요소들, 예컨대 인종, 나이, 소수민족, 장애 상태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대개 차별이 더 심하기 때문에 성 불평등의 결합적 상관관계와 다른 웰빙 영역에서의 다양한 성별격차의 동인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부모, 저소득 등 여러가지 취약한 점을 가진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 분석은 다른 조사들을 통합하고 표준적 통계 도구(예: 사회조사 또는 가구종합조사)에 여성과 남성의 웰빙에 관한 특별한 모듈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지적 시각을 국가적 통계에 완벽하게 반영하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UN 통계 위원회는 성인지 통계에 관한 매뉴얼을 최근에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통계 분야가 성인지 통계의 생산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조사와 인구조사의 기획에 젠더 이슈를 반영하고, 측정에서 성적 편견(gender bias)을 방지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2013년 5월에 OECD 회원국들은 교육, 고용과 기업가정신에서의 양성 평등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s on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를 채택했다. 이 권고는 충분한 자원을 성인지 통계에 할당하고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OECD Gender Data Portal)을 통해 그 통계의 배포를 촉진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시의성있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성인지적 데이터와 지표들을 수집·생산·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결론

직업과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로부터 유급·무급 노동의 남녀 차이에 이르기까지 성별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장은 웰빙에서의 성별 불평등에 관한 광범위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웰빙 분야를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며 웰빙에서의 성별 격차는 지난 수십년간 좁혀지고 있으나 남성은 다수의 분야에서 여전히 여성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더 자주 아프다. 교육 영역에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학교성적은 뛰어나지만, 좋은 일자리와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교육 분야에서 여전히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노동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무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경력의 최고위직에 도달하거나 창업을 하기가 어렵다. 남성이 살인과 폭력의 더 빈번한 피해자이지만 여성은 배우자 폭력의 주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대개 남성보다 약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지만 남성보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적 통계의 수집과 배포에서 성인지 관점을 주류화하는 데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책 입안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분야에서 성인지적 데이터와 지표는 여전히 충분치 않거나 국가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 노동 통계, 기업가와 무급근로, 자원의 가구내 할당, 성별에 근거한 폭력 분야에서 성별에 근거한 견고한 측정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주

1. “sex”와 “gender”라는 용어는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젠더 연구에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Sex”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으로 인정된 차이(염색체, 신체 내외의 생식기, 호르몬 구성과 기타 부차적 성의 특징들)를 말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gender”는 “남성 또는 여성과 연관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과 기회”를 의미한다(유엔인구기금(UNFPA), 2009). “Gender”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사회 생활의 결과 끊임없이 창조·재창조되는 사회 생활의 구조와 질서이다”(Lorber, 2001:83). “Gender”는 “사회적 구조”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고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Connell, 1985).
2. 가족 상황, 자녀출산의 선호도, 피임 행위, 출산과 같은 분야에서 통계는 남성에게 불리하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에 관한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기 때문이다.

3.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에 일반적인 연령별 사망률을 경험할 경우 신생아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이다.
4. 세계보건기구(WHO)는 자기 평가 건강을 건강 조사의 표준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문항을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한가?”로 하고 응답 등급을 “매우 좋다/좋다/괜찮다/나쁘다/매우 나쁘다”로 할 것을 권고한다”(de Bruin et al., 1996).
5. 그림 4.2 패널 A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매우 좋다/좋다/괜찮다/나쁘다/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OECD 보건 데이터베이스(OECD Health Database)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림 4.2 패널 B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갤럽세계조사의 “당신과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6.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적 건강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고, 일상의 정상적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고, 생산적이며 결실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웰빙의 상태”이다.
7. 건강생활년수(HLY)는 유럽통계청과 건강 생활 년수에 관한 유럽 공동 행동(EHLEIS)에 의해 모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Sullivan(1971)방법을 사용해서 연 1 회 계산된다. 사망률 통계와 자기 인식 장애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사망률 데이터는 유럽통계청의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기 인식 장애 데이터는 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EU-SILC)의 유럽 건강 최소 모듈을 근거로 하고 있다. EU-SILC의 질문은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에 당신은 일상적 활동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았나요?”이며 답변은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제약이 있었으나 심각하지는 않았다/전혀 제약을 받지 않았다”로 구분된다.
8. NEET는 “고용 상태에 있지도 않고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젊은이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i)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ILO의 정의에 따름)과; ii)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ILO 정의)를 포함한다.
9. 십대 임신은 20세(임신상태가 종료되는 나이 기준)미만의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정의된다. OECD 지역에서 십대 임신율은 멕시코, 칠레, 터키에서 가장 높다. 영어 사용권 국가들에서 또한 높다. 뉴질랜드, 영국에서 십대 임신율은 15세-19세 여성 1,000명 당 출산 건수가 20건을 초과한다(뉴질랜드: 22.1건, 영국: 23.6). 미국에서 십대 임신율은 더 높아서 15세-19세 여성 1,000명 당 출산이 35 건을 기록한다. 십대 출산율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에서 젊은 여성 1,000명 당 5 건 이하로 가장 낮다(유엔아동기금 (UNICEF), 2007; OECD, 2013a).
10. 근로소득 분포도 최하위층에서의 낮은 성별 임금 격차는 최저 임금과 단체교섭의 보장 등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국제노동기구(ILO), 2006).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임금 범칙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 커서 “끈끈한 바닥(sticky floors)”의 효과를 시사하는데 이는 여성이 최저층 일자리에서 상향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Christofides et al., 2013).
11. 그림 4.7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갤럽세계조사의 “현재 당신의 직업 또는 하는 일에 만족하나요?” 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1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직업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한 여러 수준의 만족감을 결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하게 표현된 직업 만족도가 직업의 내재적·외재적 특징들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한 직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결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13. 균등화 소득은 모든 소득원으로부터의 가구 총 소득을 등가 크기로 나눔으로써 계산되는데 이는 OECD의 등가 규모를 사용하여 계산된다(OECD, 2011b).
14.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한 등가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양육 비용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차이를 간과하게 된다는 점이다(Quisumbing et al., 2001).
15. Lise and Seitz(2011)는 등가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 불평등 수준이 과소평가 되어 추정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의 근로소득의 큰 격차는 가구 내 소비 할당의 큰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구 간 소비 불평등의 구성요소가 지난 수십년간 늘어난 반면 가구 내 소비 불평등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 상승으로 줄어들고 있다.
16. 특별 모듈의 문항은 소득이 “공동 자원” 또는 “사적 자원”으로 간주되는지를 묻는다. “공동 자원”은 두 명의 성인 중 누구든지(소득을 벌여오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가구의 소득 풀(pool)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내 자원 공유에 관한 EU-SILC 2010 특별 모듈에 관한 분석은 답변들끼리의 일부 불일치를 보여주는데 이는 질문의 해석 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Pontieux, 2012).
17. 개인적 돌봄이나 가구의 유지를 위한 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절대적 시간을 정의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시간 빈곤 기준치를 설정할 때 상대적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 상대적 기준치는 또한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18. 이 지표는 “당신은, i) 유급근로; ii)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iii) 다른 사회적 관계; iv) 취미생활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너무 많은, 너무 적은, 적당량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의존한다(OECD, 2011b 참조).
19.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의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친척이나 친구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20. 그림 4.13 패널 A의 지표는 유럽 삶의 질 조사에서 “당신이 일자리를 찾았다면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 4.13 패널 B는 동일한 조사의 “당신이 우울하고 누군가와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서 도움을 얻겠습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에 근거하고 있다.
21. 한 쪽 성이 다른 성에 비해 폭력의 영향에 더 취약한가라는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연구되어 왔다(Romito and Grassi, 2007).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소수의 연구는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구는 여성이 적어도 일부 형태의 폭력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일부 건강 성과에 대해 남성보다 더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는 다른 내용을 시사한다. 여러 형태의 폭력과 다수의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Pimlott-Kubiak and Cortina(2003)는 과거 폭력 경험을 통제한 경우 폭력에서의 양성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22. 그림 4.15에 나타난 데이터는 다수의 사망을 국제 질병분류(ICD)에 따라서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한다.

23.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 전체 살인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작은 것은 다른 국가들 혹은 지역들과 비교해서 여성 살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여성 살인 피해율은 높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여성 살인률이 이 지역에서 특히 낮게 나오게 된다.
24. 여성은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한 인신매매의 주된 대상이다.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여성과 여아들은 전세계적으로 파악된 모든 인신매매 피해의 75%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범은 성인 남성인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은 여성이 연루된다(UNODC, 2012).
25. 그림 4.17에서 보여지는 지표들은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홀로 밤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라는 갤럽세계조사의 질문으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다. 대답은 두 개의 범주(예/아니오)로 나뉘어진다.
26. 그림 4.18에서 보여지는 지표는 “맨 밑에 “0”부터 맨 위의 “10”까지 번호가 매겨진 사다리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다리의 맨 꼭대기는 최상의 삶을 의미하며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의 의미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신 삶이 더 좋다고 느낄수록 위쪽 사다리에 있으며 나쁠수록 아래쪽 사다리에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단계가 가장 당신의 느낌에 근접한가요?”라는 갤럽세계조사의 질문으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에 근거한다.
27.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격차는 작지만 다른 출처의 데이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11년-2012년 연간 인구조사(16세 이상의 성인 1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분석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약간 낮음을 보고하였다.
28. 그림 4.19에서 보여지는 감정 밸런스는 세 가지 긍정적 감정(기쁨, 즐거움, 평안)과 세 가지 부정적 감정(걱정, 슬픔, 우울감)으로 구성된다.
29. 2012년 3월 사해(Dead Sea)에서 개최된 제6차 성인지 통계에 대한 협력 그룹 및 전문가 집담회의 (meeting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Gender Statistics)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성인지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전세계적 검토 결과가 제시되었다. 전세계적 검토결과는 유엔 통계과(UN Statistics Division)에 의해서 지역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고 성인지 통계에 대한 협력 그룹 및 전문가 집단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Gender Statistics)의 업무팀에 의해 완성되었다. 검토 결과는 128개의 응답국의 68%는 이미 국가 통계국 내에 성인지 통계 담당자를 가지고 있고 37%는 국가 차원의 성인지 통계를 위한 조정 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인지적 통계는 절대 다수의 국가(86%)에서 통계 또는 성별 관계 법, 규정, 또는 국가 실행계획에 의해서 관장되고는 있지만 이 국가들중 15%만이 국가적 통계 체계하에서 성별에 근거한 전문적 조사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다.
30.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선택한 것은 그 선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공식 통계기관이 직면해 있는 점증하는 자원 압박 측면에서 성인지 관점이 특별히 필요한 중요 통계 분야들을 결합하기 위함이다.

참고 문헌

- Abramsky, T. et al. (2011),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rec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BMC Public Health*, Vol. 11/109.
- Acemoglu, D. and D. Autor (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Ashenfelter, O. and D. Card (eds.), Vol. 4, Amsterdam: Elsevier.
- Agassi, J.B. (1982), *Comparing the Work Attitudes of Women and Men*, Lexington Books, Lexington, MA.
- Aguiar, M. and E. Hurst (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2/3, pp. 969-1006.
- Autor, D.H. and D. Dorn (2013), "The Growth of Low 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forthcoming.
- Bandiera, O. and A. Natraj (2013), "Does Gender Inequality Hinder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369, World Bank, pp. 1-30.
- Bender, K.A., S.M. Donohue and J.S. Heywood (2005), "Job satisfaction and gender segrega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 57, pp. 479-496.
- Bertakis, K.D. et al.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Family Practice*, Vol. 49/2, pp. 147-152.
- Bertrand, M. (2011), "New Perspectives on Gender",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Ashenfelter, O. and D. Card (eds.), Vol. 4, Amsterdam: Elsevier, pp. 1546-1592.
- Bittman, M., M. Rice and J. Wajcman (2004), "Appliances and their impact: the ownership of domestic technology and time spent on household work",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55/3, pp. 401-423.
- Blau, F.D. and L.M. Kahn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pp. 75-99.
- Boarini, R. et al. (2012), "What Makes for a Better Life?: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OECD Countries –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2/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9b9ltjm937-en>.
- Case, A. and C. Paxson (2005), "Sex differences in morbidity and mortality", *Demography*, Vol. 42/2, pp. 189-214.
- Christofides, L.N., A. Polycarpou and K. Vrachimis (2013), "Gender Wage Gaps, 'Sticky Floors' and 'Glass Ceilings' in Europe", *Labour Economics*, Vol. 21, pp. 86-102.
- Clark, A. (1997), "Why are women so happy at work?", *Labour Economics*, Vol. 4, pp. 341-72.

- Coleman, S. and A.M. Robb (2012), *A Rising Tide, Financing Strategies for Women-owned Firms*, Stanford University Press.
- Connell, R.W. (2005), "Growing up masculine: rethinking the significance of adolescence in the making of masculinities", *Irish Journal of Sociology*, Vol. 14/2, pp. 11-28.
- Connell, R.W. (1985), "Theorizing Gender", *Sociology*, Vol. 19/2, pp. 260-272.
- Costa, P.T.J., A.Terracciano and R.R. McCrae (2001),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cross cultures: Robust and surprising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1, pp. 322-331.
- Crimmis, E.M. and C.E. Finch (2006), "Infection, inflammation, height, and longev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3/2, pp. 498-503.
- D'Onofrio, B.M. et al. (2009), "Maternal age at childbirth and offspring disruptive behaviors: testing the causal hypothe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50/8, pp. 1018-1028.
- de Bruin, A., H.S.J. Picavet and A. Nossikov (1996), *Health interview surveys: Toward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ethods and instrument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penhagen, Statistics Netherland.
- Diener, E. et al.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7, pp. 143-156.
- Diener, E. et a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pp. 276-301.
- Donohue, S. and J. Heywood (2004), "Job satisfaction, comparison income and gender: evidence from the NLS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25, pp. 211-34.
- EU (2011),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microdata/eu_silc.
- EU (2007),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database), www.eurofound.europa.eu/surveys/eqls/2007/index.htm.
-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the situation of women and men and on gender equality policies*, Luxembourg,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files/documents/130410_crisis_report_en.pdf.
- Eurostat (2013), "Health life years in 2011", *Eurostat News Release*, No. 35,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05032013-BP/EN/3-05032013-BP-EN.PDF.
- Ferraro, K.F. (1996),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Vol. 75, pp. 667-690.

- Flabbi, L. and M. Tejada (2012), "Fields of Study Choices, Occupational Choices and Gender Differentials", *Background Paper for the OECD Gender Initiative*.
- Flabbi,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Education, Career Choices and Labour Market Outcomes on a Sample of OECD Countries",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 Flandorfer, P., C. Wegner and I. Buber (2010), "Gender Roles and Smoking Behaviour",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Working Papers*, No. 7.
- Francesconi, M. (2008), "Adult Outcomes for Children of Teenage Mothers",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10/1, pp. 93-117.
- Frenzel, A.C., T. Goetz, R. Pekrun and H.M.G. Watt (2010), "Development of Mathematics Interest in Adolescence: Influences of Gender, Family and School Contex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0/2, pp. 507-537.
- Galdas, P.M., F. Cheater and P. Marshall (2005), "Men and health help-seeking behaviour: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9/6, pp. 616-623.
-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 Garey, A. (1999), *Weaving Work and Motherhood*, Temple University, Philadelphia, PA.
- Gimenez-Nadal, J.I. and A. Sevilla-Sanz (2012), "Trends in time allocation: A cross-country analysi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56/6, pp. 1338-1359.
- Goos, M., A. Manning and A. Salomons (2009), "Job Polarization in Europ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2, pp. 58-63.
- Green, C.A. and C.R. Pope (1999), "Gender,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 longitudinal 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48, pp. 1363-1372.
- Haddad, L. and R. Kanbur (1990), "How serious is the neglect of intra-household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Vol. 100, pp. 866-881.
- Hamermesh, D.S. and J. Lee (2007),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9/2, pp. 374-383.
- Hanasono, L.K. et al. (2011), "Explain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Support Availability: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truct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28/3, pp. 254-265.
- Hibel, J., G. Farkas and P.L. Morgan (2010), "Who Is Placed into Special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Vol. 83/4, pp. 312-332.
- Holtzworth-Munroe, A. (2005), "Male versus 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Putting controversial findings into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7, pp. 1120-1125.

- Idler, E.L. (2003), "Discussion: Gender Differences in Self-Rated Health, in Mortality,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Gerontologist*, Vol. 43/3, pp. 372-375.
- ILO (2012),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 ILO (2008), *Global Wage Report 2008/09: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Towards policy coherenc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eneva.
- IPU (2013), *Inter-Parliamentary Union* (database), www.ipu.org/wmn-e/classif.htm (accessed 9 July 2013).
- Jagger, C. et al. (2008), "Inequalities in healthy life years in the 25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in 2005: a cross-national meta-regression analysis", *The Lancet*, Vol. 372/9656, pp. 2124-2131.
- Juel, K. and K. Christensen (2007), "Are men seeking medical advice too late? Contacts to general practitioners, hospital admissions in Denmark 2005",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30/1, pp. 111-113.
- Kalenkoski, C.M., K.S. Hamrick and M. Andrews (2011), "Time Poverty Thresholds and Rates for the US Popu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4/1, pp. 129-155.
- Kahneman, D. and A. Krueger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pp. 3-24.
- Kelly, J.B. and M.P. Johnson (2008), "Differentiation among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update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Family Court Review*, Vol. 46/3, pp. 476-499.
- Kroenke, K. and R.L. Spitzer (1998), "Gender differences in the reporting of physical and somatoform symptoms", *Psychosomatic Medicine*, Vol. 60, pp. 150-155.
- Krueger, A.B. et al. (2007), "National Time Accounting: The Currency of Life", *Princeton University Working Paper*, No. 1034, Department of Economics, Center for Economic Policy Studies.
- Lacour, M. and L.D. Tissington (2011), "The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 6/7, pp. 522-527.
- Leigh, A. and X. Gong (2011), "Does Maternal Age Affect Children's Test Scores?",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43/1, pp. 12-27.
- Lise, J. and S. Seitz, (2011), "Consumption Inequality and Intra-household Alloca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8/1, pp. 328-355, Oxford University Press.
- Lorber, J. (2000), "Using Gender to Undo Gender: A Feminist Degendering Movement", *Feminist Theory*, Vol. 1, pp. 101-118.
- Miranda, V. (2011),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hrjm8s142-en>.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1), Table 72 in *Health: United States*, Hyattsville, MD: US Public Health Service, pp. 4-5.
- OECD (2013a), “Share of births outside marriage and teenage birth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accessed 13 June 2013).
- OECD (2013b),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accessed 4 June 2013).
- OECD (2013c), “OECD Health Data: Health status”,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accessed 20 June 2013).
- OECD (2013d),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3-en>.
- OECD (2013e),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3f),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accessed 10 June 2013).
- OECD (2013g),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en.
- OECD (2012a),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 OECD (2012b),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 OECD (2012c), *OECD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1-en>.
- OECD (2012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3896-en>.
- OECD (2011a),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1-en.
- OECD (2011b),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0a), “Gender Inequality and the MDGs: What are the Missing Dimensions?”, *OECD Development Centre Position Paper*, No. 2,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dev/poverty/45987065.pdf.
- OECD (2010b), *Obesity and the Economics of Prevention: Fit not Fa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4865-en>.
- OECD (2009), *PISA 2009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5298-en>.

- OECD (2008), “Mental Health in OECD Countries”, *OECD Policy Brief*, November 2008,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health-systems/41686440.pdf.
- Offer, S. and B. Schneider (2011), “Revisiting the Gender Gap in Time-Use Patterns Multitasking and Well-Be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Dual-Earner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6/6, pp. 809-833.
- Oksuzyan, A., H. Brønnum-Hansen and B. Jeune (2010), “Gender gap in health expectancy”, *European Journal of Ageing*, Vol. 7, pp. 213-218.
- Pimlott-Kubiak, S. and L. Cortina (2003), “Gender, Victimization, and Outcomes: Reconceptualising Ris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1/3, pp. 528-539.
- Pontieux, S. (2012), “Intra-household sharing of resources: An exploration of the ‘black box’ with the 2010 EU-SILC module”, paper presented at the 2012 EU-SILC International Conference, Vienna, 6-7 December 2012.
- Prentice, D.A. and E. Carranza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6, pp. 269-281.
- Quisumbing, A.R., L. Haddad and C. Peña (2001), “Are Women Overrepresented Among The Poor? An Analysis of Poverty in ten Developing Countries”, *Fcnd Discussion Paper*, No. 115, International Food Policy Institute.
- Ridgeway, C.L. (2011), *Framed by Gender: How Gender Inequality Persists in the Modern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Ridgeway, C.L. (2009), “Framed Before We Know It: How Gender Shapes Social Relations”, *Gender and Society*, Vol. 23/2, pp. 145-160.
-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Vol. 9/2-3, pp. 61-92.
- Romito, P. and M. Grassi (2007), “Does violence affect one gender more than the other? The mental health impact of violence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65/6, pp. 1222-1234.
- Ruedin, D. (2012),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8/1, pp. 96-109.
- Sayer, L.C. (2007), “More Work for Mothers? Trends and Gender Differences in Multitasking”, in *Competing Claims in Work and Family Life*, edited by T. van der Lippe and P. Peters, Cheltenham, UK: Edward Elger, pp. 41-55.
- Schmidt, L. and P. Sevak, (2006), “Gender, Marriage, and Asset Accumulation In the United States”, *Feminist Economics*, Vol. 12/1-2, pp. 139-166.

- Skalli, A., I. Theodossiou and E. Vasileiou (2008), “Jobs as Lancaster goods: Facets of job satisfaction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No. 37, pp. 1906-1920.
- Sloane, P.J. and H. Williams (2000), “Job satisfaction, comparison earnings and gender”, *Labour*, Vol. 14, pp. 473-502.
- Smith, P.M., R.H. Glazier and L.M. Sybley (2010), “The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service needs are similar across socioeconomic groups in Canada”,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 63/4, pp. 412-421.
- Stevenson, B. and J. Wolfers (2009), “The Paradox of Declining Female Happines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 1/2, pp. 190-225.
- Stockemer, D. and M. Byrne (2012), “Women’s Representation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orkforce”, *Parliamentary Affairs*, Vol. 65, pp. 802-821.
- Sullivan, D.F. (1971), “A single index of mortality and morbidity”, *HSMHA Health Reports*, Vol. 86, pp. 347-354.
- Sullivan, O. and J. Gershuny (2012), “Domestic outsourcing and multitasking: how much do they really contribute?”, *Sociology Working Papers*, No. 2012-05, University of Oxford, www.sociology.ox.ac.uk/documents/working-papers/2012/2012-05.pdf.
- Tesch-Romer, C., A. Motel-Klingebiel and M.J. Tomasik (2008),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Comparing Societies with Respect to Gender E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5/2, pp. 329-349.
- Tolleson-Rinehart, S. (2005), “Women Get Sicker; Men Die Quicker: Gender, Health Politics and Health Policy”, in *Gender and American Politics: Women, Men and the Political Process*, Tolleson-Rinehart, S. and J.J. Josephson (eds.), Armonk, NY: M.E. Sharpe.
- Turner, S.L., J.C. Steward and R.T. Lapan (2004),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sixth-grade adolescents’ math and science career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53/1, pp. 41-52.
- United Nations (2010), *The World’s Women 2010: Trends and Statistics*,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New York.
- UN Women (2013),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Data: Surveys by Country (compiled by UN Women as of December 2012)”,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www.endvawnow.org/uploads/browser/files/vawprevalence_matrix_june2013.pdf (accessed 25 July 2013).
- UNECE (2013), *Guidelines for harmonising time use survey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13 March 2013, ECE/CES/2013/6/Add.2, www.unece.org/stats/documents/2013.06.ces.html.

- UNECE (2011),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Second Edition)*, United Nations, Geneva.
- UNECE (2010),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A Practical Tool*, Reference manual prepared by the UNECE Task Force on Gender Statistics Training for Statisticians, United Nations, Geneva.
- UNFPA (2009), *Gender equality: A cornerstone of development*, United Nations Fund, www.unfpa.org/gender/(accessed 14 March 2013).
-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nocenti Research Centre, Report Card 7.
- UNODC (2012),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Vienna.
- UNODC (2011), *Global Study on Homicide: Trends, Contexts, Data*, UNODC, Vienna.
- Verbrugge, L. and D.L. Wingard (1987), "Sex differentials in health and mortality", *Women and Health*, Vol. 12/2, pp. 103-145.
- Verhofstadt, L.L., A. Buysse and W. Ickes (2007), "Social Support in Couple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Using Self-report and Observational Methods", *Sex Roles*, Vol. 57, pp. 267-282.
- Waldron, I. (1995), "The role of genetic and biological factors in sex differences in mortality", in *Sex Differentials in Mortality: Trend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Lopez, A.D. and L. Ruzicka (eds.).
- WHO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World Bank (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DC.
- Wood, J.T. (1996), "She says/he says: communication, caring, and conflict in heterosexual relationships", in *Gendered relationships*, Wood, J.T. (ed.), Mountain View, CA: Mayfield, pp. 149-164.

부록 4.A1

시간 빈곤의 결정요소들

본 부록은 시간 빈곤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다변량 분석의 상세한 결과를 제공한다. 분석은 일원화된 생활시간 조사의 데이터세트인 OECD에서 처리한 기타 마이크로데이터와 통합된 다국적 생활 시간 사용 연구(MTUS) 버전 5.3을 기초로 하고 있다.

회귀분석은 다음 국가들과 연도에 대한 통합 데이터(캐나다, 네덜란드는 2005년, 미국은 2003년, 스페인은 2002년, 덴마크, 독일은 2001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는 2000년, 프랑스는 1998년, 오스트리아는 1992년, 이스라엘은 1991년)에 기반한다.

OLS(ordinary least squares) 모형에서 종속 변수는 1일 당 분단위 기준 재량시간의 양이다. 재량시간은 총 시간(1일 1 440 분)에서 유급근로, 무급근로, 개인적 돌봄에 소요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된다. 프로빗 모형(probit specification)에서 종속 변수는 부족한 시간의 양이다. 시간이 부족한 개인들은 재량시간(분단위 표현)이 생산연령인구의 국가 중위 재량시간의 60% 미만인 사람들이다.

자녀의 수는 생활 시간 일지 기록자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의 수로 정의된다.

고용은 만약 일지 기록자가 고용 상태이면(근로시간은 상관없음) “1”이고 고용 상태가 아니면 “0”의 값을 취한다.

대학 교육은 만약 개인이 중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교육을 받은 경우 “1”이다(국제표준교육분류(ISCED)가 5 이상). 배우자 고용은 만약 배우자가 고용상태이면(근로 시간은 상관없음) “1”이며 배우자가 일하지 않으면 “0”이다. 최저 소득 사분위는 만약 어떤 개인의 소득이 국가 소득 분포의 최하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이며 만약 개인의 소득이 최하위 사분위보다 높으면 “0”이다. 연령 터비는 개인의 연령이 각 터비(0/1 변수)의 연령대에 해당하면 “1”이다. 15에서 24까지의 연령 범주를 기준 집단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른 연령 범주들에 대한 결과가 해석되어야 한다.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이 전체 인구의 연령별/성별 분포도를 대표하고 주중의 모든 날에 대해 표본이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 가중치들은 데이터세트 내 양질의 답변 비율에 비례해서 더 확대된다. 양질의 일지는 보고된 시간 중 91분 미만의 시간이 빠져 있는 경우로 정의되며 최소한 7개의 다른 활동 에피소드를 포함하며 4개의 기본적 일상활동(식사, 잠자기, 멍내기, 운동 혹은 여행)중 최소 3개를 보고하고 연령, 성별 혹은 일지가 작성된 날짜 등 어떤 정보도 빠지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표 4.A1.1. 시간 빈곤의 결정 요소들

종속 변수들	재량 시간(분 단위)			시간 부족(가능성)		
	OLS 모형			Probit 모형		
	전체 인구	남성	여성	전체 인구	남성	여성
성별	- 53.731*** (1.095)			0.055*** (0.003)		
자녀의 숫자	- 19.430*** (0.567)	- 15.75***1 (0.838)	- 20.61***1 (0.755)	0.034*** (0.001)	0.029***1 (0.002)	0.037***1 (0.002)
고용 상태	- 117.749*** (1.341)	- 168.48***1 (2.505)	- 89.82***1 (1.569)	0.227*** (0.003)	0.259***1 (0.005)	0.220***1 (0.004)
대학 교육	1.09 (1.194)	- 1.232 (1.753)	2.35 (1.59)	0 (0.003)	0 (0.005)	-0.001 (0.005)
배우자의 고용 상태	- 8.658*** (1.364)	- 5.59***3 (1.841)	- 11.70***3 (2.03)	0.015*** (0.004)	0.006 (0.005)	0.025*** (0.006)
최저 소득 사분위	2.41 (1.594)	0.892 (2.543)	- 0.793 (1.993)	- 0.011** (0.005)	- 0.005 (0.008)	- 0.009 (0.006)
연령(15세-24세)	- 26.771*** (3.505)	- 26.023*** (6.056)	- 23.569*** (4.186)	0.047*** (0.01)	0.043*** (0.016)	0.048*** (0.012)
연령(25세-44세)	- 8.964*** (3.446)	- 9.58 (5.909)	- 6.23 (4.14)	- 0.002 (0.009)	- 0.003 (0.016)	- 0.001 (0.012)
연령(45세-64세)	34.689*** (3.728)	21.96***2 (6.166)	26.33***2 (4.629)	- 0.096*** (0.017)	- 0.069***3 (0.026)	- 0.116***3 (0.023)
국가별 고정 효과	예	예	- 예	예	예	예
결정계수	0.159	0.189	0.125	0.0619	0.0609	0.0674
관찰빈도	141 265	68 005	73 260	122 048	57 247	64 801

주: 괄호 안에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1*** % 수준에서 유의미함, ** 5% 수준에서 유의미함, * 10% 수준에서 유의미함.

1. 남성과 여성의 상관계수가 같다는 가정은 1% 수준에서 거절됨.
2. 남성과 여성의 상관계수가 같다는 가정은 5% 수준에서 거절됨
3. 남성과 여성의 상관계수가 같다는 가정은 10% 수준에서 거절됨

출처: OECD의 계산은 다국적 생활시간 사용 연구(MTUS) 마이크로데이터(www.timeuse.org)와 공개된 생활시간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근거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288>

부록 4.A2

배우자 폭력의 결정 요소들

배우자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구실, 보호 요인들을 찾는 것은 추가적 폭력을 예방하고 회복의 촉진을 도울 효과적인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 폭력과 성폭력의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중단면 조사를 통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중단면 조사는 오랜기간 사람들을 추적하여, 폭력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그 경험들이 생애의 다양한 단계에 어떻게 다른 요소들과 연관되는지를 기록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연구는 극소수만 존재하는데 위험 요소들(여성의 지위, 성별 규범)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측정이 국가간 그리고 문화권 별 차이로 인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문헌에 의해 밝혀진 배우자 폭력의 원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빈곤.** 빈곤과 빈곤 관련 스트레스가 배우자 폭력의 핵심적 기여요소이다. 비록 배우자 폭력이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지만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빈곤과 배우자 폭력 간 관계는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빈곤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배우자 폭력은 가난한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남성 정체성 위기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빈곤 상태에서 사는 남성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남성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
- **지위 불평등.**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대개 배우자 폭력의 보호 요인인데 여성이 일하지만 남편이 일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관계 내에서 남성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가정내 경제적 불평등이 소득의 절대 수준이나 관계 내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권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피해의 과거이력.** 난폭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이력이 있는 남성은 미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마찬가지로, 성인기에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 의해서 예전에 학대를 당했던 여성은 폭력에 노출된 적이 없는 여성에 비해 미래의 배우자 폭력을 용인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 **아동 학대에 대한 노출.** 아동 학대는 배우자 폭력을 당하거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 요소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나온 증거는 아동기에 폭력에 노출된 남성은 배우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아동기에 폭력에 노출된 적이 없는 남성의 3배 혹은 4배임을 보여준다.
- **관계의 질.** 폭력은 배우자와의 갈등을 처리하거나 의견충돌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행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낮은 만족도, 지속적인 의견충돌, 심각한 결혼생활의 불화는 배우자 폭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 폭력의 발생(폭력을 당하거나 경험하는 경우 모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별히 폭력과 연관될 수 있는 갈등의

종류는 여성에 보수적 성역할에 대한 침범 또는 남성의 특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점과 주로 관계가 있다.

- **교육.** 낮은 교육 수준은 배우자 폭력 및 성폭력의 자행과 경험 모두와 관련되는 주요 요소이다. 낮은 교육 수준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폭력에 대한 용인을 증가시키고, 불평등한 성별 규범을 유지시킨다. 교육 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여성(초등학교 혹은 무학)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과 비교하여 배우자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까지 높다.
- **나이.** 어린 나이는 남성이 상대방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자행할 가능성과 여성이 배우자 폭력을 당할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어떤 종류의 성폭력은 어린 나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착취를 위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알코올 소비.** 남성에 의한(또한 종종 여성에 의한) 과도한 알코올 소비는 배우자 폭력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알코올은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판단력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호를 해석할 능력을 손상시킨다. 일부 연구자는 또한 알코올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타임 아웃”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사회 규범.** 배우자 폭력의 가능성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믿음이 공동체에 뿌리내린 정도, 공동체 내에서 배우자 폭력에 대한 전반적 관용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와 관련이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일정한 정도 내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신체적 폭력을 용인한다. 이러한 용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성과 여성의 연합(male-female union)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찰이 부부싸움 신고를 사소하게 취급하며, 여성을 보호할 입법의 부재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출처: Abramsky et al.(2011)과 세계보건기구(WHO, 2010)에 근거함.

제5장

직장에서의 웰빙: 직업의 질 측정

고용이 삶의 만족도의 강력한 결정요인이지만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느냐도 중요하다.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노동의 내용과 의사 결정의 자율성에서부터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상사로부터의 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직업 안정성 등 좀 더 전통적 영역들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직업은 질은 다양한 측정 체계들을 결합하고 광범위한 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분석된다. 직장에서의 주관적 웰빙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데 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요구사항과 기회와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무 자율성, 제대로 규정된 업무 목표, 수행된 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과 지지해 주는 동료는 개인적 수행도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직장 분위기와 열악한 직장 조직이 결합될 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커다란 시간적 압박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의 이러한 측면들은 국가간 비교가능한 지표로 변환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동 지표들을 측정할 때 근로자들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일부 의존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맥락에서 그러한 지표들의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관련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하에 제공된다. OECD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제 법의 조건에 의거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 서안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배제한다.

서론

고용은 물질적 삶의 수준의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내기 때문에 고용은 단순히 월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과 포부를 개발하며, 사회 내 유용한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이것은 단지 직업을 갖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직업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동료와 경영진과의 관계, 과도한 노동과 너무 적은 양의 노동, 근로 시간 혹은 일자리 불안(안정)과 같은 요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용의 질은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수준이나 직장 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직업의 특성들로 생각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고용의 질에 대한 국제 학계와 통계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측정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지난 10년 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특별히 고용의 질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개념화 단계를 넘어서 고용의 질을 분석할 운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How's Life?의 2011년 판에서는 고용의 질의 몇가지 영역들만이 고려되었다. 본 장의 전반적인 목적은 가능하다면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미래 작업을 위한 영역들을 밝히는 것이다. 첫번째 섹션에서는 고용의 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측정하는 기존의 국제적 체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다음의 두 섹션에서는 다수의 지표들을 제안하는데, 이 지표들은 고용의 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두 영역인 “직업과 근로소득”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 현재 사용 중인 지표들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된 지표들 중 일부는 향후에 OECD 웰빙 지표 체계에 추가될 수 있지만 다수는 아직도 여러 가지 방법론적 그리고 시행상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직장 구조와 직장 관계와 관련된 지표들은 국제적 맥락에서 사용이 가능하려면 추가적인 발전이 요청되고 있다.

고용의 질 측정

근로와 고용이 사람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가지 다른 관점과 접근방법을 통해서 조사되어왔다(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Muños de Bustillo et al., 2011 참조).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론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웰빙을 직업의 특정한 측면들과 연관짓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의 특징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개발되었다. 범위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고용의 질의 개념을 특징짓는 주요 영역들에서 상당한 정도의 수렴현상(convergence)을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의 질에 관한 지표 체계를 마련할 때 고려되어야 할 영역들의 작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제적 측정 체계의 개요

고용의 질과 관련된 개념들을 측정하고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게 할 지표들의 수집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취해져왔다. 그러나 이는 아직 미완의 과제이며 고용의 질에 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 학계 및 통계계(statistical community)는 이 분야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지표(decent work indicators)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매뉴얼이 최근에 발간되었다(ILO, 2012). 이 매뉴얼은 ILO 양질의 일자리 어젠다(ILO Decent Work Agenda)를 이행하면서 이루어진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표들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적/실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의 운영 및 정책 지향적 개념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또한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유럽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하여 고용의 질 측정(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열거된 다양한 영역들을 측정할 운영 지침들을 개발 중이다(UNECE, 2010). 유럽에서는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에 의해서 포괄적인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33개 유럽국가들에서의 일자의 질 측정 체계를 제안하고 시행했다(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 2012).¹

이러한 최근의 이니셔티브들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분리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안된 체계 중 일부는 일자의 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좀 더 폭넓은 접근법을 따른다(표 5.1 참조).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지표들은 직업의 특징과 개인 차원의 일자의 질을 결정하는 일반적 업무 환경을 가리킨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 측면들로 구분될 수 있다:

- 첫째, 근로소득, 근무 시간, 계약 기간 등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이 계약서 조항들은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기존의 프레임워크들의 기초이다.
- 둘째, 근무 환경은 근로자들의 웰빙에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 정신건강에 관한 최근 OECD 연구는 직장 내 관계와 직장 조직이 근로자의 웰빙과 정신 건강에 중요함을 보여준다(OECD, 2012).

그러므로, 근무 환경의 조직적인 측면을 서술하는 지표들(일의 내용, 근무의 자율성, 학습기회, 직장에서의 안전 등)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끼리의 관계 및 경영진/관리자와의 관계에 관한 지표들과 함께 고용의 질을 측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의 질의 이러한 중요한 측면들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체계와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의 체계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 셋째, 노동 시장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체계 역시 개인 차원의 근로의 질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일자리는 각 사회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사회 정책과 고용 정책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한 여러가지 혜택들(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 수당, 실업수당, 건강보험 혜택, 유급 병가, 연금수급권 등)을 제공한다. 국가간 비교를 할 때 고용의 질의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고용을 조건으로 한 혜택들의 범위와 고용/사회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수급권의 측면에서 국가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관측은 일자리 프레임워크와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고용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에 모두 포함되었다.

표 5.1. 직업과 고용의 질의 중요 영역들

선택된 국제적 프레임워크들

영역	제안된 지표들의 예	국제 노동기구 (ILO) (2012)	UN 유럽경제 위원회 (UNECE) (2010)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 (Eurofound) (2012)	How's Life? (2011)
<i>개인 차원에서의 근로와 고용의 질</i>					
근로소득	평균 근로소득,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 근로 빈곤율	×	×	×	×
근로 시간과 근로 시간의 배치	주당 또는 연간 평균 실질 혹은 통상 근로 시간,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의 비율, 과도한 또는 규정 외 근무시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근로 시간에 대한 단기적 유연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	×	×	×	×
일자리 안정성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단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개인사업 근로자들	×	×	×	×
평생 교육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또는 고용된 사람들 중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 자신의 직무에서 보통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적은 교육을 받은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	×	×	×	×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직무 관련 부상률, 직업병 감염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근로자들의 비율	×	×	×	×
근무 조직과 내용	근무 자율성, 근무 강도, 근로자의 유용한 일 수행 정도에 관한 자기 평가, 현재 일자리의 근무 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주관적 지표들		×	×	
직장에서의 관계	동료와 관리자와의 관계, 차별, 괴롭힘에 대한 주관적 지표들		×	×	
사회보장 제도					
실업보험과 기타 현금 소득 지원	실업보험 보장률, 대체율, 현금 소득 지원의 수급자들	×	×		
가족 친화적 정책	자녀양육 휴가, 연차 휴가 수급권, 보육 시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 상황	×	×		×
연금	연금 보장률	×	×		
건강 보험	건강 보험 보장률, 추가 의료 보험 계획을 선택한 종업원들, 병가를 낼 수 있는 종업원들의 비율	×	×		
<i>종합적 차원의 근로 및 고용의 질</i>					
넓은 경제적·사회적 맥락		×			
노동 시장 수행도	실업률, 고용률, 참여율	×			×
직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보장률, 고용주 협회에 가입한 기업들의 비율	×	×		
사회적 상황	소득 불평등, 성인 인구의 교육	×			×
거시경제적 수행도	GDP 성장률, 노동 생산성, 물가상승률	×			
고용의 불평등과 윤리					
공평한 대우	임금과 고용의 성별 격차, 직무의 분리, 장애 근로자/소수민족/이주 근로자의 고용 상황	×	×		×
철폐되어야 할 노동	아동노동, 강제노동	×	×		

주: 국제노동기구(ILO),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2012), 양질의 일자리 지표들: 개념과 정의, ILO 매뉴얼, 초판, 제네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0) 고용의 질의 측정-국가 시범 보고서, 제네바;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 2012), 유럽에서의 일자리 질의 추세, EU 출판국, 룩셈부르크.

두번째 범주에 속하는 지표들은 종합적 차원에서의 업무의 질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비록 상황적 요소들 자체가 기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고용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를 한 후 결론을 내릴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상황적 요소들(예:실업률)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거나 직장내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웰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많은 OECD 국가들에서 현재와 같은 대량 실업 상황에서 일자리 질의 개선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목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기존 일자리의 질 개선을 넘어서 사람들의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과 양 사이의 잠재적 상충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고용의 질 지표가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하나?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체계들은 How's Life?에서 사용된 웰빙 체계와 많이 중복되는데, 두 체계 모두 직업과 관련된 물질적 상태와 직장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 두 가지 모두 현재의 웰빙을 설명하기 위해 How's Life?에서 사용된 두 개의 주요 영역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체계와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하는 OECD 웰빙 체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데 아래와 같은 두가지 주된 이유 때문이다.

첫째 고용의 질은 OECD 웰빙 체계의 여러 가지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사람들의 웰빙에 관한 단독영역이 아니다. How's Life?에서 고찰된 11개의 웰빙 영역 중에서 “일자리와 근로소득” 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영역만 확실하게 고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와 근로소득” 영역은 직업과 관련된 물질적 삶의 조건과 관련이 있지만 기존의 직업의 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영역은 또한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 수행도의 광범위한 지표들을 포함한다.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은 직업과 관련된 다수의 삶의 질의 측면을 설명하지만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는 않는데 다른 측면들은 How's Life?의 다른 영역들에서 고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히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이 해당되는데 이는 고용의 질의 중요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 제도의 핵심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 교육은 How's Life?의 “교육과 기술” 영역의 일부분이 된다. 다음의 두 가지 범주의 지표들이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추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할 때 일자리의 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 첫번째 범주의 지표들은 소득 변동성으로서 이는 실직 혹은 소득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 위험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노동 시장의 충격이 사람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용한 정책적 지원(실업수당과 사회부조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는 OECD 웰빙 체계의 “일자리와 근로 소득”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구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좀 더 직접적 측정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근로빈곤 발생률 등).
- 두번째 범주의 지표들은 근무 환경의 조직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고용의 질의 이러한 중요한 측면들은 OECD 웰빙 체계의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 있는 지표들을 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How's Life?는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할 운영 체계를 제공하도록 의도하고 있어 접근법이 투입 또는 산출 지표에 의해 측정되는 웰빙 동인이 아닌 웰빙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체계들은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기존의 체계들은 질 좋은 또는 질 낮은 일자리들의 웰빙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들과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소들에 관한 지표들(노사관계체제나 사회보장 지출의 특징 등)이 혼재되어 있다.

OECD 웰빙 체계의 운영상 성격은 본 장의 다음에 나올 두 섹션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이 두 섹션은 *How's Life?*의 제1판에서 밝혀진 차이의 일부를 좁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장은 고용의 질에 관한 몇 개의 추가적 지표들을 제안하고 향후에 새로운 지표들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탐색적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은 추가적 지표들을 선택하는 기준들이다:

- 첫째, 추가적 지표들은 고용의 질이 웰빙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해야 한다. 이 조건을 따른다면 모든 정책 지표들을 OECD 웰빙 체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처럼 보이는 데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성과보다는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과 성과의 구분이 항상 뚜렷하지는 않다. 이는 특별히 실업 보험과 부조제도를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체 소득이 경우에 해당된다. 대체 소득은 실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경제활동 가구들을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좀 더 일반적으로, 여기서 논점은 고용, 실업, 비경제활동 사이의 경계가 점점 애매해진다는 사실을 OECD 웰빙 체계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이는 여러나라들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범주들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질 것이다.
- 둘째, 추가적 지표들은 표준 통계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모든 중심 지표들(제1장 참조)과 마찬가지로, 어떤 추가적 지표라도 표면적 타당성을 가져야하고,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국가간 평가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공식 출처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의 질과 관련한 다수의 중요한 영역들은 복잡한 측정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그 영역들과 관련된 가용한 지표들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준들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표들이 OECD 웰빙 체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론상·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다. 직장 조직과 직장 내 관계와 같은 측면들이 좋은 예이다. 그것들은 직업의 많은 다른 특징들과 관련이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근로 환경의 전반적 질을 결정한다. 방법론상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 환경의 어떤 측면들이 가장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들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견고한 개념적 체계가 필요하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고용의 질의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측정은 자기 보고 데이터에 상당히 의존하는데 이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본 장에 후반부에서 논의될 것이다.
- 셋째, 추가적 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떤 추가적 지표라도 OECD 웰빙 체계가 웰빙의 좀 더 포괄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웰빙 체계에 포함되는 지표들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바램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추가적 지표는 기존의 *How's Life?* 지표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는 상당히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세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중요해야 한다. 본 장의 각 섹션에서는 추가적 지표들의 부가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직업과 근로소득

노동 시장의 패턴은 지난 수십년간 뚜렷하게 변했다. 특히, 사람들의 고용 상황과 근로소득의 급변하는 성격은 현대 노동 시장의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변화들은 노동 시장의 수행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²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의 역동성은 근로와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낮아진 고용 안정성과 높아진 소득 변동성을 통해 근로자들의 웰빙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가구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섹션은 사람들의 표준적 노동 시장 지위

(고용,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가 그들의 주관적 웰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고용 불안정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 직업과 연관된 경제적 불안에 대해 논의한다.

근로가 주관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직업을 갖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선결조건이다. 그 자체로 고용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의 노동 시장 지위는 삶에 대한 만족도의 강력한 결정 요소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지위는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하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일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가 없는 것이 낮은 주관적 웰빙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e.g. Clark, 2010; Latif, 2010; Dolan et al., 2008; McKee-Ryan et al., 2005; Blanchflower and Oswald, 2002; Theodossiou, 1998).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유급근로에 종사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가 실업이라는 주관적 웰빙 성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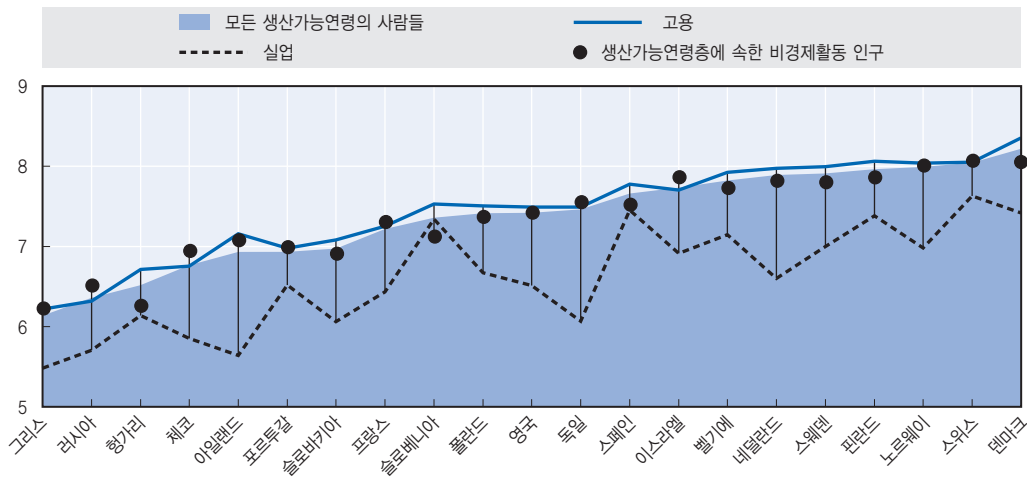
자기 보고 삶의 질의 수준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유급근로 상태인가, 실업 상태인가, 또는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비경제활동)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크다.

- 실직은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의 웰빙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림 5.1, 패널 A). 예상대로 실업 상태의 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고용 상태의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다. 실업자들은 실직과 낮은 주관적 웰빙 간의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이 인구 집단은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구직 실패는 삶에 대한 평가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일을 할 수 없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이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정의됨)는 일을 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직이 그들의 주관적 웰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는 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 그러나 비경제활동은 광범위한 상황에 해당되며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자기 보고 삶의 만족도는 비경제활동의 이유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그림 5.1, 패널 B). 그 이유 자체가 주관적 웰빙의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연히도 영구적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비경제활동 상태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 많은 연구문헌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커다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장애인은 일하기를 원하거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OECD, 2012).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는 또한 조기 퇴직자나 구직단념자들에게서 발견되는데, 구직단념자들은 일할 수 있고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들에게 가용한 일자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이러한 두 인구 집단의 비경제활동은 의도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악화된 경제적 상황 또는 불리한 개인적 특징(적절한 기술의 부재 등) 때문이며 그결과 그들이 노동시장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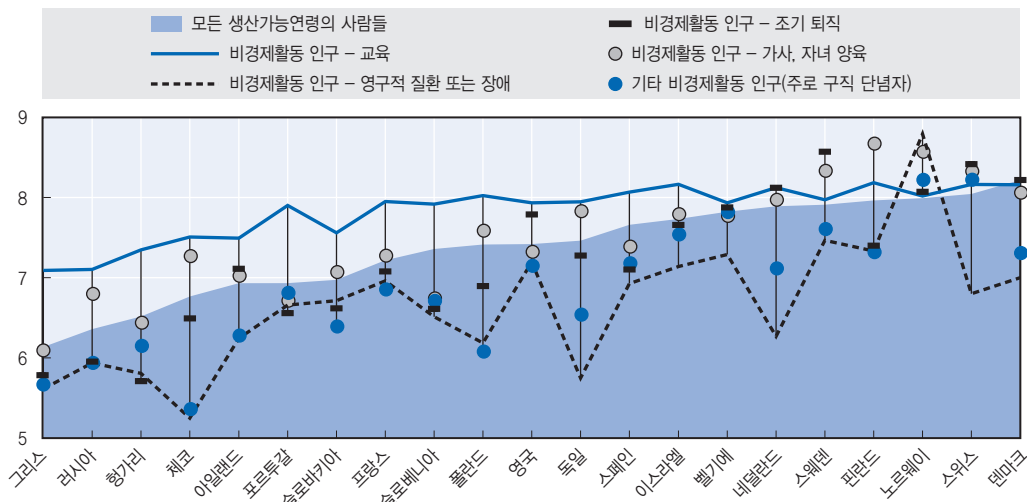
그림 5.1. 삶의 만족도와 노동 시장 지위

행복 지수, 0부터 10까지, 2010년

패널 A. 고용 상태



패널 B. 비경제활동의 이유



주: 행복 지수는 다음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의 가중 평균을 낸 것이다: “모든 점을 고려하면,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대답은 “0(매우 불행하다)”에서 “10(매우 행복하다)”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출처: ESS(2010), 유럽 사회조사, 5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060>

이러한 서술적 분석은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과 그들의 현재 노동 시장의 지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이 사람들의 웰빙의 느낌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Winkelmann and Winkelmann, 1998; Clark, Lucas et al., 2004). 위에서 제시된 증거는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들의 노동시장 지위의 원인과 관련된 주관적 웰빙 성과의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 집단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스스로가 경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는데, 구직 단념자처럼 소위 “한계 근로자들”로서 비경제활동과 실업의 중간 상태에 있거나, 불안전 취업자의 경우처럼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지만 하루 몇 시간 혹은 주당 며칠 만을 근무하거나 계절 근로를

하는 등 실업과 고용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한계 근로자라는 상황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실직을 당한 상태인지 또는 의도적인 비경제활동의 상태인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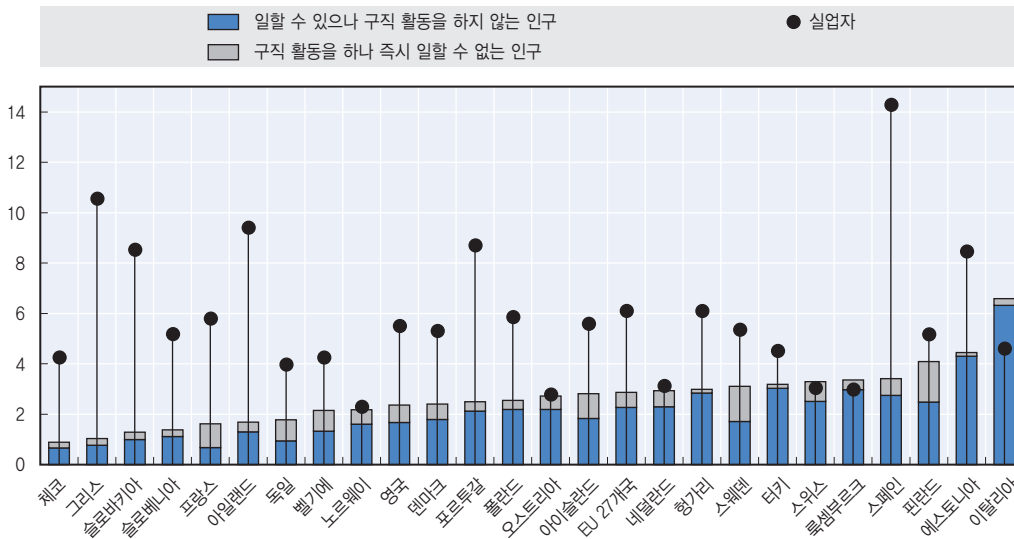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불완전 고용은 근로자들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완전 고용 상태의 근로자의 웰빙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계 상황의 존재는 노동 시장 수행도의 포괄적 지표들(실업률과 고용률 등)이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과 그들의 고용 상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는 노동시장 유휴 자원을 측정하는 단일 지표인 실업률의 사용상 한계에 대한 노동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오랜 쟁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실제로 불완전 고용과 한계 노동력은 실업자로 표현될 수 없는 미충족 근로 욕구 현황을 보여준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불완전고용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생산해내며 이는 보통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의 발생율(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전일제 근무를 원하지만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반면에, 한계 노동력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의 측정방법은 유럽 국가들에만 한정되는데 유럽에서는 실업률을 보완할 새로운 지표군의 일부로서 유럽통계청이 일명 “잠재적 추가 노동력(potential additional labor force)”에 대한 측정방법을 만들었는데 “노동력에 속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de la Fuente, 2011a and 2011b). 이 사람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에 대한 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나 실업자들과 일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잠재적 추가 노동력”은 두 개의 비경제활동 인구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일자리를 구했으나 즉시 일을 할 수는 없는 집단과 일을 할 수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집단이다. 두번째 인구 집단에는 무엇보다 구직 단념자들과 개인적 혹은 가족 상황 때문에 구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그림 5.2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두 범주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74세의 인구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즉, 27개 EU 회원국에서 평균 약 3%를 차지하는데 이는 6%를 차지하는 실업인구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한계 노동인구의 비율은 실업자의 비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기도 하다.

웰빙 관점에서 볼 때, 한계 노동력의 개념이 특히 관심을 끄는데, 이는 다른 비경제활동 인구들에 비해 실직이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들라는 달리 고용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구직활동을 하거나 일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많은 비유럽권 OECD 국가들 역시 노동력 조사의 일환으로 이 집단을 측정하여 노동 시장 유휴 자원에 관한 확장 지표들을 발표하지만 사용된 정의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노동시장 한계노동력에 대해 좀 더 협의의 정의를 사용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했고 기준 주간에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Haugen, 2009).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구직 단념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일하기를 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에게 가용한 일자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한계 노동력”의 국제적 표준 정의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목표는 차기 국제 노동통계인 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2013년 말 개최 예정)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5.2. 유럽에서의 한계 노동력

15세-74세 인구에서의 비율, 2011년



주: 한계 노동력은 구직활동을 하지만 즉시 일할 수 없는 사람들과 즉시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출처: 유럽통계청, 고용과 실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노동력조사)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079>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계 노동력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유럽통계청의 “잠재적 추가 노동력”의 정의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정의를 제안하였다(국제노동기구(ILO),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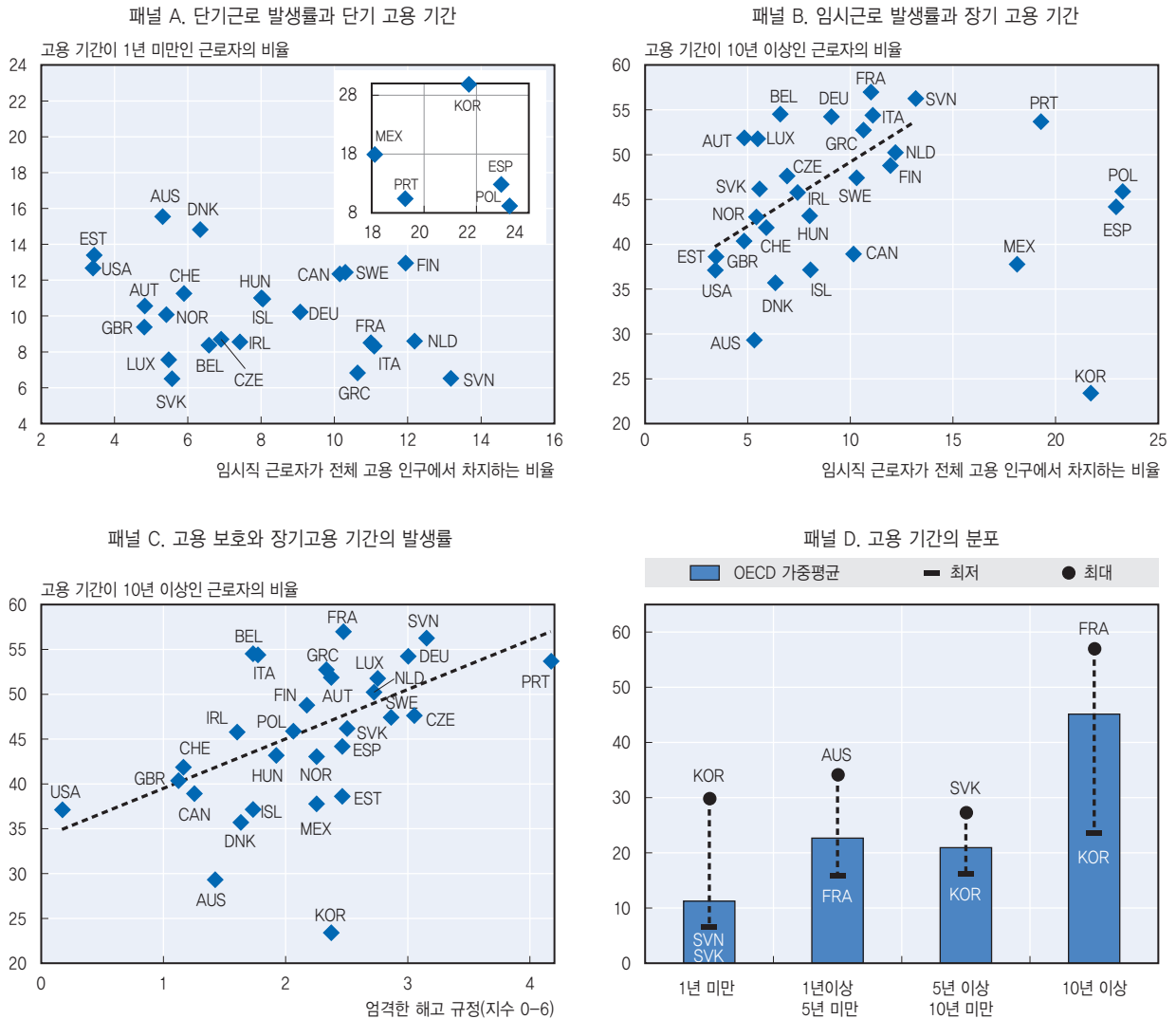
직업 안전성

현대 노동 시장은 기업과 분야간 노동력과 생산 자원들의 끊임없는 이동 및 재배치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생산적 파괴” 과정이 경제 성장의 동력 중 하나이지만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사람들의 웰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프레임워크는 직업 불안정성의 대리 지표로서 보통 두 가지 측정방법인 단기직 근로자의 비율과 임시직 발생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정 방법에는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다. 또한 그림 5.3에 보이는 것처럼(패널 A) 국가들에서 두 개의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직업 안정성의 다른 측면을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 임시근로와 고용 불안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한부 고용 계약(fixed-term contracts)은 계약 종료 후 고용 관계의 지속에 관한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임시고용의 사용에 관한 규정(기한부 고용 계약이 허용되는 직종과 그 기간 등)은 국가별로 크게 다른데 이는 임시직의 고용 불안정성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Venn, 2009; OECD, 2013). 게다가 임시직 발생율은 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측정 방법이며 직업 불안정의 보편적인 측정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임시직 발생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규정이 엄격한 국가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임시직이 대개 수요의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요소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은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5.3. 임시근로과 근무 기간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 2011년



주: 고용 기간(job tenure) 지표들은 30세-64세의 고용된 인구에 대해 계산된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터키에 대한 자료는 제공 가능하지 않다. 임시근로에 대한 지표는 25세-64세의 고용된 인구에 대해 계산된다. 호주의 경우 2005년, 멕시코의 경우 2004년, 미국의 경우 2005년 데이터이다.

패널 B에서 임시근로의 발생률과 장기 고용 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제외한 경우 0.55이고 포함시키면 0.01이다.

패널 C에서 장기 근무기간과 고용 보호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한국을 제외한 경우 0.60이고 포함시키면 0.49이다. 고용 보호에 대한 OECD 지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보려면 OECD(2013), “일자리 보호와 유연성 개선”: 고용 보호 입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OECD 고용 전망 2013)을 참조하십시오.

출처: OECD(2013), OECD 고용과 노동 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data-en>. 참조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098>

대조적으로 고용 보호법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임시근로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단점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더 크다는 사실인데 기업들이 업무량을 감축할 때 쉽게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3(패널 B)은 임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서 매우 장기간 근속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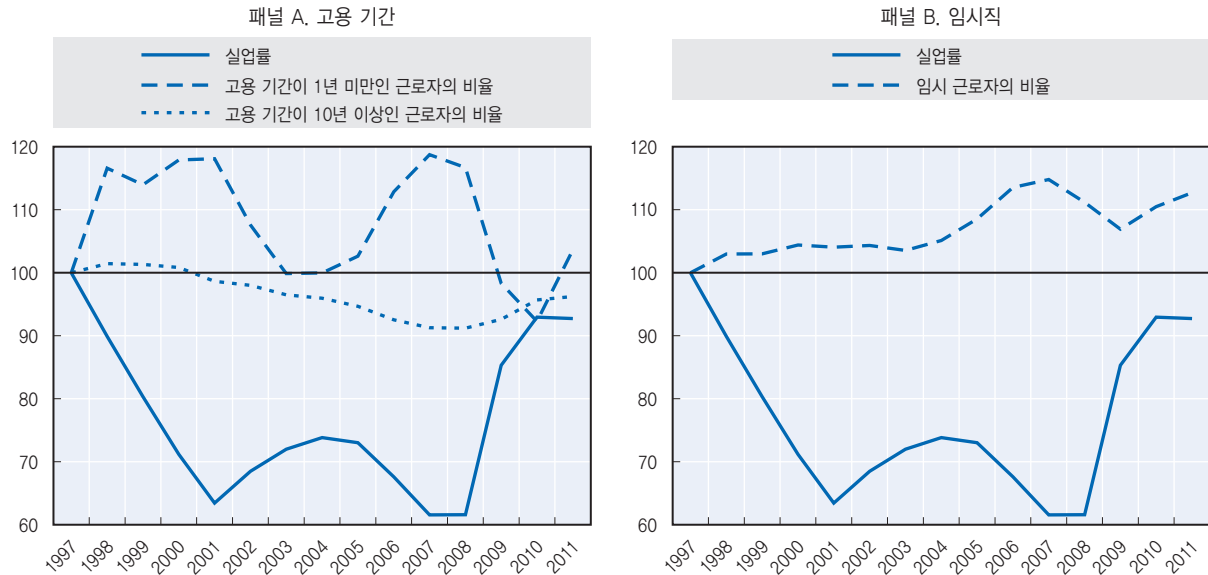
고용 기간 지표들은 계약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현재 고용주와 함께 한 기간에 초점을 맞추는 장점이 있다. 이는 예를 들어 기한부 고용 계약(fixed-term contracts)이 오랫동안 동일한 고용주와 갱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작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 기간 지표들은 고용 보장(job security)이 아닌 고용 안정(job stability)을 측정한다. 동일한 고용주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언제 떠나느냐는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퇴사(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 결정)가 전체 직장 이직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OECD, 2009).³ 사람들이 새 직장에서 막 일을 시작한 후에는 그만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짧은 고용기간(1년 미만)은 임시직 발생률보다 고용 불안(job insecurity)을 더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임시직과 정규직의 이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이직이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10년 이상)의 비중을 일정부분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고용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과 국가의 해고 규정의 엄격성 사이에 유의미한 국가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그림 5.3, 패널 C)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에 관한 OECD 지수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OECD 2013). 이 관계는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 보장의 좋은 대리 지표(proxy)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안정성은 고용 기간 지표들에 의해 측정되며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그림 5.3, 패널 D).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30세-64세의 근로자의 10%는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이 비율은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6%에서 한국의 30%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근속 기간의 매우 오래된 근로자들의 비율은 국가간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에서 30세-64세의 근로자의 23%만이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반면에 이 비율은 프랑스에서 57%에 달하며 OECD 평균은 46%이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임시근로 발생률 또는 단기 고용 기간, 고용보호수준(EPL)과 장기 근속기간의 관계(그림 5.3, 패널 A과 C)는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단지 평균 수준 또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용 불안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포르투갈이 좋은 예인데 OECD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고용보호법(EPL)이 임시근로와 장기 근로기간의 평균 이상 발생률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용 보장의 변화를 감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될 수 있는냐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기 고용 근로자의 비율로 직업 보장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율은 경기순환 주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단기 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기존 일자리 전반에 걸친 근로자 재배치 외에 순일자리 창출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기 고용 근로자들의 비율 변화는 고용 불안의 변화보다 경기 활동의 변동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그림 5.4, 패널 A). 종단면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14개의 OECD 국가들에서 단기 고용된 근로자들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하락하여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26%가 하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의 질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일자리 창출의 둔화와 높아진 일자리 손실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할 때 맨 처음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대개 기한부 고용 계약 근로자 등 단기 고용 근로자들이다. 요컨대, 고용 불안은 경기 순환적 요소들과 구조적 요소들에 의해서 야기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용의 질 추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두 요소들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고용 기간, 임시직과 경기 순환 주기

14개 OECD 국가들의 비가중평균, 1997년=100



주: 비가중평균에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 포함된다.
출처: OECD(2013), OECD 고용과 노동 시장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lfs-data-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117>

그에 비해 장기 근속 근로자의 비율과 임시직 발생률은 경기 순환 주기에 훨씬 덜 민감하다(그림 5.4 참조). 평균적으로 장기 근속 근로자의 비율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단지 4%가 증가했는데 임시 근로의 발생률은 4% 정도 하락했다. 게다가 이러한 두 지표의 장기적 추세는 과거 대부분 OECD 국가들의 특징이었던 “중신고용”의 약화와 일치한다. 단기적 변동외에 일부 OECD 국가들은 1997년-2007년 기간에 장기 근속 근로자 비율의 감소추세를 보였고 임시 근로의 발생률은 감소된 만큼 증가했다.

요컨대 국가간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비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고용 불안의 단순 대리 지표 측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장기 근속 근로자들의 비율을 고용 보장의 추가 지표로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지표와 임시근로 지표의 결합은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의 고용 불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국가들의 근로자 대다수는 고용이 철저히 보호되지만 많은 다른 근로자들은 임시직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용 안전 패턴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데 장기 근속 근로자들의 비율은 경기 순환 주기의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 소득과 경제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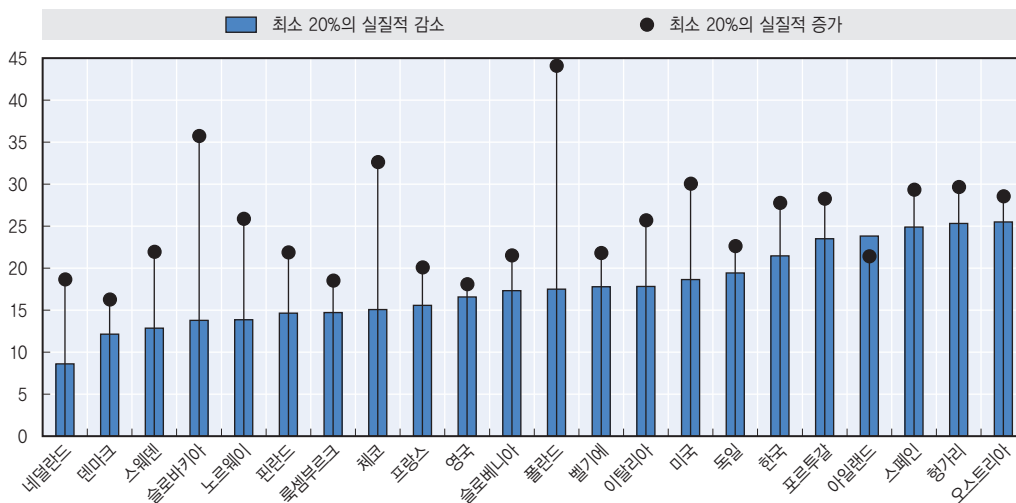
일자리의 질의 중요한 한가지 영역은 일자리가 지불하는 월급 또는 임금이 어느 정도까지 근로자가 괜찮은 삶을 영위하도록 할 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OECD 웰빙 체계는 근로소득 즉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총연간 소득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영역을 설명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웰빙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노동 시장의 역동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변동하느냐 하는 점이다.

매년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의 변화, 근로 지위의 변동, 임금 변화로 인해 총 근로 소득의 큰 변동을 경험한다(OECD, 2011). 그러나 근로 소득 변동성의 측면에서 국가간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5.5).

2000년대 중반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전반적 근로소득 변동성이 가장 높았는데 이 국가들에서 근로소득의 큰 증가와 큰 하락의 발생률이 모두 높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25세-59세의 근로자의 4명 중 1명은 다음 해에 20% 이상의 총 근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했던 반면에 5명 중 1명 이상은 20% 이상의 감소를 경험했다. 조사 기간 중 연간 GDP 증가율이 6%를 초과했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제외하면 근로 소득의 증가와 감소 사이의 높은 수준의 대칭이 존재하는데, 이는 높은 비율의 근로자가 근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에서 근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율 역시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5.5. 연간 근로 소득 변동성

1년 사이에 총 근로 소득의 큰 변화를 경험한 근로자들의 비율, 25세-59세 임금 근로자, 2000년대 중반



주: 25-59세 근로자의 추정치로서 동 연령대의 분석을 통해 노동 시장에 진입한 젊은이들과 은퇴로 전환하는 노년층 근로자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의 경우 2004년-2007년 데이터이며 예외인 국가들은 이탈리아, 포르투갈(2006년-2007년), 프랑스(2005년-2006년), 덴마크(2004년-2005년)과 미국(1995년-1996년)이다.

근로 소득의 커다란 증가와 커다란 감소의 발생을 사이의 국가간 상관관계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제외하면 0.72이고 포함시키면 0.31이다.

출처: OECD(2011), "근로 소득 변동성: 원인과 결과, OECD 고용 전망 2011,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1-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136>

실업 기간은 근로 소득 손실에 대한 분명한 주요 기여요인이다(Venn, 2011). 근로자들이 근로 소득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가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근로 소득의 감소는 금융 스트레스와 빈곤 위험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근로자들이 현재의 물질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소득은 일자리가 가져다주는 금전적 혜택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 전망은 또한 근로 소득이 크게 감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 지원책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실업 수당(UI)제도는 근로 소득의 임시적 하락에 대한 완충장치를 가구에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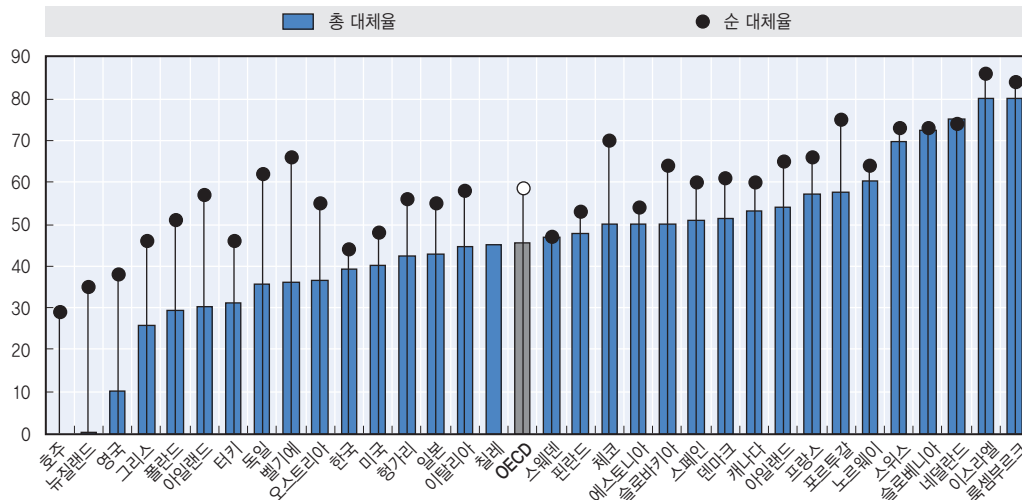
실업 수당이 사람들의 근로 생활에서 고용의 질의 한가지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Clark and Postel-Vinay(2009) 은 국가가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소득 지원책이 강력할 수록 근로자들은 노동 시장의 상황에 대해 더 안전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33개의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실업 수당은 실직 초기에는 예전 총 근로소득의 47%이다(그림 5.6). 이러한 소득 대체율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스위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에서는 70% 이고 영국, 그리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30% 미만이다. 이러한 소득 대체율은 다양한 종류의 세금과 기타 수당이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간 차이는 두 가지 중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 첫번째 요소는 국가 실업보험 제도의 복지혜택과 관련되는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실업 수당의 금액에 의해 일부 측정된다. 보장률(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국가 실업 보험 제도의 복지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그러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⁴
- 두번째 요소는 실업 보험과 사회 부조(가구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혜택이 결정됨) 를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 지원 사이의 균형이다.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실업 보험 제도가 없는데 이 두 국가는 사회 부조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림 5.6. 실업 수당

실업 초기 단계, 자녀가 없는 독신으로 과거에 평균 임금을 받았던 사람, 2011년



주: 총대체율은 예전 총 근로소득 대비 실업 상태에서 받은 총 실업수당의 비율을 말한다. 순 대체율은 세금-혜택 제도를 고려하여 실업상태일 때 유지되는 근로 소득의 비율을 보여준다. 순 대체율은 가구 순 소득을 근거로 계산되며 수령한 현금 수당, 가구에 의해 지불된 세금액수와 사회보장분담금을 고려에 넣는다. 순 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가구의 순 소득 대비 실업 기간 중 가구 순 소득의 비율이다.

출처: OECD(2012), "세금과 혜택", OECD 사회적 지출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201-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155>

상당히 오랜 동안 근무하는 것이 실직 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인 동시에 충분 조건인데 이러한 자격 조건은 실업 수당과 고용의 질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실업수당 수급이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 사회 부조, 가족 수당, 주택 수당을 고려하여 실직한 경우에 유지되는 가처분 소득의 비율로서 순 대체율을 측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참조). 이러한 추가적 요소들은 고용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실질 가구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순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⁵ 요약하면 순 대체율은 실직 시 사회 보호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는 반면에 총 대체율은 고용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구체적 수급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 대체율의 국가별 차이가 총 대체율보다 덜 두드러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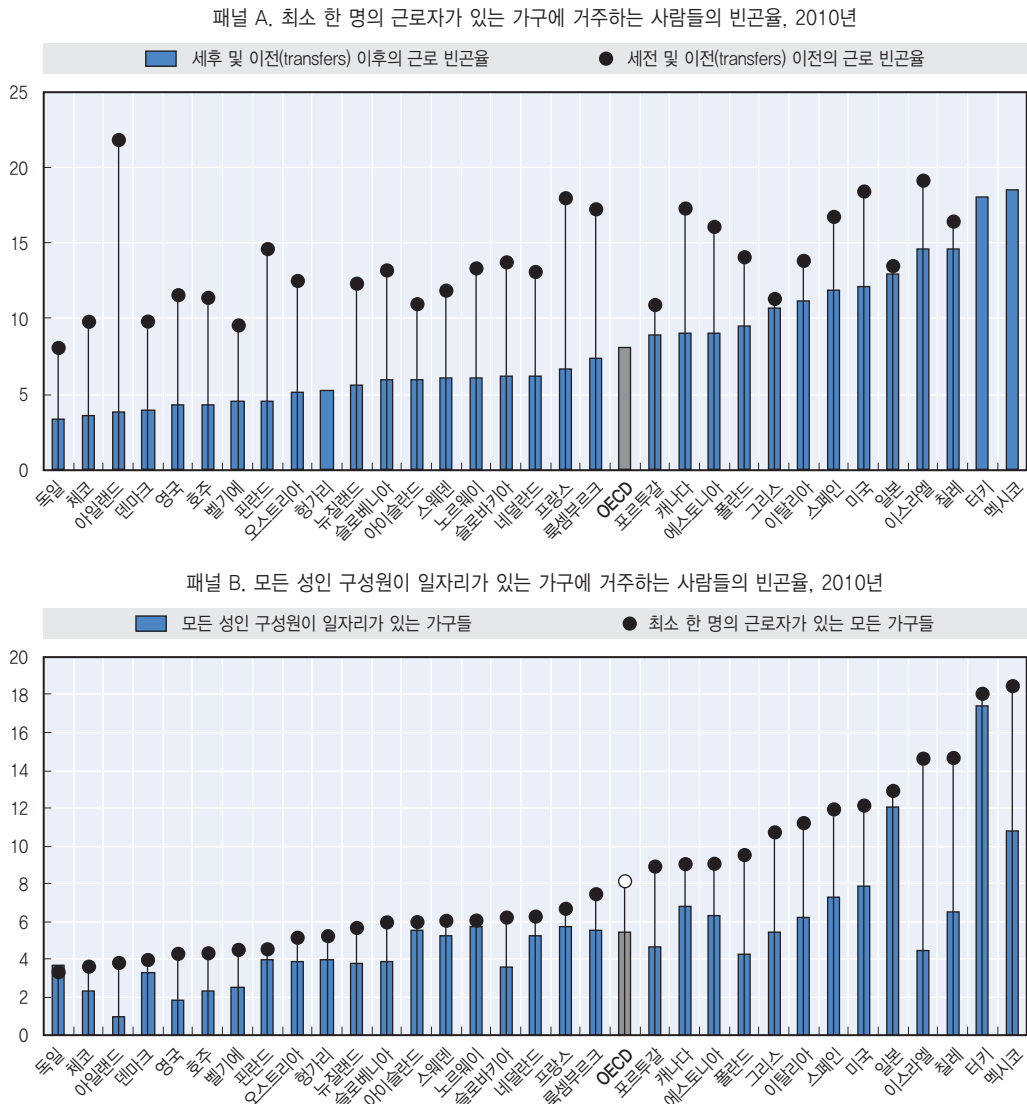
근로 빈곤

OECD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근로 소득의 일시적 하락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 집단과 고용, 실직, 비경제활동을 전전하며 종종 근로빈곤층의 대열에 합류하는 집단을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OECD, 2009). 근로 빈곤이 여러가지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전일제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와 낮은 시급, 저임금 근로와 실직 사이의 빈번한 이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로 빈곤 발생률은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복지 제도는 근로 빈곤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키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OECD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근로 가구(가구 내 최소 1인의 근로자가 있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8%가 2009년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이 없었다면 이 비율은 14%에 달했을 것이다(그림 5.7, 패널 A). 빈곤은 각국의 평균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측정되는데 가구원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해당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 수준의 50% 미만이면 빈곤으로 분류된다. 근로 빈곤률의 국가간 격차가 상당히 큰데 아일랜드, 체코,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에서는 5% 혹은 그 미만이지만 그리스, 스페인, 미국,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에서는 12% 혹은 그 이상이다.

이러한 빈곤률은 고용의 질 고려 차원을 넘어선다. 근로 빈곤율은 개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직업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소득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업(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구성원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의 질과 빈곤 사이의 관계는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빈곤율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빈곤율이 모든 근로가구의 빈곤율(전체 근로 빈곤율)보다 상당히 낮는데 OECD 평균은 5.4%이다(전체 근로빈곤율: 8.1%). 눈에 띄는 사실은 전체 근로빈곤율이 높을수록 이 두 지표들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그림 5.7, 패널 B).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에서 가구에서 한 명의 성인 구성원에 실직할 때 근로 빈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그림 5.7. 근로 빈곤



주: 근로 빈곤율은 생산 가능 연령의 가구와 최소 한 명의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의 비율로서 측정되며 가구원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해당 국가의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이다. 세금과 소득 이전(transfers) 이전의 근로 빈곤율은 생산 가능 연령의 가구주와 최소 한 명의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의 비율로서 측정되며 세금과 소득 이전 이전의 가구원수 균등화 소득이 해당 국가의 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인 경우이다. 빈곤율은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와 터키의 경우 2009년을 의미한다.

출처: OECD(2013), "소득 배분", OECD 사회 복지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data-0065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174>

근로 빈곤 발생율을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개념적 관점에서 볼 때 근로 빈곤은 고용의 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고용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로 빈곤 척결을 위한 전략이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의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방법론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근로 빈곤 관련 OECD 지표들은 이러한 기준의 대부분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표면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식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OECD에 의해 최근 시작된 일자리 질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더 많이 연구될 것이며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일자리 질과 노동 시장 수행도 및 웰빙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직장 내 삶의 질 측정

OECD 웰빙 프레임워크 내에서 근로와 개인적 삶의 관계는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 속하는데 이 영역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개인·가족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일은 시간적 구속이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관여한다. 특히, 노동이 신체·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개인이 일과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한 노출도는 직장 내 안전에 대한 표준적 측정 방법 즉 직장 내 사고 발생률을 지표로서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 직장 내 심리적 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개인의 노출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가 직장에서의 삶의 질의 한가지 주요 성과임을 시사하는 풍부한 증거가 존재한다(OECD, 2012). 현재 직장 내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가능케하는 측정 체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 섹션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번째 시도이다.

직장의 요구사항과 기회 사이에 올바른 균형의 성취

직무 건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지난 30년간 수행되었고 직장 조직과 직장에서의 관계가 근로자 웰빙과 정신 건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심리적 위험 요소에 노출된 근로자의 정신 건강이 근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몇 가지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한 가지 전제는 스트레스는 관리가 가능하다면 삶의 정상적 부분이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 삶의 질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 즉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로 변화하는 매카니즘이다.

근로자의 웰빙과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직무의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몇 가지 모형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모형은 요구-통제(demand-control) 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effort-reward imbalance model)이다(Bakker and Demerouti, 2007; van Vegchel et al., 2005a; van Vegchel, et al., 2005b). 요구-통제 모형은 높은 업무 요구(업무 과부하와 시간적 압박 등)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제에 대한 직무 재량도가 없을 때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Karasek, 1979).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은 일의 통제 구조가 아닌 근로소득, 존중감, 승진 전망과 직업 안전 등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강조한다(Siegrist, 1996). 이 모형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근로 조건은 보상이 근로자의 노력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열악한 직장 조직과 정신 질환을 연결지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e.g. Stansfeld and Candy, 2006; van Vegchel et al., 2005a; van der Doef and Maes, 1999).

최근까지만 해도 근로 역시 개인적 성취의 기회를 창조한다는 사실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기회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직무 건강에 대한 최근 모형들은 이 이슈를 다루었는데 근로자에게 심리적 비용 또는 심리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근로 환경을 통합하였다. 직무 요구-직무 자원 모형이 그러한 접근법의 한가지 예이다(Bakker and Demerouti, 2007). 이 모델에서 “직무 요구”는 지속적인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수고를 요하는 직무의 측면(육체적으로 고된 과제의 수행, 과도한 작업량의 처리, 시간적 압박과 여러가지 다양한 요구들, 고용 불안에 대한 직면 등)을 의미한다.

반대로 “직무 자원”은 개인적 성취에 도움이 되거나 업무 목표 달성에 유용한 직무 속성들을 말하며, 업무 자율성, 직무 보상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 동료와 상사로부터의 지지, 제대로 규정된 업무 목표와 수행 업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 이 모형의 기본 전제는 직무 자원은 동기 유발 과정을 유발하지만 직무 요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적절한 직무 자원이 없을 때 근로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연구결과가 직무 요구와 직무와 관련된 정신 질환 사이의 연관성, 직무 자원과 근로자의 헌신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e.g. Alarcon, 2011; Schaufeli, Bakker and van Rhenen, 2009; Mauno, Kinnunen and Ruokolainen, 2007; Demerouti, Bakker and Bulters, 2004; Hakanen and Schaufeli, 2012).

근무 환경이 어떻게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섹션은 근무 환경과 직무 관련 건강 성과의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는데 유럽사업장조사(ESWC)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유럽사업장조사는 이러한 주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직무 요구와 관련하여 이 지표들은 i) 근로자가 직면한 전반적 직무 압박; ii) 직무 요구사항과 개인의 사고 및 행동 방식 간 갈등의 존재(일명 “감정적 요구”); iii) 사업장에서의 신체적 건강 위협의 노출도; iv) 직장에서의 협박을 포함한다. 직무 자원의 지표에는 i) 업무 자율성; ii)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iii) 잘 규정된 직무 과제; iv) 좋은 경영 관행; v) 지지해주는 동료가 포함된다.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의 지표들 중 각 지표는 표 5.2에서 보고된 유럽사업장조사(ESWC)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보고 건강 상태에 관한 두 지표도 제시되었다. 첫 번째 지표는 직장에서의 건강 위험 요소의 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노출도는 업무가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한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된다. 두 번째 지표는 다섯가지 항목(패활한 느낌, 평온한 감정, 적극적인 느낌, 일어났을 때 상쾌하고 충전된 느낌, 삶의 충족도)에 근거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OECD, 2012).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적 건강을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시키며, 삶의 정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고, 자신의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는 웰빙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하나의 정신 건강 지표는 위의 5개 항목으로부터 나온 응답에 대한 평균을 내서 각 개인별로 집계된다(각 문항은 “0(항상 그렇다)”부터 “5(항상 그렇지 않다)”까지의 기준에 근거해 점수가 매겨진다).

그림 5.8은 이러한 두 개의 건강 지표와 직무 요구(패널 A)와 직무 자원(패널 B)의 각 구성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따로 보여준다. 여기서 두드러진 주요 패턴은 다음과 같다:

- 각 직무요구 지표의 경우에 직무 요구가 큰 근로자들일수록 직장에서 건강상 위험 요소에 노출된다고 더 자주 보고하며 상대적으로 직무 요구가 낮은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나쁜 정신 건강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패널 A). 이러한 두 근로자 집단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직무 요구의 형태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요구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40%-50%가 자신들의 일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20%-25%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표 5.2. 근로 요구와 근로 자원의 지표들

근로 요구들		근로 자원들	
구성요소들	유럽사업장조사(ESWC)의 기본 문항들	구성요소들	유럽사업장조사(ESWC)의 기본 문항들
업무 압박	대개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함 일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근로 시간 때문에 가족 및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매우 빠른 업무 속도 빡빡한 마감 기한	업무 자율성	과제의 순서를 선택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 업무 방법을 선택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 업무의 속도나 비율을 선택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
감정적 요구	화가난 고객을 상대함 개인의 가치와 상충된 과제가 수반되는 업무 개인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업무	학습 기회	고용주가 훈련 또는 현장 훈련(on-the-job training) 제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직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
신체적 건강 위험 요소들	커다란 소음에 노출 고온에 노출 저온에 노출 피곤하고 고통스런 자세 무거운 짐 들거나 옮김	과제의 명료성	제대로 규정된 업무 목표 관리자로부터의 피드백 업무를 잘 기획하고 조직하는 관리자
직장 내 협박	언어적 학대 협박과 굴욕감을 주는 행동 왕따 또는 괴롭힘	관리 관행	관리자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관리자에 의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갈등 해결에 유능한 관리자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도록 관리자에게서 권장을 받음
		동료의 지지	동료들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직장에서 마음이 편안함 직장에 매우 좋은 친구가 있음

주: 직무 요구(직무 자원)의 각 구성 요소에 관하여 보면, 근로 조건에 대한 유럽사업장조사(ESWC)의 해당 질문에 관한 응답의 평균을 내서 각 개인에 대한 요약 점수를 집계하며 각 질문은 예/아니오에 근거하여 점수가 집계(혹은 재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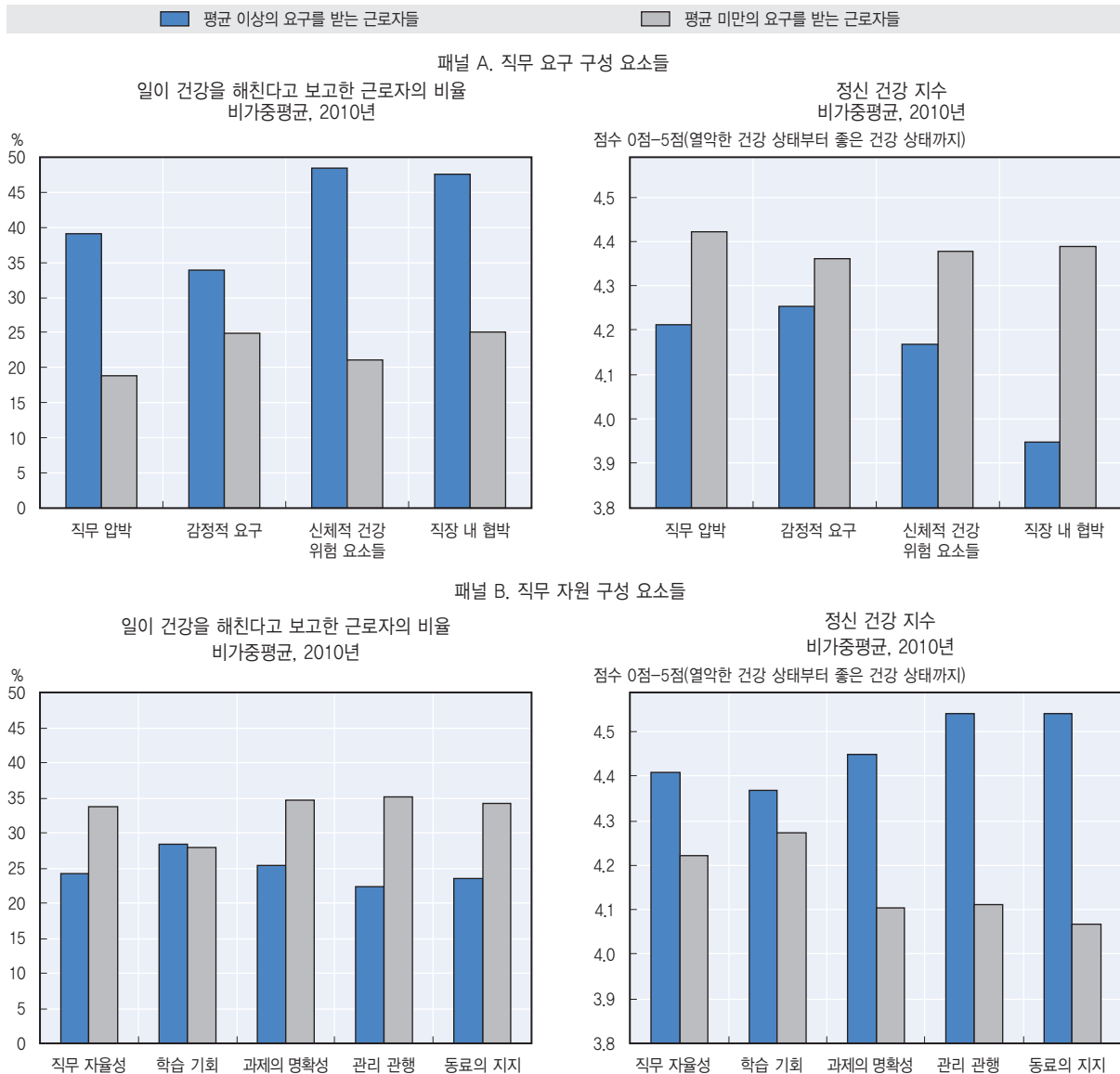
그에 비해 직무 요구와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은 비교적 약한데 직장내 협박의 경우는 예외이다.

- 마찬가지로 적절한 직무 자원의 혜택은 직무 관련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 감소와 정신 건강 상태 개선과 연관성이 있으며, 학습기회는 예외적으로 건강 변수들과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약하다(패널 B). 직장 내 건강 위험 요소들에 대한 노출의 격차는 직무 요구 지표들보다 덜 두드러지며 근로자들에게 재량권이 있는 자원의 양과 정신 건강 상태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세가지 형태의 직무 자원(제대로 규정된 업무 과제, 좋은 관리 관행, 지원하는 동료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은 근무 환경의 질이 근로자의 건강에 중요함을 시사하지만 둘 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관계가 성격 상 인과적 관계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데 종단면적 분석은 직장 조직과 직장 내 관계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e.g. Schaufeli, Bakker and van Rhenen, 2009; Mauno, Kinnunen and Ruokolainen, 2007). 그러나 근무 환경의 질에 관한 지표들이 사람들의 웰빙을 측정할 OECD 웰빙 체계 내에 추가되려면 더 발전해야 한다. 첫째, 이 지표들이 포함되면 데이터세트의 규모와 복잡성이 크게 확대되는데 일자리의 많은 다른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 건강에 관한 연구 문헌은 이 영역 문제(dimensionality problem)에 몇가지 해답 요인들을 제시한다. 특별히 직장 조직과 직장 내

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지표들을 통합해서 전반적 근무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복합 지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부록 5.A1 참조).

그림 5.8. 유럽의 직무 요구, 직무 자원과 근로자 건강 사이의 연관성



주: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의 각 구성 요소들에 관하여 보면, 고용된 인구는 두 집단(자신의 국가에서 각 특정 구성 요소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근로자들과 평균 미만의 점수를 보이는 근로자들로 나뉜다. 그리고 직장에서 건강 위험 요소들에 높은 노출도를 보고한 개인들의 비율과 정신 건강 지수가 각 국가의 두 근로자 집단을 위해 따로 계산된다. 비가중평균에는 2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포함된다.

출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 2010), 유럽사업장조사(ESWC), 5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193>

둘째, 그러한 측정 체계가 어느 정도 국가간 비교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 지표들은 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는 설문조사 설계 혹은 문화적인 응답 편향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OECD, 2013).

향후 통계적 과제

본 장은 사람들의 노동 시장 상황의 다양성을 OECD 웰빙 체계를 통해 보다 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 시장의 한계 노동력에 대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지침은 비교 가능한 측정 방법을 유럽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웰빙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정착도와와의 관계를 더 잘 규명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표들이 사람들의 웰빙 측정에 관한 표면적 타당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실직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웰빙에 실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근로 생활에서 물질적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용의 질의 또 다른 측면은 고용에 의해 제공된 경제적 안전이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부정적 충격으로부터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지표들, 즉 실업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와 그러한 혜택을 받는 실업자의 비율이 필요하다.

대체 소득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입수 가능하지만 특히 실업수당(UI)과 같은 다양한 수당의 보장률에 대한 국가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고용의 질에 관한 또 하나의 통계적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직무 건강에 관한 문헌은 강력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유용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직장 조직과 직장 내 관계에 대한 지표들을 개발할 토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무 환경의 이러한 측면들은 고용의 질의 중요한 영역들이다.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와 열악한 직장 조직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치지만 격려하는 직장 분위기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들이 국제적 맥락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직장 조직이나 직장 내 관계와 같은 영역에 대해 국가간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은데 측정치가 근로자들의 자신의 직업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일부 의존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성취하려면 일치된 가구 조사가 필요한데 주관적 판단은 조사 설계, 질문의 표현과 질문 배치순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유럽권 OECD 국가 등 OECD 국가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일치된 조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근무 조직과 직장내 관계의 주요 측면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이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헌은 “일자리 질에 대한 정의·측정·평가와 일자리 질의 노동 시장 수행도와 웰빙과의 연관성(Defining,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and its Links to Labor Market Performance and Well-being)”이라는 일자리 질에 관한 OECD의 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기회의 수적 증가와 질적 개선의 측면에서 노동 시장 수행도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정책 토론의 최우선 과제로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OECD 안팎에서 수행된 고용의 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진행 중인 연구를 활용하여 노동 시장 수행도와 전반적 웰빙의 맥락에서 고용의 질을 분석할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

OECD 웰빙 프레임워크가 고용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관련 영역들을 다루지만 본 장은 사람들의 근로 경험에서 만들어진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다수의 추가적 지표들을 찾아내었다. 제안된 지표들 중 일부는 가까운 미래에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지표들은 방법론상 그리고 이행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고용의 질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How's Life?**에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일과 **How's Life?** 지표군의 크기와 복잡성을 확대하는 위험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관리하느냐 하는 점이다.

주

1.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자리 질 연구의 유일한 출처인 유럽사업장조사(ESWC)의 데이터에 근거한다. 이 연구는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고, 기획되며, 조정되며, 근로 소득에서부터 심리적 건강 위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근로와 고용의 질의 많은 측면들을 다룬다.
2.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노동력 통계에 관한 국제 기준의 일부 측면들은 이제 시대에 뒤쳐져 있다.” 라고 주장한다(ILO, 2013:9).
3. 199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고용주로 인해 발생한 이직은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5개의 OECD 국가들(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중에서 총 이직의 평균 1/4 이상임이 나타났다(OECD, 2009).
4. ILO 사회보장조사(Social Security Inquiry)데이터베이스는 실업수당에 관한 지표들을 포함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OECD국가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5. 세금, 사회 부조, 가족 수당과 주택 수당은 개인의 고용 이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가구 소득에 관한 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대개 가구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순 대체율은 무자녀 가구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더 높는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높은 사회적 이전을 받고 대개 더 유리한 세무 처리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림 5.6에 보고된 지표들은 순대체율의 하한 추정치에 해당하는데 자녀가 없는 독신인 사람의 순 대체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Alarcon, G. (2011), “A meta-analysis of burnout with job demands, resources, and attitud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9, pp. 549-562.
- Bakker, A. and E. Demerouti (2007),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state of the ar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2/3, pp. 309-328.
- Blanchflower, D. and A. Oswald (2002),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pp. 1359-1386.

- Clark, A. (2010), “Work, Jobs, and Well-Being Across the Millennium”, in Diener, E., D. Kahneman and J. Helliwell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A. and F. Postel-Vinay (2009), “Job security and job protection”, *Oxford Economic Papers*, No. 61, pp. 207-239.
- de la Fuente, A. (2011a), “8.5 million underemployed part-time workers in the EU-27 in 2010”,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No. 56/2011.
- de la Fuente, A. (2011b), “New measures of labour market attachment”, *Eurostat Statistics in Focus*, No. 57/2011.
- Demerouti, E., A.B. Bakker and A.J. Bulters (2004), “The loss spiral of work pressure, work-home interference and exhaustion: Reciprocal relations in a three-wave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4, pp. 131-149.
- Dolan, P., T. Peasgood and M. White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9, pp. 94-122.
- Eurofound (2012), *Trends in job quality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Hakanen, J. and W. Schaufeli (2012), “Do burnout and work engagement predict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 three-wave seven-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14, pp. 415-424.
- Haugen, S. (2009),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BLS Working Paper*, No. 424.
- Hu, Q., B. Schaufeli and T. Taris (2011), “The Job Demands – Resources model: An analysis of additive and joint effects of demands and resour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9, pp. 181-190.
-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3), *Statistics of work and of the labour force –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Meeting of Experts in Labour Statistics on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 (Geneva, 28 January-1 February 2013)*.
- ILO (2012), *Decent Work Indicators: Concepts and definitions*, ILO Manual, First edition, Geneva.
- Karasek, R. (1979),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4, pp. 285-308.
- Latif, E. (2010), “Crisis,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anada”, *Journal of Policy Modeling*, Vol. 32, pp. 520-530.
- Lucas, R., A. Clark, Y. Georgellis and E. Diener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Vol. 15, pp. 8-13.

- McKee-Ryan, F., Z. Song, C. Wanberg and A. Kinicki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90, pp. 53-76.
- Mauno, S., U. Kinnunen and M. Ruokolainen (2007), “Job demands and resources as antecedents of work engage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0, pp. 149-171.
- Muñoz de Bustillo, R., E. Fernández-Macías, J.I. Antón and E. Fernando (2011), *Measuring More Than Money – The Social Economics of Job Quality*, Cheltenham: Edward Elgar.
- OECD (2013), “Protecting jobs, enhancing flexibility: A new look at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6-en.
- OECD (2012), *Sick on the Job?: Myths and Realities about Mental Health and Work*, Mental Health and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4523-en>.
- OECD (2011), “Earnings Volatility: Causes and Consequences”,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1-5-en.
- OECD (2009), “How Do Industry, Firm and Worker Characteristics Shape Job and Worker Flows?”,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Tackling the Jobs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09-3-en.
- Schaufeli, W., A. Bakker and W. van Rhenen (2009), “How changes in job demands and resources predict burnout, work engagement, and sickness absenteeis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0, pp. 893-917.
- Siegrist, J. (1996), “Adverse health effects of high effort-low reward condition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1, pp. 27-41.
- Stansfeld, S. and B. Candy (2006),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 A Meta-analytic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and Health*, Vol. 32, Special Issue No. 6, pp. 443-462.
- Theodossiou, I. (1998), “The effects of low-pay and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 logistic regression approac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Vol. 17, pp. 85-104.
-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0), *Measuring Quality of Employment – Country Pilot Reports*, Geneva.
- van der Doef, M. and S. Maes (1999), “The job demand-control (-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view of 20 years of empirical research”, *Work and Stress*, Vol. 13, pp. 87-114.
- van Vegchel, N., J. de Jonge, H. Bosma and W. Schaufeli (2005a), “Reviewing the effort-reward imbalance model: drawing up the balance of 45 empirical stud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60, pp. 1117-1131.

- van Vegchel, N., J. de Jonge and P. Landsbergis (2005b), “Occupational stress in (inter)action: the interplay between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6, pp. 535-560.
- Venn, D. (2011), “Earnings Volatility and Its Consequences for Househol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2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3v00zgslw-en>.
- Venn, D. (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3334316804>.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Mental Health: Strengthening Mental Health Promotion”, *Fact Sheet*, No. 220,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Winkelmann, L. and R. Winkelmann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Vol. 65, pp. 1-15.

부록 5.A1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 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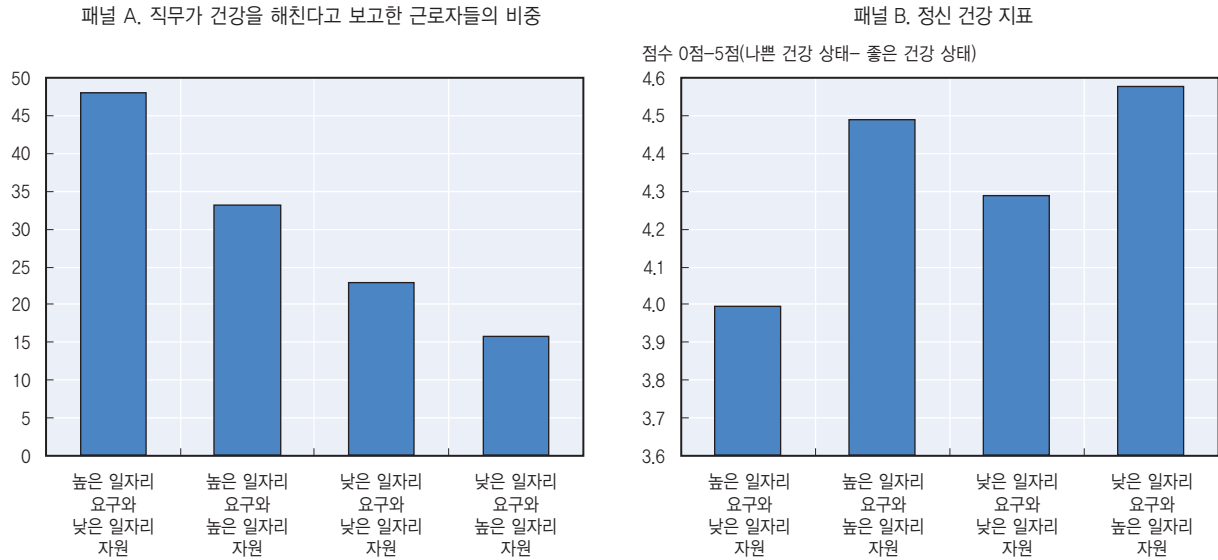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직장에서의 전반적 삶의 질을 결정할까? 직장내 건강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근무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추가하고 상쇄하는 효과가 모두 있음을 시사한다(Hu et al., 2011). 더 나아가 직장에서의 삶의 질에 대해서 보면 추가하고 상쇄하는 효과는 고립된 상태에 있는 각 개별 구성요소의 효과보다 더 중요하다.

웰빙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근로자 집단들이 특별히 흥미를 끈다. 첫번째 집단은 높은 직무 요구에 노출된 반면 가용한 일자리 자원은 거의 없는 근로자들이다. 이 집단의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낮은 웰빙과 직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번째 집단은 풍부한 일자리 자원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직무 요구로 특징지어지는 근로자들이다. 그림 5.A1.1는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들 간 상호작용은 근로자들의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각의 근로자에게 두 개의 종합지표(총 직무 요구와 총 직무 자원)는 이러한 두 영역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평균을 뺀으로써 만들어졌다. 이 두 요약지표의 고득점과 저득점을 규정하는 기준치는 해당 국가의 평균으로 설정된다. 그 결과, 4개의 근로자 집단들이 각 국가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부담이 큰 일을 하는 근로자들(높은 직무 요구와 낮은 직무 자원), 격려하는 근로 환경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낮은 직무 요구와 높은 직무 자원), 높은 수준의 자원 덕분에 일자리 요구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들, 직무 수준과 요구가 모두 낮은 근로자들.

그림 5.A1.1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로 환경의 질과 근로자들 개인에 의해 인지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22개의 유럽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부담이 큰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47%가 직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에 대한 높은 노출도를 보고하는데 이는 격려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보고한 수치인 15%와 비교된다(패널 A). 격려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집단은 부담이 큰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에 비해서 더 좋은 정신 건강을 보여준다(패널 B). 그림 5.A1.1은 직무 자원은 과도한 직무 요구가 근로자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높은 수준의 직무 요구에 부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근로자들(47%)과 비교하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직무 자원이 더 많은 근로자들은 직무가 건강을 손상시킨다는 보고를 훨씬 더 적게 한다(33%). 이러한 근로자 집단의 정신 건강 지표는 최상의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서 관찰된 지표와 비슷하다.

그림 5.A1.1. 직무 요구, 직무 자원과 근로자의 건강

비가중평균, 2010년



주: 비가중 평균은 22개의 OECD 국가들, 즉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을 포함한다.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표 5.2.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2010), 근로 조건에 대한 유럽 조사, 5편.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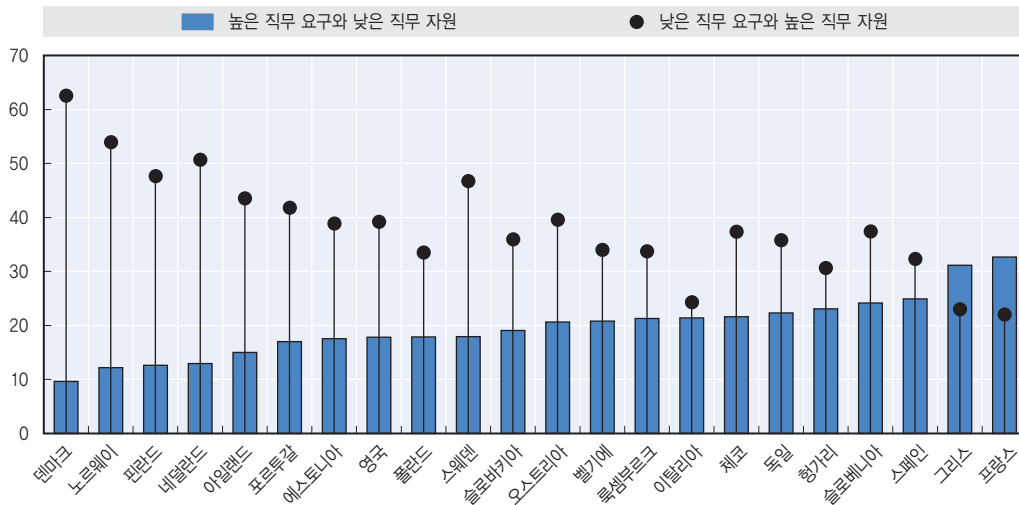
이 분석으로 어떤 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분석된 직장 조직과 직장 내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근로자의 웰빙에 중요하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직장에서의 전반적 삶의 질을 결정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태까지의 접근법은 같은 국가 내에서 다른 근로 환경의 건강 성과들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측정 프레임워크가 직장 내 삶의 질에 관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직장 내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간 비교를 하려면 모든 국가의 다양한 근로 환경들을 특징짓는 공통의 기준, 즉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의 수준을 규정할 공통의 기준(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예시적 목적을 위해서 이 두 기준은 분석 대상인 22개의 유럽 국가들의 두 종합지표의 평균치로 설정되었다. 모든 국가에서 각 개인이 직면하는 총 직무 요구와 총 직무 자원의 수준(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의 특징을 결정함으로써 예시적 목적의 기준을 통해서 각 국가에서 직장 내 낮은 삶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A1.2는 데이터가 입수 가능한 22개 유럽 국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양호한 근무 환경의 발생율을 보여준다. 그림은 양호한 근무 환경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보다 더 많이 발견되지만 국가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부담이 큰 직무에서 일하는 반면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약 10%의 근로자가 부담이 큰 직무에서 일한다. 반면에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에서 4명의 근로자 중 1명 미만이 풍부한 직무 자원의 혜택을 받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직무 요구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45%를 초과한다.

그림 5.A1.2. 선정된 유럽 국가들에서의 근무 환경의 질

높은 (낮은) 직무 요구와 낮은 (높은) 직무 자원을 보고한 근로자들의 비율, 2010년



주: 변수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표 5.2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found,(2010), 근로 조건에 대한 유럽 조사, 5편.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231>

이러한 국가간 비교는 주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본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국가간 비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직장 내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섹션에서 이용한 방법론은 다양한 직무 요구와 자원을 측정할(주로) 정성 변수들, 다른 척도에 의해 측정된 정성 변수들을 비교하는 표준화 과정, 좋은·나쁜 성취도를 확인하는 기준, 총 일자리 요구와 총 일자리 자원을 계산하는 합산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직장 내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측면들은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데 이는 국가간 평가를 할 때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OECD, 2013). 예를 들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한 근무 경험을 다르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정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직장 내 삶의 질의 유의미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제6장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 측정

미래의 웰빙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선택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지만 중요하다. 정책 입안가들, 시민들, 단체들은 무엇이 웰빙을 지속시키는지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현재의 의사결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장은 오늘날 측정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4가지 자원들(혹은 “자본”) 즉 경제적 자원, 자연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자원들은 자본의 총량, 자본의 분배,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 총량의 증가/감소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방법들 등, 지표들의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서 감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대시보드는 How's Life? 에 있는 현재의 다양한 웰빙 성과들의 대시보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 줄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웰빙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서론

현재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들이 미래의 웰빙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는데 미래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 다수(취향의 변화로부터 기술의 변화에 이르기까지)를 현재에 알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웰빙 성과를 결정할 자원들의 총량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자원들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 이 접근법이 웰빙의 측정을 위한 OECD 체계에서 제안되었고(제1장 참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측정을 위한 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 OECD 태스크포스에 의해서도 최근에 제안되었다(TFSD, 박스 6.1).

자원의 총량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유일한 결정요소는 아니지만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를 조사할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하는데, 즉 자원 총량의 축적 또는 고갈을 통해서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가용한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스 6.1. 지속 가능한 발전 측정을 위한 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 OECD 태스크포스

2009년에 유럽통계기관장 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는 지속 가능한 발전 측정을 위한 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 OECD 공동 태스크포스(TFSD)를 설립했다. TFSD의 주된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서 국가 기관들과 국제 기관들이 사용해온 매우 다양한 방법들을 망라한 폭넓은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TFSD는 웰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결합한다. UN의 후원으로 출간된 역사적인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처럼 TFSD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문제로 간주해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987). 그러므로 웰빙은 각 세대의 “필요”를 실제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

TFSD에 의해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개별 국가들의 필요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서 기획되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개발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들을 다루는 20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주제들”이 포함된다. 이 주제들은 또한 3개의 개념적 영역들에 배치되어, 인간 웰빙의 “현재 이곳(her and now)”, 미래 세대의 인간 웰빙 가능성을 가리키는 “미래(later)”,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발전 과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가리키는 “다른 곳(elsewhere)”의 웰빙을 살펴본다. TFSD는 또한 3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군을 제시했는데 각 지표군은 웰빙에 관한 3개의 다른 관점을 혼합해서 다룬다.

시간의 경과에도 웰빙을 지속시키는 것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다룬 태스크포스의 제안사항과 가장 확실한 연관이 있다. 이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TFSD는 “자본 접근법”, 즉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할 자본 자산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자산은 4개의 범주(경제적 자본,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로 분류된다.

개념에 초점을 맞춘 본 장은 **How's Life?**의 나머지 부분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본 장의 주된 목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지속시키는 자원들(또는 “자본의 총량”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자원들이 가장 유용하게 감시할 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장은 OECD 웰빙 프레임워크와 TFSD 권고사항을 출발점으로 삼고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자원 기반 접근법 또는 자본 기반 접근법이 **How's Life?**의 맥락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장은 4가지 자원(경제적 자본,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차원과 가구 차원에서 그 자원들이 어떻게 웰빙 성과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TFSD 보고서(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3) 에서 제시된 원칙들에 따라서, 4가지 자본 총량의 각각에 대한 폭넓은 측정 주제들과 예시 지표들을 찾아본다. 본 장은 웰빙의 지속성에 대한 측정의 우선순위는 자본 총량과 자본의 분배를 감시하는 것이며 특별히 자본 분배의 구체적 위험이나 취약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용한 보조 지표들은 자원이 웰빙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될 때의 효율성과 자원의 증가 또는 감소를 야기하는 특정 위험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자본 총량의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낮거나 불균형 상태로 여겨질 수 있는 기준점 나 티핑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특히 강조해야 한다(Stiglitz et al., 2009).

이 접근법이 산출할 수 있는 잠재적 측정방법의 넓은 범위를 고려하면 가장 간단하고 적절한 지표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웰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본 총량의 측정 방법들의 최종 대시보드는 점차적으로 **How's Life?**에 포함되어서 현재의 웰빙 지표들의 대시보드를 보완할 것이다.

웰빙의 유지: 자본 접근법

How's Life?에서 제시된 현재의 웰빙(제1장)을 측정하는 것은 성과, 즉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와 누구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성과들이 미래에 지속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웰빙을 견인할 요소들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장 유용한 접근법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자원들을 고려하는 것이고 “자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시간이 흘러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사회에 일련의 편익을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을 고찰하는 것이다.

자본의 개념은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본 총량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때문이다. 자본 총량의 축적 또는 고갈을 통해서 한 세대의 선택이 다음 세대가 이용 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로, 교량, 철도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 세대의 단기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미래 세대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자원 총량의 변동에 관한 감시와 투자와 관리를 통해서 자원의 고갈을 보충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자본 접근법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안내를 위해 국가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다”(UNU-IDHP(유엔대학의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인간개발프로그램)과 유엔환경계획(UNEP), 2012).

이러한 자본 접근법을 웰빙에 적용하려면 웰빙의 근본 동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웰빙의 동인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분야(보건 등)에서 상당히 진보했지만 다른 웰빙 측면들(일과 삶의 균형 등)에서는 지속적 동인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How's Life?**에서의 웰빙의 11가지 영역들 사이에 강력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는 어떤 웰빙의 성취는 또한 다른 웰빙 성과의 “생산”을 위한 동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좋은 건강 상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서 매우 가치를 가지지만 건강 상태는 또한 교육과 훈련, 사회적 활동 참여, 구직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웰빙의 동인과 그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그러므로 웰빙의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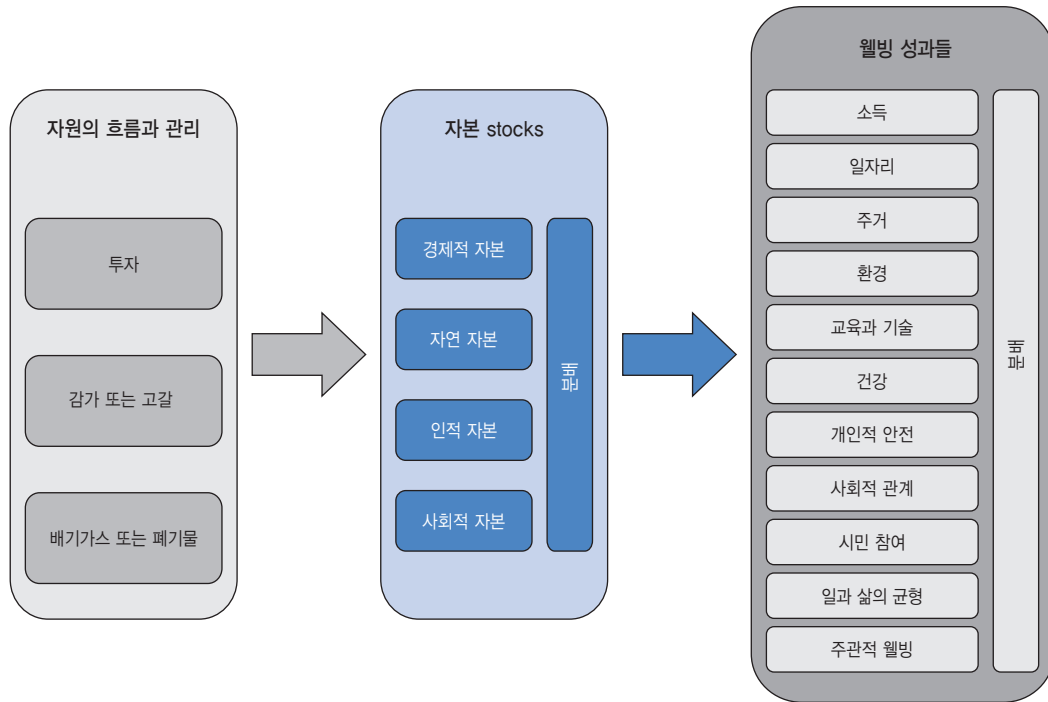
웰빙의 측정을 위한 OECD 체계와 TFSD는 4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자원들 혹은 자본들, 즉 경제적 자본,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3). 비슷한 분류가 뉴질랜드 재무부의 삶의 기준 프레임워크(New Zealand 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 2011년)와 영국 정부의 사회적 영향 태스크포스(Social Impacts Task Force)를 위해 작성된 Harper and Prince(2011) 논문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자본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장의 나중 부분에서 제시되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자본은 생산된 자본(인간이 만든 유형 자산: 건물, 기계와 수송 인프라 등; 지식 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예술 작품 등)과 금융 자본(현금, 예금과 채무 증서 형식의 부채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이 포함됨)을 말한다.
- 자연 자본은 자연 환경의 측면을 말한다. 광물질, 에너지 자원, 토지, 토양, 물, 나무, 식물과 야생동물과 같은 개별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생물 생태계, 즉 산림, 토양, 수중 환경과 대기 등의 각기 다른 환경적 자산들 간의 합동 기능과 상호작용 역시 포함할 수 있다.
- 인적 자본은 여러가지 다른 식으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지만 대개 개인의 지식, 기술, 역량, 건강과 같은 측면을 말한다.
- 사회적 자본은 아마도 4가지 자본 중에서 정의가 가장 덜 된 부분이지만 사회적 규범, 신뢰, 사회 내 다른 집단간 협력을 촉진하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른 정의에서는 거버넌스와 제도의 측면도 포함한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자본들은 어떤 공통 특징을 공유하는데 예를 들면 모두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며 또한 폭넓은 웰빙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다. 어떤 자본은 소유되며 소유자들 사이에서 이전이 가능한데 대개 이는 모든 유형의 경제적 자본과 일부 형태의 자연 자본(광물과 토지 등)에도 해당된다. 다른 자본은 함께 사용되어 경쟁상태를 유발하지 않는데 즉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대개 사회적 자본에 해당되며 생태계 등 일부 자연 자원의 성격에도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자산은 사용하면 가치가 하락하지만(인프라 등 생산된 자산) 다른 형태의 자원은 사용함으로써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교육과 기술, 협동적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 등)

그림 6.1은 자본에 대한 접근법을 예시한다. 경제적, 자연, 인적,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지속될 성과들은 11개의 How's Life? 웰빙 영역 측면에서 서술된다. 성과들의 분배는 How's Life?에서 현재의 웰빙의 주된 측면으로 강조되지만 자본에서 연구해야할 중요한 특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 자체는 투자(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취해진 행동들)와 감가 또는 고갈(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소)등 다양한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와 폐기물은 자본과 그 가치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공해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통해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기가스는 배기가스를 흡수하기위해 의존하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6.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본 흐름과 웰빙 성과의 연관관계



경제적 자본과 웰빙

경제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

경제적 자본은 아마 모든 자본들 중 가장 제대로 정의가 내려진 자본이며 국민계정체제(SNA)와 같은 회계 체계에 가장 잘 맞는 자본이다. 경제적 자본은 생산된 자본과 금융 자본을 의미한다. 생산된 자본(종종 “인간이 만든 자본”으로 설명됨)은 도로, 철도, 건물, 기계, 최종재와 중간재 등 유형자산과 지적 재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예술 작품 등 지식 자산으로 구성된다. 금융 자본은 현금, 예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매출채권, 사적연금펀드와 보험 적립금과 같은 자산을 포함한다(유엔, 2009a). 폐쇄 경제에서 금융 자본은 제로-섬 자원 즉, 모든 자산에는 동일한 가치의 부채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방 경제에서 한 국가 내에서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순 외국 자산과 부채가 국가의 금융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게 된다. 금융 자산이 실물 자산에 대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금융 자본은 가구 자산의 구성요소이자 경제 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UNECE, 2013).

TFSD에 의해 강조된 경제적 자본의 특정 범주는 “지식 자본”인데 생산된 자본의 하위군이다. 2008년 개정된 국민계정체제(유엔, 2009b)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지출은 지식 자본을 구축하는 투자로서 기록되지만 예전에는 중간 소비로 간주되었다.

지식 자본은 지속 가능성의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특히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을 통해 미래 웰빙을 달성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적 자본의 총량 외에 제도적 부문들(가구, 정부, 비금융 기관, 금융중개기관)간 그리고 각 제도 부문 내에서(예: 다른 유형의 가구들 간)의 분배는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UNECE, 2013). 예를 들어 만약 경제적 부가 인구 전체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하위 집단에 집중된다면 그 집단만이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할 것이며 그 결과 빈곤층의 웰빙의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이 역시 부문들 간 발생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 가구들이 빛이 늘어나는 반면에 기업들은 빛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가계정제도(유엔, 1993, 2009b)는 경제적 자본을 측정할 회계 체계를 개시하는 반면 OECD의 “자본 측정” 매뉴얼(OECD, 2001b; OECD, 2009)은 생산된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과 실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의 경제적 자본에 대한 지표들은 대개 1인 당 또는 가구를 기준으로 보고되지 않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고된다(정부총부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선택들은 매우 실용적인데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한 금융 자산의 액수는 은행이 근거지를 둔 국가의 인구 수 대비가 아닌 은행의 총 자산과 비교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본이 미래의 개인과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표들이 개인과 가구의 경험과 관련될 수 있는 척도를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인 당 측정은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과 금융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가구 단위의 자산 측정방법이 존재하지만(How's Life?에서 보고된 대로) 이러한 측정 방법들은 총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종종 배제한다.

경제적 자산과 웰빙의 관계

경제적 자산은 How's Life?에서 서술된 웰빙 성과들과 폭넓은 부문에서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 경제적 자본은 주거, 자산, 직업과 근로 소득을 포함한 사람들의 물질적 상태(또는 경제적 웰빙)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매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자본을 통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함으로써 웰빙을 얻는다.
- 생산된 자산과 금융 자산 모두 가구가 다양한 위험과 삶의 선택에 직면할 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치 저장의 역할을 한다. 가구 자산은 예기치 못한 소득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증대시킴으로서 사람들의 웰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 가구의 자산은 물질적 삶의 수준이 시간의 지나도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OECD, 2011c).

자연 자본과 웰빙

자연 자본의 정의와 측정

자연 자본은 광물과 목재 등 교역이 가능한 품목에서부터 대양과 대기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폭넓은 범위의 자산으로 구성된다. “환경 자산”과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 자산”은 환경의 개별 구성 요소들(물고기와 석유 자원 등)을 말하고 “생태계”는 여러 다른 환경 자산들(토양, 산림, 수중 환경과 대기에서 볼 수 있는 자산)의 공동 기능 또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2012년에 UN 통계위원회는 새로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을 발표했고, 이 계정의 중심 체계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했다.¹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중심 체계(UN통계위원회(UNSC), 2012)는 환경 자산을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생물적 그리고 비생물적 구성 요소”이며 함께 모여서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생물리학적 (bio-physical)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정의내린다(p. 124). 중심체계는 7개의 자산군을 열거하는데 표 6.1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6.1.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중심 체계 내 환경 자산의 분류

1.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
1.1. 석유 자원
1.2. 천연 가스 자원
1.3. 석탄과 토탄 자원
1.4. 비금속 광물 자원(석탄과 토탄 자원 제외)
1.5. 금속 광물 자원
2. 토지
3. 토양 자원
4. 목재 자원
4.1. 경작 목재 자원
4.2. 천연 목재 자원
5. 수산 자원
5.1. 양식 수산 자원
5.2. 천연 수산 자원
6. 기타 생물 자원(목재와 수산 자원 제외)
7. 수자원
7.1. 표층수
7.2. 지하수
7.3. 토양수

출처: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UN통계위원회(UNSC), 2012)

재생 자원과 비재생 자원 모두 자연 자산에 포함된다. 비재생 자원들은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자연적 자본이 사용되고 나면 다시 생성될 수 없다. 금속과 기타 광물, 토지, 석탄, 석유, 가스가 이에 포함된다. 재생 자원들은 “임계(critical)”의 수준을 넘지 않는 등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성장 또는 재생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² 재생 자원에는 관리되는 산림에서 얻은 목재, 사육된 양에서 얻은 양모, 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어류자원에서 얻은 물고기가 포함된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재생 에너지원(풍력, 파도, 수력, 태양열, 지열 등)이 많은 국가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을 물리적 자본 용어로 개념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원들은 사용을 통해서 고갈되지도 않고 예컨대 목재와 바이오매스와 같은 방식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 회계의 맥락에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할 기회를 토지의 가치에서 대신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는 수력의 경우 물과 관련).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물리적 단위와 화폐 단위 모두 환경 자산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화폐 가치의 범위는 자산의 경제적 소유주에 축적된 편익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는 그러므로 더 넓게 공유된 편익과 어떤 유형의 자연 자본(소유주가 없는 생태계와 생태계 관련 서비스 등)은 배제한다. 물리적 단위로 측정된 환경 자원의 범위는 이것보다는 넓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 내에서 환경 자원의 범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원에 초점을 맞춘다(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과 물질 등).

그러므로 자산의 간접적인 사용에서 얻은 비물질적 편익과 연관된 환경적 서비스(탄소저장과 홍수 완화 등)는 배제한다. 또한 자산은 국가의 경제적 영토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국경을 초월한 또는 “여러국가에 걸친”영향과 세계적으로 공유된 자산들(대기권과 대양 등)이 이러한 체계 내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실험적 생태계 회계(현재 협의를 위한 초안 상태임)는 중심 체계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물질적 편익과 비물질적 편익을 고려할 것이다. 그 측정의 초점을 생태계에 맞추는데 생태계는 특정한 공간적 지역 내에서 함께 기능하는 다른 생태 자원들의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에서 생태계는 “환경 구조, 과정과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하는 단위로서, 상호작용하는 생명 공동체(예: 식물, 동물과 미생물군 등)와 무생물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복합체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내려진다”(UN통계위원회(UNSC), 2012, 2013). 산림과 해양 생태계가 그 예인데 대기와 상호작용한다. 생태계 계정에는 생태계 자산의 총량과 총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흐름을 전달할 생태계의 능력(즉 생태계의 기능이 경제와 인류 전체에 제공하는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편익들은 생태계 자산과 인간의 웰빙 사이의 극히 중요한 연관성을 제공한다.

생태계의 기능 또는 서비스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측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한 가지 접근법(예: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OECD, 2010a)은 생태계 서비스를 i) 공급 서비스(식량, 생화학물질, 유전 자원, 담수와 연료 등의 공급); ii) 조절 서비스(기후 조절, 수질 정화, 토양유실 조절, 수분 작용 등); iii) 문화적 서비스(교육과 영감 제공, 레크리에이션, 영적인·심미적 가치 등); iv) 부양 서비스(서식지 제공과 물과 영양소 순환 등)로 분류한다.³ 그러나 매우 발달된 생태계 서비스 측정은 탄소 흡수 용량이다. 해양의 산성도, 평균 해면수 높이와 대기 내 탄소 농도 등과 같은 측정 방법들이 흡수 용량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환경적인 삶의 질”(OECD, 2011b; OECD, 2011c) 이라 일컬어지는 환경 조건들(대기의 질, 수질, 위락 또는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자본과 성격이 일부 같아서 시간의 경과에도 비교적 오래 지속되며, 비교적 느리게 축적되지만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여러가지 웰빙 성과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 관점에서 보면 환경 조건들(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순환시키는 생태계 등)을 전달하는 생태계 자원들을 측정하는 것이 선호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된 생태계 측정 방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청정 공기, 깨끗한 물, 녹색 공간의 가용성을 자본 접근법에 의거해서 측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나 실제로 자원들 중 일부는 기초 생태 자산을 해당 웰빙 성과와 연결짓는 중간 변수로서의 성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자연 자본과 웰빙의 연관성

자연 자본은 인간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편익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편익은 예컨대 깨끗한 공기 혹은 음용수 또는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산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나, 천연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 또는 식량 가격과 영양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작물의 수확 감소로 인한 정치적 갈등 등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정을 수반하는 좀 더 긴 인과적 사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OECD의 녹색 성장 전략(2011b; 2011c)은 경제적 생산 측면에서 자연 자산의 역할을 설명한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연 자본과 웰빙 성과 사이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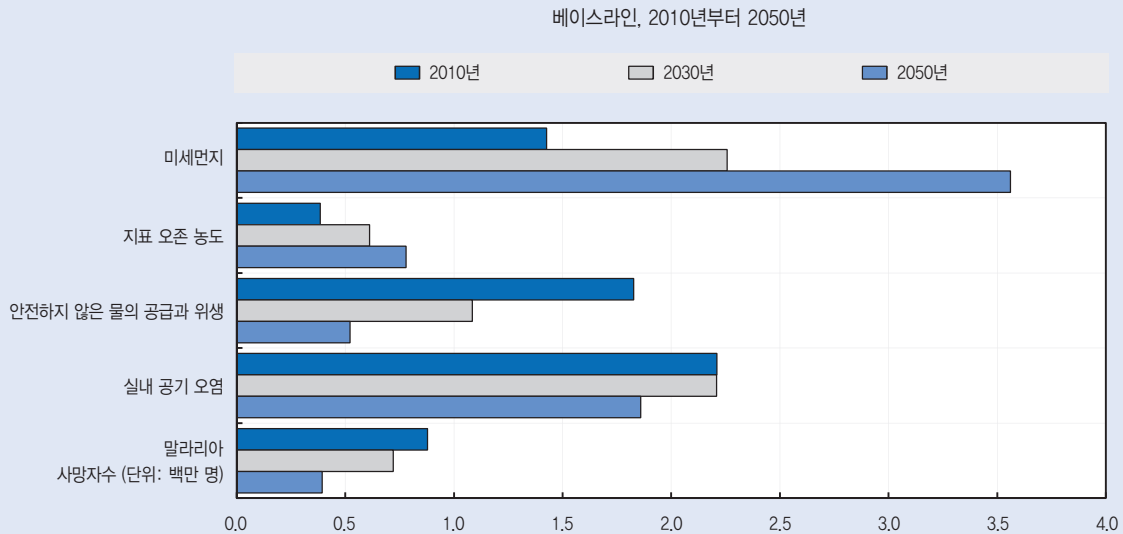
- 자연 자본은 “환경의 질”의 웰빙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는 깨끗한 공기, 청정한 물, 녹색 공간의 접근성, 현지 환경에 대한 만족과 같은 자원들은 본질적 가치를 가지며 건강, 사회적 관계,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과 같은 다른 웰빙 성과에도 기여한다(OECD, 2011c).
- 자연 자본은 대개 다른 형태의 자본의 생산에 근거가 되는 에너지와/또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원자재, 물, 공기, 토지와 토양과 같은 투입과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의 개발에 기여하는 환경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물리적 공간, 주거 공간, 식량, 깨끗한 공기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 자연 자산은 소득과 자산의 생성을 돕는다. 정의에 따르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에서 설명된 것처럼 환경 자원은 직접적인 물질적 편익(경제 활동을 위한 공간, 에너지, 물질을 제공함)을 제공한다. 투입물에는 연료, 식량, 담수, 생화학물질, 유전 자원 등 위에서 서술된 다양한 범위의 환경 자산이 포함된다. 세계은행(2011)은 2005년에 자연 자본이 저소득 국가의 총 경제적 부의 30%를 차지하며, 중저 소득 국가의 총 경제적 부의 25%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는 보통 다른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은 아름다운 주변 경관에 살고 있는 가치를 포함하며 농지의 경제적 가치는 그곳에 포함된 자연 자산을 반영한다(유엔, 2009a). 국가들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계(그리고 실험적 생태계 계정)를 채택하기 시작함에 따라 자연 자본의 경제적 편익을 설명할 능력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 자연 자본과 이와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 그리고 주거의 질, 레크리에이션 기회, 여가 시간, 공동체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는 조절 서비스(수질 정화와 토양 유실 조절 등), 흡수 기능(오염물질, 폐기물, 탄소를 흡수 또는 저장할 능력 등),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홍수와 자외선 등), 농업 및 생활 공간의 공급, 수분 작용과 같은 기능의 제공이 포함된다.

자연 자본은 또한 미적, 영적 그리고 심리적 편익뿐만 아니라 교육적, 위락적, 여가적 편익을 제공한다.

박스 6.2. 자연 자본과 신체적 건강

자연 자본과 인간의 건강 사이에 매우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자연 자본은 주거 공간(shelter)을 마련할 자원과 열과 빛 에너지를 제공한다.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은 인간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도시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거의 백이십 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시 실내 공기 오염은 거의 이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산된다(세계보건기구(WHO), 2009). 2050년까지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조기 사망자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두배 이상 늘어서 연간 삼백육십 만명에 이르고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2). 자연 자본은 또한 말라리아와 같은 특정 질환의 범위와 전파를 억제하는 조절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6.2. 선정된 환경 위험으로 인한 전세계 조기 사망건수



주: “안전하지 않은 물의 공급과 위생”은 아동 사망률만을 언급한다.

출처: OECD(2012a), 2050년까지의 환경적 전망: 비행동(Inaction)의 결과, OECD 출판국,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89250>

예를 들면, 녹지 주변에 거주하는 것은 정신적 웰빙의 개선(White et al., 2013; van den Berg et al., 2010; Maas et al., 2009)과 질환의 위험 감소(Maas et al., 2009)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심각한 대기 오염은 삶의 만족도 하락(Silva and Brown, 2013)과 연관성 있다. 박스 6.2는 자연 자본과 신체적 건강 사이의 일부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인적 자본과 웰빙

인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

OECD(2001a)는 인적 자본을 “개인들의 내부에 체화된 기술, 역량, 특징으로써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웰빙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UNU-IHDP와 유엔환경계획(UNEP, 2012)에 의하면 인적 자본은 교육, 기술, 암묵적 지식, 건강으로 구성된다. 많은 연구자들과 기관들은 현재 경제적 생산에 대한 가치에 중점을 둔 인적 자본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Boarini et al., 2012), 건강과 교육은 또한 다른 웰빙 성과의 생산에 광범위하게 기여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의 성과이기도 하다(OECD, 2011c).

인적 자본의 개념은 경제적 생산을 위한 노동의 질과 소득의 차이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에 뿌리를 둔다(e.g. Schultz, 1961; Becker, 1962). 개념적으로 동일한 양의 근로(시간)를 하고 다른 투입물은 같다면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성과 근로소득은 높아질 것이다. 전문적 기술 외에 인적 자본의 개념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동기와 행동의 측면으로 확대되었다(OECD, 2001a).

“건강 자본”은 그 자체가 구체적 자산으로서 종종 개별적으로 인식된다(e.g.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UNU-IHDP and UNEP, 2012). 이러한 맥락에서 TFSD는 미래의 건강 성과들(고혈압과 비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언급했는데 이는 종종 자본의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양육, 정규 교육, 직업현장 훈련, 비공식 훈련, 건강 행동들(흡연, 알코올, 다이어트, 운동 등과 관련된 행동) 등 많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적 자본의 총량은 이민자의 유출 또는 유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자본과 많은 형태의 자연 자본과는 달리 인적 자본은 사용에 따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예를 들면, 기술을 활용하면 할수록 기술이 강화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비자발적 실직 등으로 인해) 기술은 약화된다. 이는 인적 자본은 웰빙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른 형태의 자본과는 다른 “운동 법칙(laws of motion)”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Laroche et al., 1999; Boarini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은 축적하는데 시간의 소요되고 충분한 투자가 없으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예: 기술은 노이 슬거나 혹은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

인적 자본이 개인들에게서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그 자본의 개별적 “소유주”가 사망하면 고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기술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세대간 전달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들은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인적 자본의 유지는 이민자(Stark et al., 1998; Beine et al., 2008)와 인구변화(Liu, 2011)뿐만 아니라 공적/사적인 시장 및 비시장, 교육에 대한 투자, 훈련과 건강(Abraham and Mackie, 2005)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적 자본은 특별히 세대 간 인적 자본의 전달에 있어서 특정한 역할을 한다(Abraham and Mackie, 2005).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학력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부모의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OECD, 2012b)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부모의 개입은 더 나은 학생 수행도와 연관이 있다(OECD, 2012c).

인적 자본의 정의가 망라하는 광범위한 특징들 때문에 측정 방법은 대개 교육과 기술 수준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 고용과 같은 노동 통계들, 기대수명과 같은 보건 지표들을 포함한다(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3; Liu, 2011). 측정 방법은 화폐 단위와 물리적 단위 둘 다 존재한다.

인적 자본의 화폐적 가치 추정

인적 자본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실험적인 지표는 존재한다(검토를 하려면 Boarini et al., 2012 참조). 생애소득 접근법(Jorgenson and Fraumeni, 1989; Liu, 2011)은 한 국가의 총 인구, 인구구조(나이와 성별 기준), 기대수명, 교육 수준, 고용 패턴과 근로소득에 관한 정보를 결합한다. 생애소득 접근법을 대체하는 접근에는 세계은행에 의해 채택된 간접적(간류) 접근법(2006; 2011)⁴과 비용 기반 접근법(cost-based approach)이 있는데, 비용 기반 접근법은 개인, 가구, 고용주, 정부의 의해 과거에 수행된 인적 자원에 대한 일련의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접근법들은 전체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광범위한 비시장 편익을 배제한다(OECD, 2010b) 그러나 화폐적 평가액은 교육이 범죄와 건강에 미치는 비생산(non-production) 영향에 대해 추정된 바 있다(Lochner and Moretti, 2004; Lochner, 2011).

인적 자본의 물리적 측정 방법

인적 자본의 경우에 지속 가능성을 보고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물리적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학력의 측정 방법:** 최종 학력,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평균 학교 교육 연수, 또는 현재 젊은이들의 기대 학업 지속 연도 등.
- **기술과 역량의 측정 방법:** 학생들이(학교 안팎에서)습득한 기술과 역량의 평가 방법에는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평가(PISA)가 있고 성인의 경우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가 있음.
- **건강 상태의 측정 방법:** 기대 여명 또는 사람들의 기능에 질병이나 장애가 제약을 가하는지 정도를 반영한 질보정기대여명(quality-adjusted life expectancy) 등(예: 유럽통계청의 건강생활년 측정 방법, 2009, 2011).

이러한 변수들은 결합해서 전체 인간 자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기대 여명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과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고등 교육을 받고 숙련된 노동력이지만 종종 질환을 앓으면 자신의 인적 자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적 자본과 웰빙의 연관성

How's Life? 체계에서 인적 자본과 웰빙 성과들 간에 강력한 연관성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인적 자본은 경제 생산과 소득 창출에 필수적 투입물이다.** 인적 자본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의 측면에 대해 2012 포용적 국부 보고서(Inclusive Wealth Report :UNU-IHDP 와 UNEP, 2012)는 인적 자본은 영국에서 경제의 생산 기반의 90%, 미국에서 78%, 노르웨이에서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 성장 모형”(예: Romer, 1990; Barro and Sala-i-Martin, 1995)은 또한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인적 자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개인 차원에서 인적 자본은 개인의 생애에 걸쳐 소득의 흐름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할 수 할 수 있는 개인 소유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Boarini et al., 2012).
- **인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웰빙 성과들을 망라하며 다른 비화폐성 웰빙 성과들에 기여한다.** 예를 들면, 양호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상태는 교육, 훈련, 노동 시장, 사회적 관계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건강은 또한

주관적 웰빙과 강력한 관련성이 있다(OECD, 2011c).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및 기술 수준은 개인 차원에서 높은 근로소득과 더 큰 고용 가능성, 더 나은 건강 상태, 더 높은 시민의식과 정치적 참여와 연관이 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 낮은 범죄율, 더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 더 높은 정치적 안정과 연관이 된다(UN, 2009a, 2013; OECD, 2011c).

OECD(2010b)는 교육이 시민/사회적 참여, 건강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설명하며 이러한 관계의 인과적 매커니즘에 대해 알려진 것들(그리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것들)을 도표로 그렸다. 이 연구는 광범위한 본질적 편익들이 인적 자본의 개념 안에 묶여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회적 자본과 웰빙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

사회적 자본은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유형의 자본 중에서 가장 정의가 덜 되었고 아마도 다른 유형의 자본과 흐름의 구조를 단순 비교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일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대체 평가방법들이 제안되었지만 그것들의 초점은 “집단 내 혹은 집단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와 이해를 가진 관계망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비교적 넓은 정의가 시사하는 것보다 대개 더 협소하다”(OECD, 2001).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4가지 중요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Scrivens and Smith, 2013):

- 개인적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망(친구, 친척 등)과 사회적 행동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든지 혹은 전화나 이메일로 소식을 교환하는 등 이러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 사회 관계망 지원은 사람들의 개인적 관계의 직접적 성과이며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 각 개인이 이용 가능한 정서적, 물질적, 실제적, 재정적, 지적 또는 직업적 자원을 말한다.
- 시민 참여는 자원봉사, 정치적 참여, 집단 가입,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동 등 사람들이 시민의 삶과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신뢰와 협동 규범은 사회적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유된 가치와 기대를 말하며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4개의 개념 모두가 사람들의 현재 웰빙을 평가하는데 중요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은 신뢰와 협동 규범이라는 사실이 제시되었다(Scrivens and Smith, 2013).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신뢰와 협동 규범은 느리게 형성되고 시간의 경과에도 비교적 오래 지속되며 세대를 통해 전승된다. 둘째 신뢰와 협동 규범은 강하고 광범위한 유용한 가치를 갖고 사회 제도(시장, 국가 인프라, 사회적 안정)의 기능과 집단행동에 기여하는데 이는 결국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 발전의 기타 핵심 측면을 뒷받침한다.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 가장 자주 간주되는 2가지 유형의 신뢰는 보편적 신뢰(즉, 낯선 사람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인데,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정치 제도, 사법, 경찰, 언론이나 기타 제도적 체제와 관련된다. 규범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공식적 규칙이며 사회적 모델, 사회화(정규 교육을 포함함)와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즉, 공식 처벌 또는 사회적 추방과 같은 비공식적 처벌)를 통해서 집단 또는 공동체로 확산된다.

위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네 가지 접근법 외에도 정치적·제도적·법적(PIL) 조치들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로서, 혹은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들로서, 혹은 사회적 자본의 성과들로서 간주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다(Scrivens and Smith, 2013).

OECD(2001a)는 정치적·제도적·법적(PIL) 조치들은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작동하는 규칙과 제도들을 설명하는 것이며 자본 자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른 정의에 따르면 제도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UNECE, 2013와 세계은행, 2011 등). 제도와 법적 체계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도 어느 정도 지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투자가 없으면 악화되는 등 자본의 개념의 일부 다른 특징을 공유한다. 제도를 사회적 자본의 일부로 또는 별개의 범주로 간주되어야 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제도가 미래에 시민들의 웰빙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한도에서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ira d'Ercole and Salvini, 2003).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연·경제적 자본과는 다른데, 주로 관계에 기반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경제 또는 자연 환경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의 집단 혹은 전체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된다. 사회적 자본은 또한 투자부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신뢰와 협동 규범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장점은 사회적 자본이 사용에 따라 가치가 저하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자주 사용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⁵ 인적 자본의 경우처럼, “소유주”들 사이에 이전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를 경제적 자본과 같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기보다는 이용 가능한 경향이 있다. 이 점이 자본의 광의(경제외적)의 정의와 일치하지만 이는 사회적 자본을 화폐적 가치로 따지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임을 시사한다.

사회적 자본의 물리적 측정 방법

신뢰와 협동 규범 혹은 정치적, 제도적, 법적 조치들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Hamilton and iu(2013)는 제도적 질과 사회적 자본과 같은 자산들의 결합 가치가 연구 대상 이었던 고소득 국가들의 총 국부의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뢰에 대한 주된 측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볼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또는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표준 질문인데 이 질문은 많은 국가적·국제적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Scrivens and Smith, 2013). 특정 제도와 관련된 신뢰 역시 조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국가 정부 또는 지역 정부, 경찰, 사법제도 등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를 묻는 조사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접근법들은 덜 직접적이지만 다소 어감의 차이가 나타나는 측정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여러 기관들에 대한 인지된 청렴성(부패의 부재), 대표성, 수행도에 관한 문항들을 통해서 신뢰와 관련된 태도를 측정한다. 제도적 신뢰에 대한 측정 방법들은 또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등과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 정치체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문헌에서 협동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 규범의 개념화와 측정 방법에 대해 관심은 사회적 자본의 경우보다 덜 한다. 협동 규범은 다른 집단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관용과 차별의식을 측정함) 또는 타인의 유익에 대한 믿음(보편적 상호주의를 측정함)을 묻는 질문들을 통하여 측정된다. 예를 들면, Knack and Keefer(1997)은 공공 교통요금을 내지 않거나 정부 수당을 부정하게 요청하는 등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시민 협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거버넌스 혹은 정치적·제도적·법적 조치들을 측정할 표준화된 접근법은 없다. TFSD는 제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투표율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지만 투표율은 자본 측정 방법이 아니라 추이 측정 방법에 더 가깝다. 웰빙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거버넌스 혹은 정치적·제도적·법적 조치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에 전승될 수 있고, 광범위한 웰빙 성과들과 분명하고 확립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자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박스 6.3).

박스 6.3. 웰빙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자본: 통계상 문제

사회적 자본을 정의 내리는 접근법이 다양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개발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Scrivens and Smith's(2013)는 “데이터뱅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했다. 현재까지 국가적 조사와 국제적 조사의 대략 50%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항이 거의 일치되지 않으며 용어와 초점이 국가간 다르고 데이터는 희귀한 상태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 원천의 대부분은 비공식적이지만(국제적 조사 프로그램, 세계 가치 조사와 껌럽세계조사의 몇몇 모듈 포함)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추론은 한계가 있는데 작은 표본 크기 등의 요소들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통계청의 최초의 “삶의 질” 지표 군은 EU-SILC(소득과 생활여건에 대한 EU 통계 조사)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거버넌스와 기본권”의 영역들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측정치를 포함할 것이다. 유럽통계청은 모듈을 순환시킴으로써 미래에 이러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국제적 혹은 국경을 초월한 측정 방법들(국가간 협업 규범 등)에 관한 폭넓게 인정된 지표들이 없고 이 분야는 개념적 그리고 측정상 발전이 여전히 필요한 분야이다. 사회적 자본을 다룬 많은 연구문헌이 지역 또는 국가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환경, 안보, 지식창조, 금융 안정 등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역할은 개발과 웰빙의 지속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어왔다(Kaul et al., 1999; Sachs 2008). OECD(2013a)는 국제적 협력의 사례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접근법 사용했다. 반면에 TFSD는 국경을 초월한 영향의 측정 방법으로서 국제 기관에 대한 기여 자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스위스연방통계청이 다국적 조약을 국제 제도적 자본의 지표로서 사용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 자본 량의 측정을 위해 TSFD가 제안한 지표는 없다.

거버넌스 또는 정치적·제도적·법적 조치들 측정할 표준화된 접근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측정 방법들을 위한 통계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작업이 될 것이며 “국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를 호주의 발전을 측정하는데 별도의 영역(pillar)으로서 인정하기로 한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통계체계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ABS, 2012). 웰빙의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미래 세대에 전달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범위의 웰빙 성과들과 명확하고 확립된 연관성이 있는 거버넌스와 기관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유럽통계청은 소득과 생활여건(EU-SILC)에 대한 EU 통계 조사의 특별 모듈(AHM)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다. 개인적 관계, 사회 관계망 지원, 시민 참여와 관련된 측정치들은 사회적 참여에 관한 AHM 2006(AHM 2006 on Social Participation)을 통하여 수집되었고 사회 관계망 지원, 신뢰에 관한 측정치는 주관적 웰빙에 관한 AHM 2012(AHM 2013 on Subjective Well-Being)에 포함된다.

사회적 자본과 웰빙의 연관성

신뢰, 협동 규범, 정치적·제도적·법적 조치들은 How's Life?에 포함된 웰빙 성과에 몇가지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성과를 개선한다.** 높은 신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식 계약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Fukuyama, 1995; Knack and Keefer, 1997). 이는 결국 개인 차원의 고용과 소득 등 경제 영역과 비경제 영역에서의 교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마찬가지로 공통적 기대는 교환의 정확한 조건에 대한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정부의 수행도는 또한 높은 신뢰의 이득을 얻고(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 관료들의 합의, 협업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Knack, 2000).
- **자원의 효율적 할당을 촉진한다.** 신뢰와 협동 규범은 예컨대 자연 자원 관리 혹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과 같은 시장 또는 정부 주도의 개입을 대체할 수 있는 집합적인 실천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신뢰와 협동 규범에 근거한 단체 행동 전략은 대개 산림, 농지 또는 어류 등 공동 자원을 관리할 가장 효율적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질의 유지에 기여한다. 집합적인 실천을 위한 메커니즘 또한 다양한 공공재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데 시장의 효과적 기능(과 폭넓은 웰빙의 몇가지 측면들)이 이에 달려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 모두 적용되며 환경, 안보, 금융시장 안정, 재산권 존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의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Kaul et al., 1999). 환경 친화적 행동에 관한 규범과 가치는 또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UNECE, 2013).
- **삶의 질과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뢰 수준이 높고 더 잘 협력하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Helliwell and Putnam, 2004; Helliwell and Wang, 2010; Hudson 2006), 더 건강하고(Lochner et al., 2003), 교육 수준이 더 높으며, 시민 참여 의식이 높고(Putnam, 2000),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Sampson et al., 1997). 이러한 특징들의 인과적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나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웰빙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oleman은 교육적 성취를 지지하는 규범이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학교 퇴학을 줄여주는지를 보여주었고(Coleman, 1988), Sampson et al.(1997)은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율이 하락함을 발견했다.

자본 stocks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추가적인 고려사항들

자본의 측정 방법은 화폐적 단위와 비화폐적(또는 “물리적”) 단위로 존재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표들을 수집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측정치들을 합산해야 할까 혹은 측정치의 대시보드로 제시되어야 할까? 자본을 국가 수준에서 측정하는 것이 충분한가 혹은 어떤 경우에 국제적인 지표들이 필요할까?

Stiglitz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TFSD는 물리적 측정 방법과 화폐적 측정 방법 모두를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을 지속시키는 자본 총량을 감시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대시보드들은 국가 단위에서 편찬될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 대시보드들은 특정 자본 총량과 관련된 좀더 광범위한 국제적 영역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본 접근법이 중요한 구성 체계를 제공하지만 자본총량의 변화가 갖는 구체적 정책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항상 간단하지 만은 않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총량 측정방법을 좀 더 세밀하게 분해하거나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보완되어야 (정책) 의사결정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다. 특히, 부문 간 또는 가구 간 자본총량의 분배는 미래에 웰빙이 특별히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사회 내 불균형을 알아내거나 사회내 집단들을 밝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투자, 감가, 배기가스와 폐기물 등 자본총량과 관련된 다양한 흐름에 대한 정보는 오늘 취한 행동이 미래 세대에 남겨질 자본총량의 질과 양의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본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방법들은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자원의 신중한 사용으로 이끌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지표들은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이 시간이 경과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도록 고안되었다.

하나의 중심 측정도구나? 또는 지표들의 대시보드냐?

자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단일 중심 측정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세계은행, 2006, 2011; UNU-IHDP 과 유엔환경계획(UNEP), 2012).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1인 당 총 국부의 수준이 하락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포괄적 국부 지수(UNU-IHDP and UNEP, 2012)는 국가의 자연 자본, 인적 자본, 산업화된 자본의 1인 당 추정치를 결합하고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이를 연구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의 가치를 측정하고 총합을 내는 과정은 자원 관리에 내재한 상충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즉 만약 자본의 한 가지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자본들은 총 자본적 토대의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치가 상승해야만 한다. 1인 당 평가는 또한 인구 증가 혹은 감소의 효과가 계산에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성공 혹은 실패만을 결정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정책)의사 결정자와 일반 대중이 의사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확한 화폐적 추정치가 필요하다.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한다는 맥락에서 총계를 낼 때 두 가지 주된 문제가 존재한다. 첫번째 문제는 화폐 단위로 모든 유형의 자본 총량(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의 총 가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두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유형의 자본 총량이 서로 대체(교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적 그리고 가구의 웰빙 성과의 수준을 동일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나 하는 점이다.

웰빙을 위한 stocks의 화폐적 가치 추정

자본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공통의 단위는 화폐이다. 가치평가는 특정 자본이 미래 세대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편익의 총 가치(한 자본의 잠재가격이라고도 알려짐)를 추정하는 것이다. 잠재가격은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 현재 시장 가격에 근거하며 이러한 가격들은 총 자본의 미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시장 가격의 이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목적으로 할 때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시장 작동의 불완전성과 관련되는데, 시장 가격이, 경제적 생산 과정에서 자산을 사용함에 따른 웰빙 비용과 웰빙 혜택을 포함하여, 자산의 진정한 웰빙 가치를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러한 외부적 효과들(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며 활동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의 축적된 활동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더 잘 반영해서 시장 가격을 정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모든 외부적 효과들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으며(Tol, 2009) 이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부의

추정치들은 탄소 배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예: UNU-IHDP and UNECE, 2012). 그런데도 웰빙의 모든 영역들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은 상당하다.

두번 째 화폐가치화의 어려움은 대부분의 자본이 생산하는 웰빙 편익의 다수는 단순히 시장가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속 가능성 회계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은 때때로 “사회적 가치” 로 알려진 그러한 비시장적 요소들의 화폐적 가치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추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Demos, 2010; Social Enterprise UK, 2012) 또는 “투자로 인한 사회적 수익”(nef, 2013; Cabinet office, 2009; centre for Social Justice, 2011)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새로운 기법이 다른 비시장 요소들과 연관된 삶의 만족도 달성에 근거한 가치의 평가를 위해 또한 개발되었다(Fujiwara and Campbell, 2011; and OECD, 2013b에서 검토됨).

그러나 현재 이러한 평가 방법들로 인적, 사회적, 자연 자본이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웰빙 편익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방법들은 구체적 프로젝트와 정책들(e.g. Cabinet Office, 2009; Social Enterprise UK, 2012) 혹은 구체적 재화와 용역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자본 stocks 자체의 미래 웰빙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데이터 질과 채택된 가정에 대한 추가 요구가 생길 것이다.

다른 자본들의 대체가능성

자본들의 집합은 다른 자본들이 완벽하게 대체가능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대체는 한 형태의 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본 투입물들의 다른 조합을 이용하여 동일한 산출물이 생산됨을 의미한다. 완벽한 대체가능성은 대체 옵션이 무제한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한 자본의 고갈이 동일한 가치의 다른 자본이 증가함으로써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완벽한 대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소득을 창출할 광물 자원의 고갈은 이 소득이 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에 충분히 재투자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광물 자원이 고갈될 미래에 경제 성장을 창출할 의지할 만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영 석유 기금과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은 자연 자원(석유와 가스)이 금융 자본으로 전환되고 있는 예인데 석유와 가스가 고갈되고 나면 금융 자본이 수익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Heal, 2011).

만약 대체가능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합쳐진 총 부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평가는 다른 자원들 사이의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을 감출 수 있다. 그러한 불균형이 미래 자산 가격의 변화로 드러나는데 이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속불가능한 추세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때에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자산은 처음부터 가격이 없다. 어떤 경우에 대체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자본의 변화가 되돌려질 수 없는 특정 “tipping points” 또는 “임계치(critical thresholds)”를 넘어가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아래에서 논의됨). 실제로 지속 가능성 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법은 자본 stocks 들 사이의 완벽한 대체가능성이 아닌 제한된 대체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UNU-IHDP and UNEP, 2012; OECD, 2011b; Heal, 2011).

자본의 화폐가치화와 대체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려하면 물리적 측정 방법들과 화폐적 측정 방법들로 구성된 지표들의 대시보드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킬 자원들을 감시하는데 가장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일 수 있다. 대시보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합격/불합격 시험이 갖는 강력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구체적 문제 영역들을 강조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자본의 분배

사회 내 다른 집단들 사이의 웰빙 성과들의 분배는 현시점에 웰빙의 핵심 구성요소이다(OECD, 2011c).

마찬가지로 자본에의 접근과 이에 대한 집단별 그리고 개인별 차이가 생기는 방식은 자본이 미래의 웰빙 성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 자본이 평등하게 분포된 국가일수록 더 큰 소득 평등을 경험한 것으로 발견되었다(Alesina and Rodrik, 1992; OECD and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00). 최근 OECD 분석은 또한 지난 수 십년간 교육 수준의 상승세가 임금 격차의 증가를 상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고한다(OECD, 2011d).

자본의 변화가 인간 웰빙의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시골 지역사회의 웰빙은 종종 자연 자원의 변화로 인한 악영향에 더 취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사회는 부의 원천으로서 자연 자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으며 종종 지역의 자본이 고갈될 때 다른 곳으로부터 자연 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를 수입할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Crifo and Laurent(2013)는 사회적 불평등과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환경적 위협과 재난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경제적 자본의 경우에 자본의 구성과 분배는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경제체제 내에서의 불균형이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TFSD는 경제적 자산과 부채는 분리되어야 하고 다른 부분들(정부, 가구, 금융 중개기관과 비 금융권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프랑스경제분석위원회(Conseil d'analyse économique)와 독일경제정책자문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0)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민간 부분의 순고정 자본 형성부터 공공 부분의 부채 지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시 수준에서 가구들 사이의 경제적 자본의 분배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이 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OECD의 가구 소득, 소비, 부의 분배에 관한 통계 체계(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등에서 역시 강조되었다(OECD, 2013c).

자본의 공간적 분포

자본의 측정에 대한 대부분의 회계 접근법(예: 국민계정제도(SNA)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들은 국가 경계선 내의 자본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본을 측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자산과 생태계의 측정은 지방(sub-national) 단위의 상세한 측정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생태계는 특정 공간적 지역과 연관지어서 대개 정의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분포 측면에 대한 관심은 지역 단위의 측정방법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예컨대 국가 내에서 혹은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 간 자원에 대한 접근성 또는 사용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지역 단위로 이루어질 개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측정방법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 측정 프레임워크를 지역 단위에 적용할 능력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자본의 글로벌한 성격은 웰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감시가 세계적 관점을 요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떤 자본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고(예: 대기 등) 국가들끼리 서로 다른 국가의 자본(식량 생산을 위한 생태계 등)에 의존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 웰빙의 지속 가능성은 그 국가의 자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러한 사실은 측정과 자본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자연 자본의 일부 요소들의 경계는 국경을 초월한다. 대기와 해양(이들이 제공하는 흡수 능력과 다른 서비스들)은 특정 영토에 귀속시키기가 어렵다. 다른 유형의 자본들 역시 공유되는데, 국제적 협력, 재산권의 인정, 또는 평화 협정이 공유되며 글로벌화하는 사회적(또는 제도적) 자산의 하나의 예이다. 반대로 국가간 분쟁은 사회적 자본의 글로벌 자본을 위협하는 공유된 부채될 간주될 수 있다.

국가간 상호의존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자산들은 특정 지리적 장소에 국한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다른 곳의 미래 웰빙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대우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신약의 개발로 이끌 수 있다. 지식과 금융 자산은 모두 강력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다. Kaul et al.(1999)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 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안정, 건강과 평화는 “글로벌 공공재”이며 그것의 유지에 국제적 협력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다는 사실은 자본에 관한 국가 지표들만으로는 미래의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른 정책과 관련 지표들

국경을 초월한 영향들

TFSD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영향들의 특정 세트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개발 경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영한다. TFSD에 의해 강조된 요소들에는 금융 이전(공적개발원조(ODA) 등), 재화와 용역의 수입, 이주, 지식 이전이 포함된다. 고임금국가들이 환경적 압력을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들로 수출하는 관행이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UNECE, 2013). 한가지 예가 탄소 누출인데 탄소 집약적 기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자국 내의 탄소 생산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탄소 발자국 측정 방법은 국내 소비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영향의 일부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한 국가의 소비가 해외에서 들어온 자원의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측정 방법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물의 이용· 생물학적 다양성 발자국(footprint)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한 계산은 복잡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즉 웰빙 성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은 그러므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 발전은 다양한 자연 자원의 사용 면에서 효율 상승으로 이끌 수 있다. 반면에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는 농토의 생산성 변화로부터 건강 위협을 통한 인적 자본에 대한 악영향에 이르기까지 자본 stocks에서 파생된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ECD, 2012a).

자원 생산성 혹은 효율성이 측정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대개 지표는 투입 단위당 생산된 산출량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OECD의 녹색성장 전략(2011b; 2011c)은 경제적 성과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자연 자원 사용을 측정할 다양한 생산성 측정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이산화탄소 생산성 측정 방법들이 포함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당 산출된 GDP 또는 실제 가치분 소득을 관찰한다. 효율성의 다른 측정 방법들에는 영국 신경경제단(NEF)의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2012), 유엔개발계획(2013)의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생태 발자국과 관련된 웰빙 성과의 관찰이 포함된다(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 참조, 2012).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일부 자연 자본은 다른 자연과 경제적 자산이 웰빙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 되는 방식과 똑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지는 않는다(위를 참조). 이는 이러한 자본들에 적용된 효율성 또는 생산성은 소비 자체로의 회귀가 아닌 투자에 대한 수익(또는 웰빙 영향)의 측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2010b)는 교육 투자에 대한 건강 및 사회적 통합 수익과 인적 자본의 다양한 화폐적 추정치의 좌표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Boarini et al.(2012)이 검토한 것처럼 기술 수준 상승에 기인한 경제적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웰빙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은 자본의 화폐적 가치측정과 비슷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한다. 자본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웰빙 성과들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웰빙의 다차원적 성격은 또한 효율성의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자본의 변화는 광범위한 웰빙 영역에 걸친 변화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투입과 산출이 웰빙의 “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정 방법은 관리하기 쉬운 투입-산출 관계군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의 연구 과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과 흐름

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흐름에 대한 정보는 오늘 취해진 조치가 미래 세대에 전달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책과 관련된 흐름(flows)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투자 - 이러한 맥락에서는 자본의 증가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의미한다(인적 자본의 경우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출 등).
- 감가 - 자본의 가치하락을 의미함(기계의 마모로 인해 생산된 자본 가치의 하락, 기술이 쓸모없게 되므로 인적 자본 가치의 하락). 자연 자본의 경우에 자원고갈은 매장량에서 자연자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유전에서 석유를 추출함).
- 이산화탄소 배출과 폐기물 - 이 문맥에서는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물(by-products)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됨(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적 자본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 토양과 물 그리고 영양소 균형을 통해 자연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농지 내 질소잉여물)

현재 혹은 미래에 자본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역시 때때로 “위험요소들”로서 묘사된다. 재앙적 사건들(글로벌 금융 위기 혹은 자연 재난)과 사회 내 느린 변화(비만율의 증가 등)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위한 자본 자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위험 요소들 혹은 “조기경보 신호”는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일부 접근법에서 크게 강조된다.⁶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경우에, 프랑스 독일(Franco-German) 보고서는 투자(생산된 자본과 R&D), 공공부채(public debts), 위험요소들(자산 거품의 팽창을 시사할 수 있는 사적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의 상황 등)을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프랑스-독일 보고서에서 강조된 위험 요소들에는 온실 가스 배출과 비-재생가능 자원들의 고갈을 포함한다. 약간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여 Rockström et al.’s(2009)의 지구촌의 경계에 대한 작업은 미래의 웰빙을 위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가리키면서 환경에 대한 되돌릴수 없는 변화가 자연이 감당할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 담수 사용, 토지 사용, 대양 산성화, 성층권 오존 고갈, 질소와 인의 순환 주기과 관련된 한계치가 포함한다. Stiglitz et al.(2009)는 위험한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에 대한 근접도를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의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상당한 양의 연구 결과물이 있는 기후변화가 이에 해당된다(Stern, 2009).

인적 자본의 경우 미래의 건강에 대한 매우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밝혀졌고(미국 국립 연구 회의, 2010) 현재 인구를 대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요소들은 비만, 흡연, 신체활동 등이 포함된다. 유럽통계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에는 EU내 독성 화학물질의 생산, 도시의 대기 오염 노출과 오존에 의한 대기 오염에의 노출 등 다양한 “건강 결정요소들”이 포함된다.

How's Life?의 맥락에서 웰빙의 지속을 위해 제안된 측정 방법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자본 접근법의 사용은 기존의 “지속 가능성” 측정 방법들의 새로운 구성과 새로운 데이터 군의 창조 혹은 병합을 요구한다. 웰빙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의 범위가 그렇게 넓기 때문에 측정 방법의 선택과 발전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에 대한 집중을 요구한다.

4가지 자본의 측정지표와 지표의 비교 범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핵심” 지표들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각 유형의 자본은 지표들의 대시보드들을 통해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대시보드들에는 화폐적 측정 방법들과 그리고 물리적 측정 방법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자본의 대부분의 측면들은 국가 규모에서 측정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 (특히 자연 자원에 대한) 국제적 혹은 글로벌 수준의 지표들 역시 필요할 수 있다. 1인 당 자본에 근거한 측정 방법을 제공하면 적절한 경우에 인구 변화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자본들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분야 간(정부, 기업, 가구 등), 집단 간(성별, 연령, 교육, 수입, 혹은 시골/도시 지역 등)과 그리고 공간적 위치(국가의 각기 다른 지역들 등)별 비교가 포함될 것이다. 가장 적절한 비교의 형태는 해당 자본이 어떤 것이냐와 웰빙 지속에 있어서 위험이 어디에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본의 경우에 자산과 부채는 정부, 가구들, 금융중개기관들과 비금융기업들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NECE, 2013). 가구 간 부의 비교는 중요한 요소로서 또한 강조되어왔다(OECD, 2013c).

자본을 측정하는 목적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원의 순 자본의 양, 즉 부채를 뺀 자산을 파악하는데 있다. 실제로 측정의 초점은 때때로 자산(자연 자원에서의 담수 자원 혹은 사회 자본에서의 협력 규범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경우에 측정 방법들은 부채에 더 방향이 맞춰질 것이다(자연 자본의 경우에 대기의 질은 대부분 대기의 오염에 관한 측정 방법들에 의해 파악됨).

“핵심” 자본을 감시 가능하게 하는 지표들 외에 추가적인 “정책 관련 지표들”군은 자본의 핵심군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경을 초월한 영향(발자국 측정 방법들을 통해 파악된 것처럼), 자본과 감가상각 등 다양한 자본 흐름, 미래에 자본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려진 위험 요소들(인적 자본의 경우 비만은 미래 건강에 위험을 제기한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자원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사람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웰빙을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혹은 그 반대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6.2는 How's Life?의 맥락 안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감시하는데 가장 유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의 유형들을 요약하고 있다. 4가지 각 핵심 자본에 대한 중심 측정 방법들의 선택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중요 원인의 연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표 군들(국민계정제도(SNA), 환경경제통합계정(SEEA)과 TFSD 등)들에 대한 기존의 제안들은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표 6.2.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감시할 측정 방법 유형들

핵심 지표들: 자본과 분배		정책 관련 지표들			
자본의 측정(자산과 부채)	자원분배의 측정	초국경적 영향	효율성	자본 흐름	기타 위험 요소들
자연, 인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자본. 물리적 그리고/또는 화폐적 측정 방법들(1인 당 기준으로 보고됨). 지역적, 국가적, 국가간 혹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감시.	국가간. 국가내 다른 집단간 혹은 다른 부문간.	탄소·물·토지 발자국.	자본 투입 대비 웰빙 성취물들.	투자. 감가상각/고갈. 이산화탄소 배출/폐기물.	자연, 인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진 측정 가능한 위험들.

표 6.3은 각 자본에 대해 여태까지 알려진 측정 테마들을 개괄하고 그것들의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의 예를 제시한다. 이것들은 TFSD가 밝혀낸 중요 측정 방법 테마들의 하위 군들이며 “이후에” 즉 미래 세대의 웰빙을 위한 자본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국민계정제도(SNA)과 기존 OECD 연구와 더 많은 일관성을 갖도록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

표 6.3.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측정 테마와 예시 지표들

자본	측정 주제	예시 지표들
자연	환경 자산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중심 체계의 분류 SEEA와 일관된 개발 예정의 하위 테마들과 지표들 경험적 생태계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대기 • 대양 • 산림 • 생물학적 다양성 환경적 삶의 질을 결정할 조건들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 토지 토양 자원들 목재 자원들 수중 자원 기타 생물자원들 수자원들 생태계, 생물학적 다양성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세계기상기구) 오존층 상태(성층권 오존 농도) 산림 식피 등 토지 사용(식량농업기구; OECD 환경 전망) 종의 풍부도(OECD 환경 전망) 멸종 위기에 처한 종(OECD 환경 데이터) 분진 물질에 대한 도시의 노출(OECD 환경 전망) 수질 위락용 공간과 녹지의 가용성
인적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 교육	선택된 OECD 국가들에 대한 생애소득 접근법 추정치(Liu, 2011) 교육 수준(OECD 교육 통계치) 국제성취도평가(PISA: 학생 역량)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성인 역량)(OECD, 근간 예정)
	건강	기대수명(OECD 보건 데이터), 건강수명(유럽통계청)

6.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 가능성 측정

자본	측정 주제	예시 지표들
사회적	신뢰 기관/거버넌스 협력 규범	타인에 대한 신뢰(유럽사회조사;갈렘세계조사) 시민을 참여시키는 제도의 질과 과정(OECD, 추가 개발 예정) 사회적 기능을 지탱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 즉 관용과 상호호혜를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가치와 기대(개발될 예정)
경제적	생산된 자산 금융 자본(비생산 자산의 일부)금융 자본(비생산 자산의 일부)	지식 자본을 포함한 생산된 자산(OECD 국민계정 데이터) 부채를 빼고난 자산(OECD 국민계정 데이터)

주: 테마들과 지표들은 TFSD 웰빙의 “이후 세대를 위한” 측정 테마들의 하위군(subset)인데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i) 자연 자본의 측정 방법들은 환경적 자원에 대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구성(reconfigured)되었다.
- ii) “기후”라는 테마는 생태계”라는 더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된 대기로서 이해된다.
- iii) “대기의 질”과 “수질”이라는 테마들은 “삶의 환경적 질을 결정하는 조건들”이라는 새로운 테마 아래에 분류되었는데 여기에 오락용 공간과 녹지 공간의 가용성이 추가되었다.
- iv) “협력 규범”이 Scrivens and Smith(2013)의 주장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추가되었다.
- v) “지식 자본”은 국민계정제도(SNA)에 따라 “생산된 자본”아래에 포함된다.
- vi) 일부 OECD의 특정 데이터 원천들은 또한 “예시 지표들” 칼럼 아래에 포함된다.

표 6.3에서 확인된 일부 테마들의 경우에 관련된 국가적 측정 방법들은 몇몇 OECD 국가들에서 이미 존재하며 잠재적 데이터 원천들은 해당 괄호안에 제시된다. 다른 측정 방법들은 아직도 이행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에서의 환경적 자산, SEEA 경험적 생태계 계정 내에서의 생태계 측정 방법들, 국민계정제도(SNA)에서의 지식 자본이 있다. 수질, 위락용 공간과 녹지, 제도, 협동 규범의 총량(stock) 측정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는 대개 투표율과 오수 처리 접근성 등 흐름(flows) 혹은 정책 관련 지표들을 통해 측정된다.

기존의 측정 방법들과 어떠한 새로운 측정 방법들은 How's Life? 지표들로서 선택되기 위해서는 제1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질적 기준에 맞추어서 좀더 일반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표 6.3의 마지막 칼럼에 제시된 다수의 테마들과 측정 방법들은 How's Life?와 다른 국가적 이니셔티브들에서 현재의 웰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부 웰빙 성과들은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른 웰빙 성과들을 이끌거나 결정하는 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측정 방법 상의 중복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사이에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Stiglitz-Sen-Fitoussi 위원회(2009)는 지속 가능성은 현재의 웰빙에서 분리해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웰빙과 미래 웰빙과 관련된 측정 방법의 융합(conflation)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지표들 사이의 어느 정도의 중복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교육, 건강, 자산과 같은 요소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웰빙을 위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개념적 분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웰빙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유지시키는 것을 돕는 자본은 따로 제시되는 두개의 다른 대시보드를 통해 감시되어야 한다.

향후 통계적 과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자본의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지표들의 대시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의존하는 것인데 미래의 웰빙이 광범위한 지표들(자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과 현재 일부만 알려진 여러 위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 아젠다(과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웰빙에 필수적이지만 대체가능성이 제한된 “결정적으로 중요한” 종류의 자원들을 밝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된 자원의 4가지 폭넓은 범주 내에서 이러한 자본의 하한치(lower bounds) 혹은 중요 기준치(중요 임계값)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알려진 대체성의 한계가 있는 자본은 면밀히 감시되어야 할 가장 확실한 후보이며 이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웰빙의 모든 성과에 필요한데 여기에는 어떻게 자본의 각기 다른 투입이 미래의 웰빙 성과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지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신뢰, 사회 규범과 기타 삶의 질 변수들(주관적 웰빙, 건강, 개인적 안전과 시민 참여 등) 간의 관계를 지탱하는 인과적 기제(인과관계 메커니즘)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Scrivens and Smith, 2013). 교육이 사회적 참여, 시민 참여, 건강과 임금과 어떻게 연관되는나을 밝힐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OECD, 2010b; Boarini et al., 2012). 경제적 그리고 자연 자원의 경우에 시스템 차원(전체 경제 차원 또는 전체 환경 차원)에서의 측정 방법들을 개인과 가구 차원에서 미래 웰빙 성과와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인과관계의 복잡한 연결망이 존재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자본의 소유권과 접근성의 분배와 어떻게 이것이 미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는 것이 이러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웰빙 지속 가능성을 위한 측정 과제

본 장 전체에서 다수의 데이터 공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공백들은 위의 표 6.3에서 제안된 지표군이 수집(편찬)되기 전에 메워져야 한다. 어떤 분야는 자본 자체의 정의와 측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른 경우에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흐름, 위험 요소들과 효율성에 대한 이해와 측정을 동반(수반)한다.

특히 지속 가능성에 관한 통계적 문제를 다룰 때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 경제적 자본의 측정은 단연 가장 많이 발전된 분야이다. 그러나 동 분야에도 여전히 중요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제도적 부문들의 부의 보유에 관한 데이터와 여러 인구집단 간 부의 분배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의 OECD 지침(OECD, 2013c and 2013d)은 이 분야의 가구의 미시 통계의 질과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식 자본의 측정 역시 새로 개정된 국민계정제도(SNA: 유엔, 2009b)에 포함되었고 그럼으로써 연구개발(R&D) 지출이 R&D 자본을 늘리는 투자로서 기록될 것이다.
- 환경경제통합계정 체계를 2012년에 국제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상당한 진보이며 향후 몇 년 내에 자연 자산에 대한 더 나은 데이터를 산출할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 자산 계정을 개발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측정을 생태계로 확대하는 것이 경험적 생태계정을 향해 나아갈 우선사항인데 이를 위해서 UN통계위원회(UNSC)는 상세한 연구 의제를 설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체계)들은 자연 자본 측정 방법들을 개선할 상황을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통계치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적 자본의 경우에 비록 몇 가지 물리적 측정 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인적 자본의 총량을 파악하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체로서가 아니라 분리된 구성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적 자본의 물리적 측정 방법들과 교육, 건강, 직업과 근로 소득 영역에서 현재의 웰빙 성과들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웰빙과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인적 자본 사이의 더 명확한 개념적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생애 소득 접근법(lifetime income approach)과 같은 화폐적 추정 기법들은 이것을 달성할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현재 광범위한 데이터 한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건강, 고용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웰빙 편익은 반영하지 않는다. Boarini et al.(2012)는 데이터 질과 비교 가능성, 국민계정제도(SNA)와의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적 자본(또는 교육)에 대한 경험적 위성계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의 근간 예정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성인 인지 능력과 직무 능력에 대한 측정 방법들(PIAAC: 국제성인역량조사)은 또한 인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건강을 인적 자본에 대한 측정 지표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은 발전이 필요한 또 다른 분야인데 건강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s)는 특별히 어려운 분야임이 지적되었다(유엔환경프로그램(UNEP)과 UNU-IHDP, 2012).
- 사회적 자본은 개념적 이해와 측정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Scrivens and Smith(2013)는 그러한 측정 방법들의 정책적 이용 가능성에 근거하여 미래 통계 개발과 일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지적하였다. 이는 통계적 과제의 기초 작업이며 지속 가능성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 신뢰와 협동 규범에 대한 더 나은 측정 방법 개발을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 영역들을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정치적, 제도적 그리고 법적 장치들(거버넌스 포함)은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적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웰빙 성과들을 연결할 인과관계 매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연구는 특정 측정 방법들의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가 가장 적절한 지표들의 선택을 지시(안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지속 가능성의 국제적 영역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간과된다. 한 국가의 웰빙 추구가 다른 나라에 의해 경험되는 미래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특히 자연 자원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양질의 글로벌 통계치, 발자국 측정치 등 초국가적 영향에 대한 측정 방법들의 추가적 개발과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
- 마지막으로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 여러 자원들 또는 자본의 분배(접근성)를 반영할 측정 방법들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한데 자본의 분배가 미래에 어떻게 웰빙 성과들이 분배될 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누가 자본을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는 자본 관리를 누가 책임 지느냐에 대한 합의점을 제공해 준다.

결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지속시키는 것은 최소 현재 수준의 웰빙을 미래에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웰빙의 지속 가능성은 현재 웰빙 성과들로부터 따로 분리되어서 측정되어야 하며 웰빙의 장기적 동인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가장 유망한 측정 접근법은 자원 또는 “자본”을 기준으로 구성된 접근법으로 보이는 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OECD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웰빙 측정을 위한 OECD 체계에서 구현되었다. 이 접근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을 결정하거나 이끄는 것을 돕는 경제적, 자연적,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지속적인 자본을 고찰한다. 물리적 지표들과 화폐적 지표들로 모두 구성된 대시보드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자본을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본의 변동을 감시하는 것은 웰빙이 시간의 경과에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첫단계이다. 자본에 관한 데이터와 자본의 변화가 미래 웰빙을 위협에 처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본이 위험할 정도로 낮거나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시기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 관련” 지표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자본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관련 지표들은 특정 위협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자본이 변하는 시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측면들과 웰빙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간결한 지표군들을 선택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적·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미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 지표들의 최종 대시보드는 현재 웰빙 성과들의 대시보드에 대한 보완장치로써 **How's Life?**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웰빙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미래 세대의 웰빙 지속에 유용한 자원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주

1.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2012)는 경제와 환경 간 상호작용에 관한 비교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와 회계 규정을 설정할 통계 체계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국민계정제도(SNA) 체계와 호환(양립)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
2. “갱신 가능성(회복 가능성)”은 조건적인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포괄적 국부 보고서 2012(Inclusive Wealth Report 2012)에서 국제인간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University 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UNU-IHDP)과 유엔환경계획(UNEP, 2012)은 물고기를 원칙적으로 재생가능하지만 stock의 재생에 도전과제를 제기하는 (어려운) 속도로 “매장된”된 하나의 자원의 예로서 강조한다.
3. 몇 개의 대안적 분류 접근법들의 존재한다. 예를 들어 de Groot, Wilson and Boumans(2002)는 생태계의 중심적 기능들을 i) 조절; ii) 서식지; iii) 생산; iv) 정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 EEA, 4.3판, 2013년 1월)에 의해 개발된 생태서비스의 국제공통 분류(CICES)에 따르면 i) 공급 서비스, ii) 조절과 유지 서비스, iii) 문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4. 잔존가치 접근법(residual approach)은 한 국가의 총 부(각국의 미래 소비 흐름의 총 할인 가치를 통해서 구함)를 추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의 유형적 구성 요소들(생산된 자본과 시장가격이 있는 자연 자본의 요소들)의 합을 뺀으로써 인적 자본의 가치를 추산한다. 그러면 잔존 가치는 모든 “무형” 자본을 반영하는데 여기에는 인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과 시장 가격이 부재한 자연 자본의 측면도 포함한다.
5. 이러한 문맥에서 “사용”은 그 자본으로부터 얻어진 편익을 대개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신뢰는 사업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본은 이러한 방식의 사용을 통해서 파괴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경우에는 만약 양 당사자가 거래로부터 기대했던 편익을 얻는다면 강화될 수도 있다.

6. 예를 들어, 프랑스-독일 보고서인 경제 성과,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의 감시(프랑스경제분석위원회(Conseil d'analyse économique)과 독일경제정책자문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0)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때 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경고 신호”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Abraham, K.G. and C. Mackie (eds.) (2005), *Beyond the Market: Designing Nonmarket Accounts f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Research Council Panel to Study the Design of Nonmarket Accounts,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Washington, DC.
- Alesina, A. and D. Rodrick (1992), “Distribution, Political Conflict and Economic Growth: A Simple Theory and Some Empirical Evidence”, in *The Political Economy of Business Cycles and Growth*, A. Cukierman, Z. Hercovitz and L. Leiderman, Cambridge, MA: MIT Pres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2012: Summary Indicators*, www.abs.gov.au/AUSSTATS/abs@.nsf/mf/1370.0.55.001 (last accessed 22 July 2013).
- Becker, G.S. (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5, pp. 9-49.
- Beine, M., F. Docquier and H. Rapoport (2008), “Brain Drain and Human Capital 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inners and Losers”, *The Economic Journal*, Vol. 118/528, pp. 631-652.
- Boarini, R., M. Mira d'Ercole and G. Liu (2012), “Approaches to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A Review of Country Practic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2/0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8zlm5bc3ns-en>.
- Borucke, M., D. Moore, G. Cranston, K. Gracey, I. Katsunori, J. Larson, E. Lazarus, J.C. Morales, M. Wackernagel and A. Galli (2013), “Accounting for Demand and Supply of the Biosphere's Regenerative Capacity: The National Footprint Accounts' Underlying Methodology and Framework”, *Ecological Indicators*, Vol. 24, pp. 518-533.
- Cabinet Office (2009), *A Guide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Office of the Third Sector, www.neweconomics.org/publications/entry/a-guide-to-social-return-on-investment (last accessed 22 July 2013).
- Centre for Social Justice (2011), *Outcome-based Government: How to improve spending decisions across government*, Policy Report from the Social Return on Investment Working Group, January, www.centreforsocialjustice.org.uk/publications/outcome-based-government (last accessed 22 July 2013).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Supplemen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Sociolog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Social Structure*, pp. S95-S120.
- Conseil d'analyse économique and the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0),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Joint Report as requested by the Franco-German Ministerial Council, the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Occasional Reports series, 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expertisen.html (last accessed 22 July 2013).
- Crifo, P. and É. Laurent (2013), "Enjeux environnementaux et question sociale : Pourquoi et comment lier justice sociale et écologie ?", *Références économiques du Conseil éc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No. 23-2013,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IMG/pdf/023.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Daly, H. and J. Cobb (1989), *For the Common Good*, Beacon Press, Boston.
- de Groot, R.S., M.A. Wilson and R.M.J. Boumans (2002), "ATypology for the Classification, Description and Valuation of Ecosystem Functions, Goods and Services", *Ecological Economics*, Vol. 41, pp. 393-408.
- Defra (2010), *Measuring Progres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2010*,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London, http://sd.defra.gov.uk/documents/SDI2010_001.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3), *Towards a Comm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cosystem Services (CICES)*, Version 4.3, January 2013, <http://cices.eu/> (last accessed 22 July 2013).
- Eurostat (2011),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1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rostat Statistical Books, European Union,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31-11-224/EN/KS-31-11-224-EN.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Eurostat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09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rostat Statistical Books, European Union,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78-09-865/EN/KS-78-09-865-EN.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Hamish Hamilton, London.
- Fujiwara, D. and R. Campbell (2011), *Valuation Techniques for Social Cost-Benefit Analysis*, HMTreasury and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guidance.
- Global Footprint Network (2010), *National Footprint Accounts, 2010 edition*, www.footprintnetwork.org (last accessed 22 July 2013).
- Gough, I. (2013), "Carbon Mitigation Policies, Distributional Dilemmas and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42/2, pp. 191-213.

- Halpern, D. (2005), *Social Capital*, Polity Press, Cambridge.
- Hamilton, K. and G. Liu (2013), "Human Capital, Tangible Wealth, and the Intangible Capital Residual",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No. 2013/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840h633f7-en>.
- Hardin, R. (2004), *Trust and Trustworthines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Harper, G. and R. Prince (2011),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impacts of policy and their effects on wellbeing*, Paper 3, a paper for the Social Impacts Task Force, DEFRA Evidence and Analysis Series, www.defra.gov.uk/publications/files/pb13467-social-impacts-wellbeing-110403.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Heal, G. (2011), "Sustainability and its Measure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700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www.nber.org/papers/w17008 (last accessed 22 July 2013).
- Helliwell, J. and R.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Vol. 359, No. 1449, pp. 1435-1446.
- Helliwell, J. and S. Wang (2010), "Trust and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59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www.nber.org/papers/w15911 (last accessed 22 July 2013).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Vol. 59, No. 1, pp. 43-62.
- ISTAT (2013), *Rapporto Bes 2013: il benessere equo e sostenibile in Italia*, www.misuredelbenessere.it/ (last accessed 22 July 2013).
- Jorgenson, D.W. and B.M. Fraumeni (1989), "The Accumulation of Human and Non-Human Capital, 1948-1984", in Lipsey, R.E. and H.S.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s, Investment, and Wealt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Juniper, T. (2013), *What has Nature Ever Done for Us? How Money Really Does Grow on Trees*, Profile Books, London.
- Knack, S. and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4, pp. 1251-88.
- Knack, S. (2000),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504, World Bank, New York, <http://elibrary.worldbank.org/content/workingpaper/10.1596/1813-9450-2504> (last accessed 22 July 2013).
- Kaul, I., I. Grunberg and M.A. Stern (1999),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New York.

- Laroche, M., M. Mérette and G.C. Ruggeri (1999), *On the Concept and Dimensions of Human Capital in a Knowledge-based Economy Context*, Canadian Public Policy/Analyse de Politiques, Vol. XXV(1), pp. 87-100.
- Liu, G. (2011),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for Comparative Analysis: An Application of the Lifetime Income Approach to Selected Countr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Vol. 2011/06, No. 4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3h0jnn9r5-en>.
- Lochner, K., I. Kawachi and R. Brennan and S. Luka (2003), “Social Capital and Neighbourhood Mortality Rates in Chicago”,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56, pp. 1797-1805.
- Lochner, L. (2011), “Non-Production Benefits of Education: Crime, Health and Good Citizenship”, *NBER Working Paper*, No. 1672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www.nber.org/papers/w16722 (last accessed 22 July 2013).
- Lochner, L. and E. Moretti (2004), “The Effect of Education on Crime: Evidence from Prison Inmates, Arrests and Self-Repor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1, pp. 155-189.
- Maas, J. et al. (2009), “Morbidity is Related to a Green Living Environmen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63, pp. 967-973.
-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Biodiversity Synthesis”,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World Resources Institute, Island Press, Washington, DC, www.unep.org/maweb/en/Framework.aspx (last accessed 22 July 2013).
- Mira d’Ercole, M. and A. Salvini (2003)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of Social Protec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1667753377>.
- Morrone, A., N. Tontoranelli and G. Ranuzzi (2009), “How Good is Trust?: Measuring Trust and its Role for the Progress of Societ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Vol. 2009/0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0633873086>.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 *Accounting for Health and Health Care: Approaches to Measuring the Sources and Costs of Their Improvement*, Panel to Advance a Research Program on the Design of National Health Accounts, Committee on National Statistics. Division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Neumayer, E. (2012), “Human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for People-Centered Development*, Vol. 13, No. 4, pp. 561-579.
- nef (2013), *Our Work: Social Return on Investment*, New Economics Foundation, www.neweconomics.org/projects/social-return-investment (last accessed 22 July 2013).

- nef (2012), *The Happy Planet Index: 2012 Report – A global index of sustainable well-being*,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www.happyplanetindex.org/assets/happy-planet-index-report.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New Zealand Treasury (2011), “Working Towards Higher Living Standards for New Zealanders”, *New Zealand Treasury Paper*, Vol. 11/02, May, p. 3, www.treasury.govt.nz/publications/research-policy/tp/higherlivingstandards/tp-hls-may11.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Nordhaus, W.D. and J. Tobin (1973), “Is Growth Obsolete?”, in Moss, M. (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p. 509-564.
- OECD (2013a),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463-en>.
- OECD (2013b),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3c),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30-en>.
- OECD (2013d),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OECD (2012a),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The Consequences of Inac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2246-en>.
- OECD (2012b), “Does parental education affect students’ chances?”, in *Education at a Glance 2012: Highlight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_highlights-2012-34-en.
- OECD (2012c), *Let’s Read them a Story! The Parent Factor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32-en>.
- OECD (2011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11b), *Towards Green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1318-en>.
- OECD (2011c),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1356-en>.
- OECD (2011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 OECD (2011e), *Quality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OECD Statistical Activiti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td/qualityframeworkforoecdstatisticalactivities.htm (last accessed 18 July 2013).
- OECD (2010a), *Paying for Biodiversity: Enh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0279-en>.
- OECD (2010b),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6319-en>.
-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2009: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8476-en>.
- OECD (2001a),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9515-en>.
- OECD (2001b),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Measurement of Capital Stocks,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and Capital Servic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3260-en>.
- OECD and Statistics Canada (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1762-en> (last accessed 22 July 2013).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s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 Rockström, J. et al. (2009), "A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 *Nature*, Vol. 461, pp. 472-475.
- Sachs, J. (2008), *Common Wealth: Economics for a Crowded Planet*, Allen Lane, London.
- Sampson, R., S. Rau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Vol. 277, No. 5328, pp. 978-924.
- Schultz, T.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1, No. 1, pp. 1-17.
- Scrivens, K. and C. Smith (2013), "F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Capital: An Agenda for Measure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 Silva, J. and Z. Brown (2013),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Valuing Environmental Quality by Combining Life Satisfaction Surveys and GIS Data",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Vol. 2013/0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840hfpwkb-en>.
- Skidelsky, R. and E. Skidelsky (2012), *How Much is Enough? The Love of Money and the Case for the Good Life*, Allen Lane, London.

- Social Enterprise UK (2012), *The Social Value Guide: Implementing the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Social Enterprise UK, www.socialenterprise.org.uk/uploads/files/2012/12/social_value_guide.pdf (accessed on 22 July 2013).
- Stark, O., C. Helmenstein and A. Prskawetz (1998), "Human Capital Depletion, Human Capital Formation, and Migration: a Blessing or a 'Curse'?", *Economics Letters*, Vol. 60, No. 3, pp. 363-367.
- Statistics New Zealand (2008),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2008*, 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environment/sustainable_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aspx (last accessed 22 July 2013).
- Stern, N. (2009), *A Blueprint for a Safer Planet*, The Bodley Head, London.
- Stiglitz, J.E., A. Sen and J.P.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www.stiglitz-sen-fitoussi.fr/en/index.htm (last accessed 22 July 2013).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3), *Sustainable Development – A Brief Guide 2013: 17 key indicators to measure progress*,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01/new.html?gnpID=2013-267 (last accessed 22 July 2013).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2*,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22/publ.html?publicationID=4066 (last accessed 22 July 2013).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4),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MONET: Final Report – Methods and Results*, www.bfs.admin.ch/bfs/portal/en/index/themen/21/22/publ.html?publicationID=1598 (last accessed 22 July 2013).
- Tol, R.S.J. (2009), "The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2, pp. 29-51.
- United Nations (2011), "As world passes 7 billion milestone, UN urges action to meet key challenges", *Press Release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News Centre*, 31 October 2011,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0257&Cr=population&Cr1=&Kw1=7+billion+milestone&Kw2=&Kw3=#.Ue0-yEpKaz4 (last accessed 22 July 2013).
- United Nations (2009a),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the OECD and the Statistical Office for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9b),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09c),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United Nations, New York.
-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 The Rise of the South: Human Progress in a Diverse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New York, http://hdr.undp.org/en/media/HDR_2013_EN_complete.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UNECE (2013), *Framework and Suggested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prepared by the Joint UNECE/Eurostat/OECD Task Force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7 May 2013, www.unece.org/fileadmin/DAM/stats/documents/ece/ces/2013/SD_framework_and_indicators_final.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UNSC (2012),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Central Framework*, UN Statistical Commission, white cover publication, pre-edited text subject to official editing, http://unstats.un.org/unsd/envaccounting/White_cover.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UNU-IHDP and UNEP (2012), *Inclusive Wealth Report 2012: Measuring progress towards sustai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 Kerk, G. and A. Manuel (2012), *Sustainable Society Index SSI-2012*, The Sustainable Society Foundation, The Hague, www.ssfindex.com/cms/wp-content/uploads/ssi2012.pdf (last accessed 22 July 2013).
- van den Berg, A., J. Maas, R.A. Verheij and P.P. Groenewegen (2010), "Green Space as a Buffer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70, pp. 1203-1210.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M.P., I. Alcock, B.W. Wheeler and M.H. Depledge (2013), "Would You Be Happier Living in a Greener Urban Area? A Fixed-Effects Analysis of Panel Data", *Psychological Science*, published online first, 23 April 2013.
- WHO (2009), *Global Health Risks: Mortality and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s*,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 Wood, C. and D. Leighton (2010), *Measuring Social Value: The Gap between Policy and Practice*, Demos, London, www.demos.co.uk/files/Measuring_social_value_-_web.pdf?1278410043 (last accessed 22 July 2013).
- World Bank (2011), *The Changing Wealth of Nations: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ew Millennium*, World Bank, Washington, DC.
- World Bank (2006),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Measuring Capital for the 21st Century*, World Bank, Washington, DC.
- WWF (2012), *Living Planet Report 2012*, WWF International, Gland, Switzerland.

용어해설

감정 밸런스: 긍정적 기분과 느낌(기쁨, 즐거움과 평안 등) 과 부정적 기분과 느낌(걱정, 슬픔과 우울감)의 순 균형(net balance)을 파악한다.

“고정된” 빈곤: “고정된” 빈곤은 시간의 특정 순간에 측정된다. 이는 한 국가내의 그리고 특정 년도의 소득의 전반적 분포와 비교한 기준에 근거하는데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불변상태이다. 이러한 “고정된” 한계치는 특정 년도의 중위 소득의 50%에 설정된다.

자동안장장치: 이는 경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정책들(특히 소득세와 복지 지출)의 구성요소들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거시경제에서의 “자동안장장치들”로서 역할한다.

캔트릴 사다리: 선구자적 사회 연구자인 **Hadley Cantril** 박사에 의해 개발된 “자기기대성취를 위한 노력척도 (Self-Anchoring Striving Scale)”로도 불리는 캔트릴 사다리(Cantril, 1965)는 다음의 것들로 구성된다: 사다리 맨 밑에서 “0”로 표시되고 꼭대기에 “10”으로 표시된 사다리를 상상해보자. 사다리 꼭대기는 당신의 가능한 최선의 삶을 나타내며 밑은 가능한 최악의 삶을 나타낸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번째 계단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가? (현재의 계단) 5년 후 당신은 어떤 계단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미래의 계단). 캔트릴 사다리는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상의 가용한 측정 방법을 나타낸다.

자본: 웰빙을 지속시키는 맥락에서 “자본”이라는 용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 성과를 결정하거나 이끄는 것을 돕는 내구적인 경제, 자연, 인적, 사회 자본들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본 stocks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성, 가치를 저장할 능력과 사회를 위해 일련의 편익들을 산출하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자본은 투자를 통해서 축적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저하되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고갈될 수 있다(소비, 방치 또는 손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본과 사회적 자본도 참조하시오.

자본 stocks 와 흐름: Stock은 특정 시점에 가용한 자본의 총량(즉 부채를 뺀 자산)을 이상적으로 반영한다. Stocks 는 자주 흐름과 대조되는데 흐름은 종종 연간 단위 등 고정 기간에 대해 측정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의 지속성 맥락에서 정책과 관련된 흐름은 투자(자본의 stock을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의미)와 감가(stock 내의 약화를 말함)을 포함할 수 있다.

더부살이(Doubling up)/하향 이동(Moving down moves): 이러한 용어들은 미국의 주택 위기 이후에 만들어졌다. 한 개인 또한 가족이 다른 가구에 얹혀 살으로써 다세대 성인가구를 형성하게 된다. “더부살게 된 (doubled-up)” 가구는 최소 1인의 성인(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님)이 한 명 더 포함된 또다른 가구로 정의된다. 하향 이동은 실직 또는 기타 부정적 요인이 주택 위기(압류 또는 퇴거 등)를 촉발시켜서 가구가 주택 소유주에서 임차인 혹은 무상임대(rent-free)상태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한다.

경제적 자본: 생산된 자본(건물, 기계와 수송 인프라 등 인간이 만든 유형 자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예술 작품 등 지식 자산)과 금융 자본(현금, 예금과 채권 형식의 채무 등 다양한 금융 자산이 포함됨)을 말한다.

생태계: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의 중심 체제에서 생태계는 “환경 구조, 과정과 기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하는 단위로서, 상호작용하는 생명 공동체(예: 식물, 동물과 미생물군 등)와 무생물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복합체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내려진다(UN통계위원회(UNSC), 2012, 2013).

생태계 서비스는 생태계 기능이 경제와 폭넓은 인적 웰빙 모두에 가져오는 편익을 말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i) 식량, 생화학물질, 유전 자원, 신선한 물, 연료 등의 공급 서비스; ii) 기후 조절, 수질 정화, 토양 침식 조절, 수분작용(pollination) 등 조절 서비스; iii) 교육과 영감, 레크리에이션, 영적인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포함한 문화적 서비스; iv) 서식지 제공과 물과 영양분 순환 등 부양 서비스를 포함한다(출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 2005, OECD, 2010a).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제4장에서 사용된 것처럼 이 개념은 소비와 저축이 포함된 총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이다. 이른바 “제곱근 척도”는 가구 필요의 규모의 경제를 시사하는데 즉 가구 구성원 한 사람이 추가될 때 가구소득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이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소득의 2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구 총 소득은 가구의 각 구성원이 받은 전체 화폐소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근로 소득, 투자 소득, 사회적 급여와 기타 가구 소득이 포함된다.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을 이 합계에서 뺀다.

성인지적 통계: 통계학의 한 분야로 전통적 분야를 초월해서 여성과 남성의 실제 삶과 양성 평등과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반영하는 통계 지표를 밝혀내고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한 경제내에서 개인들 혹은 가구들 사이에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분배상태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한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절대 평등 가상선 사이의 부분으로 측정하는데 선 아래의 최대 영역의 퍼센트로 표시된다. 지니계수가 “0”이라는 것은 완전한 평등을 “100”은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낸다.

우리 천장: 특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승진의 상한선으로 특히 여성에게 부과되는데 즉각적으로 인식되거나 공공연하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

총대체율: 근로를 하지 않을 때 받는 총 실업급여가 과거의 총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중심지표들: How's Life?의 중심지표들은 매우 고품질의 지표들로 간주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리고 국가별 웰빙의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개념적 그리고 정책적 관련성, 기본 데이터의 질, 사용된 개념과 조사 문항의 비교 가능성, 편찬 주기와 같은 다수의 품질 기준에 각각 다른 정도로 부합한다.

건강수명년수: 이 지표(장애 없는 기대 수명)는 어떤 연령의 사람이 장애 없이 살 것으로 추정되는 잔존 연수를 측정한다. 이는 활동에 제약이 없는 년수와 최소 한가지 이상의 활동 제약을 경험하는 년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대수명의 경우는 수명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지표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

가구순가처분소득: 제2장에서 사용된 것 처럼 이 개념은 가구에서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가구 구성원이 소비할 여력이 되는 최대 금액을 측정한다. 사람들의 총 소득(급여소득, 개인사업 소득과 자본소득 및 다른 부분으로부터 받은 당좌 현금이전)과 정부로부터 가구가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교육 및 의료서비스)을 더하고 나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세금, 가구에서 내는 사회보장기여분과 가구에서 소비되는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으로써 얻어진다.

가구 순금융자산: 이는 화폐용 금, 현금과 예금, 주식을 제외한 증권, 대여금, 주식과 기타 자기자본(투자펀드에서 발행한 주식 포함), 국가계정시스템의 정의에 의한(SNA) 기술적 보험준비금과 기타 매출/매입 채권, 순가구금융부채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 측정은 준기업의 경제적 생산에 기여하는 주거, 토지, 자산과 같은 가구의 물질적 웰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자산들은 제외한다.

인적 자본: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보통 개인들의 지식, 기술, 역량 및 건강과 같은 측면을 의미한다.

배우자 폭력: 결혼, 동거 혹은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학대이다. 배우자 폭력은 신체적 공격 혹은 폭행,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협박, 스토킹과 수동적/은밀한 학대 등 여러가지 형태를 띤다.

비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개인들과 전일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경제 침체(economic slack) 때문에 평상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고용기간은 고용의 지속적 기간을 말하며 현재 일자리 혹은 현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측정한다.

화폐화: 웰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맥락에서 화폐화는 화폐단위로 어떤 자원(자본 stock)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자본: 경제적 생산과 폭넓은 웰빙에 기여하는 자연 환경의 측면들을 말한다. 광물질, 에너지 자원, 토지, 토양, 물, 나무, 식물과 야생동물과 같은 개별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폭넓은 생물 생태계, 즉 산림, 토양, 수중 환경과 대기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환경적 자산들 사이의 공동 기능과 상호작용도 포함할 수 있다.

NEETs: 고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 단어는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 대체율은 실업상태일 때 유지되는 근로 소득의 비율을 보여준다. 순 대체율은 가구 순 소득을 근거로 계산되며 현금 수당, 세금, 가구에서 지불하는 사회보장 기여분을 고려에 넣는다. 순 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가구 순 소득 대비 실업 상태에 있는 가구의 순 소득의 비율을 보여준다.

한계노동인구: 두 개의 비경제활동 인구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일자리를 구하나 당장 근로가 가능하지는 않는 집단과 근로가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집단이다. 이 사람들은 실업을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으므로 실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실업자와 일부 특징을 공유한다.

PPP: 구매력 증가(PPP)는 국가들 사이의 가격 수준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여러 통화의 구매력을 동등화하는 통화환산률이다. PPP는 단순 가격 비교로 동일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국가 통화의 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일차소득: 이 소득은 근로자를 위한 급여, 부동산 소득과 영업잉여금의 합계에 해당된다. 이차소득과 함께 일차소득은 가구조정가처분소득의 큰 구성 요소이다.

Regrettables: GDP에 포함된 활동의 일부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웰빙의 감소(혼잡도의 증가와 더 긴 출퇴근 시간의 경우 처럼) 혹은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환경적 비용의 일부(오염저감 비용의 경우 처럼)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활동들을 “regrettables” 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적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나 확실히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시키지는 않는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소득 빈곤은 한 국가내 전반적 소득 분포도와 관련되어 설정된 기준점과 비교해서 측정된다. 이러한 상대적 기준은 대개 매해 중위소득의 50%에 설정된다

이차소득: 이 소득은 사회적 현물이전 수령, 공적 현금이전, 가구에서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의 합계에 해당된다. 일차소득과 함께 이차적 소득은 가구조정가처분소득의 큰 구성 요소이다.

부차적 지표들: How's Life?보고서의 중심 지표에 대한 보완 증거를 제공한다(예: 해당 영역의 좀더 구체적인 측면들을 다루는 지표들로서, 다루는 국가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중심 지표들보다 자료출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에 근거하는 지표들임).

환경경제통합계정은 경제와 환경 간 상호작용에 관한 비교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와 회계 규정을 설정할 통계 체계이다. 환경경제통합계정(SEEA)은 국민계정제도(SNA) 체계와 호환(양립)가능한 구조를 채택한다(UN통계위원회(UNSC), 2012).

사회적 자본: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협력을 촉진할 공유된 규범, 가치와 이해로 이루어진 관계망”으로 간주될 수 있다(OECD, 2001a). 최소한 4가지 유형(개인적 관계, 사회 관계망 지지, 시민 참여, 협력 규범들)의 사회적 자본이 밝혀졌다(Scrivens and Smith, 2013). 또는 거버넌스, 정치적, 제도적 그리고 법적 장치들도 포함될 수 있다.

끈끈한 바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서 높은 수준의 일자리로 상향 이동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한다.

대체: 웰빙 “생산”의 맥락에서 대체는 한가지 형태의 자본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자본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가지 자원의 고갈이 지속가능한 웰빙의 전체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른 자원의 증가로 인해 별충된다면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간 결핍: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 그리고 개인적 돌봄 활동에 쓰여진 시간을 고려한 후에 여가를 위한 시간의 부족을 의미한다.

TFSD: 2009년에 유럽통계기관장 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에 의해 설립된 지속 가능한 개발 측정을 위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유럽통계청/ OECD 공동 태스크포스(TFSD)를 말한다. TFSD의 핵심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측정하는 국가 그리고 국제 기관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을 일치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2013년 5월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측정할 프레임워크와 제시된 지표들”을 보고했다(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2013)

규정 외 근무시간: 통상 근로시간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 시간 수를 말한다. 규정외 근로시간은 저녁과 밤 근무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무시간을 포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유일한 장이다. OECD 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경제, 인구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그들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거나, 공동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또는 모범사례를 확인하거나, 국내외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증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연합(EU)도 OECD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이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발행 일: 2014년 5월

원저: OECD

번역 · 발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www.oecdkorea.org

인쇄: 아이프리넷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모든 사람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좋거나 더 나은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How's Life? 제 2판은 사람들의 삶과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측면-소득, 직업, 주거, 건강, 일과 삶의 균형, 교육,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이 책은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조건과 인구 전체의 삶의 질을 살펴봄으로써 OECD 국가들과 기타 주요 국가들의 웰빙에 대한 포괄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폭넓은 범위의 비교 가능한 웰빙 지표들을 통하여 이 보고서는 다양한 웰빙 영역에서 국가들이 다른 수행도를 보여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OECD 지역 내 저소득 국가들은 주관적 웰빙과 일과 삶의 균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보고서는 웰빙에 대한 더 나은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발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얻기를 원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필요에 부응한다.

또한 본 보고서는 특히 중요한 웰빙 영역에서 분야를 초월한 4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본 보고서는 어떻게 웰빙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에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영향은 장기적으로만 나타나지만 본 보고서는 위기가 사람들의 웰빙의 경제적·비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한다. 둘째, 본 보고서는 웰빙에서의 양성격차를 관찰하는데 남성에게 유리한 전통적 성별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인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웰빙 성과가 좋은 영역은 서로 다르며 과제와 역할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었음을 발견한다. 셋째, 본 보고서는 고용의 질과 직장 내에서의 웰빙을 관찰한다. 본 보고서는 직장에서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능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현재 웰빙과 미래 웰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웰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측정할 방법을 고찰한다.

How's Life?는 2011년에 OECD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착수된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는 OECD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맥을 함께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권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시민들을 사회적 발전에 관한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 웰빙 종합 지표인 더 나은 삶 지표(www.oecdbetterlifeindex.org)이다.

